

大韓民國選舉史

第6輯 (1993. 2. 25~1998.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58-090016-14

大韓民國選舉史

第6輯 (1993. 2. 25~1998.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된 지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미루어진 『대한민국선거사』 발간사업을 재개하여 제4, 5, 6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선거사는 통계와 사료(史料) 중심이었던 이전의 『대한민국선거사』와는 체제와 내용을 달리하였습니다. 매번 선거가 끝난 후 통계 중심의 선거총람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선거의 전 과정을 역동성 있게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선거제도의 변화,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전략, 선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진솔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선거사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문화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선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선거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역사 기술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선거사 기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청·국가기록원 등 다른 기관의 자료도 수집·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근·현대 역사서와 신문·연감·정치인의 자서전 등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 기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역사 기술에 있어서 완벽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선거사』 발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애써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과 편찬실무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 승 태

이봉능

일러두기

1.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은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인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실시된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이나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나 이후의 내용도 기술하였다.
2.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의 체제는 본문(4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본문 제1장(개관)에서는 수록대상 3개 선거의 실시 배경과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1개 선거를 1개 장으로 분류하고, 내용은 ‘장·절·1·가·1’ 순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3. 본문 각 장의 하부 목차인 절은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하였다. 즉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선거제도, 후보자 추천과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공명선거활동, 선거법위반 행위, 선거결과,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 9개 주제로 통일하였다.
4. 본문 각 절의 하부 목차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그 절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통일하였다. 다만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은 당시 선거 또는 정당과 관련된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회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특화하여 구성하였다.
5. 부록은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의 실시상황과 주요 통계,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에 수록할 대상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연표, 참고문헌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6. 서술방법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과 인명은 한자 또는 영어 등을 같이 표기하였다. 정당의 명칭은 약칭을 표기할 경우 시대에 따라 같은 명칭이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식 명칭을 표기하였다. 법률과 규칙(폐지된 것 포함)의 명칭은 「 」 안에 표기하였다.
7. 각종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가 큰 금액은 읽기 쉽도록 ‘○○억 ○,○○○만 ○○원’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였다.
8. 각주는 기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였고, 자료 출처는 부록 참고문헌에 일괄 표시하였다. 각주와 참고문헌은 ‘편저자, 발간연도, 문헌의 제목, (문헌의 출처), 출판사, 쪽수’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헌이 단행본일 경우는 문헌 제목을 『 』 안에 표기하였고, 논문일 경우는 “ ” 안에 표기하되 그 출처를 함께 표기하였다.
9.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우리 위원회가 직접 촬영한 것도 있지만 국가기록원과 언론사 등에서 제공한 것도 있다.

大韓民國 選舉史

목차

제 1 장 | 개 관

제 2 장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29
1.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30
2.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31
3.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치활동 재개	32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32
5. 12·12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민주당의 내분	35
6.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	37
제2절 선거제도	40
1. 선거법 개정	40
가. 개정경위 / 40	
나. 선거법 개정의 주요쟁점 / 42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43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 43	
나. 지방의원정수 / 44	
다. 선거일과 선거기간 / 44	

- 라. 선거인명부 / 45
- 마. 후보자 / 45
- 바. 선거운동 / 46
- 사. 선거비용 / 47
- 아. 투표 / 48
- 자. 개표 / 49
- 차. 당선인 / 49
- 카. 재정신청 / 50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51

- 1. 정당의 후보자 추천51
 - 가. 민주자유당 / 51
 - 나. 민주당 / 53
 - 다. 자유민주연합 / 55
 - 라. 기타 정당 / 55
- 2. 후보자등록56
 - 가. 후보자등록 상황 / 56
 - 나. 직업별·학력별·성별 등 후보자등록 상황 / 58
 - 다. 후보자 사퇴 및 등록무효 등 상황 / 59
- 3. 기탁금60

제4절 선거운동62

-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62
 - 가. 민주자유당 / 62
 - 나. 민주당 / 65
 - 다. 자유민주연합 / 68
- 2. 선거운동70
 - 가. 선전벽보 / 70
 - 나. 선거공보 / 73
 - 다. 소형인쇄물 / 75
 - 라. 방송연설 / 80

마. 방송광고 / 82	
바. 신문광고 / 84	
사. 합동연설회 / 88	
아. 정당·후보자 연설회 / 91	
자. 공개장소 연설·대담 / 95	
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 98	
카. 단체의 대담·토론회 / 102	
타. 현수막 게시 / 104	
파. 기타 선거운동 / 105	
3. 선거쟁점	107
가. 지역등권론 / 107	
나. 세대교체론 / 109	
다. 충청도 핫바지론 / 110	
라. 야권(민주당·자유민주연합)연대 논란 / 112	
마. 후보자의 전력 논란 / 113	
바.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 논란 / 115	
제5절 선거비용	117
1. 선거비용제한액	117
2. 선거비용 수입·지출	118
3. 선거비용 확인·조사	120
4. 선거비용 보전	121
제6절 공명선거활동	123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23
가. 언론매체 이용 / 123	
나. 인쇄매체 이용 / 125	
다. 시설물 및 기타매체 이용 / 126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27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128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31

-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131
 -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131
 - 나. 검찰의 단속활동 / 133
 - 다. 경찰의 단속활동 / 133
-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134
- 3. 주요 위반사례135
 - 가. 지방선거후보자 공천관련 금품수수 / 135
 - 나. 부천시장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 / 136
 - 다. 제주지사의 직능단체 여행경비 제공 / 137
 - 라.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의 금품살포 / 137

제8절 선거결과.....139

- 1. 선거인139
- 2. 투표140
 -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 140
 -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 142
 -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 143
 - 1) 투표용지 오쇄 / 143
 - 2) 거소투표 대상자의 대리투표 / 144
 - 3) 기타 투표관련 사건·사고 / 144
- 3. 개표145
 - 가. 정당별 득표상황과 당선자 / 146
 -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 149
 -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 152
 - 1) 문화방송(MBC)의 투표소 출구조사 결과 발표 / 152
 - 2) 개표업무 방해 / 153
 - 3) 기타 개표관련 사건·사고 / 154
- 4. 선거에 관한 쟁송.....155
 - 가. 선거소청의 제기 및 처리결과 / 155
 - 나. 선거소송의 제기 및 처리결과 / 155
- 5. 선거결과 특징156

-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 156
- 나. 특정정당의 연고지역에서 시·도의회 장악 / 158
- 다. 무소속 당선자의 대폭 증가 / 159
- 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증가 / 160
- 마. 선거관리의 복잡성 / 161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163

- 1. 재·보궐선거 사유발생과 실시상황163
- 2.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164
 - 가. 1996. 7. 19 전주시장 보궐선거 / 165
 - 나. 1996. 8. 5 여천군수 보궐선거 / 167
 - 다. 1996. 9. 12 노원구청장 재선거 / 168
 - 라. 1996. 11. 18 오산시시장 보궐선거 / 170

제 3 장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175

- 1.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175
- 2. 비자금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177
- 3.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180
- 4.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183

제2절 선거제도184

- 1. 선거법 개정184
 - 가. 개정경위 / 184
 - 나. 선거법 개정 주요쟁점 / 186
-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189
 -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 189
 -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 189
 - 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 / 189

- 라. 후보자 / 190
- 마. 선거운동 / 190
- 바. 선거비용 / 191
- 사. 투표 / 192
- 아. 당선인 / 193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194

- 1. 정당의 후보자 추천194
 - 가. 신한국당 / 194
 - 나. 새정치국민회의 / 196
 - 다. 통합민주당 / 199
 - 라. 자유민주연합 / 201
 - 마. 기타 정당 / 202
- 2. 후보자등록203
 - 가. 후보자등록 상황 / 203
 - 나. 등록무효 / 206
- 3.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신고207
- 4. 기탁금207

제4절 선거운동209

-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209
 - 가. 신한국당 / 209
 - 나. 새정치국민회의 / 212
 - 다. 통합민주당 / 214
 - 라. 자유민주연합 / 217
 - 마. 기타 정당 / 219
- 2. 선거운동219
 - 가. 선전벽보 / 220
 - 나. 선거공보 / 222
 - 다. 소형인쇄물 / 225
 - 라. 방송연설 / 227

마. 합동연설회 / 228	
바. 정당·후보자 연설회 / 232	
사. 공개장소 연설·대답 / 234	
아. 기타 선거운동 / 236	
3. 선거쟁점	239
가. 안정론과 견제론 / 239	
나.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공방 / 240	
다.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 / 242	
라. 전국구후보 공천현금 공방 / 244	
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장시위 / 245	
바. 세대교체론 / 247	
아. 기타 쟁점사항 / 247	
제5절 선거비용	249
1. 선거비용제한액	249
가.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 249	
나.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 250	
2. 선거비용 수입·지출	251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 251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 252	
3. 선거비용 확인·조사	253
4. 선거비용 보전	255
제6절 공명선거활동	257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257
가. 언론매체 이용 / 257	
나. 인쇄물 이용 / 258	
다. 시설물 및 기타 매체이용 / 259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 260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261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262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264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264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264	
나. 검찰의 단속활동 / 265	
다. 경찰의 단속활동 / 266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266
3. 주요 위반사례	268
가. 불법연설회 개최 / 268	
나. 금품제공 / 269	
다. 허위사실 공표 / 270	
라. 선거비용지출보고서 등 허위작성 / 270	
 제8절 선거결과.....	 271
1. 선거인	271
2. 투표	272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 272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 273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 274	
1) 투표용지 교부 착오 / 274	
2)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 275	
3) 특정 후보에게 투표권유 / 275	
3. 개표	276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자 / 276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 282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 282	
1) 투표함 운송 지연 / 282	
2) 투표지 분류 오류 / 283	
3) 개표결과 예측 오류 / 283	
4. 선거소송	284
가. 선거소송 제기 / 284	
나. 선거소송 처리결과 / 284	

5. 선거결과 특징285

- 가. 국회의원선거사상 최저 투표율 / 285
-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재연 / 287
- 다. 정치신인 대거 당선 / 288
- 라. 서울에서 여당이 다수의석 차지 / 289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291

-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291
-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92
 - 가. 1997. 3. 5 국회의원보궐선거 / 294
 - 나. 1997. 7. 24 국회의원재·보궐선거 / 295
 - 다. 1997. 9. 4 국회의원보궐선거 / 297
 - 라. 1997. 12. 18 국회의원보궐선거 / 299
 - 마. 1998. 4. 2 국회의원재·보궐선거 / 299
 - 바. 1998. 7. 21 국회의원재·보궐선거 / 301
 - 사. 1999. 3. 30 국회의원재·보궐선거 / 305
 - 아. 1999. 6. 3 국회의원재선거 / 307

제 4 장 | 제15대 대통령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311

- 1. 노동관계법 개정안 기습처리 파동312
- 2. 국제통화기금(IMF) 사태314
- 3. 한보특혜 대출비리 사건.....316
- 4. 김현철(김영삼 대통령 차남)의 비리 사건319
- 5. 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DJP연합)320
- 6.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신한국당 탈당과 국민신당 창당322
- 7.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신설 합당324

제2절 선거제도327

- 1. 선거법 개정327

가. 개정경위 / 328	
나. 선거법 개정의 주요쟁점 / 329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331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 331	
나. 선거일 / 332	
다. 후보자 / 332	
라. 선거운동 / 333	
마. 선거비용 / 335	
바. 투표 / 335	
사. 개표 / 336	
아. 당선인 / 336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338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338
가. 한나라당 / 338	
나. 새정치국민회의 / 341	
다. 자유민주연합 / 343	
라. 민주당 / 344	
마. 국민신당 / 345	
바. 건설국민승리21 / 346	
사. 기타 정당의 후보자 추천 / 346	
2. 후보자등록	347
3. 기탁금	349
제4절 선거운동	351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351
가. 한나라당 / 351	
나. 새정치국민회의 / 354	
다. 국민신당 / 357	
라. 건설국민승리21 / 360	
마. 기타 정당의 선거전략과 공약 / 361	

2. 선거운동	361
가. 선전벽보 / 362	
나. 소형인쇄물 / 364	
다. 현수막 / 367	
라. 방송연설 / 368	
마. 방송광고 / 370	
바. 신문광고 / 372	
사. 정당·후보자 연설회 / 375	
아. 공개장소 연설·대담 / 377	
자.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380	
차.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 382	
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 390	
타. 기타 선거운동 / 391	
3. 선거쟁점	392
가.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논란 / 392	
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책임 논란 / 395	
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논란 / 397	
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 논란 / 401	
마. 김대중 후보 건강문제 논란 / 402	
마. 북풍(北風) 논란 / 403	

제5절 선거비용

1. 선거비용제한액	407
2. 선거비용 수입·지출	408
3. 선거비용 확인·조사	410
4. 선거비용 보전	411

제6절 공명선거활동.....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412
가. 언론매체 이용 / 412	
나. 인쇄매체 이용 / 413	

다. 시설물 및 기타매체 이용 / 414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415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416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419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419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419	
나. 검찰의 단속활동 / 420	
다. 경찰의 단속활동 / 421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422
3. 주요 위반사례	423
가. 흑색선전 및 후보자비방 / 423	
나.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 / 423	
다. 금품·음식물 제공 / 424	
라. 선거관리 침해 / 424	
마. 기타 위법행위 / 425	
제8절 선거결과	426
1. 선거인	426
2. 투표	427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 427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 429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 431	
3. 개표	432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 432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 435	
4. 선거결과 특징	436
가. 현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 436	
나.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고착화 / 438	
다. 근소한 표차의 당선 / 440	
라. 미디어 선거운동의 본격화 / 441	

 부록

-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445
-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451
- 3.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455
- 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518
- 5. 연 표590
- 6. 참고문헌593

大韓民國

選舉史

1 장
개관



개 관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은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의 집권기에 실시된 각종 선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5년간이었다. 이 기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제15대 대통령선거 등 총 3회의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되었다. 또한 6곳의 국회의원선거구, 29곳의 시·도의회의원선거구, 76곳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에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의 재·보궐선거도 4곳에서 실시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고 하였고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하였듯이, 과거 여느 정부 때보다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선거 본연의 기능이 중요시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35년 만에 부활되었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해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16년 만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던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집권기간을 ‘선거 본연의 기능이 뿌리내린 정착기’라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선거제도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발전기’라고 할 수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실시된 세 차례 전국단위 선거의 실시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선거의 명칭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

군의회의원선거 등 4개의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이 선거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되어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이 ‘지역등권론’을 내세우며 정치활동을 재개하였고, 민주자유당 김종필 대표도 당내 갈등으로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여 ‘충청도 핫바지론’을 거론하며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신 3김시대’가 형성되었고, 선거전도 그만큼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쟁점도 지방자치에 관한 것보다는 중앙정치에 관한 것이 더 많았다. 선거결과는 김대중 이사장이 지원한 민주당의 승리였다. 전국 15개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이 가장 많은 5명의 당선자를 냈고,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각각 4명의 당선자를 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30명을 뽑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972명을 뽑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많은 84명(36.5%)과 390명(40.1%)의 당선자를 냈다. 민주자유당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70명(30.4%),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335명(34.5%)의 당선자를 냈다. 자유민주연합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23명(10.0%),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94명(9.7%)을 당선시켰다. 민주자유당의 당선지는 영남권에, 민주당의 당선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에, 자유민주연합의 당선지는 충청권에 집중되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나타났다.

두 번째 선거는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였다. 이 선거는 제14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1년 8개월 정도 남겨두고 실시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 이사장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정계에 복귀한 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대권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였다. 선거전은 지역에 따라 신한국당(민주자유당이 당명을 바꿈),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이 2자 또는 3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안정론과 견제론, 3김 청산, 내각제 개헌론 등이었다. 신한국당은 안정적인 개혁을 위하여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정론’을,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여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개헌저지선인 3분의 1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견제론’을 내세웠다. 통합민주당은 지역할거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해 ‘3김 청산’을, 자유민주연합은 책

임정치 구현을 위해 ‘내각제 개헌’ 을 주장하였다. 선거결과 신한국당은 34.5%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46.5%인 139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의석에 미달하여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의 자리를 지켰고,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차지하여 통합민주당을 제치고 제3당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데 그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신한국당은 정국운영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소속과 통합민주당의 당선자 일부를 영입하여 제15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여소야대 상황은 여대야소로 바뀌었으나 야당이 이에 반발하여 여야 관계는 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세 번째 선거는 1997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였다. 이 선거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IMF 사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치러졌다. 선거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 이회창 후보와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 를, 김대중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과 ‘경제 대통령’ 을, 이인제 후보는 ‘젊은 대통령’ 과 ‘세대교체’ 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IMF 사태의 책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 등이었다. 김대중 후보는 ‘IMF 사태의 책임’ 과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나서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였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 에 관해서는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나서서 김대중 후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공영방송사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선거운동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선거결과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40.3%를 얻어 38.6%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1.7%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대권 4수에 도전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DJP 연합’ 과 이인제 후보가 영남지역에서 여권성향의 표를 잠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표 1-1〉 김영삼 정부 기간 선거 실시 상황

연번	선거명	선거일자	선거 실시배경 및 특징
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선거일 등을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의결 ○ 선거관리의 복잡성
2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6.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 국회의원선거사상 최저 투표율
3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대 대통령 임기만료 ○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정권교체

2 장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995. 6. 27)

개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 때마다 각각 적용해오던 선거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선거로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임되었다. 그 후 30여 년간 지방자치제는 명목만 유지해 오다가 1991년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구·시·군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실시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개혁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선거전은 김대중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이 '지역등권론'을 내세우며 정치활동을 재개하였고,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 김종필총재는 '충청도 핫바지론'을 거론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김대중·김종필 총재를 구시대 인물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국은 이른바 '신 3김 시대'가 형성되었고 선거전도 가열되었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3당이 연고지역에서 승리하여 지역분할 구도를 형성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영남권에서,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자유민주연합은 충청권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당선자를 많이 내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나타났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9절 _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2년 6개월 후인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는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치활동 재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 ‘12·12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민주당의 내분’,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 등을 들 수 있었다.

1.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1993년 2월 25일)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됨에 따라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사회 각계 대표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하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였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다”며

“문민시대 개막을 선언하면서 오늘부터 정부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질 것이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살아있는 안정이 이 땅 위에 자리잡을 것” 이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 국정지표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복’, ‘국가기강 확립’을 제시하였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는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만큼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규제와 보호 대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국가의 정통성이 유린되는 ‘정치적 밤’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정치,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을 촉구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황인성 신임 국무총리와 이회창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에 보내 인준절차를 밟았다. 취임식 다음날에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이경식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 한완상 서울대교수를, 내무부장관에 이해구 민주자유당 사무부총장을 임명하는 등 24개 부처의 각료를 인선하고 김덕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 김상철 변호사를 서울시장에 임명하여 새정부의 진용을 완성하였다. 김영삼 대통령 초기 조각에서는 전문직과 여성이 많이 기용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이례적으로 민간인 출신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기용하였다.

2.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한 해 동안 정치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은 사건 중 하나는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1993년 2월 27일 스스로 17억 7,8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들도 자진해서 재산을 공개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3월에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마쳤다. 민주당도 이에 참여하여 정국은 일거에 재산공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재산공개 후유증은 심각했다.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집중되면서 재산

공개 과문은 확산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재산공개진상과악특별위원회(위원장 권해옥 사무부총장)를 설치하고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해 숙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축재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학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93년 3월 26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이어 3월 29일에는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겨 그해 내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같은 날 박준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였고 6월 30일에는 국회의원직마저 내놓았다. 또한 임춘원·정동호 의원은 당의 제명처분에 반발하여 탈당하였다. 이에 앞서 3월 26일 의원직을 사퇴한 김문기 의원(상지대 재단이사장)은 대학재단 운영비리관련 위반혐의로 3월 31일 구속되었다. 민주자유당 이원조·금진호·조진형·김영진·남평우 의원 등 5명은 공개 경고를 받았다.

1993년 5월 20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8월 12일까지 3급 이상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했고, 이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167명과 지방의회의원 6,800명이 9월 7일까지 재산을 일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일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정 축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또 다시 징계과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처음 재산공개액과 큰 차이를 보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1993년 9월 17일 부정축재의혹이 있는 이학원 의원과 앞서 탈당한 박규식 의원을 제명하였고, 김동권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정호용·김영광·남평우·윤태균·이현수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총재 친서형식을 통해 비공개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자유당 일부 의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부정축재사실이 드러나 정치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부정축재 과문이 대구·경북지역의 민정계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큰 타격을 입혀 이른바 ‘PK정서’에 맞서는 ‘TK정서’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 재산공개과문(조선일보 1993년 3월 31일)

3.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치활동 재개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1993년 1월 26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 국내로 돌아온 그는 1994년 1월말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이 되어 대외활동을 시작하였다.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의 정치적 행보는 1994년 5월 8일 대전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만일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민주당이나 특정계파를 업고 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하여 가시화되었다. 또 박준규 전 국회의장, 박철언 전 의원 등 새 정부 들어 대표적인 소외세력과 잇달아서 접촉을 갖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위원회 고문직도 수락하여 세간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 5·6공 인사 끌어안기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을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회의’에 초청하며 정치재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중국·러시아·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국제정세에 맞춘 대권수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 1994년 12월 18일에는 ‘아·태평화재단 후원회 밤’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세를 과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는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이사장은 호남지역을 순회하며 대규모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방선거 후보의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각종 공직선거제도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였다. 특히 막대한 선거자금의 살포로 인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쳐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 폐해가 극심했다. 또한 선거비용 한도액은 허술한 관리제도로 통제력을 상실하였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공공연히 금품

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거법에 의해 해마다 치러지는 각종 선거를 한데 묶어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선거법 제정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여야는 새로운 선거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3년 2월 23일 제160회 임시국회(1993. 2. 9~2. 28) 제7차 본회의에서 여야 동수의 하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닥친 재산공개 파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5월 11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민주자유당 신상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자유당 김중위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 의원을 각 당간사로 선출한 후 선거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국의 선거법을 비교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법 제정의견을 작성하여 1993년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제정의견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본골격이 되었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도 1993년 10월 중순경에 자기당의 선거법안을 확정해 제출했다. 그 후 양당은 선거법협상을 계속 벌였으나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많아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활동도 중단되었다.

1994년 1월 초 여야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 여야 각 3인의 협상대표를 구성하여 선거법 성안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6인의 협상대표가 구성되었는데, 민주자유당에서는 신상식·박희태·황윤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상천·정균환·강수립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1994년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인 회담에서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폐지, 선거비용의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등 주목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밖에 1995년에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는 4년에서 1년을 단축하고,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 형태로 2년마다 번갈아 실시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994년 2월 15일 제166회 임시국회(1994. 2. 15~3. 4)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한 후에도 6인 협상대표의 활동은 그대로 이어졌고 당원단합대회와 연수회 전면금지, 선거사범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선거사범의 벌칙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1994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어진 선거법 협상에서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있던 조항들에 대해 막판 절충에 들어가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은 존치하되 정당투표제(1인2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선거연령은 20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여 3월 4일까지 계속 협의하였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94년 3월 4일 협상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자를 놓고 대립하였으나, 협상 끝에 지방선거일자를 1995년 6월 27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선거법 협상을 끝낸 여야는 3월 4일 제166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신상식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폐회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선거법 제정의 대장정을 끝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 선거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등 4개의 개별선거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선거법의 명칭에 ‘선거부정’이란 말을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새로 제정된 선거법의 주요특징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비용 불법지출 규제, 선거사범 처벌 강화, 선거관리체제 합리화 등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포괄적 제한·금지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로 전환하였고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선거공영제가 확대되었다.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비용 중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과 방송연설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되었다.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귀속될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선전벽보 첨부·철거비용, 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셋째, 선거비용 불법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통제장치가 강화되었다. 선거비용은 제한액

총액의 범위 내에서 비목과 상관없이 지출하되, 제한액을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되도록 하였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도록 하였고, 회계책임자는 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실성 여부를 실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기부행위 제한이 강화되었으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금품살포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재정신청제도가 신설되었고, 선거사범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연장되었다.

그 밖에 선거관리체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은 단축되었고,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선거시기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마다 각종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발생하는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동시선거 특례 규정을 두어 서로 다른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5. 12·12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민주당의 내분

1993년 7월 19일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도 경비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고소·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핵심관련자 38명에 대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1년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냈다.



▶ 조준응 서울지검 1차장 검사가 12·12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4년10월 29일)

검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12·12사태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이 군 명령을 무시한

채 병력을 불법 동원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12·12 군사반란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했으며, 육군 정규 지휘 계통의 명령을 위반한 채 군 최고 지휘부를 점령하여 군통수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쟁점이었던 내란외환죄 적용 여부에 대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만 있었을 뿐 정권 탈취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백한 ‘군사반란’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법정논쟁이 되풀이되어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하고 국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두 전직 대통령이 14년간 국가를 통치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자유당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소극적인 논평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어설픈 정치적 심판은 군사쿠데타가 재발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민주당은 1994년 11월 7일 최고 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분간 정기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이 기소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지구당별로 동시다발적인 규탄집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곧바로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새해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단독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며 민주당의 국회동원을 압박하였다.

이처럼 ‘12·12 군사반란 관련자 기소투쟁’이 장외투쟁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김대중 이사가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의 ‘12·12 군사반란 관련자 기소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김대중이사는 1994년 11월 23일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세상이 달라진 만큼 야당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야당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원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김대중 이사가 12·12 군사반란자 기소투쟁에 대해 제동을 걸자 이를 ‘5·6공 꺼안기를 통한 정계복귀전략’이라고 단정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의원직 사퇴선언과 함께 기소관철을 위해 범국민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 이사의 국회 등원 촉구 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론이 거세지자 마침내 이기택 총재는 국회 등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 달 가까이 공전해 온 정기국회는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이기택 총재가 주도한 12·12 관련자 기소투쟁이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당 분열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기택 총재는 지방선거 전에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대중 이사장과 동교동계는 지방선거전에 개최하는 것은 당내분을 심화시킨다며 반대하면서 대립했다. 또한 이기택총재와 김대중 이사장은 경기지사 후보공천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하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였고 선거기간 중에는 ‘지역 등권론’에 다른 견해를 보이며 충돌하여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6.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

민주자유당은 1995년 초 개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종필 대표 체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내에는 큰 변화가 있으며 당 대표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당 체제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민주계 최고 실세인 최형우 내무부장관도 국민이 개혁을 원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를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계를 중심으로 지도체제의 변화 등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러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김종필 대표의 경질설 등이 언론을 통해 계속 흘러나왔다. 마침내 김종필 대표는 “내가 갈 길은 내가 갈 것이며 동조자가 있다면 규합해 나가겠다. 구국을 위해 만든 당을 뒤집어 놓는 게 세계화냐”며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1995년 2월 9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김종필 대표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김용환 의원 등 구 민주공화당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세를 규합한 뒤 신당의 당명을 자유민주연합으로 결정하는 등 신당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 이종근, 김용환, 이공규, 구자춘, 조부영, 유수호, 정태영, 김진영 등 현역의원 9명이 동반탈당한 뒤 신당창당에 합류하였다. 세력을 규합한 김종필 대표는 2월 21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박준규 전 국회의장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창당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1995년 3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김종필을 총재로 선출하고 내각제 추진을 골자로 한 당헌 및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김종필은 1990년 3당통합으로 신민주공화당 총재에서 물러난 지 5년만에 자유민주연합 총재로 선출되

었다. 김종필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정치가 만성적인 불안과 혼란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에 바탕한 절대권력의 독선과 횡포 때문”이라며 내각제로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날인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등록신청을 하였고, 4월 3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절차도 마쳤다.

김종필 총재는 창당 직후 신민당과 합당에 나서 1995년 4월 29일 신민당 김복동 최고대표 위원과 회동을 갖고 양당이 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양당은 합당수임기구 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당명은 ‘자유민주연합’으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당 대표자로 하여 합당할 것을 결의한 뒤 5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신설합당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민당 내 일부 인사들은 법원에 정당합당등록 금지가처분 신청²⁾을 내고, 합당등록 신청에 대하여 무효화를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회의록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고



▶ 자유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1995년 3월 30일)

2)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995년 6월 21일 신민당의 임춘원·박영록 최고위원 등 9명이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통합의결이 무효라고 낸 정당합당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신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형식적 요건이 완비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5월 31일 신설합당 등록신청이 수리됨으로써 등록 절차를 마쳤다.

자유민주연합은 1960년 제3공화국 이후 내각제 실현을 창당이념으로 공식 표방한 정당이 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에서 내각제 개헌은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2절 선거제도



여야는 1993년 2월경부터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선거법 제정을 추진하여 1년여 협상 끝에 1994년 3월 만장일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선거법은 모두 17장 277개 조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선거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1. 선거법 개정

앞의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된 선거법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현실에 맞게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첫 번째 개정은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은 자치구·시·군의 장과 의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을 배제를 주장하는 민주자유당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대립한 끝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만 정당추천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후 통과되었고, 세 번째 개정은 때마침 일어난 대구지하철 폭발 사고로 국회가 공전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이때 처리된 것은 4개 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업무의 효율화와 인구수 변동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선거구 조정이었다.

가. 개정경위

1994년 12월 22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법상의 관련조항 일부가 개정되었다. 여야 이견없이 합의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995년 1월 1일 법률제4796호로 공포·시행되었다.

1995년 3월 3일 민주자유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이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로 규정해 자치구·시·군의 장과 의원선거는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민주자유당 의원들만의 요구로 제173회 임시국회(1995. 3. 9~3. 18)를 소집해 이를 처리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황낙주 국회의장 공관과 이한동 국회부의장 사택을 점거하며 국회등원을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6일간 공전되었다. 이처럼 대치정국이 계속되던 중 1995년 3월 12일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총무(김덕룡·최낙도)회담을 열고 민주자유당이 강행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민주당이 의장단에 대한 억류를 풀고 국회를 정상화 시킨다는 데 합의하였고, 여야는 곧바로 선거법 협상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3월 14일 사무총장 및 원내총무 회담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때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지역구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추가 선출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필요한 조항도 함께 신설 또는 정비하였다.



▶ 황낙주 국회의장이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근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1995년 3월 7일)

이 같은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 내무위원장이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 3월 15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995년 4월 1일 법률 제494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1995년 5월 1일 국회는 여야 의원 282명의 명의로 제174회 임시국회(1995. 5. 1~5. 4)를 소집하여 시·군 통합을 위한 법안과 현안을 처리코자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민주당의 대정부질문과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여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개회식만 치르고 자동 유회됐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4일에도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임시국회는 폐회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5월 10일 법률 제4949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 때 개정된 선거법에는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시·회의의원선거구의 구역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나. 선거법 개정의 주요쟁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선거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재정신청 제도 도입’ 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이었다.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거소송이 속출할 우려가 있고, 선거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거사범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온 게 상례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우리가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을 양보할 테니 재정신청을 받으라”고 하자 민주자유당 박희태 의원은 “우리가 시효를 받아 줄 테니 재정신청을 포기하라”고 신경전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계속 선거법협상을 벌인 끝에 재정신청 주체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허위사실 공표죄, 부정선거운동죄,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으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선거분위기가 너무 일찍 가열되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1995년 6월 22일을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이때는 농번기여서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5월 10일 이전으로 당길 것을 요구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총무회담과 열고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이 ‘6월 22일부터 30일 사이 이외에는 안된다’고 완강히 맞섰다. 진통 끝에 민주당이 선거날짜만 바꾼다는 명분만 살리는 방향으로 1995년 6월 27일에 합의함으로써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결정되었다.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1991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하여 선거사범 처벌을 강화하여 선거풍토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선거일 법정화, 선거운동 주체의 포괄적 금지규정 삭제, 선거운동기간 단축,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기준 법정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통제 강화, 재정신청제도 도입, 비례대표 시·도의원제도 도입, 선거사범 처벌강화 등이 있었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 원칙적으로 부여하였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였다(법³⁾ 제15조, 제18조).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9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였다(법 제16조, 제19조). 종전 선거법에서는 시·도지사 35세 이상, 자치구·시·군의 장의 경우 30세 이상, 지방의회의원선거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률적으로 모두 25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3) 이 장에서 법이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5. 10 시행, 법률 제4949호)을 말한다.

나. 지방의원 정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고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경우 매 20만 명마다 1인씩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인구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2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시·도의원으로 추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의석배분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다(법 제22조, 제190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인구수가 2만 명을 넘는 경우 2만 명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하였다(법 제23조).

이에 따라 산출된 의원정수를 보면 시·도의회의원은 972명(지역구 875명, 비례대표 97명)이었고,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4,541명이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시·도의회의원은 106명,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237명이 늘어났다.

다. 선거일과 선거기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하도록 법정화하였다. 선거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로 하되 동시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연기규정을 두었다(법 제33조, 제34조, 제202조). 종전 선거법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되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별로 선거일 확정시기와 선거기간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8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거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게 하되,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늦어도 선거일 전 23일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20일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공고하도록 하였다(법 제35조).

그 밖에 부칙에서 선거일과 임기규정을 두었다. 제1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1995년 6월 27

일로 결정하였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향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실시 간격을 2년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라.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일 전 22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고 명부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완료일 다음날부터 열·공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7일에 확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부재자신고서를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고 작성완료일 다음날에 확정하도록 하였다.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제도를 두어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서 읍·면·동당 1인씩 선임하여 선거인명부의 허위 또는 부정 작성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법 제204조).

마. 후보자

후보자 등록 요건은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무소속 추천인수는 적게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50인 이상에서 많게는 시·도지사선거의 2,000인 이하까지 선거별로 차등을 두었다(법 제47조, 제48조).

후보자 기탁금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 2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 4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 원으로 종전의 선거법과 같았으나 시·도지사선거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인상하였다(법 제56조).

기탁금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제외)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반환하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 반환하도록 하였다.

반면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제외)를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귀속하도록 하였다. 또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귀속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법 제57조).

바. 선거운동

선거운동 주체는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종전 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 등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서는 범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8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간의 형평성 유지와 선거의 과열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하고(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54조). 또 종전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과 선거당일의 선거운동을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당일의 위반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토록 하였다.

선거운동 방법도 대폭 확대하였다. 선거법에서는 제한·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선거법상 주요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합동연설회만 있었으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신설하여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연설원 등은 확장장치를 사용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횡수에 제한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연설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7조, 제79조).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하였다.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등을 신설 또는 대폭 증편하였으며, 그 밖에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⁴⁾는 그의 부담으로 횡수에 제한 없이 공평하게 후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74조). 종전 선거법에서 신문광고는 시·도지사선거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자를 말한다.

한하여 일간신문에 각 1회를 게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총 5회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광고가 신설되어 시·도지사에 한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로 각각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연설은 중전 선거법에서는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로 각 2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도지사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로 각 1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방송 공사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각 2회 이상,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3회 이상 경력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담·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의 대담·토론회와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변단체, 후보자 관련단체, 사적 모임 등을 제외한 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1조, 제82조).

다만 동시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축소하였다. 선전벽보는 후보자 과다로 인한 첩부장소수 부족을 감안하여 단일선거의 50%만 첩부하도록 하였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 개최횟수를 선거구마다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다. 또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장장치는 휴대용만 사용하도록 하였다(법 제206조, 제208조, 제216조).

사.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선거구별로 산정한 후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제한액을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법 제121조, 제258조).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반드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127조, 제132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해당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34조).

지방선거에서도 처음으로 선거운동 비용 보전제도를 도입하였다. 선거결과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명함형은 제외)의 작성비용과 방송연설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도록 하였다.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후보자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1조).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때에는 기탁금반환대상이 아닌 경우 기탁금에서 공영비용(선전벽보 작성·첨부비용,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을 공제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였다.

아. 투표

투표는 기표(記票)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직접 또는 우편방법으로 하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표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투표는 선거인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였다(법 제146조, 제147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전 선거(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비해 1시간이 늘어났으나,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은 이전 선거와 변함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법 제155조).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은 10일간에서 3일간으로 단축하였다. 부재자투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부재자투표사무원인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소 운영기간이 길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의 경우 “무소속”),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호는 “1, 2, 3”으로 표시하며, 소속정당명과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여 선거인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도를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자치구·시·군

의 장선거는 연두색,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하늘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계란색을 사용하였다(법 제150조, 216조).

부정투표용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 가인은 시·도지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에서 추천한 대리인이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하는 때 입회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하지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정당추천위원 가인제도는 그대로 존속시켰다(법 제151조, 제157조, 제211조).

자. 개표

개표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개표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175조, 제181조, 제214조, 제215조).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고, 개표시간 단축을 위하여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개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 이내에서 보조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할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제2개표소 개표를 주관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216조). 또 부재자투표의 개표는 우편투표함을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장으로 옮겨서 개함·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12조).

차. 당선인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후보자수가 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1인이라도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만 당선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90조, 제191조).

카. 재정신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여야의 선거법 제정 협상에서 마지막에 타결된 쟁점사항이었는데, 이는 선거법 제정의 핵심적 쟁점이기도 하였다.

재정신청의 주체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 또는 정당(중앙당에 한함)이었다. 재정신청 대상 선거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허위사실 공표죄, 부정선거운동죄,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이었다.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하여 당내 민주화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기성정치인의 반발과 영입인사들의 경선 회피 등으로 일부 선거구에서 한정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본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전반적으로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별로 심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그 정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는 모두 공천을 하였지만 비연고지역은 공천 희망자가 없어 공천을 하지 못한 선거구가 많았다. 선거별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행정경험과 정치능력을 중시하여 정부고위관료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대거 공천하였다. 선거사상 처음 도입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는 여성 인사를 많이 공천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1995년 3월 정치인 중심의 공천이 예상되는 민주당 등 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선거에서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공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경선제를 도입하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는 공개경쟁과 지역사정에 따른 선별공천을 병행하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는 공개모집하여 심사결정하되 지구당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시·도지사선거에 경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공직후보자 공천



▶ 민주자유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개표(1995년 5월 12일)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경선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당무회의의 심의로 같음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경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15명의 시·도지사 후보 중에서 경선을 치른 지역은 서울·경기·제주 등 3곳으로, 대부분 당내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종전의 공천방식에 의해 시·도지사 후보가 결정되었다.

1995년 5월 16일 확정된 시·도지사선거 후보들은 크게 민주계 핵심과 관료출신들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정원식 전 총리를 선출했으며, 민주계 핵심인사들인 문정수 전 사무총장(부산)과 김혁규 전 지사(경남)를 비롯해 최기선 전 시장(인천), 이인제 의원(경기) 등을 경남과 수도권에 공천하였다. 이 밖에 조해녕 전 시장(대구), 김동환 전 시장(광주), 이상룡 전 지사(강원), 강현욱 전 농림수산부장관(전북), 이의근 전 청와대행정수석(경북), 우근민 전 지사(제주) 등 지명도가 높고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관료들을 공천하였다.

1995년 5월 2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공천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210개 지역에서 542명이 신청하여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20개 자치구·시·군은 공천신청자가 없는 등 호남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은 경쟁률은 저조하였다. 이어 5월 13일에는 20개 지역의 자치구·시·군의 장 공천자를 발표하였고, 계속적인 심사를 통해 5월 22일까지 165곳을 추가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전남·전북의 12곳과 경북의 5곳 등 총 21개 지역에는

공천자를 내지 못하였다. 공천자 중에는 심완구(울산), 심기섭(강릉), 최수환(포항) 등 전직 국회의원과 권문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서울 강남구)도 포함되었다.

1995년 5월 18일 지역구시·도의회의원 공천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056이 신청해 평균 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천 희망자가 없는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 중 17%가 넘는 151개나 됐는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광주 등 호남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이었다. 이어 5월 26일 전국 664곳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1차 공천자를 확정·발표하고, 6월 5일까지 166곳의 후보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호남과 충남지역 등 42개 선거구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여성·직능대표, 당과 시·도의회를 연결할 수 있는 사무처 간부 등을 후보로 추천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시·도지부로부터 3배수의 추천을 받아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민주자유당은 모두 9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했는데, 이 중 54%가 여성이었다. 서울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과 부산의 서정옥 부산 여성발전회공동의장 등을 1번으로 공천하였다.

나. 민주당

민주당은 1995년 3월 지방선거후보 공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지기반이 확실한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자유당의 후보 결정 추이를 지켜본 뒤 민주자유당의 공천 탈락자의 영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구·경북·강원 등 일부지역은 자유민주연합과 연합공천을 통한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인물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천경쟁이 과열되어 ‘공천현금 수수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995년 6월 2일 시·도지사 11명, 자치구·시·군의 장 118명, 지역구시·도의회의원 410명 등 모두 539명의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공천은 주로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됐으며, 영남과 충남 등은 공천을 하지 못한 지역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6월 5일에도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 17명, 지역구시·도의회의원 후보 72명 등 모두 89명을 추가로 공천하였다. 그 후 계속적인 공천 작업을 통해 모두 749명을 공천하였다.



▶ 민주당 대구 서구지역 공천자 대회(1995년 4월 12일)

시·도지사선거는 서울시장 후보에 조순 전 부총리를 공천하는 등 서울·부산 등 11곳에 후보를 공천하였지만, 대구·경북·경남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강원도에서는 야권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공천후보가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4개 시·도에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주요 공천자로는 장경우(경기)·허경만(전남) 국회의원과 노무현(부산)·이용희(충북)·조중연(충남) 전 국회의원 등이 있었으며,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출신으로는 송언중 전 체신부장관(광주), 강보성 전 농수산부장관(제주) 등이 있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수준인 156명을 공천하였다. 서울은 25개 선거구 모두에, 부산은 16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 공천하였다. 그 밖에 충북에서 11개 선거구 중 7곳에 공천자를 낸 것을 비롯해, 충남에서는 15개 선거구 중 8곳, 경북에서는 23개 선거구 중 6곳, 경남에서는 21개 선거구 중 7곳에 공천하였다. 주요 공천자로는 노승환(서울 마포구), 김길준(군산), 이석용(안양), 이규정(울산) 등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로 582명을 공천하였다. 공천자 중에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던 이지문(당시 육군 중위)이 있었다. 그는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영등포구제4선거구에 공천되었다.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로 58명을 추천했는데 여성들의 시·도의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 호남 등 강세지역에서 여성을 대거 추천하였다. 전남에서 송희성 여성유권자연맹 광주지부장 등 여성 2명을 각 1번과 3번에 공천하였으며, 서울에서도 안순덕 전 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등 2명을 각각 2·3위에 공천하였다.

다.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4월초 시·도지사 후보로 전직 관료출신인 홍선기 전 대전시장(대전), 심대평 전 청와대 행정수석 비서관(충남), 주병덕 전 충북지사(충북), 이판석 전 경북지사(경북)를 공천하였다. 경기지사 후보로 김문원 대변인을, 인천시장 후보에는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강우혁 국회의원을 확정하였다. 강원지사 후보로 경제관료 출신의 최각규 전 부총재를 공천하였다. 하지만 인물난으로 서울, 부산, 제주 그리고 호남지역에는 공천하지 못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5월 14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로 광명시 등 4곳의 공천자를 발표하였고, 5월 30일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 후보로 9명을 공천하였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가 적어 충청권에 비해 비충청권 지역에서 심각한 인물난을 겪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연합은 시·도지사선거 9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67명,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179명 등 모두 255명의 후보 공천을 완료하였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모두 24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충청권에서는 예비후보까지 포함해 의원정수를 대부분 다 채웠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의원정수의 절반을 공천하지 못했으며,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는 후보를 내지 못하였다.

라. 기타 정당

앞의 3개 정당 외에도 친민당, 통일한국당, 대한민주당 등 3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1992년 11월 창당된 친민당은 박홍래 최고위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였다.

1992년 11월 진리평화당으로 출범하여 1993년 1월 4일 신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1995년 4월 1일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 통일한국당은 고순복 고문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였다.

민주도덕사회 건설을 표방하며 1993년 10월 20일 창당된 대한민주당은 류한희(경기도 용인군 제2선거구), 김이준(충남 당진군 제1선거구)을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로 공천하였다.

2.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등록 상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1995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 서울시장 후보자등록 접수(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5,758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모두 15,596명이 등록하여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별로는 전국적으로 15명을 선출하는 시·도지사선거에 총 5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3.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무소속 5명을 포함해 9명의 후보가 나온 서울시장선거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충북 6 대 1, 대구 5 대 1, 대전이 4 대 1 순이었다. 특히 출마자 가운데 국무총리·부총리·장관·국회의원·도지사·시장 등을 지낸 인사가 전체의 68%인 38명으로 여야 3당은 국정운영 경험자를 중심으로 공천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전국적으로 230명을 선출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는 총 943명의 후보가 등록해 4개 선거 중 가장 높은 4.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곳은 강원도 원주시장선거로 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도 전직 구·시·군의 장들이 출마한 경우가 많았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일수록 이 같은 양상

이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87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총 2,44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때의 경쟁률은 3.3 대 1이었다.

전국적으로 4,541명을 선출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는 11,970명이 등록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의 경쟁률은 2.4 대 1이었다.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출마자는 1,383명으로 전체 후보자수의 40.1%를 차지했다. 무소속이 가장 많이 출마한 지역은 경남과 경북으로 각각 58.1%와 55.9%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 51.6%, 부산 45.6%, 전남 41.5%, 전북 36.9% 순이었다.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은 시·도별로 지역구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총 97명을 선출하였는데, 모두 178명이 등록하여 1.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3개 정당만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전북에서만 1명이 빠진 96명을 추천하였으며, 민주당은 전남과 전북은 전 선거구에 추천하였지만 나머지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내지 못하여 의원정수의 59.8%인 58명을 추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는 후보가 없었으며 의원정수의 24.7%에 해당하는 24명을 등록하였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수가 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투표를 실시하

〈 표 2-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상황

(단위: 명)

선 거 별	선거구수	정수	후보자수	경쟁률	정당별 후보자 등록상황						
					합계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기타정당	무소속	
합 계	4,885	5,758	15,596	2.7대1	15,596	1,153	807	279	4	13,353	
시·도지사선거	15	15	56	3.7대1	56	15	11	9	2	19	
자치구·시·군의장선거	230	230	943	4.1대1	943	209	156	67	-	511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875	875	2,449	2.8대1	2,449	833	582	179	2	853
	비례대표	15	97	178	1.8대1	178	96	58	24	-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750	4,541	11,970	2.6대1	11,970	-	-	-	-	11,970	

※ 기타정당은 친민당, 통일한국당, 대한민주당임.

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을 득표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당시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87개가 있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부산의 해운대구와 동래구, 인천 옹진군, 강원도 양구군 등 4곳은 모두 후보자가 1명만 출마했는데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또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41곳,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242곳 등 모두 283개 선거구는 단독출마 또는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가 되었으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 표 2-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선거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인 선거구	2인 선거구
41	202	40

한편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1994년 말까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부동산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보 또는 시보 등에 이미 공개한 때에는 공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시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후보자 재산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을 뿐 진위 여부를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근거가 없어, 후보자등록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 직업별·학력별·성별 등 후보자등록 상황

등록을 마친 15,596명 후보자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정치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정치인은 53.6%를 차지했으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8.0%,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7.1%,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도의회의원선거의 28.1%,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48.0%는 상업·농업 종사자로

나타나 정치인 출신보다 많았다.

학력별로는 전체 후보자 중졸 및 고졸이 3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 25.3%, 대학원졸 9.0% 순이었다. 시·도지사선거는 대졸이 58.9%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 30.4%, 고졸 5.4% 순이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도 대졸이 48.3%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 20.4%, 고졸 17.2% 전문대졸 이상 8.7% 순이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대졸 39.7%, 고졸 24.3%, 대학원졸 13.4% 순이었으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고졸 38.0%, 대졸 20.1%, 중졸 8.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역이 크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선거일수록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 30.6%, 60대 이상 13%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선거는 50대가 6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23.2%, 40대 8.9%순이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도 50대가 53.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20.8%, 40대 20.8%, 30대 5.2%순이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50대가 43.5%였으며, 40대 30.2%, 30대 14.3%, 60대 이상 11.4% 순이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50대가 43.6%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31.6%, 60대 이상 12.7%, 30대 1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출마자는 331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후보 79명을 제외하면 여성후보는 252명으로 1.6%를 접하는데 그쳤다.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서울시장선거의 황산성과 김옥선 2명이었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전재희(광명시), 최순자(서울 도봉구), 이영화(강화군), 이영애(경남 하동군) 후보 등 4명의 여성이 출마했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는 40명이었으며,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는 민주자유당이 96명 중 54명(56.3%), 민주당이 58명 중 19명(32.8%), 자유민주연합이 24명 중 6명(25.0%)의 여성후보를 공천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는 206명이었다.

다. 후보자 사퇴 및 등록무효 등 상황

등록한 후보자 15,596명 가운데 총 48명의 후보가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일의 후보자수는 15,548명으로 줄어들었다.

〈 표 2-3〉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사퇴 등 현황

(단위: 명)

당초 후보자수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최종 후보자수 (선거일)
	계	사퇴	등록무효	사망	
15,596	48	29	17	2	15,548

사퇴한 후보자수는 총 29명이었다.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전남지사선거에 출마한 최문작 후보가 사퇴하였으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사퇴한 후보가 없었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는 2명이 사퇴하였으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26명이 사퇴하였다. 그 중 김관수(충북 충주시 양성면), 이인경(서울 강동구), 이재복(경북 성주군) 후보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후보를 사퇴하였다.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총 17명이었다.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등록무효된 후보가 없었으나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민주당 서중현(대구 서구), 무소속 최규태(대구 동구), 무소속 신상근(충남 연기군) 후보 등 3명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등록이 무효되었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승배(대구 북구제1선거구), 민주당 전연탁(강원 강릉제3선거구) 후보가 피선거권 상실로, 윤석범(광주 동구제1선거구) 후보는 이중당적으로 등록무효되는 등 총 8명이 등록무효되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6명이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등록무효되었다.

3. 기탁금

후보자등록신청 시 납부하는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는 5,0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400만 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200만 원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된 기탁금 총액은 466억 7,800만 원이었다.

기탁금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제외)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반환되었고, 비례대표시·도의

회의원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 반환되었다. 반면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제외)를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귀속되었다. 또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귀속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은 후보자는 14,106명(전체후보자수의 90.4%)이었고, 반환된 기탁금은 총 403억 2,785만 원이었다. 나머지 1,490명의 기탁금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제작비용을 보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며 그 금액은 48억 4,421만 원이었다. 기탁금 반환사유는 당선자가 5,756명이었으며, 득표수에서 반환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는 8,348명이었고, 사망에 의한 기탁금 반환대상자는 2명이었다. 기탁금귀속대상자는 득표수 반환요건에 미달한 후보자가 1,4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퇴 29명, 등록무효 17명 순이었다.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는 귀속대상자가 254명이었으며 귀속된 기탁금은 총 4억 6,901만 원이었다. 또한 시·도의회의원선거 때에는 귀속대상자 155명의 기탁금 4억 3,183만 원이 귀속되었다.

〈 표 2-4〉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반환 및 귀속상황

(단위: 명, 천원)

선거 별	기탁금		공제금액			과태료 등	기탁금 반환상황		기탁금 귀속상황		
	후보자수	금액	계	선전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수	반환금액	후보자수	귀속금액	
합 계	15,596	46,678,000	1,503,183	913,562	589,621	2,750	14,106	40,327,850	1,490	4,844,217	
시·도지사선거	56	2,800,000	131,502	14,008	117,494	-	41	2,050,000	15	618,498	
자치구·시·군의장선거	943	9,430,000	363,300	165,480	197,820	300	690	6,899,800	253	2,166,600	
시·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2,449	9,796,000	281,695	184,735	96,960	200	2,154	8,615,800	295	898,305
	비례대표	178	712,000	676	676	-	-	161	644,000	17	67,324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1,970	23,940,000	726,010	548,663	177,347	2,250	11,060	22,118,250	910	1,093,490	

제4절 선거운동



선거전은 지역에 따라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3파전 양상을 보였다. 또 이들 정당들은 당시 선거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2년 뒤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결부하여 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로 보았다. 이에 따라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 이사장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지역등권론’을 내세우며 정계복귀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 김종필 총재도 ‘충청도 핫바지론’을 내세우며 연고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기하려 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이 세대교체와 양김(김대중·김종필) 퇴진론을 주장하고 나서 지방선거전은 한층 가열되었다.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여야 3당 모두 선거전략과 선거공약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서울시장선거가 전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한다고 보았고, 서울시장선거에 총력전을 펼쳤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이춘구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 김덕룡 사무총장을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하여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선대본부장 직속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정책별로 시·도지부와 지구당 선거준비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방선거전에 돌입하였다.

1) 선거전략

민주자유당은 선거초반 진정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실현의지를 홍보하는 가운데 공명한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이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하며 ‘지역등권론’을 주장하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충청도 핫바지론’을 거론하자 대응전략으로 ‘세대교체론’을 선거쟁점화하며 ‘양김(김대중·김종필을 말하며 이하 이장에서 같다) 퇴진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여권성향이 강한 자유민주연합에 대해서는 민주자유당만이 유일한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차별화하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김대중 이사의 정계복귀를 염두에 두고 ‘색깔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시·도지사선거의 승리를 위해 시·도별로 우세, 혼전, 열세 지역을 구분한 후 혼전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선거결과를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와 동일시하고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울에서 패할 경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권 재창출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였다.

열세지역인 호남과 대구·경북 및 충청권은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지역개발 공약과 해당지역 출신 인사들을 내세우기로 하였다. 특히 충청지역은 김종필 대표의 탈당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일이야말로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충청 출신인 이춘구 대표를 포함한 중앙당 당직자들이 대거 현지로 내려가 충청권을 순회하며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행정규제 완화와 대출확대 등을 약속하는 등 ‘반 민주자유당’ 지역정서를 반전시키려 노력하였다.

2)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5년 5월 19일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위한 민주자유당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①지방화시대 촉진과 민생치안 확립 ②세계개혁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 ③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④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 ⑤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 공급 ⑥인간중심 교육개혁과 지방문화 발전 ⑦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등 7대 과제 64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지방화시대 촉진과 민생치안 확립’에 관한 공약으로 지방고등고시제를 실시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하며, 지방 5급 공채합격

자에 대해 입대시 장교편입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귀향촉진법을 제정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 등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며 공공번호인제의 도입 등 법률구조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의 추진을 약속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선진치안체제를 확립하고 신고인 요청에 따른 신변보호제도를 시행하며 식품·마약사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 밖에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고 경평 축구대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개혁과 교통난 완화’에 관한 공약으로 부동산 값의 안정을 위해 종합토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1998년까지 각종 세금신고 기준율을 완전 폐지하며 물가연동을 통해서 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난 해소책으로 2001년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지하철 544km를 추가로 건설하고, 1999년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총 9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며, 동서 9개축·남북 7개축의 격자형 도로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공사표준 공기제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에 관한 공약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비 42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간에 걸쳐 5조원을 투입하며, 매년 농어업인 후계자와 전업농가 25,000명을 양성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거래의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공동어장의 종합개발과 오지 도서개발 촉진을 위한 과소지역진흥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관한 공약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 도급계약 제도 및 국유지 장기임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치 및 민속주 등 전통고유업종을 수출산업화하고 폐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공급’에 관한 공약으로 식수난 해소를 위해 주요하천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국 33개소에 광역위생매립지를 조성하며, 현재 49%에 머물고 있는 하수처리율을 1997년까지 7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쾌적한 삶을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2000년대 초까지 확대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료혜택 증진을 위해 첨단보건의료 과학단지

를 조성하고 1998년까지 전국민 연금시대를 실현하며 2000년부터는 의료보험 급여일수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중심의 교육 개혁과 지방문화 발전’에 대한 공약으로 ‘책가방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권역별로 대학단지를 개발하며, 여교사 자녀를 위해 학교마다 유아방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체력증진을 위해 충남 천안에 청소년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강원 평창에는 청소년 수련마을을 건립하며, 전국 읍·면·동 단위별로 1개소씩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과 지방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공약으로 국회 및 시·도 의회의 비례대표직에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며 국제분야의 여성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99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3,600개의 탁아소를 설치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남녀차별금지 규정 및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며, 1999년까지 총 10개소의 모자 임시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 밖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나. 민주당

민주당은 이기택 총재를 선거대책위원장에, 선거대책본부장에 김태식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하고, 선대본부장 책임 하에 선거종합상황실과 부정선거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하였다.

1) 선거전략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을 이끌어낸 이후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경기지사 후보공천을 두고 김대중 이사장과 이기택 총재가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하면서 대립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던 국고보조금 기발 신청이 불발되어 선거자금난에 빠졌다. 또한 후보자 공천에서는 비호남지역에서 인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시 선거의 성격을 ‘김영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해 그동안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심판론’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비호남지역에서는 김영삼정부의 부정부패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고, 호남지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역살림꾼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선거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민주자유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념적 공세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호남지역의 완전 석권과 서울·경기지역의 당선과 영남·강원·충청지역에서의 약진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충청과 영남지역에서는 야권공조를 통해 민주자유당을 압박한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2)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5년 5월 19일 교통·환경·교육·건강·사회복지 등 12개 분야별로 지방화시대의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각 후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울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3개 지역별 공약개발 모형도 함께 마련하였다.

‘교통난 해소’에 관한 공약으로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신호등을 축소하며, 지하철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함과 동시에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예약택시제와 호출택시제를 도입하고, 택시 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감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해시설을 유치할 경우 사전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공해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녹색 GNP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생태계 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질 좋은 교육확보’에 관한 공약으로 초등학교의 급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자녀교육을 위해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결손 집단에 대한 보호정책을 내놓았다. 고액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1년간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초등교육기간을 5년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한 주민 건강한 지역건설’에 관한 공약으로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자 보건수첩을 발행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해 집중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주민건강협회를 구성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체육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실현’에 관한 공약으로 주민복지행정을 위해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노인 인력은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공공건물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내 고장문화 보전책’에 관한 공약으로 향토문화제를 활성화하고, 읍·면·동까지 도서관을 확충하며 시·군·구별로는 문화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1시 1군에 문예회관을 설립하고 작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살림 살찌우기’에 관한 공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지방세의 정률세를 확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세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간 세목조정으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세인 담배 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상호교환하며 지방세 외 수입을 현실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약속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장려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세 비리 일소대책’에 관한 공약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단일화하고, 군 단위 지역의 세무업무를 통합하며 지방의회의 세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거안정책 마련’에 관한 공약으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재개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주거민의 재입주율을 극대화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행위의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농어업 개선’에 관한 공약으로 통합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농어민의 지출축소 방안을 마련하며 양정제도 개선과 농특세 15조 원의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활성화’에 관한 공약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며 지방정부간 시·도 정책협의회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여성정책’에 관한 공약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원제와 교원실습제로 아동교육을 활성화하며 성폭력범죄 예방책 마련(핫라인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다.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김복동 수석부총재를 위원장에, 조부영 사무총장을 본부장에 임명하여 선대위를 발족하였고, 정석모 김용환 김용채 구지춘 최각규 정상구 이필선 부총재와 한영수 원내총무내정자 등 8명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후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들어갔다.

1) 선거전략

자유민주연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뒤 내각제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기본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의원내각제 추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개발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김종필 총재가 강압에 의해 민주자유당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탈당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반민주자유당 정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 ‘반 민주자유당’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전략도 수립하였다.

시·도지사선거 승리를 위하여 전력의 분산보다는 충청권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청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른바 ‘충청도 핫바지론’을 거론하며 지역정서를 자극하는데 당력을 집중하였다.

또한 열세지역에서는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 강원지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조를 이끌어냈으며, 서울과 호남지역에서는 시·도지사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민주당과 연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 선거공약

자유민주연합은 ‘작은 약속 큰 실천’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의 2종류의 공약을 마련하였다. 중앙공약은 지방공약의 보완 차원에서 지방행정 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중 중앙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할 제도개선 등의 분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공약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및 편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특히 농어민과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행정과 환경’에 관한 공약으로 지방양여금을 확대하여 지방제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해 광역행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환경보호를 위해 상수원지역의 소득보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안지역에 폐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통과 지역경제’에 관한 공약으로 광역교통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 순환버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후보장용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중소기업의 금융 및 세제혜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문화’에 관한 공약으로 고등학교에 학급편성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원의 안식년제를 도입하며 대학정원 및 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지역단위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종합오락시설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며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여성·노인’에 관한 공약으로 작업장별로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체장애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령의 노인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퇴직자 자녀 교육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선거운동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995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고, 법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제1회 지방선거는 신문, 방송광고, TV토론, 방송연설 등 미디어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가.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1995년 6월 15일까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7일까지 첩부하였다. 첩부기준은 자치구의 동인 경우에는 인구 2,000인에 1매, 자치구가 아닌 동의 경우에는 1,4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1,00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400인에 1매 비율이었다. 첩부는 읍·면·동을 단위로 균등하게 후보자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지역구에는 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첩부된 선전벽보는 전국적으로 57,603개소에 774,598매였다. 선전벽보 오·훼손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비닐벽보관’에 선전벽보를 넣어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철거요구 민원이 감소된 것은 물론 우천 시에도 선전벽보 훼손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다.

선전벽보는 선거운동 방법 중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선거인쇄물로 선전벽보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지지도가 좌우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안과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 부심하였다. 특히 많은 선전벽보가 동시에 한 장소에 첩부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후보자 사진은 근엄한 표정의 정면 얼굴로 ‘한 표’를 호소하던 종전의 선전벽보와 비교해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한 선전벽보가 많았다. 선거구호는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화하였다.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선전벽보 상단에 당 마크 외에 당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넣어 민주자유당 후보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후보자들은 녹색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여 각각 자기 당의 공천자임을 표시하였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는 “새로 나는 서울”, 민주당 조순 후보는 “경제시장 조순”, 무소속 박찬종 후보는 “서울을 시원하게”라고 표현하여 각각 서울의 해결사임을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전북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강현욱 후보는 농림수산부장관과 전북지사 등의 행정경력을 내세워 “행동하는 경제도지사”를 선거구호로 내세웠고, 민주당 유종근 후보는 낙후된 전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경제전문가임을 내세워 “뛰는 도지사, 잘 사는 전북”이라는 선거구호를 게재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경남 진해시장에 출마한 김병로 후보는 자신의 기호가 ‘1번’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1등 진해 1등 살림꾼”이라는 구호를 게재하였고, 같은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석곤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신념과 추진력 있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충북 도의회의원에 출마한 제천시제4선거구의 김진학 후

보는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게재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전북 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군산시제3선거구의 김응환 후보는 타락한 기존정치를 타파하고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반신을 드러낸 채 왼쪽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을 선전벽보에 게재하였다.

한편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에 경력(학력·경력·학위·상벌)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후보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선거구 관내에 공고문을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198명에 419건이었다. 서울의 44개 선거관리위원회에 평균 3~4건의 경력 등 허위사실 게재를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었고 지방에서도 평균 2건 안팎의 허위사실 게재 내용이 제보되었다.

이들 대부분이 선거인쇄물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국내외 대학원의 단기연수과정을 이수하고도 마치 그 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과장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방 후보들은 이들의 정확한 학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지역의 한 구의원 후보는 지난 1992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흘간 연수받은 경력을 '최고경영자 과정 연수'라고 기재했으며, 한 구청장 후보는 학부 학력 없이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 대학원 수료 학력을 3개나 나열했다. 또 한 시의원 후보는 재정 향우회 이사나 동창회 임원직을 주요경력으로 내세웠으며, 일부 후보자는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뒤 시민단체 회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에서는 54명의 시의회의원선거입후보자중 33%가 넘는 18명이 자신들의 학력을 대학원 수료로 게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중 단 한 명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전남에서는 시장·군수선거후보 5명, 도의원선거후보 15명이 고졸 이하이면서도 후보등록서류에는 대학원 수료 또는 재학 중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남군의 한 도의원선거후보는 중졸 학력을 행정대학원 1년이라고 기재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 서울시시장선거 선전벽보(정원식, 조순, 박찬종 후보)



▶ 경남 진해시장선거



▶ 충북도의원선거(제천시)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후보자(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제외)가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에서 4면 이내로 제작하여 1995년 6월 15일까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6월 17일까지, 매세대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함께 6월 18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한 매수는 총 209,428,000매(매세대 197,730,000매, 부재자신고인 11,698,000매)였다.

대부분의 선거공보 앞면은 선전벽보의 도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뒷면에는 주로 학력과 경력, 선거공약사항 등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인쇄물이 증질지(신문용지)에 흑색으로 인쇄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전단형 소형인쇄물과 규격과 내용이 중복되어 유권자의 관심을 유발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인쇄물 종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 충남도지사선거 선거공보(박중배 · 심대평 후보)



▶ 인천시장선거 선거공보(최기선 · 신용석 후보)

다. 소형인쇄물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형인쇄물 3종(책자형, 전단형, 명함형)을 제작 배부할 수 있었다. 소형인쇄물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4종(전단형 1종, 책자형 3종)이었으나 선거홍보물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3종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3종을 모두 제작할 수 있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는 책자형을 제외한 2종까지만 제작할 수 있었다.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에서 8면으로 편철 등의 방법으로 제작을 하거나 병풍형태로 접어서 제작할 수 있었으나 책자형의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는 작성할 수 없었다. 전단형은 길이 38cm 너비 27cm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에서 명함형은 길이 10cm 너비 6cm이내에서 제작할 수 있었다. 게재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후보자의 홍보사항 외에도 작성근거와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명·인쇄소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소형인쇄물은 앞서 기술한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와 달리 후보자가 그 내용과 형식, 디자인에 있어 법적인 제한을 훨씬 덜 받는 가운데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자신의 이미지와 정견·정책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선거인쇄물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후보자들은 선거공약 외에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판관포청천’을 자신의 도덕성·청렴성과 연관시켜가며 이미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소형인쇄물의 본문도 종전 선거에서는 공약을 열거하는 데 그쳤으나 유권자들이 게재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만화, 캐리커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각시키려 하였다.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가 작성하여 1995년 6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6월 17일까지 발송하였고, 매세대에는 선거공보와 함께 6월 18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한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103,886,000매(매세대 98,362,000매, 부재자신고인 5,524,000매)였다.

인천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최기선 후보는 인천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을 발전시킬 인물을 내세웠고, 민주당 신용석 후보는 인천 토박이로 언론인으로 몸담아온 자신을 소개하며 새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강우혁 후보는 지방행정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지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책자형 소형인쇄물



▶ 대구시장선거 책자형소형인쇄물(조해녕 · 이의익 · 문희갑 · 이해봉 후보) 앞면



▶ 경기도지사 선거 책자형소형인쇄물(이인제 · 장경우 · 김문원 · 임사빈 후보) 앞면

를 호소하였다.

경기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는 선거구호로 “일등경기 일하는 도지사”를 게재하며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민주당 장경우 후보는 “경기도의 자존심”을 선거구호로 게재하였고, 전문경영인 출신임을 강조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문원 후보는 경기도 출신임을 강조하며 경기발전의 책임자임을 내세웠다. 무소속 임사빈 후보는 다른 선거구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의 출신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경기도 토박이임을 강조하였다.

충남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박중배 후보는 충남 발전을 위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민주당 조중연 후보는 “충남의 운명은 충남인의 손으로”라는 선거구호를 게재하며 충남 자존론을 거론했다. 자유민주연합 심대평 후보는 이제는 충남도 달라져야

한다며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경륜’을 강조하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대구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조해녕 후보는 소형인쇄물을 자신의 사진이 아닌 만화와 캐리커처로 게재하며 대구인물과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하였으나 이른바 ‘TK’ 정서를 의식하여 소속 정당명은 제일 뒷면에 배치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이의익 후보도 다른 후보자와 달리 만화형태로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무소속 문희갑 후보는 대구의 분노를 선거로 보여주자며 대구의 자존심을 강조하였고, 무소속 이해봉 후보는 대구시장을 역임한 인물로 청렴성을 갖춘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하였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여성후보로 경기도 광명시장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전채희 후보는 “왜 전채희인가?”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할 수 있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제13대 국회부의장으로 마포구청장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노승환 후보는 낙후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7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서울의 관문인 마포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부이사장 출신으로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권문용 후보도 강남에 꼭 필요한 경영행정가임을 내세우며 강남을 세계 1등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밖에 연기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상근 후보는 관내 8개 군의 선거공약을 각각 4행시로 게재하였고, 박찬중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창원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용석 후보는 2면과 3면을 서울시장선거 박찬중 후보와 똑같은 도안과 내용으로 ‘서민제일주의’를 강조하였다. 민주자유당 이규열 대구 남구청장 후보는 대구지역의 ‘반민주자유당’ 정서를 감안하여 1면에 당명을 게재하지 않고 기호 1번만을 부각시켰다.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제외)가 작성하여 부재비용은 1995년 6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6월 17일까지 발송하였다. 매세대에는 6월 18일까지 제출한 인쇄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6월 21일까지 발송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송한 매수는 197,410,000매(매세대 192,097,000매, 부재자신고인 5,313,000매)였다.

부산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문정수 후보는 부산발전을 위해 힘있는 시장 후보임을 강조하였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소신있는 시장 활력있는 부산”을 선거구호로 내걸고 행정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 충청지사선거 전단형소형 인쇄물 첫면



▶ 경북지사선거 전단형소형 인쇄물 첫면



▶ 대전시장선거 전단형소형 인쇄물 첫면



▶ 군포시장선거(백남규)



▶ 계양구청장선거(박희룡)

혁과 참여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무소속 강현욱 후보는 “부산사랑, 부산발전”을 선거구호로 게재하고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생산도시, 잘사는 도시’로 만들 것임을 부각시켰다.

대전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염홍철 후보는 대전발전을 멈출 수 없다며 ‘삶의 질’과 최고의 도시를 향한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연합 홍선기 후보는 대전을 미래도시, 경제도시, 녹색도시, 자치도시, 복지도시, 문화도시 등으로 가꾸겠다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충북도지사선거에서 민주당 이용희 후보는 이례적으로 인쇄물 첫면에 자신의 사진을 넣지 않고 여성 3명의 얼굴이미지를 게재한 뒤 “어머니 같은 충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민주연합 주병덕 후보는 “힘 있는 충북”을 강조하며 충북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게재했다.

경북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이의근 후보는 위대한 잘사는 경북, 위대한 경북을 위해 적합한 힘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무소속 이판석 후보는 태극기와 호랑이 얼굴을 배경으로 경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자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경기 군포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백남규 후보는 “군포 청백리”라는 제목 아래 창대신 삼을 들고 말을 탄 기사 복장으로 캐리커처를 넣어 군포시장에 책임자임을 부각시켰다. 인천 계양구청장선거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박희룡 후보는 “장보러 가느냐 투표하러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게재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통상적인 명함과 달리 사진과 현직은 물론 경력을 게재할 수 있었으며, 선거권자수 이내에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한 다음 직접 배부할 수 있었다.

후보자들은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우선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자신을 상징하는 독특한 선거구호를 게재하여 배부하였다. 선거구호로는 “새시대 새인물”, “새일터 새일꾼”, “○○○과 함께 ○○군의 표정을 바꿨시다”, “건강하고 젊은 ○○, 젊은 군수 ○○○” 등을 게재하여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후보자가 있었으며, “발로 뛰는 도지사, 잘사는 ○○”, “활일 많은 ○○, 일 잘하는 ○○○”, “신선하다 우리일꾼, 뽑아주자 ○○○” 등 유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을 강조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그 밖에 “1982년 총무를 맡은 사람, 1995년 ○○시 시장을 맡을 사람”, “도정경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한 자산” 등과 같이 행정경험을 나타내는 구호도 있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선거홍보물을 인쇄하게 됨에 따라 인쇄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들이 인쇄소를 선점하고 값을 올려 선거자금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아예 홍보물 제작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인쇄소에 홍보물 제작을 의뢰했으나 마감일(6월 15일) 이후까지 인쇄가 끝나지 않아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 후보자 중 648명이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116명이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출하지 못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인쇄물 관련으로 많은 탈법·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후보자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주택가 골목, 아파트 우편함이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주차차량의 앞 유리창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가 쉴새없이 제기되었고, 단속을 하더라도 배포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단속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는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이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천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밝히거나 정당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어 내천을 암시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인쇄물을 만들면서 특정 정당의 글자배열과 색상, 편집스타일 등을 모방하거나 당직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장하는 등 탈법행위가 성행하였다.

한편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는 선거인쇄물이 비슷하자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표안내문 봉투(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동봉)를 뜯어보지도 않고 봉투째로 폐기하거나 우편함에 방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선거일에도 투표절차와 투표장소 등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은 투표구를 분구하여 투표소수가 직전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15,346개소)보다 1,884개가 늘어난 17,230개소에 설치되어 유권자의 혼란은 더했다.

선거인쇄물 발송에 따른 사건·사고도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에서는 두 번째로 발송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첫 번째에 모두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 모두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공한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이미 발송된 세대에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방송연설

방송연설은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운동이었다.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가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었으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후보자중 1

인이 시·도지사선거와 같은 방법과 횟수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법상 TV와 라디오별로 가능한 총 56회의 방송연설 중 TV를 통해서는 49회, 라디오는 41회가 실시되었다.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총 39회의 법정가능횟수 중에서 TV를 통해서는 20회, 라디오는 15회가 실시되었다.

〈 표 2-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연설 실시상황

(단위: 회)

선 거 별	매체별	법정가능횟수	실시횟수
시·도지사 선거	TV	56	49
	라디오	56	41
비례대표시·도 의원 선거	TV	39	20
	라디오	39	15

방송연설은 짧은 시간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전수단인 관계로 후보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특히 TV토론회에서 나타난 열세를 만회하고 선거중반 부동층 흡수를 위해 방송연설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후보자들은 방송연설을 통해 다른 선거운동에서 전달하지 못한 정책과 공약사항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며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교통·환경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이 맞는 행정을 통해 교통·환경·주택 등 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주당 조순 후보는 소박함과 정직함 그리고 단호히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직한 성품을 강조했다. 선거중반 문화방송을 통해 방영된 방송연설에서 그는 나이 30세에 미국 유학길에 오른 사연에서부터 민주당 서울시장선거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동기 등을 솔직히 피력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무소속 박찬중 후보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며 연설의 상당부분을 선거참여 유도에 할애하였다.

부산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문정수 후보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강조한 데서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힘 있는 시장은 자신이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

주당 노무현 후보는 자질론을 내세워 방송연설을 통해 서민과 함께하는 개혁시장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 방송시설의 경영·관리자는 자체 부담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녹화방송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방송시설주관 방송연설은 연설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를 공정하게 방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계유선방송사가 공정하게 방송연설을 방송하지 않아 후보자가 방송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박중배 후보는 서산유선방송이 1995년 6월 25일 오후 9시50분부터 10분 동안 대전 KBS TV를 통해 방송된 자신의 방송연설은 중계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오후 10시부터 방송된 자유민주연합 후보의 방송연설은 10분간 그대로 중계했다며 서산유선방송사 대표를 고발했다.

마. 방송광고

방송광고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첫선을 보여 주목을 받았던 선거운동 방법으로 시·도지사선거에만 실시할 수 있었다. 광고횟수는 TV 및 라디오별로 후보자당 각 1분씩 총 3회(재방송 포함)까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거법상 TV 및 라디오별로 가능한 168회의 방송광고 중 TV를 통해 120회, 라디오는 103회가 실시되었다.

방송광고 요금은 시간대별로 TV광고료는 최고 6,000만 원에서 최저 114만 7,000원이었고, 라디오는 최고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다. 여기에 제작비용 2,000만~5,000만 원이 추가되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매체의 특성상 많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광고를 준비했다. 또한 1회 광고가 1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방송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며, 짧은 시간에 시청자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킬 묘안을 짜내기 위해 부신했다.

또한 각 후보들은 1995년 6월 20일~25일 사이에 방송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 기간 중에 황금시간대를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 및 상대후보 측과 각축전을 벌였다. 특히 TV광고의 경우 이른바 '황금시간대' (1995. 6. 25. 오후 9시 뉴스 전)를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라디오 광고도 주부와 운전기사 등의 청취율이 높은 오전 인기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 표 2-6〉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광고 실시상황

(단위 : 회)

선거별	매체별	법정가능 횟수	실시횟수	후보자 실시상황			
				계	전부실시	일부실시	미실시
시·도지사선거	TV	168	120	56	39	1	16
	라디오	168	103	56	31	5	20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는 3대 가족이 등장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서울 살림을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려면 경륜을 갖춘 정원식 후보가 가장 낫다”고 설명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원식 후보를 살림꾼이라며 자질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총리를 지낸 정원식 후보의 경륜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다. 민주당 조순 후보는 “조순 군단의 서울 경영”이라는 주제로 광고를 제작했다. 이 광고는 텔런트와 아나운서, 소설가,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각계 대표가 차례로 나와 조순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와 어떤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증인들이 증언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조순 후보의 경영능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특히 조순 후보는 방영시간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당시 인기 드라마인 “관관 포청천” 1·2부 사이에 광고를 내보냈다. 이는 조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강직하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상대후보에 비해 상당한 차별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소속 박찬중 후보는 “점핑 서울”이라는 주제로 광고를 제작했다. 이 광고는 대사사용을 배제하고 선거구호인 “서울을 시원하게”를 음악과 영상만으로 표현하였다. 박찬중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구는 넣지 않는 대신 서울예술전문대학교 박호준 교수가 작곡한 “솟아오르는 서울”이 배경 음악으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대한 빌딩군, 신문윤전기, 지하철, 삭발한 박찬중 후보의 모습 등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행동하는 시장 이미지를 부각코자 하였다.

부산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문정수 후보는 응급상황에 처한 부산 경제를 긴급 수술한 뒤 유도시합을 벌이는 모습을 담아 ‘힘 있는 시장’과 확실한 ‘경제문제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자갈치시장 상인, 택시기사, 가정주부 등 서민층에 초점을 맞춰 소탈하면서 ‘개혁적인 후보’의 이미지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솔하고 담백한 직접화법으로 표현하였다. 무소속 김현옥 후보는 태종대 일출을 배경으로 조

강하는 장면과 시장 재직 시절 이룬 업적 등을 보여 줌으로써 ‘행정가’ 출신임을 강조하였다.

제주시장선거에서는 우근민, 강보성, 신구범 후보 모두 제주의 풍경들을 배경으로 각각 “밭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주의 큰 인물 강보성”, “세계 속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1등 뱃사공 신구범” 등의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광주시장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김동환 후보와 민주당 송언중 후보가 서로 텔레비전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 측은 광고제작에서부터 방송에 이르기까지 비용부담이 너무 커 방송광고를 일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찬중 후보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 KBS에 미납된 광고비 때문에 KBS 측으로부터 광고접수가 거절되기도 하였다.

바. 신문광고

후보자(시·도지사선거에 한함)는 일간신문에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인구 3백만 명이 넘는 시·도에서는 1백만 명마다 1회씩 추가로 광고할 수 있었다. 신문광고는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에서 통상적인 광고란에 흑백으로 광고할 수 있었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의 신문에 한 번 광고를 내는 것을 1회로 봄으로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에도 광고횟수는 1회로 보았다. 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합동으로 광고를 낼 수 있으나, 이때도 각 후보자가 각각 1회씩 광고를 낸 것으로 간주되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신문광고는 선거법상 가능한 378회 중에서 61.4%인 232회가 실시되었다.

〈표 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문광고 실시상황

(단위: 회)

선거별	법정가능횟수	실시횟수	후보자 실시상황			
			계	전부실시	일부실시	미실시
시·도지사 선거	378	232	56	27	16	13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선거 초반에는 후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낸 뒤,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투표로 연결시키는 단계적 광고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의 1면과 3면 등 가독률이 높은 주요 지면을 선호하였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는 “서울살립,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역시 컴퓨터 황소 정원식이죠!”를 비롯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시장은 정원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행정경험과 집권당의 후보임을 부각시켰다. 반면 민주당 조순후보는 얼굴 이미지만 실어 정직하게 시정을 이끌 인물임을 강조하였고, “조순이요? 결코 굽히지 않는 멋진 분이죠”라는 제목으로 옳지 아니한 일에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경제학자의 이미지를 각각 부각하였다. 무소속 박찬중 후보는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은 박찬중”이라는 제목으로 이미지 없이 단순하게 “기호 7번”만 강조하였다.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신문광고

1
셀로나는 서울
시원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편안한 서울

민주자유당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시장은 역시 정원식입니다”

민주자유당

아담이나 무소속에게 서울살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 산하에 대한의 공권적인 경제권 침투원으로 반정부(사)고, 지역집권이나 부추기는 정당 - 서울살림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민간기업에 이를 중개 하는 것은 출신에게 서울살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수적인 법인, 인가받은 고급한 사람 - 한 번도 조직을 이끌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서울살림을 맡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살리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지방정책을 조직도, 도자를 사해도 있는데

어떻게 서울이 산뜻한 나체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총다시들 서울살림을 파먹아보고 종합행렬 관행을 가진 정당이 -

국회의 일부에 의정하여 보정행렬 정서 -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살림이란 관할할 수 있는 정당이 -

합소같은 혁신, 합쳐야할 정당은 행정적으로 서울을 서울로 바꾸어달 정당이 -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장은 역시 정원식입니다.

1 정원식

조순이요?
결코 굽히지 않는 멋진 분이죠



민주당

경제정책을 실천하는 투자공공성과 금융실권제로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했던 조순 - 한국은행 총재시절, 한국의 역할을 바로잡기 위해 물자 없애 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는 시인편에 서서 비호에게 입할 수 있는 시정입니다.

언제나 주저없이 그릇을 부를 수 있는 사람 - 세상에 주저할 수는 한국공공성의 일방적 제지.

한동안 “기호” 호로 알려진 박찬중 사람 - 조순은 경제와 생활의 일치, 그 제정행위 (합당금-1)을 증명할 의무행위로 일고 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 교육이시 비록 비호성에서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적 공백이어서 깊은 학내의 인정으로 인정받은 그는, 무엇보다 시인이나 학내의 열 손에 배려 받던 박찬중에게 무소속을 맡은 것은 물론 정당입니다.

정당에 배척당할 정도로 비호성에서 일고 있던 사람. 공생의 공무와 행정행위는 서울을 바로잡는 데 정당하게 하시는 것은 서울 -

역시 시장일 - 조순이 좋습니다.

서울 포항현 -
2 조순

부산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문정수 후보는 “부산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부산발전-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부산경제를 희생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대 걸 곳은 부산뿐입니다!”라는 제

목으로 서민의 시장 노무현과 소신에 찬 출마배경을 소상히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무소속 김현옥 후보는 “불도저 시장, 김현옥”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행정력을 강조하였다.

경기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는 “눈높이가 다른 사람 이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등경기 통일한국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하였다. 민주당 장경우 후보는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경기도를 위한 약속을 지키는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무소속 임사빈 후보는 “신바람 나는 경기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정치꾼이 아닌 살림꾼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전북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강현욱 후보는 “전라북도 역대 최고의 도지사로 선정”이라고 게재된 과거 『월간조선』 기사를 인용하며 전문행정가임을 부각하였다. 민주당 유종근 후보는 “35년 푸대접에 종지부를 찍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소외받은 전북도민의 감정을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전남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전석홍 후보는 “전남의 산과 들, 바다와 섬,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전남출신과 행정전문가를 내세웠다. 민주당 허경만 후보는 “이제는 희망을 만들어 가야할 때”라는 제목으로 전남도민을 위해 도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광주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동환 후보는 “바뀌야 광주가 새로워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였고, 민주당 송언종 후보는 “자랑스런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광주 건설과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5년 6월 19일 신문광고를 통해 “우리의 대구를 포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 한 사람 당 100만 원짜리 빗쟁이를 만들려는 사람, 지역구도 못 살리면서 대구를 살리겠다는 사람, 시장선거를 국회의원선거로 착각하는 사람 등 대구를 포기하는 선택 7가지를 게재하며 다분히 무소속 문희갑 후보를 겨냥한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문희갑 후보는 반발하며 다음날 “문희갑이 드리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결코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지 않으며 민주자유당이 죽인 대구 경제를 살리고, 깨끗한 정치세력을 키우겠다는 반박광고를 게재하였다. 또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구지사선거 문희갑 후보 신문광고

경북지사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이의근 후보와 무소속 이판석 후보 간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두고 한 차례 공방이 있었다. 무소속 이판석 후보는 “김영삼 정권은 경북을 버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노태우 정권에 비해 각각 16.46%와 1.66% 증가에 그쳤다면 푸대접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 이의근 후보는 내무부 자료를 인용하며 1992년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1991년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로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이며 1993년부터는 유류특소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경북지사선거 이판석 후보 신문광고

사.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2회, 지역구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국적으로 개최된 합동연설회는 법정개최 횟수인 5,085회의 94.0%인 4,787회였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당 평균 16회씩 개최된 셈이었다. 미개최된 283회는 무투표 선거구인 관계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후보자 전체가 참여를 포기하여 미개최한 경우도 16회(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4회)가 있었다.

합동연설회는 정당·후보자연설회나 공개장소 연설·대담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청중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데다 전파력도 강해 각 후보들은 합동연설회에서 정책대결을 벌였고, 상대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설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무소속 후보자들은 정당추천 후보자와 겨뤄야 하기 때문에 합동연설회를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보고 부동표 흡수에 안간힘을 쏟았다.

선거초반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를 통해 제각기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지지층을 안정화하고 부동층을 공략하여 지지도를 상승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선거중반에 가까워지면서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전북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전은 가열되었고 후보자들 간의 정치적 공방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청중 앞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가 하면, 심한 인신공격을 퍼부어 비방과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언론 등에서는 정치권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지역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치논점을 제시하다가 자칫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는 대신 지역개발 등의 공약발표에 주력하였다.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경륜을 강조하면서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당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의 '상머슴론' 과 '인물론' 을 내세워 타당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김대중 이사장의 본격적인 선거전 가세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김영삼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한편, 지방선거를 '민주자유당 대 민주당' 의 정당대결로 압축하고 민주자유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모습이였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김영삼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임을 내세우며, 중앙집권주의의 뿌리 깊은 폐해를 청산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자유민주연합 후보자들은 충청도가 타 지역보다 낙후된 이유는 그동안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충청도 핫바지론' 을 내세워 지역정서를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각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에서 정책대결을 벌이며 총력전을 벌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합동연설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첫째, 연설회가 후보자의 세 과시용으로 전락하여 동원된 청중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인천의 한 시의회의원선거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는 후보들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지지운동원이 200~300명씩 빠져나가 연설회가 끝날 때쯤에는 청중이 수십 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청중 동원의 실체가 드러난 경우도 있었는데, 송파구청장 선거합동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해 달라는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청중 52명을 모은 뒤 이중 36명에게 2만 원씩을 건네준 선거운동원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둘째, 후보자들이 정책대결보다는 후보간의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후보자 비방 등으로 유권자들의 빈축을 샀으며, 이로 인해 선거 무관심증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충북의 시장선거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는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개짓는 소리를 한다”고 상대를 비방했고, 또 부산의 한 시의회의원선거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 후보는 상대를 “일은 탄전이고 흥청망청 돈이나 쓰는 기생 오라비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여 청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제주시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서는 한 후보가 “빛더미 속에서 집 팔고 나온 후보와 부녀자 강제추행, 사기전과가 있는 후보를 찍어서야 되겠느냐”며 상대 후보들을 비난하자, 이에 맞서 “박수부대나 동원하는 알박한 정치상술을 쓰는 사람이 시정잡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조강지처를 버린 게 실질적인 전과자”라고 맞받으며 비방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구청장 선거합동연설회장에서도 후보자들이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는 전과자”, “원고 없이는 연설도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비방을 주고 받았다.

연설내용을 두고 상대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 서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모 후보가 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하자, 이에 맞서 상대후보는 “의원 활동과정에서 돈도 받고 향응도 받았다. 사람이 살다보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고 폭로내용을 시인하였다. 이런 두 후보의 유세내용을 지켜본 다른 당 후보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에 해당되고,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양쪽 후보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다.

수원 신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수원시시의회의원선거(권선구 세류3동 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 이태호 후보는 상대후보인 박운용 후보를 지칭하며 “간통 및 추행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며 “한 표도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박운용 후보로부터 고발되었고, 이태호 후보는 구속되었다.

그 밖에 사건·사고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 창신초등학교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의원선거(종로구 제3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 택시기사 박성원은 10부제 해제에 항의하며, 청중저지선을 넘어 연단 앞까지 다가가 민주자유당 박선오 후보에게 욕설과 함께 모래를 던지며 연설을 방해하여 긴급 구속되기도 하였다.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원선거(회경제1동선거구) 합동연설회에서는 5명의 후보 중 3명이 연설을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확장장비가 폭우로 사용이 어렵게 되자 나머지 2명의

후보는 자신의 휴대용 확장장치를 사용해 연설을 속개하였다. 또 전북 남원시장 합동연설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연설도중 전력 과부하로 앰프 연결전선에 화재가 일어나 연설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선복구 후 잔여시간의 연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후보자가 거절하였다. 그 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회가 종료된 후 후보자와 참석한 청중에게 사과방송을 하였다.

아. 정당·후보자 연설회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제외)·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청중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연설회 개최횟수는 선거별로 달랐다. 시·도지사선거는 구·시·군마다 3회,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2회,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마다 1회였다.

연설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고지벽보를 첩부할 수 있었다. 첩부매수는 시·도지사선거는 200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0매, 지방의회의원선거는 50매였다. 연설회 장소에는 연설회 장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확장기는 연설회장 안에만 설치해야 했다.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공개장소 연설·대담과 달리 대규모로 청중을 모이게 하여 개최되는 관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한 장소에서 합동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적으로 개최된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모두 3,910회로 법정개최 가능횟수 21,445회의 18.2%에 불과하였다. 선거별로도 지역이 넓거나 관심도 부족으로 청중을 모으기 어려운 선거일수록 개최율이 극히 저조하였다. 이와 같이 개최율이 저조한 것은 첫째, 후보자들은 개최가 자유로운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치중했고, 둘째,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유권자들이 모일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4일에 불과하나 대부분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이를 피해가면서 일정을 짜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방에선 지역별로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을 가장 선호했지만, 장날은 선거운동기간 중 3일 정도에 불과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8〉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 연설회 개최상황

(단위: 회)

법 정 개최횟수	정 당 별 개 최 횟 수					
	계	민주자유당	민 주 당	자유민주연합	대한민주당	무 소 속
21,445	3,910	978	760	267	2	1,903

여야 3당은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데다 선거운동기간도 짧아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의 면면을 보고 투표하기가 힘들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러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정당 연설회가 정당의 정책이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한 곳으로 모아 합동으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중앙당 당직자들은 물론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여 지원유세를 펼쳤다.

각 정당들은 1995년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당연설회에 돌입하여 초반 대세장악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선거중반에 이르러서는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정당연설회를 집중 개최하였다. 하지만 여야 각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무관한 ‘세대교체론’, ‘지역등권론’, ‘중간평가론’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자유당은 김대중 이사장의 ‘지역등권론’과 ‘야권연대’를 비난하면서 안정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여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집중공략 대상으로 정해 김덕룡 사무총장과 이춘구 대표가 수시로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춘구 대표는 당진과 공주군 등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를 겨냥하며 “30여 년 동안 자신을 혈똥어온 사람과 한통속이 돼 지역분할을 획책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사람과 연대한다면 과연 국가보안법을 사수해야 한다던 그분의 소신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냐?”고 반문하며 야권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김덕룡 사무총장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이번 선거를 정치생명연장과 정계복귀의 발판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지방자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형우 국회의원은 김대중 이사장의 지역등권주의를 거론하며 “대통령제로는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 까 내각제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구 대표는 청주 대전 충주 춘천 등 중부권 지역의 연설회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오로지 두 사람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정권욕의 볼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덕룡 사무총장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전북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김대중 이사장의 지역등권론은 온 국토를 조각내고 야합해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야합까지 하려는 것을 국민이 말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울 송파·강동 연설회에서도 김대중 이사장과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개혁과정에서 이미 도태된 사람이라며 “지역감정을 이용해 지방자치제를 망치게 한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장선거 정원식 후보와 서초구청장선거 조남호 후보의 정당연설회

민주당은 당시 지방선거가 각종 대형사고로 얼룩진 김영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고 견제와 대안세력으로서 제1야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김대중 이사장은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지원연설을 통해 세대교체론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의 정치활동 재개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민주당의 정당연설회는 지역별로 우세 또는 백중 지역에 집중되었고, 민주자유당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기택 총재와 김대중 이사장이 지원연설을 펼치며 총력을 기울였다.

이기택 총재는 경남 양산 등에서 개최된 연설회에서 민주당은 호남당이 아니라 50년 동안

독재에 맞서온 제1야당이라며 “여당사람을 밀어주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 인지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제는 야당을 밀어줄 때” 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초·강릉유 세에서도 “강원도민이 역대선거에서 여당후보를 찍었지만 얻은게 뭐가 있느냐?” 고 반문하고 민주당지지를 호소했다.

김대중 이사장은 인천 부천 등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현 정부의 인기도는 지금 20% 이하로 바닥 수준”이라며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임을 강조하였다. 또 안산 광명 구로 등 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나는 결코 식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1980년 김영삼 대통령이 정 계은퇴를 선언해놓고 지키지 않는 등 더 많이 식언을 했다”며 자신의 정치활동재개에 대한 여 당의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또 “국가위기에 노병도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듯이 당이 어려움 에 처해서 백의중군의 심정으로 지원에 나선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후보의 지원연 설을 정당화하였다. 그는 전남 함평 영광과 전북 고창 김제 정읍등에서 개최된 민주당 후보지 원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세대교체론을 반박하고 지역차별철폐와 지역등권주의 실현 등 을 주장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대해 “진정한 세대교체는 무능에서 유능으로, 불성실에서 성 실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중반에 이르러 야권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야권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며 투표에 의한 야권 후보단일화 를 주장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김종필 총재가 연설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김영삼 정부 를 심판하기 위해 자유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당연설회는 특히 당선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전 충청 및 강원 등 우세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충북 청주 영동 등을 순회하면서 “민주자유당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자민련 후보를 찍는 것이 현 정권을 혼내주는 방법”이라며 여당만 찍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면서 “자 민련을 찍어 충북의 기백을 보여주자”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는 국 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많이 안겨줬다”며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과천 광 명 안산 인천을 순회하며 지원연설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도 대통령이 계속 잘못 을 저지르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총재는 서울 노원·도봉, 의정부, 철원 등에서 개최된 연설회에서 “나도 1960년대 초에 혁명해봤지만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되는 데 18년이 걸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5

년 동안에 세상을 모두 뒤집고 바꿀 수 없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추진 방식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통합을 하면서 의원내각제개헌을 추진하기로 사인까지 해놓고 이를 어겼다”면서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충남 청양 공주 부여 등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김영삼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라며 “자민련후보를 팡팡 찍어 현정부를 심판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관권개입과 청중동원 문제와 관련해 맞고받하는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은 1995년 6월 21일 나주 남산공원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주자유당 전석홍 전남지사 후보의 손을 들어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도 민주당이 6월 20일 김대중 이사장이 참여한 해남지구당과 보성지구당 연설회에 관광버스 20대와 10대를 각각 빌려 진도, 여수, 여천지역 주민을 동원하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자. 공개장소 연설·대담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일명 ‘개인연설회’라고도 불리는 이 연설회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옥외는 물론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옥내모임에도 참석하여 연설·대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유신정권의 출범에서부터 지난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계속 금지된 것은 이 연설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제외)와 그 배우자 및 연설회원(시·도지사선거에 한함)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횡수에 제한 없이 연설을 하거나 대담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확장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 확장장치를 같은 시각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장장치만 사용이 가능했다. 연설·대담장소에는 표지 1매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해야 했으며, 차량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선전벽보·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차량에 부착할 수 있었다.

연설·대담용 차량의 형태나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확장장치의 출력 또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연설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었으며, 차량용 확장장치는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당가나 로고송을 방송할 수 없었으며,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방영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도 이를 허용하게 되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갖가지 다양한 연설·대담차량이 선보였다. 트럭을 개조해 대형 점보트론과 연단을 갖추고 갖가지 선전문구가 게재된 차량을 운행하는 후보가 있었는데, 자전거·오토바이·리어카 등 이색적인 연설·대담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쓰레기 청소대행업회사의 대표로 있는 후보자는 청소차에 쓰레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해 유권자의 시선을 끌며 한 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선거구가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군수 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자는 소형선박을 전세내어 ‘해상유세’를 펼치기도 하였다.

후보자들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정치적 쟁점보다는 주로 지역별 공약이나 정견 등을 발표하거나 후보자들 간에 제기되었던 논란에 대한 해명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들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는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급식제의 초·중·고 확대 실시’를 공약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도 제시하였다. 이에 민주당 조순 후보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정만을 거듭해 왔다면서 여당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적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자신은 재정마련 방안 없이 정책이나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정원식 후보의 공약을 겨냥하였다. 무소속 박찬중 후보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홍길동식의 시원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자신의 강점인 ‘젊음’을 부각시켰다.

부산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문정수 후보는 부산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만 적체현상 등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3당 합당에 반대했던 소신있는 후보자임을 강조하며, 김대중 이사장의 지역동권을 비판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탈당설에 대해 당선을 위해 이 당 저 당

움아 다니는 보따리 장사꾼은 되지 않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하였다.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 서울시장선거 조순 후보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대구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조해녕 후보는 '문화갑 후보의 외자 30억 달러 도입' 공약은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빚을 안겨 대구를 죽이는 지름길이라며 그런 외자도입 공약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해봉 후보도 지금은 국내자본이 충분하므로 외자도입이 필요 없다며 외자도입 반대를 주장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이의익 후보는 외자 30억 달러 도입은 시민을 혼란시키는 마구잡이 공약이라며 한국이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30억 달러를 빌려온단 말이나며 문화갑 후보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무소속 문화갑 후보는 뚜렷한 재원조달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외자도입을 비난하는 것은 무식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자신의 외자도입 주장을 비난하고 있던 상대후보들에게 역공을 가했다.

경기지사선거에서 무소속 임사빈 후보는 토박이인 자신을 선택하여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키게 해달라며 지역연고가 없는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는 토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경기도청과 맞먹는 제2청사를 의정부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민주당 장경우 후보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였고, 자유민주연합 김문원 후보는 수원천 주변 정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월공단 부근의 오·폐수

및 오염감시도 보다 철저히 하겠다며 환경공약을 내세웠다.

인천시장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최기선 후보는 정부는 ‘굴업도 핵폐기장’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용석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강우혁 후보는 재조사 자체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을 수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석 후보는 문민정부 출범 후 인천은 굴업도 핵폐기장 등 대규모 위험·혐오시설이 들어서서 무기력한 도시로 변모하였다며 정부정책을 공격하였다. 강우혁 후보도 주민의견 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민독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전북지사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강현욱 후보는 2백만 도민을 상대로 도지사 연습을 할 수는 없고 도지사가 살림을 잘못 이끌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고위 관료출신인 자신의 경륜을 강조하였다. 지역정서에 대해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전북당의 당원’이라면서 김대중 이사장의 바람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민주당의 유종근 후보는 이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강조하며 ‘심판론’을 제기하였다. 또 강현욱 후보가 ‘전북당의 당원’임을 내세우는 것은 ‘세 불리함’을 회피하려는 치졸한 연극이라며 반박했다.

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언론기관 대담·토론회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거니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가 토론회 개최 방식을 문제삼아 토론회를 기피함으로써 개최되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4절 선거운동”과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 제4절 선거운동” 참조).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TV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언론기관은 자율적으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정당의 추천,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였다. 그 결과 언론기관은 시·도지사선거 24회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1회 등 총 55회의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언론기관 토론은 질의자와 후보간의 질의응답형식 뿐만 아니라 후보들 상호간의 열띤 토론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유세장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브라운관을 통해 각

후보들의 인격이나 자질, 소양 등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서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특히 TV방송사들은 좌석 배치, 화면 연출 등 기술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후보 간 반론을 유도하는 자료화면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토론회를 박진감 넘치는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쟁점 위주로 비교적 활발한 토론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사전녹화에 의한 준비화면으로 각 후보 진영의 추천사를 삽입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언론기관 토론회는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일 전에는 토론회가 불가능하게 돼 있었으나 “취재 형식이라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기간 전에도 개최되었다. 1995년 5월 27일 한국방송공사(KBS)는 서울시장선거 주요 후보를 대상으로 ‘특별합동회견’의 형식으로 사실상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5월 29일에는 서울방송(SBS)이 인천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해 같은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관훈클럽은 서울시장선거 후보 조순(5월 23일), 정원식(5월 24일), 박찬종(5월 26일)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장선거에서는 TV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선거는 매우 부진하였다. 인천시장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최기선 후보가 당초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으나 유세일정을 이유로 갑자기 연기를 요청하였고, 결국 열리지 못했다. 또한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가 민주자유당 경기지사 후보경선에서 낙선한 후 본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사빈 후보가 참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서울시장선거에서도 서울방송(SBS)이 선거일 전일에 개최하려던 토론회가 조순 후보의 참여거부로 무산되었다. 때마침 제기된 자신의 전력시비에 대해 비난하면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도지사선거에서 이른바 ‘빅3’라고 불리우며 가장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시장선거의 TV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서울시장선거 TV토론은 방송3사(KBS, MBC, SBS)가 각 1회씩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다양한 형태로 토론회가 열렸다.

1995년 6월 11일 문화방송(MBC)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는 민주자유당 정원식, 민주당 조순, 무소속 박찬종 후보 등 세 명의 주요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서울의 여러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신상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당초 공직선거 사상 첫 자유토론으로 계획됐으나 후보자들 간의 활발한 공방은 거의 없이 사회자와의 문답 위주로 진행됐다.

서울시 부채 4조 원의 해소방안에 대해 정원식 후보는 “서울시의 부채 중 86.9%는 지하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1~3호선의 재원 중 불과 3%만 담당했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 후보는 “서울시의 부채 중 원래 중앙정부가



▶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1995년 6월 23일)

가 9조원에 이른 2기 지하철 5~8호선 비용 중 2조 원을 대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켰으면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후보자의 신상문제에서 정원식 후보는 전교조의 복직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에게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해직교사 문제를 거론했었다”고 말했다.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에 갔을 당시 술에 만취돼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게 사실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행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나를 음해하는 거짓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중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비서관은 경기고와 사법시험 후배로서 선후배관계로 만났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신 헌법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국제신문에 기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지역 보안책임자가 내 이름을 빌려 기고하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순 후보는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 재직 때 금융실명제와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총리나 총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답변했다.

1995년 6월 17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유세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던 영상을 방영하며 후보자 간 상호토론을 유도했다. 토론회에서 박찬중 후보는 조순 후보의 세계잉여금 1조 2천 억여 원의 탁아소 건립 공약과 관련하여 “그

것은 미집행 세출예산으로만 잡혔었지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며 조순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조순 후보는 “남아 있다면 그런 복지 분야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정원식 후보가 박찬중 후보에게 “서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원마련 대책을 묻자 박찬중 후보는 “정원식 후보가 당선되면 재원확보가 되고 조순 후보나 제가 되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무세와 도세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주장했다.

1995년 6월 18일 서울방송(SBS)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세 후보자 간 상호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박찬중 후보의 유신지지 전력 문제로 1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순 후보측 참관인은 1972년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신헌법을 찬양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서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찬중 후보는 보충질문은 토론내용 중에서 하기로 한 사전합의에 어긋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 지역등권론이 선거쟁점으로 등장한 데 대해 정원식 후보와 박찬중 후보는 지역등권론이 결국은 지역할거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순 후보는 지역등권론 반대를 통해 ‘호남표 고립화’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방송 3사의 토론회와는 별도로 한국PC통신과 한세정책연구원은 합동으로 1995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민주자유당 정원식, 민주당 조순, 무소속 박찬중·황산성 서울시장 후보를 매일 한 명씩 초청하여 질문자와 토론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토론회 기간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한 시간씩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행정학과 교수, 환경·교통·여성·행정 분야 학자, 20~30대 대표 등 9명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질문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면 후보자가 이를 역시 컴퓨터로 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실시되었다.

언론기관 대담·토론과 관련으로 사건·사고도 있었다. 대구시장선거에서는 무소속 안유호 후보자가 토론회에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대구 문화방송에 난입하여 주조정실의 철문을 파괴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대구문화방송에서 안유호 후보자를 초청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 미만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뒤 안유호 후보는 토론회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카. 단체의 대담·토론회

단체(정부투자기관, 관변단체, 후보자관련단체, 사적모임 등을 제외)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토론회 주체자의 성명, 대담·토론회의 주제,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개최장소에는 단체의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해야 했다. 이러한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214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245개 선거구(시·도지사선거 15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30개) 중 87%의 선거구에서 토론회가 열린 셈이었다. 이와 같이 단체의 토론회가 활발하게 개최된 것은 종전선거 때보다 토론회 개최 자격이 완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불참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빠지지 않고 토론회에 참석하느라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선거참모들과 토론회 대책을 숙의해야 했다. 그 결과 유권자와 대면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어 곤혹스럽다고 호소하는 후보도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과 공약에 대해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급조된 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회가 민원해결이나 단체홍보용으로 전락하여 토론회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대부분의 토론회가 후보들 쌍방 간의 토론이 아닌 토론자와 후보자 간의 토론회로 진행돼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토론회가 활성화되어 기존의 돈이나 조직, 연고 중심의 선거풍토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선거구의 단체의 대담·토론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5년 6월 13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가 주최한 대전시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지역경제발전 문제를 두고 정책대결을 벌였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토론자와 후보들은 대전의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반면 민주자유당의 염홍철 후보는 신흥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며 의견을 달리하였다. 이에 민주당의 변평섭 후보 등은 진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전망이냐고 되물었다. 반론에 나선 염홍철 후보는 경제위기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통계 때문이라며 일부 기관의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995년 6월 19일 ‘공선협’이 주최한 종로구청장선거 후보자 등 초청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경륜’, ‘일꾼론’,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자유당 배문환 후보는 1985년부터 5년 6개월간 종로구청장을 지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종로를 정치뿐 아니라 경제·역사·문화의 1번지로 키우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민주당 정홍진 후보는 지난 4년간 서울시의원을 지낸 의정활동 경험과 정치지도력을 갖춘 본인이야말로 종로를 키울 수 있는 일꾼이라며 ‘일꾼론’을 주장했다. 무소속 전재갑 후보는 자신이 종로구에서 20년간 살아온 토박이임을 강조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창신·송인동 등 낙후지역 재개발 및 환경개선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1995년 6월 19일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한 인천시장선거 후보자 등 초청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에는 동감하면서도 방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신용석 후보는 시민투표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자유민주연합 강우혁 후보는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그 자체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민주자유당 최기선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하였다. 그 후 시민단체의 비난이 고조되자 최기선 후보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 밖에 수원시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는 수원천 복개 등 환경관련 정책을 놓고 각 후보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안산시장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시화담수호 보존에 관해, 성남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는 분당의 서울남부저유소 건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단체의 대담·토론회가 유력후보들이 참석을 거절하여 토론회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5년 6월 13일 ‘경인일보’가 주최한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에는 경기지사 후보 4인(이인제·장경우·김문원·임사빈 후보)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인제 후보가 언론기관 대담·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경선결과에 불복한 부도덕한 사람에게 왜 기회를 주느냐며 임사빈 후보가 참석하면 불참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주최 측은 임사빈 후보를 제외한 3인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6월 16일 ‘경실련 경기협의회’와 6월 20일 ‘경기북부지역 유권자’들이 주최한 토론회도 같은 이유로 이인제 후보가 불참하여 결국 토론회 개최가 무산되었다. 이에 민주당 장경우 후보는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TV

토론을 약속하였다가 끝까지 거부한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며 비난했다. 임사빈 후보도 민주자유당의 불공정 경선사례를 폭로하는 등 이인제 후보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자격 문제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 학생회 등 학생단체들이 후보자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벌이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헌법과 교육법상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목포대와 목포전문대 학생회의 목포시장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이미 개최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준비해 오던 조선대, 전남대, 광주대 총학생회는 토론회를 막는 것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무리한 조치이고 이미 치러진 대학 토론회와도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타. 현수막 게시

현수막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제외)가 천으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었다. 게시수량은 선거별로 달랐다. 시·도지사선거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이내였으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읍·면·동수 이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안에 1매를 게시할 수 있었다.

현수막은 법정게시 매수 47,139매의 95.3%인 44,903매(교체매수 9,842매 제외)가 게시되었으며, 이는 전체 3,700개 읍·면·동당 평균 12매의 현수막이 게시된 수치였다.

당시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빨리 마치면 그만큼 눈에 띄는 현수막 게시장소를 선점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후보자등록 접수경쟁이 벌어졌다. 먼저 등록을 하기 위해 등록기간 첫날 이른 새벽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도 사거리나 시장·터미널·역 부근 등 목 좋은 곳에서는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먼저 현수막 게시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쉽게 제작·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의 기호·성명 등을 단기간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동시선거에서는 과다하게 게시되어 도로를 점거하게 되고 교통신호를 방해하며 게재 내용에 한계가 있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지되었다.

사건·사고도 있었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투표일 전일 현수막 등 각종 선거게시물을 철거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서울 서대문구)

토록 후보자에게 독려하여 민주당 추천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대부분 철거하였으나 다른 후보자들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유언비어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철거한 후보자 측에 다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안내하였고,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후보를 사퇴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첩부하여 수습하였다.

파. 기타 선거운동

앞서 기술한 선거운동방법 외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경력방송’, ‘컴퓨터 통신’, ‘전화’, ‘자필서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었다.

‘경력방송’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만 가능한 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원고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KBS)가 후보자마다 매회 1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3회 이상,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각 2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방송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시·도지사선거 90회,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920회 등 총 1,010회의 경력방송을 실시하였다.

한국방송공사(KBS) 외의 방송시설도 자체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할 수 있었는데, 모든 선거 후보자의 경력방송이 가능하였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원고에 의해 선

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방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아닌 방송시설에서는 모두 1,848회의 경력방송이 이루어졌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1995년 6월 11일부터 선거일 전 날인 6월 26일 오후 12시까지만 가능하였다. 유권자는 직접 연설회장에 가지 않고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데이콤·한국PC통신·나우콤 등 컴퓨터통신업체들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게시판’ 등을 개설해 후보자 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후보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정원식·조순·박찬중 후보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광장’을 개설하고 신세대 및 부동층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뉴미디어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기간에 할 수 있었으나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이를 할 수 없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화 내용을 미리 녹음하였다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유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하지만 자동응답장치(ARS)에 홍보내용을 녹음하여 전화를 걸어오는 유권자에게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허용되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였고, 전화번호부는 물론 동창회·직장·교우회·고객명단 등 유권자 개인의 신상정보 확보에 안간힘을 쏟았다. 정당추천 후보들은 각 정당에 비치된 자료를 이용하거나 당 조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자필서신(인쇄 및 복사본은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등이 자필로 쓴 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자필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운동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선거운동 대상을 분명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언론보도
(동아일보 1995년 6월 11일)

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자필서신은 후보자나 자원봉사자 등 선거권자가 직접 써야 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후보에게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실제 선거에서는 불법으로 인쇄본 또는 복사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송자를 가명이나 차명으로 하거나 발송지로 원거리 우체국을 이용하여 찾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성행하여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폐지되었다.

3. 선거쟁점

가. 지역등권론

‘지역등권론’은 김대중 이사장이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내세운 주장으로, 일부지역 특권층들이 국민 대다수를 지배하는 지역패권주의로부터 각 지역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이사장은 1995년 5월 26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연 등에서 “지역등권주의란 정권을 배출한 특정지역만이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살았던 지역패권주의와 달리 15개 시·도 모두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은 권리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각 지역이 수평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수직적 상하관계에 매여 있던 과거보다 진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연일 비난하고 나섰다. 김대중 이사장은 지역패권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맞받아치며 공방이 가열되었다. 여기에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지역특성과 토양에 따른 주민의 판단을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선택에 대한 도전이라며 김대중 이사장을 거들고 나서는가 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지역등권론’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 ‘지역등권론’은 선거기간 내내 쟁점으로 부상하여 논란이 되었다.

민주자유당은 김대중 이사장이 ‘지역등권론’을 통해 지역을 분할하고, 대구·경북의 이른바 ‘TK정서’ 동조세력을 한데 묶어 부산·경남 지역을 에워싸, 민주자유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지역감정 조장행위라며 비난하였다. 민주자유당 박범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역등권주의란 부산·경남 지역 사람과 호남지역 사람

이간시켜 노골적으로 싸움을 붙이려는 무책임한 선동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민주자유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김태식 사무총장은 김대중 이사장에 대한 집단 콤플렉스가 심각한 상태라고 일축하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중앙 집중의 폐해를 지방분권에 의해 해소하자는 것이며 이는 지역등권론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지방화시대에 대한 원론적 주장을 고질적인 지역감정으로 악용하려는 민주자유당의 저의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자유당이 지역등권론을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등권론’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기택 총재는 “통일을 앞둔 이 마당에 지역을 분할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며 이는 시기에도 맞지 않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전당대회 후 동교동계와 이기택 총재 간에 일시적으로 봉합된 내분이 ‘지역등권론’으로 인해 다시 불협화음이 표출되었다.

‘지역등권론’ 파장은 급기야 양김(김대중·김종필) 퇴진론으로 번져갔다. 민주당 이부영 부총재는 1995년 6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노무현 부산시장선거후보의 지원연설에서 “지역등권론은 손바닥 하나만 뒤집으면 지역할거주의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북통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통령이 안 되니까 내각제를 추진해 형님, 아우하면서 권력을 주고받으려 하고 있다”며 양김(김대중·김종필)을 비난하였다. 이부영 부총재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대중·김종필씨는 뜻 있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양김 퇴진을 촉구하였다.

지역등권론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있었다. 김윤환 정무장관은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느 정도 지역등권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역등권론’에 대해 수용의사를 보였다. 그렇지만 김대중 이사장의 지역등권주의나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지역분할주의는 지역감정을 다시 부추켜 정권장악을 노리는 것인 만큼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3김 시대의 부활은 정치발전의 퇴행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나. 세대교체론

1995년 6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세대교체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6월 24일자 커버스토리로 소개되었다. 6월 26일자 제주신문 창간기념 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그 내용은 “80% 이상의 국민들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차세대 정치인들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은 세대교체가 대통령 직선제 아래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밝혀 내각제 개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미묘한 시점에 나와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타임지와 인터뷰한 1995년 6월 14일은 김대중 이사장이 호남순회 강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민주당의 정당연설원으로 등록하겠다고 밝힌 날이었다. 시기적으로도 김대중 이사장이 ‘지역등권론’을 강조하고,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내각제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해 ‘반 김영삼 연대’를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세대교체론’은 자연히 여야 논쟁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민주자유당은 “김대중 스스로 천명이 다했다고 물러섰다가 권력욕에 불타 다시 나타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세대교체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망”이라면서, 김대중이사장의 정계복귀가 세대교체의 대세를 역류하는 것임과 그가 세대교체의 직접적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도부의 성명과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김대중과 김종필을 구시대의 인물로 치부하며 ‘세대교체’를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때마침 민주당 내에서도 이부영 부총재가 양김(김대중·김종필) 퇴진을 주장하자 즉각 동조하고 나서며 ‘지



▲ 김영삼 대통령의 『타임(TIME)』지 회견 (동아일보 1995년 6월 20일)

역등권론'은 손바닥만 뒤집으면 분열주의다, 전국을 갈가리 찢고 있다, 자기당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분명 김대중 이사장이 지역분열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대교체론'을 김대중, 김종필을 직접 겨냥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뒤흔들어 놓기 위한 고도의 책략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였다. 김대중 이사장은 전남지역 지원유세에서 "세대교체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인사를 매장시키기 위해 내세운 반민주적 주장이었다", "70년대 김대통령과 나는 40대 기수론을 주창한 적은 있으나 결코 인위적 세대교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또 "인위적 세대교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은 인위적 세대교체론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도 서울 경기유세에서 선거 때만 되면 세가 불리한 여권이 상투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세대교체라며 김영삼 대통령과 측근들이 주장하는 세대교체론은 민주자유당 내 소수인 민주계의 정권유지 연장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자유민주연합 안성열 대변인도 "세대교체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퇴장시키기 위한 방약무도한 발상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 충청도 핫바지론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 김종필 총재는 김영삼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지역적 지지기반인 충청권의 결집을 위해 '충청도 핫바지론'을 내세웠다. 이는 민주자유당 대표 시절 강압에 의해 탈당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반민주자유당 정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종필 총재는 후보자 지원연설 때마다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에서 충청권만 소외돼 왔으며 충청도민들이 단결하여 자유민주연합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김영삼 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 논쟁은 충청권에 출마한 자유민주연합 후보자에도 번져 개인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등에서 이를 강조하였고, 상대 후보자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며 반박하면서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1995년 6월 13일 온양온천역 앞 유세에서 "이 선거에서 푼푼

몽처 김영삼 정권을 혼내주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2년 후 대통령선거에서 충청도 기백이 훨훨 타오르도록 하자”고 충청도민의 지역정서를 자극했다.

자유민주연합 변웅전 국회의원은 1995년 6월 23일 서산지역 정당연설회에서 “현 정권은 충청도의 자존심이자 7천만의 지도자인 김종필 총재를 헌신짝처럼 버림으로써 충청도를 핫바지로 만들었다”며 핫바지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 엄홍철 대전시장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지역감정이라는 바람으로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시도”라며 비난했고 민주당 변평섭 후보도 “과거 도덕성을 상실한 정권이 계속돼 정치가 낙후상태를 면치 못한다”며 공박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은 유세 때마다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는 광주지역도 대전보다는 교부금을 몇 배나 더 많이 타가고 있다고 충청도 푸대접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에 호소했다. 자유민주연합 주병덕 충북도지사 후보는 “30년간 야당만 해온 호남은 도로가 뽕뽕 뚫리는 등 대접을 받는데 충북은 오히려 푸대접만 받고 있다”, “이 선거에서 명청도에서 똑청도로, 핫바지에서 갈바지로 변신하자”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자유민주연합 심대평 충남지사 후보도 “민족정기를 지켜온 선비정신에 핫바지가 웬 말이냐”며 충청도민의 정서를 부추겼다. 이에 민주자유당 박중배 후보는 “김종필 총재는 충청도민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는 주머니속의 조약돌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충청도민을 조약돌에 비유하며 김종필총재를 비난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현수 청주시장 후보도 “경상도 당은 30년간 집권했고 전라도 당은 30년간 제1야당을 해왔다. 충청도는 선거 때마다 찍을 당이 없어서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고 명청도에 핫바지 소리까지 듣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등 ‘명청도’나 ‘핫바지’라는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충청도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열린 대전 서구제4선거구의 시의원 합동유세에서 김학원 후보는 연설 도중 갑자기 양복바지에 끼입은 흰색 핫바지를 가리키며 “이 선거에서 똥똥 몽처 핫바지를 완전히 벗어버리자”며 시종 핫바지론을 전개하였다.

‘충청도 핫바지’ 논란에 대해 민주자유당 이춘구 대표는 “충청도민을 지역감정의 불모로 삼으려 한다”, “충청도민은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를 겨냥하였다. 충남지역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기택 총재도 “충청도 푸대접론의 일차적 책임은 공화당 정권 18년 동안 2인자 노릇을 했던 김종필씨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라. 야권(민주당·자유민주연합)연대 논란

야권연대는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반 민주자유당’ 공동전선의 의미를 가진 최대 변수 중 하나였다. 공식적으로는 정책노선이 달라 공론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연합은 창당 시부터 강한 기대감을 여러 차례 나타냈고, 민주당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여 어떤 형태로든 양당의 제휴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당시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처음 가시화된 곳은 강원지사선거였다. 민주당의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은 이봉모 후보가 1995년 6월 12일 야권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보등록을 포기하였다. 이어 14일에는 강원도 선거대책본부장인 민주당 최옥철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합 조일현 국회의원이 ‘반 민자연합전선’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동안 연일 자유민주연합을 공격해 왔던 이기택 민주당 총재도 이와 관련하여 이봉모 후보가 사퇴했으므로 자유민주연합은 강원도에서 민주당 후보와 겹치는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야권공조의 구체적 사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다. 1997년 6월 14일 자유민주연합 고문인 김동길 의원은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 선거에서 반민자세력이 연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순 후보에 대한 지원연설이 야권 연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1995년 6월 23일 “자유민주연합은 서울시장선거 조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당의를 정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또 민주당 측이 요구해 올 경우 지원유세 등 자유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연합의 연대제의에 대한 민주당의 화답은 선거일을 이틀 앞둔 1995년 6월 25일 나왔다. 김대중 이사장은 경기 서울지역 지원유세에서 “5 내지 6개 시·도지사선거에서 야권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며 “야권 후보자 중 가장 당선율이 높은 후보에게 집중시킴으로써 투표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실현시키자”고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 같은 야권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이사장과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간의 ‘반 민주자유당’ 전략과 ‘정치활동 재개’라는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지역등권론과 내각제 등에서 서로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화답을 주고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김대중 이사장의 지원유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탓할 이유가 없다고 엄호한 것이나 김대중 이사장이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를 비판하는 이기택 총재에게 “적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자유민주연합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정치적 야합이라고 공격하였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지역분할을 하고 야합해서 내각제를 해보려는데 이는 희망 없는 정치인들끼리 정치권력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추악한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념도 성격도 다른 정당들이 지방선거를 맞아 급하게 야합한다고 국민들이 과연 따라 주겠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박범진 대변인은 “세대교체라는 시대흐름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자유민주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에 추파를 보낸 것이라며 비하하였다.

마. 후보자의 전력 논란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의 자질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중 ‘후보자의 전력’이 정치쟁점화된 곳은 서울시장선거였다. 처음에는 박찬중 후보의 유신헌법 찬양 기고가 대상이었으나 선거종반에 이르러서는 조순 후보자의 ‘전력 문제’로 확산되었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비록 완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전력이 논란이 된 것은 유력정당들이 차기 대권주자와 연계하여 서울시장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서울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찬중 후보는 방송 3사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과거 ‘유신지지 기고’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자기 이름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유신시절 자신이 좌담회에 직접 참석하여 유신헌법을 찬양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1995년 6월 18일 서울방송(SBS) 토론회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무소속 박찬중 후보의 유신기고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과 연설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박찬중 후보를 일제히 공격하며 선거쟁점화하였다.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은 “개혁시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순 후보의 정미홍 부대변인도 “매번 기발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박 후보는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라며 박찬중 후보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 그 후에도 김대중 이사장이 나서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박

찬중 후보의 유신지지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당초 유신지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시민을 태연하게 속인 사람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당 측에서 유신전력을 계속 문제 삼고 나오자 박찬중 후보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의 유신시절 행적을 겨냥했다. 박찬중 후보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유신 당시 군과 정보책임자로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람과 신군부의 핵심 실세로 국민을 억압했던 사람들도 동교동에 붙으면 죄가 사면되느냐?” 고 반문하고 “과거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야당의 기준이 패거리인지 의심스럽다” 고 주장했다. 박찬중 후보의 선대위 이상룡 대변인도 “조순 후보는 유신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고 5공시절 신군부에도 협력했다”, “조순 후보를 초야의 선비로 한때 존경한 많은 사람의 가슴을 황량하게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어 “조순 후보는 더 이상 출세주의 기회주의로 지자체의 신성함을 더럽히지 말라” 면서 조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민주자유당 박범진 대변인도 “민주당이 박찬중 후보의 유신전력을 문제 삼는다면 강창성 의원 등 민주당 내 유신세력을 축출해놓고 그런 주장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박찬중 후보를 옹호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조순 후보의 정미홍 부대변인은 “박찬중 후보가 아직도 유신찬양 사실에 대해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고 비난하였다. 조순 후보의 김민석 대변인도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대변인은 박찬중 후보의 대변인으로 둔갑했느냐” 며 비난하였다.

1995년 6월 24일 민주자유당 박범진 대변인은 조순 후보가 1977년 당시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유신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의 비밀 자문교수단 팀장을 맡아 수경사 경호부대를 사열하면서 찍은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 이신범 부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조순 후보는 중학시절 남로당 입당설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6·25 전쟁 기간 중 교육동맹위원장으로 부역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조순 후보의 사상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조순 후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상대후보 한 사람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자신의 전력을 설명하지 않는 위선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현재 전 총리, 고병익 전 서울대 총장, 박동서·고영복 교수 등이 박정희 정부시절 청와대 국기 하강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며 “그럼 이 분들도 유신지지 학자냐” 라며 반박했다. 그는 또 “조순 후보는 육사 교관과 서울대 교수와 학장, 부총리직을 역임했고 한국은행 총재직을 수행하였다. 정부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않다가 야당의 시장후보로 나섰다고 비난을 퍼붓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격하였다.

이처럼 조순 후보의 전력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1995년 6월 25일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대변인과 이신범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 이신범 부대변인은 “조순 후보는 6·25 때 강릉농업학교 교사 시절 교직원 동맹위원장, 민청위원장, 문화동맹위원장 등 세 가지 직책을 맡아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순 후보 전력에 대한 의혹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전력시비공방은 선거 종반까지 이어졌다. 서울방송(SBS)은 1995년 6월 26일 이른바 ‘빅3’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순 후보가 이성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 서울시장선거 선거대책위의 박성범 대변인은 “정부문서 변조사건, 유신지지 전력시비 등에 대한 민주당 조순 후보의 진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으나 조순 후보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결정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찬중 후보진영의 조해진 부대변인도 “시민과의 약속 위반으로 유감이라며 조순 후보의 전력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 논란

김대중 이사장은 1995년 6월 9일부터 4일간에 걸쳐 호남지역 순회집회를 열고 “어느 정당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섰는가를 판단해 한 표를 던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어 수도권 후보들의 지원유세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어 아예 민주당 정당연설원으로 공식 신고하여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지방선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김대중이사장의 지원유세를 완전한 ‘정치복귀’로 단정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에 대한 발언수위를 하루가 다르게 높여온 김대중 이사장이 선거 전에 돌입하면서 마침내 복귀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게 민주자유당의 입장이었다. 민주자유당은 김대중 이사



▲ 김대중 이사장의 지원유세 관련 언론보도
(동아일보 1995년 6월 16일)

장에 대해 “식언정치인의 원조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다. 그의 정계복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행위이고 또 한번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이사장은 “나도 정상적인 국민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유세할 수도 있으며 투표할 권리도 있다”며 선거지원 유세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는 당원의 의무라며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당당히 하지 슬그머니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삼 대통령도 1980년 10월 정계를 영원히 은퇴한다고 해놓고 다시 나와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국가원로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격하였다.



제5절 선거비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로 선거비용 제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비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 제한방식으로 전환하여 총액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선거비용은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기본액에 선거구별 인구수에 따른 가산액을 합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선거별 기본액은 선거종류에 따라 8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차등을 두었다. 선거구별 가산액은 인구수의 크기에 따라 인구 1인당 30원에서 90원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방송연설비용을,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는 방송연설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를 추가로 가산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선거법의 시행년도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년도가 같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4,885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하여 1995년 5월 28일까지 공고하였다. 선거비용 제한액 총액은 2,696억 5,600만 원이었으며,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결정액은 <표 2-9>와 같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평균제한액이 541만 원이 하락하였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도 1,298만 원 정도 하락하였다.

이처럼 선거비용제한액이 하락하게 된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를 도입하고 산출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했기 때문이었다.

〈 표 2-9〉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결정 상황

(단위: 천원)

선거별	선거구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선거구		최소선거구(금액)		
			선거구명	금액	선거구명	금액	
시·도지사선거	15	634,000	서울시	1,423,000	제주도	274,000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30	56,000	경남 울산시	139,000	경북 울릉군	31,000	
시·도 의회의 원선거	지역구	875	19,000	서울 강서구제5선거구	23,000	인천 옹진군제1선거구	16,000
	비례대표	15	57,000	서울시	117,000	제주도	27,000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3,750	11,000	경기 이천읍	14,000	서울 중로구 세종로동	9,000	

2. 선거비용 수입·지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임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인 1995년 7월 27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집계결과 선거비용은 모두 1,189억 6,529만 원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 1인당 평균 77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지출비율은 44.1%였다. 선거별로 보면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가 33.0%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없이 40%대의 비슷한 지출비율을 보였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를 지출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명(경기 성남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6명,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3명이었다. 반면에 선거비용 지출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후보자도 있었는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22명이었다.

〈 표 2-10〉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정당· 후보자수	선거비용 제한총액	선거비용 지출총액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지출액	
계	15,449	269,656,940	118,965,290 (44.1%)	17,455	7,700	
시·도지사선거	56	39,691,000	17,197,246 (43.3%)	708,767	307,09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943	54,070,000	24,293,003 (44.9%)	57,338	25,761	
시·도 의회의원선거	지역구	2,449	45,880,000	22,609,864 (49.3%)	18,734	9,232
	비례대표	37	2,087,940	690,576 (33.0%)	56,430	18,664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11,964	127,928,000	54,174,599 (42.4%)	10,692	4,528	

※()안은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선거비용 지출총액의 비율임.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비목별 지출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선거별로 후보자들이 어느 선거운동 부문에 선거비용을 많이 또는 적게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어느 선거운동을 중시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선거비용 지출액 중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및 실비가 39.8%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명함형소형인쇄물 관련비용이 11.4%, 연설·대담비용이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거사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함형소형인쇄물 배부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의 지출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가 17.3%, 정당연설회 개최비용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구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주로 미디어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치중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3. 선거비용 확인 · 조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15,596명의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 5,693명과 낙선자 중에서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조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1,882명을 합한 7,575명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실태를 집중 조사하였다.

선거비용 지출 확인·조사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시작되었으나, 사실 확인과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기간 전부터 단속과 병행하여 지출자료를 수집하였다.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보고서,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와 정당회계보고서를 사전에 수집한 선거비용 관련 자료와 일일이 대조·확인하여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준수와 불법선거비용지출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방문 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근위원회와 교차하여 실사반을 편성·운영하였다. 현지 실사반은 우선 선거기획사, 인쇄업체, 선거운동용 장비 대여업체, 현수막업체 등 선거와 관련 있는 모든 업체를 방문조사하였고, 업체관계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실사는 선거비용관련 업체,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을 방문조사하여 거래내역과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선거비용의 축소·허위·누락여부를 조사·확인하였다. 특히 선거사무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당·실비의 금전 또는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2,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행위로 밝혀진 246건은 고발하였고,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증빙이 불충분한 120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였다. 나머지 1,767건은 경고 조치하였다. 당선자들의 위법사항은 985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14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다. 위법행위 유형은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는 허위작성과 선거비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으며 열람인은 열람기간 중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총 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3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회계서류 심사결과 위반사실이 없어 종결처리하였다. 고발된 사안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비용 중 로고송제작비와 차량임차료 등을 누락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였다.

〈 표 2-1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 조치상황

(단위: 건)

선거별	구 분	합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합 계		2,133(985)	246(83)	120(63)	1,767(839)
시·도지사선거		45(14)	10(3)	7(2)	28(9)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74(61)	20(3)	15(3)	139(55)
시·도회의의원선거		395(187)	45(14)	29(14)	321(159)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519(723)	171(63)	69(44)	1,279(616)

※ () 는 해당 건수 가운데 당선자관련 건수임.

4.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운동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여 주는 제도로 지방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전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과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의 방송연설비용이었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제외)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보전되었고, 비례

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 보전되었다. 반면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제외)를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귀속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요건을 충족한 13,852명(전체 후보자수의 88.8%)의 후보자에게 총 341억 3,476만 원이 보전되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90명의 후보자는 선전벽보가 선거공보작성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보전하였다(구체적 내용은 “제2장. 제3절 후보자추천과 등록” 참조).

〈표 2-1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상황

(단위: 명, 천원)

선거별	정당 및 후보자수	보 전 금 액					
		계	선전벽보비용	선거공보비용	소형인쇄물비용	방송연설비용	
합 계	13,852	34,134,760	8,938,108	3,618,404	20,042,657	1,535,591	
시·도지사선거	41	5,274,807	38,241	258,264	3,803,158	1,175,144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690	6,477,008	464,594	465,526	5,546,888	-	
시·도 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2,145	4,825,342	1,416,513	671,005	2,737,824	-
	비례대표	21	365,599	5,152	-	-	360,44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0,955	17,192,004	7,013,608	2,223,609	7,954,787	-	



제6절 공명선거활동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었다. 특히 시민단체는 그동안 투표참여 캠페인,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 등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출마한 회원들에 대해 지원활동을 펼치거나 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표방하는 후보들을 후원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은 '새로운 선거법의 올바른 이해확산' 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하여 새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홍보하였고, 위법선거운동의 사전예방과 정견·정책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에 동참을 유도하였다. 특히 4개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에 따른 투표혼란을 방지하고 기권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표절차안내에 많은 비중을 두고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 언론매체 이용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은 주로 신문, 잡지·간행물, 텔레비전, 라디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광고나 특집물 연재, 대담·토론, 기고·인터뷰, 자막방송과 멘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방송광고는 텔레비전 3종, 라디오 3종으로 제작되었으며,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와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텔레비전에서 213회, 라디오에서는 442회가 실시되었다. 신문광고는

공명선거 홍보용과 투표절차 안내용을 제작하였다. 공명선거 홍보용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와 “공명선거로 신바람 나는 지방자치 시대를…”이란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4개 지방선거 - 투표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투표절차 안내 등 총 396회가 게재되었다. 그리고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대담·토론회 114회, 기고·인터뷰 994회, 자막·멘트 방송 12,000여 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선거법의 주요내용과 투표절차에 대해 홍보가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95년 6월 10일 후보자등록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금품제공·흑색선전·상대방 비방·폭력 등 고질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치와 관련해 비중을 두는 것은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정견·정책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문광고

‘95. 6. 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최병식당·광역시장·도시선거
 • 최재국당·시장·군선거
 • 최병식·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 최재국·시·군의회의원선거

“깨끗한 선거가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깨끗한 한표, 즐거운 선거-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힘을 합칠 때 밝은 지역사회, 참된 민주주의가 정착됩니다.

새선거법으로 찾아지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전향점으로 삼읍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5년 6월 7일

‘95. 6. 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최병식당·광역시장·도시선거
 • 최재국당·시장·군선거
 • 최병식·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 최재국·시·군의회의원선거

“정정당당히 겨룰 때 모두가 승리자”



공명선거로 신바람나는 지방자치시대를...

바로고 깨끗한 한표 - 법을 준수하고 정파·정견에 의한 공경경쟁-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공명선거풍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읍시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5년 6월 1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문광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5.6.27)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합니다”

투표 절차 안내

1. 투표소로 입장하여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 수령 시 신분증 제시) → 2.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뒷면의 투표방법을 꼭 읽어주세요) → 3. 투표용지 투입 (투표용지 앞면의 투표방법을 꼭 읽어주세요) → 4. 투표소로 퇴장 (투표용지 투입 후 투표소로 퇴장)

4개 지방선거 - 투표는 이렇게 합니다.

- 투표용지는 4개입니다.
 - 시·도지사선거 - 1명 1표
 - 시·도의회선거 - 1명 1표
 - 시·군·구·자치도청장 선거 - 1명 1표
 - 시·군·구·자치도의회선거 - 1명 1표
- 기표방법
 - 앞면의 지시(시·군·구·자치도청장 선거)에 따라 기표한다.
 - 뒷면의 지시(시·군·구·자치도의회선거)에 따라 기표한다.
 - 기표할 때는 기표용지 뒷면의 기표방법을 꼭 읽어주세요.
- 투표하러 갈 때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투표시간(투표시간)에 맞춰 투표소에 도착합니다.
 - 투표소로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꼭 보여주세요.
 - 투표소로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꼭 보여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5년 6월 26일

나. 인쇄매체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인쇄물은 달력, 선거법 안내책자, 홍보만화집, 홍보팸플렛, 포스터, 담배광고, 전단(리플렛) 등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달력 120,000부를 제작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하는 음식점과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배포하여 기부행위제한·금지외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선거법 주요내용을 담은 선거법 안내책자 500,000부와 공명선거를 주제로 한 홍보만화집 ‘올바른 선택’ 300,000부, “밝고 깨끗한 선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팸플렛 150,000부를 제작하여 정당, 입후보예정자, 금융기관·행정기관 민원실,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포스터는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98,700매)와 투표절차 안내 (677,000매) 벽보를 제작하여 지하철역 구내, 게시관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집중 첩부하였고, 선거일에는 투표절차 안내도(4종) 42,500매를 투표소 내·외에 첩부하여 투표방법을 집중 홍보하였다. 그 밖에 공명선거 홍보용 포스터와 표어를 게재한 ‘88라이트’와 ‘디스’ 담배 2천만여 갑의 발매를 통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포스터



▲ 투표절차 안내 포스터



▲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포스터

그 밖에 새로 제정된 선거법 안내책자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해설요약집 1,000부를 제작하여 언론기관에 배부하였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라는 제목으로 전단지(리플렛) 610,000부를 제작하여 시민단체들이 가두캠페인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 시설물 및 기타매체 이용

공명선거활동에 활용된 시설물은 육교현판, 현수막, 선전탑, 비행선, 애드벌룬, 뉴스전광판, 싸인보드 등이 있었으며, 그밖에 홍보매체로는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와 컴퓨터통신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홍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육교현판 74개, 현수막 5,224기, 선전탑 30개소가 있었으며, 부산에서는 “풀뿌리 지방선거 이슬처럼 깨끗하게”라는 홍보문구를 게재하여 비행선을 띄웠고, 경남에서는 “깨끗한 선거”라는 홍보문구를 대형현수막에 게재하여 애드벌룬으로 띄워 홍보하기도 하였다.



▲ 육교 현판



▲ 선전탑

시설물매체에 주로 사용된 홍보문구는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선거로 깨끗하게 주권행사 올바르게”, “선거풍토 깨끗하게 주권행사 올바르게”,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 “공명선거 기틀위에 밝아오는 지방자치” 등으로 새로 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돈 안 쓰는 선거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부행위제한과 공명선거 홍보를 위하여 뉴스 전광판과 컴퓨터 싸인보드를 통해 공명선거 표어와 투표일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홍보문구로는 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맙시다”가 사용되었다.

그밖에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와 컴퓨터통신(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을 이용하여 정당, 선거관계자, 일반국민 등이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시청각매체로 기부행위 홍보용으로 “CF방송모음집”과 홍보용 비디오 “1995. 6. 27”을 제작하여 기관, 단체, 지역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역, 터미널 등에 배부하여 공명선거 홍보와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졌다.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와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선거운동의 근절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95년 4월 3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와 전국 검사장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혔으며, 특히 관련개입 방지를 위해 통·리·반장 및 예비군간부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면 즉각 해임하고 의법조치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김용태 내무장관은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소집, 공명선거와 전환기 공직기강확립 대책 등을 시달리며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5년 5월 30일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선거에서 반드시 공명선거를 실천해 선거혁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지방선거에 따른 합동담화문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면서, 사회안정과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각종 범법행위와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그 밖에 정부는 공명선거 정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제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1995년 4월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일전까지 모두 6회가 개최되었으며, 참여한 부처로는 총무처,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공보처, 서울시, 행정조정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 주요 협의내용은 선거관리 추진상황 보고, 투·개표 안전관리 대책, 선거사범 단속대책 등이었다.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민단체는 독자적으로 또는 연대해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나서는 등 공명선거활동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책캠페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명선거 감시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후보공천기준 제시는 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가 맡았다. 종전 여러 단체들이 부정선거 방지나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백화점식으로 벌이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과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기로 하고 활동목표를 “이렇게 바꾸자”로 정하였다. 서울·부산 등 10개 지방 경실련에서 3월말까지 각 지방

고유의 개혁과제를 마련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시하였다.

부정선거운동 방지를 맡은 공선협은 활동목표를 “내 고장의 주인정신 공명선거로 꽃피우자”로 정했으며,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와 공명선거실천 서약, 토론마당 개최, 경인·강원 등 과열예상지역에 대한 고발단운



▶ 시민단체의 선거부정 고발창구(공선협)

영 등을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하였다. 이어 5월에는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명선거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법·탈법 선거운동 감시에 들어갔다. ‘공명선거감시단’은 시민감시단과 대학생감시단으로 구성되었으며, 향응제공 및 야유회, 금전살포, 물품배포, 불법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선거법위반행위 사례 총 729건을 접수해 이중 4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였다. 또한 ‘선거부정 고발’, ‘연고주의 배격’ 등의 스티커를 배포함과 동시에 감시단원들에게 단체로 티셔츠를 입게 해 공명선거감시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려 하였다.

전국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시민협은 1995년 2월 후보공천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공천기준안에는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소신 있게 대처하며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개발능력이 뛰어난 인물 등이 있었다. 또한 공천기피 인물로는 축재비리 및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세무비리나 안전사고 등에 관련된 책임 있는 공직에 종사했던 자, 관변단체 종사자, 재산·학력 허위기자재 등을 꼽았다. 이어 지방자치 정책캠페인 전국발대식을 열고 지방선거의 바람직한 공약모델인 30대 정책과제와 이를 분야별로 세분화한 110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공동체의식 개혁국민운동협의회는 공동체의식개혁실천 범국민출범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감정 해소, 공명선거 실천, 집단이기주의 극복 등 공동체의식개혁실천 100대 과제를 선포하였다. 김지하 시인이 주도하고 환경·여성·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도 ‘95년 자치시대를 위한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구현하는 선거가 되도록 주민자치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등 19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청년캠프’ 소속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대학별로 교내 방송과 신문, 대자보 등을 통해 ‘20대 투표참여운동’을 펼치고 지하철역, 백화점 등 시내 곳곳에서 선거참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PC통신 하이텔에 20대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PVOTE’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도 대자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였다.

시민단체가 소속후보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한농연)는 출마한 회원들에게 WTO특별법 시행령 및 7대 농업지원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 ‘농어민 권익대변자의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조합원 95명이 출마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7대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보냈으며, 조합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자원 봉사한 경우도 있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종교계도 별도의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3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책정했으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지방자치제 정착과 공명선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6월에 들어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역별 버스 및 택시회사를 방문해 부정선거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스티커붙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교계의 경우도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경제정의실천불교인연합 등 11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단체협의회는 부정선거고발창구를 개설하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였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돈은 묶고 입은 풀다”는 기조 하에 새로 제정한 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선거였다. 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 본질을 벗어나 선거결과에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금품·음식물제공 사례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를 ‘일당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선거법위반행위 단속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및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였다. 시민단체도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나서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제2장. 제6절 공명선거활동”에서 기술하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은 크게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으로 나누어졌다.

‘예방활동’을 위해 설날, 연말연시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의 발생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위반사례 유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위법선거운동의 자제와 정견·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유도하였고, 공무원 등에게는 선거관여 금지를, 시민단체 등에는 위법사례 신고 등을 요청하였다. 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위반사례집’ 176,900부를

발간하여 정당과 선거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위법선거운동 예방활동을 벌였다.

‘단속활동’을 위해 전임직원 1,263명과 특별단속위원 6,962명, 구·시·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지방공무원 2,403명과 한시적으로 단속활동에 투입된 공익요원(구·시·군청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선거종료 후 지방자치단체로 복귀 근무) 797명 등 총 11,42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172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 침해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사례 280건은 고발하였고, 증거가 불충분한 239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였다. 나머지는 경중이나 위반행위자의 수용자세 등을 감안하여 경고·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 중 92건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 12%의 기소율을 보였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2,694건)만 비교할 때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위반사례 건수인 1,425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선거별	조치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사직당국 이 첩
합	계	3,172	280	239	2,217	196	240
시·도지사선거		104	12	23	44	9	1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74	25	42	216	40	51
시·도의회의원선거		612	55	55	420	43	39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2,082	188	119	1,537	104	134

그 밖에 부산 부산진·전남 강진·신안 등 3개의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불법유언물이 익명 또는 유명단체 명의로 우송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체국에 우송중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에서 내사종결된 사례도 있었다.

나. 검찰의 단속활동

대검찰청은 1995년 5월 22일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선거개입 등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하였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자원봉사자 및 사조직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 후보자 폭행, 연설방해 등 선거폭력, 정당 활동 병자 불법선거운동, 공직자 불법 선거관여 행위를 ‘공명선거저해 7대 사범’으로 정해 중점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대검찰청은 1995년 6월 10일 불법, 탈법 선거운동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기간 중에 야유회·반상회·종친회·동문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를 여는 행위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어기는 각종 불법·탈법선거운동의 유형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찰청은 1995년 6월 26일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시달된 지침에서 검찰은 선거관리 위원회와 합동으로 투·개표 과정에서 예상되는 선관위직원 폭행, 입후보자간 폭력행위, 투·개표장의 질서문란 행위 등 각종 선거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경찰청은 1994년 12월 29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과 선거사범 신고(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연말연시를 틈탄 선거사범 단속활동은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선거관련 폭력행위·불법 흑색 선전행위·정당활동 병자 불법 행위·선거질서 교란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1995년 6월 10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 입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1995년 6월 22일 선거일에 임박하면서 금품살포 등 불법·탈법선거운동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에 ‘불법선거사범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은 6월 24일 오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자원봉사자를 구속하는 등 총 110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사범의 유형으로는 향응제공 30명, 금품살포 11명, 호별방문 3명 등이 있었다.

편파수사 논란도 있었다. 1995년 6월 24일 대구 달성군수선거에서 하영태 민주자유당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양시영 무소속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 적발된 후 승용차에 실려 있던 불법유인물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대구 달성경찰서 옥포파출소장이 불법유인물 일부를 소각하자, 여당후보의 불법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며 양시영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밤새워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6일에는 경남 경찰청에서는 관내 각 경찰서에 무소속후보 금품살포 행위를 특별단속토록 지시하여 편파 단속 의혹이 일기도 하였다.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검찰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995년 12월 27일(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총 3,236명을 입건하여, 그 중 51.2%에 해당하는 1,656명을 기소하고, 1,580명은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기소율 51.2%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았으며 구속된 사람도 266명에 달하였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선거 관련이 196명이었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관련은 628명이었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 관련이 527명,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관련은 1,885명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여전히 많았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을 초과지급 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선거사범은 전체의 3분의 1인 1,079명이었으며, 그 중 150명이 구속되었다. 다음으로는 흑색선전 472명, 불법선전물 배포 368명, 선거비용 부정 지출 353명, 선거폭력 139명, 신문·방송 부정이용 98건, 기타 부정선거운동 727건 등이었다.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시·도지사 8명, 자치구·시·군의 장 71명 등 모두 658명이 적발되었으며, 이중에서 24명이 구속되는 등 28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당선자로는 시·도지사 중 무소속 신구범 제주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중 김봉열 영광군수, 이해선 부천시장, 최선길 노원구청장, 이창승 전주시장 등 4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박팔용 김천시장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비용 관련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등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 등 30명이 기소되었다.

〈표 2-14〉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

(단위: 명)

선거명	입건	기 소			불기소
		소 계	구속	불구속	
합 계	3,236	1,656	266	1,390	1,580

3. 주요 위반사례

가. 지방선거후보자 공천관련 금품수수

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선거의 정당공천을 두고 대립 끝에 1995년 3월 15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구당위원장이 후보자를 사실상 낙점하는 내부공천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지구당위원장들은 선거법개정안이 공식 발효되기 전인 3월초 연고지역으로 중심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공천을 강행하였다.

그 중 민주당 영광·함평지구당 공천비리 사건은 1995년 3월 18일 전남 도의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강명룡이 공천비리 내용을 지역 언론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언론에서 강명룡은 영광·함평 지구당 위원장인 김인곤 국회의원이 1억 5,000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잘못된 공천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곤 의원은 녹음테이프를 들어본 결과 액수는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후에도 이 지역 출마예정자들이 내천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비리를 계속 폭로하였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선거개시일을 하루 앞둔 1995년 6월 10일 민주당 김인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영광군수 후보자 김봉열과 강명룡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

인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공천과 관련해 강명룡으로부터는 전남 도의회의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4,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김봉열로부터는 같은 취지로 제공한 2,000만 원과 지구당 신축대지 200평(시가 3억 4,500만 원) 등 모두 3억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가 끝나고 1995년 11월 10일 제1심 법원에서 김인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6,000만 원을, 김봉열 영광군수와 강명룡 전 전남도의회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인곤 피고인이 비록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나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니고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왔으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2월 26일 항소심에서 김인곤 의원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6,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김봉열 영광군수와 강명룡 전 전남 도의회의원의 형량은 1심과 같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선거사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의원직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부천시장선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검찰은 선거일을 3일 앞둔 1995년 6월 24일 부천시장선거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김길홍, 민주당 이해선, 무소속 이창식 후보 등 3명을 선거범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10여 명이 1995년 5월말 경 부부동반으로 베트남을 여행하는 때에 30만 원에서 2백만 원의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였다. 이들이 구속되기 앞서 무소속 이강용 후보가 부천시청 기자실에서 자신의 이력서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참석한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어 부천시장선거에서는 출마자 8명 중 무려 4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 명의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자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측은 “종교탄압이며 억울하고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였다. 또 후보자의 부인들은 연설회 등을 통해 “검찰이 시민후보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 사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졌다. 강원룡 목사,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대표,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경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 10명은 성명을 내고 “대외협력비 차원에서 낸 의무부담금을 기부금으로 규정해 구속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선거결과 민주당 이해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 옥중당선자가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었다. 1995년 10월 1일 1심 법원에서 이해선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길홍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창식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해선 당선자는 항소했고, 2심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제주지사의 직능단체 여행경비 제공

제주지사의 여행경비 제공사건은 신구범 지사가 북제주군 구좌읍 이장단에게 일화 30만 엔을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내용의 무기명 투서가 각 기관에 나돌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신문은 1995년 1월 6일자에 이를 보도한 뒤 계속해서 신구범 지사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고,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반면 돈을 받은 이장단협의회장 신의정(동북리장)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것은 당시 지역유지 4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민일보와 한라일보에 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신의정 이장은 1994년 여름께 이장단협의회 소속 이장들에게 동남아 여행을 제의하고, 그에 따라 여행계획을 추진하면서 1인당 여행경비가 85만 원으로 책정되었음에도 다른 이장들에게 1인당 35만원씩만 부담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여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당시 제주지사인 신구범에게 10월말부터 3회에 걸쳐 이장단협의회 여행계획을 보고하고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구범 제주지사는 11월 중순 비서관을 통해 일화 30만 엔(한화 240만 원 상당)을 건넸고, 신의정 이장에게 전화하여 “일화 30만 엔을 비서관에게 맡겨놓았으니 찾아서 여행경비에 보태 쓰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시·도지사선거에서 신구범 제주지사를 1995년 4월 24일 불구속 기소하였다. 선거결과 신구범 지사는 당선되었고 1997년 6월 20일 제1심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11월 14일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선고형량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아 신구범 당선자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의 금품 살포

서울 강남구청장선거 무소속 김길웅 후보는 고양구(강남구의회의원선거 청담2동 선거구 후

보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고양구는 선거를 책임있게 치러 주겠다고 해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김길웅 후보는 고양구에게 1995년 5월 말경부터 6월 중순까지 총 1억 7,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고양구는 강남구 수서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조영차량(수서지역 보상대책위원장)과 박은경(수서지역 번영회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구속되었다. 또한 박성호(통일민주산악회장 강남지부 총무부장), 신용철(김길웅 후보 회계책임자), 손상윤(강남구 청담2동장) 등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95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고 열람 및 공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0일에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1975년 6월 28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기준 20세 이상의 자) 중 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인수는 인구수의 68.1%인 31,048,566명이었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인수 3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29,422,658명보다 1,625,908명이 늘어나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2-1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단위 : 명)

인구수	선거인수		
	계	남자	여자
45,571,787	31,048,566 (786,330)	15,278,832 (728,119)	15,769,734 (58,211)

※ () 안은 부재자신고인수 본수에 포함됨.

시·도별로는 서울이 7,438,025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5,043,054명(16.2%), 부산 2,658,224(8.6%)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348,191명(1.1%)으로 가장 적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재자신고기간은 1995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하여 확정된 부재자수는 전체 선거인의 2.5%인 786,330명이었다. 이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수(748,843명)보다 5.0%가 늘어난 것으로 선거인수 증가율 5.5%보다 0.5% 포인트 낮았다. 부재자신고인 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이 72.8%인 572,660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이었다.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730,317명이었고, 거동불편 등으로 자택이나 병원 등 거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은 56,013명이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서는 12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비교란에 위장전입자로 표시하여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남 여수시의회의원선거(신월동선거구)에서는 당선자와 차점자 간의 표차는 4표였으나, 당선자가 자신의 친·인척 등 모두 12명을 위장전입시켜 그 중 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다.

2. 투 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부재자투표방법 중 ‘순회투표’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섬을 순회하면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투표방법은 ‘일반투표소⁵⁾ 투표’, ‘부재자투표소 투표’, ‘거소투표’, ‘순회투표’로 다양해졌다.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소는 일반투표소 투표에 앞서 1995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설치·운영되었다. 부재자신고인은 이 기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와 기관·시설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하였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

5) ‘일반투표소’란 선거일 당일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투표소를 말한다. 일반투표소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재자투표소’와 비교해 편의상 이하 이 책에서 ‘일반투표소’라고 기술하기로 한다.

나, 접전지역과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등은 예외적으로 종전의 방법대로 거소투표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섬을 순회하며 투표를 실시하였다.



▲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소는 총 51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436개소, 기관·시설의 장이 75개소를 설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는 주로 위원회 사무실,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실에 설치되었으며 기관·시설의 투표소는 병원, 교도소, 요양소에 설치되었다. 순회투표는 5개 시·도의 15개 섬에 10개소를 설치하였다.

부재자투표 상황은 총 부재자신고인 786,330명 중 745,882명이 투표하여 94.9%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전체의 93.1%인 694,575명이 투표하였고, 6.9%인 51,307명이 거소에서 투표하였다.

〈표 2-16〉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상황

(단위 : 명)

부재자 신고인수	투 표 수			기권수
	합 계	부재자투표소 투표	거소투표	
786,330	745,882 (94.9%)	694,575	51,307	40,448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는 1995년 6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투표개시시각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오전 7시에서 6시로 앞당겨져 투표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다.



▶ 부산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투표관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전국적으로 237,380명(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97,562명, 투표사무원 139,818명)이었으며, 정당·후보자·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97,052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투표사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는 부족하여 6,100여 명을 국세청 등 국가공무원으로 충원하였다.

투표절차는 투표혼란 방지를 위해 먼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를 한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표용지는 개표시 혼표 등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연두색,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하늘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계란색을 사용하였다. 투표함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골판지 투표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투표용지 색상에 맞추었다.

투표결과 시·도지사선거를 기준으로 총 선거인수 31,048,566명 중 21,227,449명이 투표하여 68.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1960년 서울시장·도지사선거의 투표율 38.8%보다 29.6%포인트 높았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55.0%와 시·도의회의원선거 58.9%보다는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제주도로 80.5%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북 76.7%, 전남 76.1%, 강원 74.8%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62.0%였다. 서울이 66.2%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투표율에도 못 미쳤다. 종전 선거와 같이 도시지역은 투표율이 낮고 농촌지역은 높은 전형적인 투표행태를 보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여 언론 등에서는 투표율이 80%를 웃돌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하게 된 요인은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후보간의 고소·고발사태가 잇따르는 등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져 선거무관심층이 증가하였고, 대도시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투표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지역등권론, 세대교체론, 핫바지론 등 '3김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의 구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표 2-17〉 1991년 이후 지방선거의 투표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1991년)	시·도지사선거 (1995년)
선거인수	24,067,144	28,083,024	31,048,566
투표수	13,237,093	16,533,934	21,227,449
기권수	10,830,051	11,549,090	9,821,117
투표율(%)	55.0	58.9	68.4

※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 수를 제외한 숫자임.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용지 오쇄(誤刷)

인천 남동구 구의회의원선거(남촌동선거구)에서는 후보자 최광환을 최광한으로 잘못 인쇄한 부재자 투표용지 93매가 발송되었고, 서울 광진구 시의원선거(광진구제1선거구)에서는 후보자의 추천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을 무소속으로 잘못 인쇄한 부재자 투표용지 1,799매가 발송되어 물의를 빚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시 유효투표로 처리하였고, 일반투표소

투표용지는 재인쇄하였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의회의원선거(신촌동선거구)에서도 ‘기호 2번 정정환’을 ‘3번 정정환’으로, ‘기호 3번 배진석’을 ‘2번 배진석’으로 잘못 인쇄한 부재자 투표용지 152매를 발송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때 기호가 아닌 이름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투표소 투표용지는 재인쇄하였다.

2) 거소투표 대상자의 대리투표

제주시 북제주군에서는 부재자 거소투표 신고자 아들의 친구 2명이 대신 투표해 준다고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대리투표한 후 발송한 경우가 있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청년 2명이 거소투표자의 허락을 받고 대리투표한 후 봉합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간 경우도 있었다.

경북 영덕군 측산면선거구에 출마한 군의회의원 김용대 후보의 선거사무원 박동헌이 나이가 많아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찾아가 대리투표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씩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가산면선거구에 출마한 군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보이는 5명이 거소투표자 집을 방문하여 대리투표한 경우가 있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합천군의회의원선거 조병채 후보의 회계책임자 조춘석과 선거사무장 윤병대가 합천군 묘사면 사리의 거소투표자의 집을 방문하여 대리투표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 대리투표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발송된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개표 때에 이를 가려내어 무효처리하였다.

3) 기타 투표관련 사건·사고

서울 양천구 목6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부주의로 같은 선거의 투표용지 2매를 교부하였다. 선거인은 2매 모두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던 중 발견되었고 그 중 1매는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였고 1매는 회수하여 별도 보관 처리하였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는 김익영이 자신의 실수로 구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중복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다. 투표사무원이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투표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3회에 걸친 귀가요구도 거절하며 15분간 투표를 방해하였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정신장애수용원(복지시설)의 원장이 원생 15명을 인솔하여 투표소에 도착한 후 원생의 기표소 출입을 보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투표에 불참시킴으로써 돌아간 사례가 있었다(당시 5명은 스스로 투표하였고, 투표참여를 권유하였으나 10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3. 개 표

1995년 6월 27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한 뒤 오후 6시 55분 대구광역시 북구개표소를 시작으로 전국 376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관리 사무를 위하여 동원된 인력은 전국적으로 118,810명(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3,204명, 개표사무원 115,606명)이었고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30,882명의 개표참관인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선정(참관인 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밖에 없는 경우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145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수가 많은 92개 선거관리위원회는 2개의 개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들 개표소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3인 이내에서 추천한 인사를 보조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관할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개표를 주관하였다.



▶ 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1995년 6월 28일 오후 11시 40분에 개표가 끝나자 시·도지사 15명을 비롯하여 총 5,756명의 당선인이 결정되었다. 이 중 투표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는 5,433명이었고, 323명은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5,758명이었지만 민주당이 인천과 경북에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를 정수보다 적게 추천하여 2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가. 정당별 득표상황과 당선자

정당의 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3개 정당은 모두 당선자를 냈다. 그러나 대한민주당, 친민당, 한국당은 당선자를 한명도 내지 못하였다.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은 민주당으로 478명(전체 당선자의 39.3%)이 당선되었다. 반면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은 410명(33.7%)이, 자유민주연합은 121명(10.0%)이 당선되었다.

1)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모두 410명이 당선되었다. 시·도지사선거는 부산·경남·경북·인천·경기 등 5곳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부산시장 문정수, 인천시장 최기선, 경기지사 이인제, 경북지사 이의근, 경남지사 김혁규 후보였다. 반면 서울시장선거 정원식, 대전시장선거 염홍철, 충북지사선거 김덕영, 전북지사선거 강현욱 후보 등은 낙선하였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부산지역 16개 선거구 중 14곳에서 당선되었으며, 경남에서는 21개 선거구 중 10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또한 서울에서는 25개 자치단체 중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당선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모두 70명이 당선되었다. 주요 당선자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장 조상도, 울산시장 심완구, 서울 강남구청장 권문용, 서초구청장 조남호 후보 등이 있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286명이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득표한 결과 49석이 배분되었다.

〈표 2-18〉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상황

(단위: 명)

구 분	계	시·도지사	자 치 구·시·군의장	시·도 의회의원	
				지역구	비례
합 계	1,215	15	230	875	95
민주자유당	410	5	70	286	49
민 주 당	478	4	84	352	38
자유민주연합	121	4	23	86	8
무 소 속	206	2	53	151	-

2) 민주당

민주당은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모두 478명이 당선되었다.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전남·전북 등 4곳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서울시장 조순, 광주시장 송언종, 전북지사 유종근, 전남지사 허경만 후보 등이었다. 반면 경기지사선거 장경우, 부산시장선거 노무현 전 국회의원 등은 낙선하였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서울은 25개 선거구 중 23곳에서 당선자를 내었으며, 광주는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되었다. 전북은 14개 선거구 중 13곳에서, 전남은 24개 선거구 중 22곳에서 당선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모두 84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로는 서울에서는 노승환 전 국회의원이 마포구청장에 당선되었고, 김대중 이사장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수 손장조, 전북 군산시장 김길준, 경북 포항시장 박기환, 대전 유성구청장 송석찬, 경기 안양시장 이석용 후보 등이 있었다. 낙선자로는 울산시장선거 이규정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의원 133개 의석 중 122석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광주 전북 전남에서 제1당이 되는 등 모두 352명이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시·도 의원은 38석을 배분받았다.

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모두 121명이 당선되었다. 시·도지사선거는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 4곳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대전시장 홍선기, 강원지사 최각규, 충북지사 주병덕, 충남지사 심대평 후보 등이었다. 낙선자는 대구시장선거 이의익 후보 등이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충남지역 15개 시장과 군수 전체와 대전지역 구청장선거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등 전국에서 모두 23명이 당선되었다. 주요 당선자로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고향인 충남 부여군수 유병돈 등이 있었다. 낙선자로는 부산 영도구청장선거 노자태 전 국회의원이 등이었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대전과 충남에서 제1당이 되는 등 총 86명이 당선되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으로는 8석이 배분되었다.

4) 무소속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선거에서 무소속은 모두 1,383명이 출마하였으며 그 중 시·도지사선거 2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53명, 시·도의회의원선거 151명 등 모두 206명이 당선되었다.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대구와 제주에서 당선되었으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전통적 여당의 연고지역인 경남·경북·대구·강원에서 대거 당선되었고, 호남과 충청권, 경기 지역 등에서도 고르게 당선되었다. 또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도 151명이 당선돼 무소속의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당선자로는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대구시장 문희갑, 제주지사 신구범 후보가 있었으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전남 나주시장 나인수, 전남 곡성군수 조형래 후보와 경남지역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자 중 최연소자로 당선된 남해군수 김두관 후보가 있었다. 낙선자로는 신민당에서 탈당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종 후보와 민주자유당 후보경선에서 이인제 의원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한 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임사빈 전 의원이 있었다.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개 지방선거를 통틀어 최고득표율로 당선된 후보는 광주 광산구청장선거의 고재유 후보로 유효투표 총수의 91.7%(66,015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최저득표율 당선자는 경기 용인군의회의원선거(용인읍선거구)에 출마한 조명길 후보로 9.3%(2,13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직업은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선거에서 정치인이 가장 많았는데, 시·도지사 당선자의 66.7%,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자의 35.7%, 시·도의회의원 당선자의 27.3%가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생업(농업 23.0%, 상업 22.7%)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당선자의 직업 중에서는 건설업도 두드러졌는데, 4개 지방선거에서 모두 406명으로 전체 당선자 중 7.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출마자 331명 중 128명이 당선되어 전체 당선자의 2.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당선자 42명을 제외하면 여성 당선자는 86명으로 1.5%에 불과하였다.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없었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1명만 당선되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여성 당선자가 55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5.7%를 차지하였으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72명으로 1.6%를 차지했다. 지방의원 당선자는 총 127명으로 1991년 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자보다 6.3배 증가한 것으로 유력정당들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여성을 대거 공천한 결과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선거별 50대 당선자는 시·도지사선거의 73.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63.9%, 시·도의회의원선거의 41%,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42.1%가 50대였다. 20대 당선자도 있었는데, 시·도의회의원에서 4명,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15명이 있었다.

학력별로는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대졸 이상이 많았으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고졸이 가장 많았다. 시·도지사선거는 대졸 53%, 대학원졸 40%, 대학중퇴의 순이었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대졸이 51.7%, 대학원졸 22.6%, 고졸 10.0%, 고졸 미만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대졸 43.3%, 고졸 23.6% 등의 순이었으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고졸 37.5%, 대졸 23.3%, 고졸미만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9〉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명단

시·도별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서울	조순 (민주당)	종로구 정흥진(민주당), 중 구 김동일(민주당), 용산구 설송웅(민주당), 성동구 고재득(민주당), 광진구 정영섭(민주당), 동대문구 박 훈(민주당), 중랑구 이문재(민주당), 성북구 진영호(민주당), 강북구 장정식(민주당), 도봉구 유천수(민주당), 노원구 최선길(민주당), 은평구 이배영(민주당), 서대문구 이정규(민주당), 마포구 노승환(민주당), 양천구 양재호(민주당), 강서구 유 영(민주당), 구로구 박원철(민주당), 금천구 반상균(민주당), 영등포구 김두기(민주당), 동작구 김기옥(민주당), 관악구 진진형(민주당), 서초구 조남호(민자당), 강남구 권문용(민자당), 송파구 김성순(민주당), 강동구 김충환(민주당) (이상 25명)
부산	문정수 (민자당)	중 구 변종길(민자당), 서 구 변익규(민자당), 동 구 광윤섭(민자당), 영도구 박대석(민자당), 부산진구 하계열(민자당), 동래구 이규상(민자당), 남 구 이영근(무소속), 북 구 권 익(민자당), 해운대구 서석인(민자당), 사하구 박재영(민자당), 금정구 윤석천(민자당), 강서구 배응기(무소속), 연제구 박대해(민자당), 수영구 신종관(민자당), 사상구 서경원(민자당), 기장군 오규석(민자당) (이상 16명)
대구	문희갑 (무소속)	중 구 강현중(민자당), 동 구 오기환(자민련), 서 구 이의상(민자당), 남 구 이재용(무소속), 북 구 이명규(무소속), 수성구 김규택(무소속), 달서구 황대현(무소속), 달성군 양시영(무소속) (이상 8명)
인천	최기선 (민자당)	중 구 이세영(민자당), 동 구 김창수(민자당), 남 구 민봉기(민자당), 연수구 신원철(민자당), 남동구 김용모(민주당), 부평구 최용규(민주당), 계양구 이현진(민주당), 서 구 권중광(민주당), 강화군 김선흥(민주당), 옹진군 조건호(민자당) (이상 10명)
광주	송언종 (민주당)	동 구 박종철(민주당), 서 구 이정일(민주당), 남 구 정두채(민주당), 북 구 김태홍(민주당), 광산구 고재유(민주당) (이상 5명)
대전	홍선기 (자민련)	동 구 박병호(자민련), 중 구 전성환(자민련), 서 구 이현구(자민련), 유성구 송석찬(민주당), 대덕구 오희중(자민련) (이상 5명)
경기	이인제 (민자당)	수원시 심재덕(무소속), 성남시 오성수(무소속), 의정부시 홍남용(민주당), 안양시 이석용(민주당), 부천시 이해선(민주당), 광명시 전재희(민자당), 평택시 김선기(민자당), 동두천시 방제환(민자당), 양주군 윤명노(민자당), 안산시 송진섭(민주당), 과천시 이성환(민자당), 의왕시 신창현(민주당), 군포시 조원극(민주당), 시흥시 정언양(민주당), 구리시 이무성(무소속), 남양주시 김영희(무소속), 여주군 박용국(민자당), 오산시 유태형(민주당), 화성군 김일수(민자당), 파주군 송달용(민자당), 고양시 신동영(민주당), 하남시 손영채(민주당), 광주군 박종진(민주당), 포천군 이진호(무소속), 연천군 이중익(민자당), 양평군 민병채(민자당), 가평군 이현직(무소속), 이천군 유승우(민자당), 용인군 윤병희(민자당), 안성군 이종건(민자당), 김포군 유정복(무소속) (이상 31명)

시·도별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장
강원	최각규 (자민련)	춘천시 배계섭(민자당), 원주시 김기열(자민련), 강릉시 심기섭(민자당), 동해시 김인기(민자당), 태백시 홍순일(민자당), 정선군 김원창(민자당), 속초시 동문성(민주당), 고성군 이영구(민자당), 양양군 오인택(무소속), 인제군 이승호(무소속), 삼척시 김일동(무소속), 홍천군 이춘섭(민자당), 횡성군 조태진(무소속), 영월군 김태수(무소속), 평창군 김용욱(무소속), 화천군 홍은표(무소속), 철원군 김호연(민자당), 양구군 임경순(민자당) (이상 18명)
충북	주병덕 (자민련)	청주시 김현수(자민련), 충주시 이시중(민자당), 제천시 권희필(민자당), 단양군 정하모(민자당), 청원군 변종석(자민련), 영동군 박완진(민자당), 보은군 김종철(민주당), 옥천군 유봉열(무소속), 괴산군 김환묵(민주당), 음성군 정상현(무소속), 진천군 김영완(무소속) (이상 11명)
충남	심대평 (자민련)	천안시 이근영(자민련), 공주시 전병용(자민련), 보령시 김학현(자민련), 아산시 이길영(자민련), 금산군 김현근(자민련), 연기군 홍순규(자민련), 논산군 전일순(자민련), 부여군 유병돈(자민련), 서천군 박형순(자민련), 홍성군 이종근(자민련), 청양군 정원영(자민련), 예산군 권오창(자민련), 서산시 김기흥(자민련), 태안군 윤형상(자민련), 당진군 김낙성(자민련) (이상 15명)
전북	유종근 (민주당)	전주시 이창승(민주당), 군산시 김길준(민주당), 익산시 조한용(민주당), 정읍시 국승록(민주당), 남원시 이정규(민주당), 김제시 곽인희(민주당), 완주군 임명환(민주당), 진안군 임수진(민주당), 무주군 김세웅(민주당), 장수군 김상두(민주당), 임실군 이형로(민주당), 순창군 임득춘(민주당), 고창군 이호중(무소속), 부안군 강수원(민주당) (이상 14명)
전남	허경만 (민주당)	목포시 권이담(민주당), 여수시 김광현(민주당), 순천시 방성룡(민주당), 나주시 나인수(무소속), 여천시 정채호(민주당), 여천군 정근진(민주당), 담양군 문경규(민주당), 장성군 김흥식(민주당), 화순군 임홍락(민주당), 곡성군 조형래(무소속), 구례군 이동승(민주당), 광양시 김옥현(민주당), 고흥군 류상철(민주당), 보성군 문광웅(민주당), 장흥군 김재중(민주당), 강진군 김재홍(민주당), 완도군 차관훈(민주당), 해남군 김창일(민주당), 진도군 박승만(민주당), 영암군 박일재(민주당), 무안군 이재현(민주당), 영광군 김봉열(민주당), 함평군 정원강(민주당), 신안군 손장조(민주당) (이상 24명)
경북	이의근 (민자당)	포항시 박기환(민주당), 울릉군 정종태(민자당), 경주시 이원식(민자당), 김천시 박팔용(무소속), 안동시 정동호(무소속), 구미시 김관용(민자당), 영주시 김진영(무소속), 영천시 정재균(무소속), 상주시 김근수(무소속), 문경시 김학문(민자당), 예천군 권상국(무소속), 경산시 최희욱(무소속), 청도군 김상순(민자당), 고령군 이진환(무소속), 성주군 김건영(무소속), 군위군 홍순홍(무소속), 칠곡군 최재영(무소속), 의성군 정해걸(무소속), 청송군 안의중(민자당), 영덕군 김우연(민자당), 영양군 권용한(무소속), 봉화군 엄태항(무소속), 울진군 전광순(민자당) (이상 23명)

시·도별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경남	김혁규 (민자당)	창원시 공민배(무소속), 울산시 심완구(민자당), 마산시 김인규(무소속), 진주시 백승두(민자당), 진해시 김병로(민자당), 통영시 고동주(민자당), 고성군 이갑영(무소속), 사천시 하일청(민자당), 김해시 송은복(민자당), 의령군 전원용(민자당), 함안군 조성휘(무소속), 창녕군 김진백(민자당), 밀양시 이상조(무소속), 양산군 손유섭(무소속), 거제시 조상도(민자당), 하동군 정구용(민자당), 남해군 김두관(무소속), 함양군 정용규(무소속), 산청군 권순영(무소속), 거창군 정주환(무소속), 합천군 강석정(무소속) (이상 21명)
제주도	신구범 (무소속)	제주시 고민수(민자당), 북제주군 신철주(민자당), 서귀포시 오광협(무소속), 남제주군 강태훈(민자당) (이상 4명)
계	15 명	230 명

※ 1. () 안은 소속 정당명이며, 민주자유당은 ‘민자당’ 으로, 자유민주연합은 ‘자민련’ 으로 표기하였음.
2.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부록 “4.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을 참조.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 문화방송(MBC)의 투표소 출구조사 결과 발표

1995년 6월 27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자 문화방송은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 10,6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시·도지사선거 당선예상자가 민주자유당 5, 민주당 4, 자유민주연합 4, 무소속 2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또한 문화방송은 개표방송 10분 만에 서울시장 선거의 득표율이 조순 39.4%, 박찬중 34.4%, 정원식 24.0% 라고 보도하였다.



▲ 문화방송(MBC) 개표결과 방송 (동아일보 1995년 6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투표한 선거인에게 투표결과를 질문

하여 집계·공표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조사내용에 대한 방송 중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투표장 출구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귀가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선거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된 투표비밀 보장부분은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질문할 수 없다는 선거법의 근거를 다시 제시하였다. 비록 방송이 투표가 끝난 뒤 시작됐지만 조사 자체가 투표 진행시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고, 선거법은 출구조사만이 아니라 투표결과에 대해 묻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9개월 후에 실시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⁶⁾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즉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 등은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개표업무 방해

경남 마산시 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서학이는 개표참관인이 아님에도 출처불명의 개표사무원 표찰을 가슴에 달고 개표장에 들어가 무효투표지 2매를 훔쳐 1매는 입에 넣어 삼키고 1매는 손으로 찢고는 마산시장을 다시 뺏아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개표업무를 방해하다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이 투표지 유·무효 구분을 하고 있던 개표사무원을 시비 끝에 폭행하여 1시간여 동안 개표가 중단되었다. 전북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개표장 출입자격이 없는 김용근이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근무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6) 출구조사(Exit Poll)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조사대상 투표소를 선정한 다음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간격으로 투표지를 면접 조사함으로써 투표자 분포 및 정당별·후보자별 지지율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출구조사는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항상 실시되고 있다.

3) 기타 개표관련 사건·사고

서울 강남구갑선거관리위원회 제2개표소에서는 신사1동 투표함이 완전히 계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3동 투표함이 개함돼 신사1동 투표지와 함께 뒤섞여 투표용지 교부수가 투표자 수보다 140장이 더 많은 것으로 계수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표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여 1시간 40분여간 개표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 강서구을선거관리위원회 제2개표소에서는 개함점검부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유·무효를 구분하던 중 민주자유당 후보자의 투표지 묶음에 민주당 후보자의 투표지 20매가 혼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심사부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해당 후보자의 표로 합산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제1개표소에서는 각 동별로 부재자투표 봉투를 분류한 결과 중곡1·2동의 봉투수가 접수한 수량보다 1매씩 부족하여 다시 계수하였고 이로 인해 개표가 1시간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표 2-20〉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 제기 및 처리상황

(단위: 건)

선거별	구분	제기	처리상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합 계		95	31	2	55	7
시·도지사선거		1	-	-	1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	2	-	8	-
시·도의회의원선거		22	3	2	15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62	26	-	31	5

4. 선거에 관한 쟁송

가. 선거소청의 제기 및 처리결과

지방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선자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지방선거에 한하여 적용하는 선거소송 전심제도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소청 제기건수는 총 95건으로 1991년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5건에서 22건으로 줄었으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43건에서 62건으로 늘어 소청제기 건수에서는 비슷하였다.

선거소청 검증 결과 선거소청 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선거소청이 제기된 95건 중 31건은 자진해서 소청을 취하하였고 선거소청 검증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건은 총 64건이었다. 그 중 기각결정은 55건이었으며 인용결정 7건, 각하결정 2건이었다. 인용결정된 7건은 당선무효 6건과 선거무효 1건이었으며, 인용결정한 사건은 시·도의회의원선거가 2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5건이었다.

인용결정된 당선무효 소청 6건은 모두 투표지 검증결과 득표수 변동으로 당선인이 변경되었으며, 선거무효 소청 1건은 전남 여수시의회의원선거 신월동선거구로 김정완 당선자가 차점자와 4표 차이였으나, 자신의 친·인척 등 12명을 위장전입시켜 그 가운데 9명을 투표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청에서 선거무효 결정을 하였다.

나. 선거소송의 제기 및 처리결과

선거소송은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을 포함한 피소청인이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6건으로 선거별로는 시·도지사선거 1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건,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3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1건이었다.

법원의 선거소송처리 결과 14건은 기각되었고 2건의 소송은 소송제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기각 결정된 선거소송 중에는 선거소청에서 위장전입자의 투표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전남 여수시의회의원선거에서 김정완 당선자가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에서 소송제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서울 구로구의회의원선거 고척제1동과 서울 강동구의회의원선거 명일제2동선거구로 이들 선거구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모두 누락된 투표지에 대해 선거소청에서는 무효로 결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유효투표지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구로구 고척제1동선거구는 선거소청 시 투표지 검증 결과 당선인(변주태)과 소청인(김영봉)의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인 소청인을 당선자로 결정하였으나, 선거소송결과 무효로 처리되었던 당선인의 감표(4표)가 유효⁷⁾로 처리돼 당초 당선인인 변주태로 다시 결정되었다.

그 밖에 선거소송에서는 투표지의 상·하단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란에 접선 기표한 것을 유효로 결정하였다. 또한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육안(肉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판단 결과는 선거소청 결정과 동일하여 선거소송으로 인한 당락변경은 없었다.

5. 선거결과 특징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투표성향은 전국단위선거 때마다 계속 되어왔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비롯된 호남 대 비호남의 양분구도는 사라졌지만 서울·부산·광주·전남·전북·충남·대전지역에서 지역주의 투표

7) 투표구위원회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 가인이 모두 누락된 투표지라 하더라도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자수와 투표용지교부수가 일치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선관위가 작성하고 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여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인정되면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처리하여야 한다.(1996. 7. 12. 96우16)

현상이 재연되었다.

여야 3당은 연고지역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모두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유권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연고정당 후보에게는 높은 지지를 통해 당선시킨 반면 비연고정당 후보에게는 낮은 투표성향을 보였다. 시·도지사선거의 득표율을 보면, 민주자유당은 부산에서 51.4%의 지지를 획득한 반면, 광주·전남·전북(호남권)에서 23.0%, 대전·충남·충북(충청권)에서 21%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의 경우 광주·전남·전북(호남권)에서 74.4%를 얻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지지율이 무려 12.4% 포인트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남과 경북에서에서는 공천조차 하지 못했다. 자유민주연합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호남권 전체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지만 대전·충남·충북(충청권)에서 56.7%를 득표하였다.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당선자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 민주자유당은 부산에서 87.5%, 민주당은 서울 92%, 광주 100%, 전남 91.7%, 전북 92.9%, 자유민주연합은 대전 80%, 충남 100%의 압도적인 당선율을 보였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자유당은 부산에서 90.9%, 민주당은 서울 91.7%, 광주 100%, 전남 91.2%, 전북 94.2%, 자유민주연합은 대전

〈표 2-21〉 지역별 정당득표율 비교

(단위 : %)

선거별	정당별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시·도지사 선거	민자당	20.7	51.4	10.3	26.5	32.8	19.2	23.3	20.9
	민주당	42.4	37.6	87.7	73.5	67.2	12.9	24.5	10.8
	자민련	0	0	0	0	0	67.9	36.4	63.8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민자당	35.1	58.2	12.0	13.9	23.6	24.8	30.7	17.3
	민주당	47.9	4.1	83.0	50.5	54.7	7.0	13.9	18.1
	자민련	3.7	1.6	0	0	0.9	53.6	22.6	57.0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민자당	36.7	55.7	9.6	18.6	24.4	27.1	35.9	12.8
	민주당	48.6	13.3	82.3	55.1	60.5	8.4	22.6	16.2
	자민련	3.2	0	0	0	0	54.5	13.4	55.5

※ 무소속의 득표율을 제외한 비율이며 '0' 인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임.

100%, 충남 89.1%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경남·강원·충북은 지역주의 투표성향에서 벗어난 데 비해 충남과 대전은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김영삼 정부에 대한 비판정서를 지역정서와 연계하며 선거쟁점화하여 오히려 전남·전북의 수준으로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나. 특정정당의 연고지역에서 시·도의회 장악

선거결과 15개 시·도의회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1개 정당이 시·도의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비례대표시·도의원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정되므로 여기서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었으며 무소속이 함께 경쟁하였다. 그 결과 민주자유당은 833명을 공천하여 286명(34.3%)이 당선되었으며, 민주당은 582명 공천하여 352명(60.5%)이 당선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179명을 공천하여 86명(48%)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은 853명 중 151명(17.7%)이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지역별 소속정당 현황을 보면 민주자유당은 강원, 부산, 경남, 경북 등 3개 시·도의회에서, 민주당은 서울, 광주, 전남, 전북 등 4개 시·도의회에서, 자유민주연합은 대전과 충남 시·도의회에서 각각 과반수 또는 3분의 2이상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여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특히 대전과 광주는 한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전체 의석을 차지하는 독점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1당 지배체제가 나타난 지역들은 대부분 주요 3개 정당의 지역적 연고가 있는 곳으로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연관이 있었다. 즉 이들 주요 정당들은 약세지역에는 절반도 공천하지 못한 반면 연고지역에는 대거 공천하였다. 또한 대구, 경북, 경남지역에서 지역구시·도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것도 반대당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인사들이 당의 일방적인 공천권 행사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대거 당선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무소속의 선전은 지역주의의 균열보다는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시·도의회에서 1당 지배현상이 일어난 지역은 시·도지사과 자치구·시·군의 장도 같은 당 출신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 2-2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별·정당별 당선자 수

(단위: 명)

지 역 별	의원정수	민주자유당	민 주 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서울·광주·전북·전남	276	12	256	0	8
대전·충남	78	3	2	72	1
강원·부산·경북·경남	276	179	7	3	87

다. 무소속 당선자의 대폭 증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우선 시·도지사선거에서는 대구의 문희갑 후보와 제주 신구범 후보가 정당 공천자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2명의 무소속후보자 시·도지사 당선은 기존의 3당 구도에 대한 저항감의 표시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과장을 일으켰다. 서울에서는 박찬중 후보가 비록 낙선하였지만, 30%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를 무려 62만여 표(12.9%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2위를 기록하였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무소속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무소속 돌풍이란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230개 선거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3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 돌풍의 진원지는 이른바 'TK 정서'라 불리며 당시 '반 민주자유당 정서'가 팽배했던 대구·경북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대구에서 5명, 경북에서 14명이 나왔다.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음을 볼 때 무소속의 선전이라 할 수 있었다. 경북지역의 경우 민주자유당이 내부사정으로 공천을 포기한 선거구가 5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무소속 당선자는 적지 않은 편이었다. 그 밖에 여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11석을, 민주당의 연고지역인 전남·전북 지역에서 각각 2명과 1명이 당선되었다는 점도 주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무소속은 위력을 발휘하여 전체 875개 선거구 중 151명(17.3%)이 당선되었다. 이는 866개 선거구 중 115명(13.3%)이 당선된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것과 비교하면 4% 포인트 높은 것으로 선거구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7명이 증가한 것이었다. 특히 37석을 선출하는 대구에서는 22명의 무소속후보자가 당선되어 다수의석을 차

지했으며, 경기·충북·제주지역에서는 무소속의 선전으로 다수당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정당의 공천이 허용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된 것은 지역분할주의와도 관련이 있었다. 즉, 특정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색이 강한 지역에서 그 정당의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유력인사들이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유권자들도 다른 정당을 택하는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증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총 325명이었고, 그 중 127명(39.0%)이 당선되어 전체 의원정수(5,511명)의 2.3%를 차지하였다. 지난 1991년 지방선거에 비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5배 증가하였고 시·도의회의원선거는 무려 6.3배 증가했다.

선거별로 보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72명으로 의원정수 4,541명 중 1.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의원정수 4,303명에 40명(0.9%)이 당선된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이었다. 당선율은 206명 중 72명이 당선되어 35.0%의 당선율을 보였다. 123명이 출마하여 40명(32.5%)이 당선된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비해 2.5% 포인트가 높아졌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4명을 포함해 총 55명이 당선되어 전체 의원정수 970명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때의 의원정수 858명 중 8명(0.9%)이 당선된것에 비해 무려 6.3배가 증가한 것이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40명이었으며 이 중 13명이 당선되어 32.5%의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63명의 여성이 출마하여 8명(12.7%)이 당선된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당선율이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증가한 원인은 첫째, 시·도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주요정당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했기 때문이었다. 민주자유당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60%를 공천했으며, 민주당은 30%, 자유민주연합은 25%를 공천했다. 둘째, 여성단체들의 여성후보 발굴과 적극적인 참여의 성과였다. 한국유권자연맹의 경우 총 34명의 여성후보를 내어 그 중 19명이 당선되었으며,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경우도 17명의 후보를 내어 14명이 당선되었다.

마. 선거관리의 복잡성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개별로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상 비능률을 막기 위해 4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4개 선거관리업무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지방행정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가까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지만 행정기관의 협력 없이는 선거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거의 전인력이 차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후보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물량면에서는 천문학적인 수량의 인쇄물이 쏟아졌다. 전국단위선거인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업무량을 비교하여 제1회 지방선거관리의 복잡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투표발송작업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1배가 넘는 15,596명이었다. 이는 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당 평균 54명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으로는 후보자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구·시·군청 행정공무원을 2일간 파견받아 처리했다.

후보자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1배가 넘는 15,596명이었다. 이는 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당 평균 54명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으로는 후보자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구·시·군청 행정공무원을 2일간 파견받아 처리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매세대에 발송하는 인쇄물은 선거공보 1종이었으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전단형 소형인쇄물이 함께 발송되었다. 인쇄물량은 전국으로 8억 2,403만 8,000부였으며, 16절지 규격의 종이로는 12억 2,922만 장이었다. 선거인쇄물 발송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개 읍·면·동사무소당 233,000부 정도 발송했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라벨 출력·인쇄물 투입·봉합·발송까지 2~3일간 20여 명을 투입하여 발송작업을 했으며, 우체국은 발송작업 현장에서 접수하여 각 가정에 배달했다.

합동연설회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6배가 많은 4,787회가 개최되었다. 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당 평균 16회가 개최된 셈이다. 실제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휴일이 2일 정도 있어 분산 개최하더라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루에 평균 8회의 합동연설회를 관리한 것이었다. 합동연설회장 설치·철거에는 일용인부가 투입되었으며, 질서유지요원으로는 구·시·군청 행정공무원 309,000여 명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합동연설회의 개최시기가 선거인쇄물,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간과 겹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합동연설회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했다.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54,745매가 게시되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3배가량 많았다. 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당 234매가 게시된 수치였다. 선거운동기간이 13일 정도이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평균 18장의 현수막을 검인한 셈이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는 1억 2,500만 장으로 각 지역별로 인쇄단가가 달라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통상적인 가격인 한장에 10원으로 계산하면 12억 4,170만 원 가량 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선거인수가 많아 1개 위원회당 평균 270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검수·보관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오쇄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투·개표장비는 투표함·기표대·선거가방·개표상자·계수기 등 기본적인 것만 모두 28만 9천여 대가 소요됐다. 투표함은 11,870개, 기표대가 118,388개, 선거가방이 37,910개, 개표상자가 16,778개, 계수기가 4,000대이며, 처음으로 도입된 투·개표전산시스템용 컴퓨터는 1,027대가 사용되었다.

투·개표 인력면에서 보면 소요된 연인원은 총 121만 명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자체인력을 제외하면 지원인력은 110만 명에 이르렀다. 지원인력으로는 행정기관 공무원 26만여 명, 경찰공무원 32만여 명, 교원 11만여 명, 전기·통신·의료요원 1만 명이 동원되었다. 그 중 투·개표사무인력으로 각각 13만 명, 11만 명이 투입되었으며, 투·개표소 경비경찰 17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이 밖에 일용인부 37만 1천여 명과 자원봉사자 1만여 명이 선거를 지원했다.

〈표 2-23〉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수 등 비교

(단위: 명, 매, 회)

선거별	후보자수	인쇄물 매수	합동연설회	현수막 게시수	투표용지 매수	투표 사무원수	개표 사무원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360	12,609,839	783	16,873	29,500,000	75,971	26,24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5,596	824,038,000	4,787	54,745	125,000,000	139,818	115,606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1. 재·보궐선거 사유발생과 실시상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1995. 7. 1~1998. 6. 30)에는 총 701명(재선거 54명, 보궐선거 647명)의 궐원이 발생하였다. 그 중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53개 선거구와 사직 등으로 궐원이 발생한 56개 선거구에 대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곳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곳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591곳은 지방의원 정수가 3분의 2 이상이 궐원되지 않거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24〉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사유발생 및 선거실시 상황

(단위: 명)

구분 선거별	사유 발생								선거 실시	미실시
	합계	사망	사직		퇴직 등					
			타선거 출마	일신상 사유	선거법 위반	기타법 위반	제명	기타		
합계	701(54)	62	401	143	56	37	2		109(53)	592(1)
시·도지사	2	-	2	-	-	-	-			2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5(1)	2	6	3	1	3	-		4(1)	11
시·도의회의원선거	228(12)	11	164	31	12	10	-		29(12)	199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456(41)	49	229	109	43	24	2		76(40)	380(1)

※ () 안의 수는 재선거 실시 횟수로 본수에 포함되었음.

재·보궐선거 실시결과 평균투표율은 36.3%로 제1회 지방선거의 투표율 68.4%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최고투표율을 보인 선거는 1996년 6월 27일 실시한 경남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구만면선거구)로 84.9%였으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낸 선거는 1997년 3월 6일 치러진 서울시의원재선거(서울 서대문구제5선거구)의 11.2%로 최고 투표율과 8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4곳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8곳 등 22곳에서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후보자는 평균 2명 정도가 출마했는데, 4곳의 자치구·시·군의 장(노원구청장, 전주시장, 여천군수, 오산시장)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서는 비교적 중앙정치의 영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대해 기술하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기술을 생략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임기 중 시·도지사 재·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자치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는 15곳에서 발생하여 4곳은 실시하였고, 11곳은 1998년에 발생하여 시·도지사과 같은 사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연합공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⁸⁾은 4개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공론화하고자 하였으나,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⁹⁾와 자유민주연합은 ‘지방자치제 포기’라고 맞서 공방이 가열되었다. 노원구청장 재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공조하여 단일후보를 공천하고 오산시장선거에서도 자유민주연합 후보를 새정치국민회의가 지원하여 ‘DJP연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8)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이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당명을 변경한 것이다. 1996년 2월 6일 민주자유당은 노태우·전두환 두 전 대통령 부정부패사건과 12·12 군사반란 및 5·18사건으로 실추된 민주자유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5·6공화국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

9)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이사와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다. 김대중 이사는 1995년 7월 18일 공식적으로 정계복귀 의사를 밝힌 후 창당작업에 들어갔다. 그 후 8월 11일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명으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신청을 하여 수리됨으로써 창당되었다.

가. 1996. 7. 19 전주시장 보궐선거

전북 전주시장 보궐선거는 이창승 전 전주시장이 제1회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대의원에 게 금품살포를 해 선거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형 확정 전에 사퇴함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면 실시하게 된 후 처음 실시된 보궐선거였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 여야 모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인위적 정계개편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정계개편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김대중, 김종필 총재는 1996년 5월 4일 회동을 갖고 검찰의 표적수사 중단과 당선자 영입중단을 촉구하면서 계속할 경우 국회 원구성을 거부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중지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당선자 영입작업은 계속되어 5월 20일에는 과반수의석(150석)을 넘게 되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동대책위를 열고 장외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곧바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합동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장외집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점증하자 여야는 협상을 벌여 원구성과 제도개선 및 부정선거 진상특위를 설치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구성문제를 놓고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였고, 이후 7월 8일 제180회 임시국회(1996. 7. 8~7. 27)를 재소집하여 제도개선특위와 제15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진상조사특위 위원구성에 합의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전주시장선거는 후보자등록부터 충돌했다. 신한국당은 지역특성상 승산이 없다고 보았지만, 제1회 지방선거부터 쟁점화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주장하며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며, 이를 법으로 막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신한국당의 후보자 없이 새정치국민회의와 무소속 후보 2인이 출마하게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추천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하였다. 처음 추천하려던 월간 『말』지 발행인 정동익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낙마하였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비공개 공천을 신청한 김완주 전라북도 기획관리관을 두고 김대중 이사장과 유종근 전북지사 간에 공천갈등을 겪으며 진통 끝에 양상렬 변호사를 후보로 결정하였다.

선거결과 선거인수 376,588명 중 66,66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7.7%라는 역대 구·시·군

의 장선거 선거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 양상렬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68.6%인 44,07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투표율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의원선거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로, 1965년 11월 9일 서울 10지구(서대문구 일부지역) 제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저투표율 20.8%보다도 3.1% 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또 제1회 지방선거 당시의 전주시장선거 투표율 68.2%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전주지역 선거구의 투표율인 61.9%에 비해 각각 50.5%, 44.2% 포인트가 낮은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실시된 전주시 조촌동 시의원선거의 투표율 39.9%보다 22.2% 포인트 낮아 시의원선거보다도 못한 시장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저조한 투표율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먼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았던 신한국당은 이 선거에서 지방자치체에 대한 정치권의 과잉개입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자치구·시·군의 장의 정당공천배제 방침을 굳히고 국회 제도개선 특위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무더운 날씨와 신한국당이 공천하지 않은 것 등을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당내에서도 이로 인해 신한국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공천배제의 빌미를 제공하여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표 2-25〉 1996. 7. 19 전주시장 보궐선거 득표상황

(단위: 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새정치국민회의 양상렬	무소속 박용갑	무소속 이양재	계		
376,588	66,669 (17.7%)	44,079	15,639	4,465	64,183	2,486	309,91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나. 1996. 8. 5 여천군수 보궐선거

전남 여천군수 보궐선거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¹⁰ 수습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던 정근진 전 군수가 사고 선박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 정치적 상황은 전주시장 보궐선거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신한국당은 전주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 2명이 출마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여천군수 공천은 대의원들의 직접투표로 후보를 결정하였다. 후보로 선출된 조남선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주승용을 5표차로 물리치고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주승용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결과 선거인수 46,699명중 27,92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9.8%의 투표율을 나타낸 가운데 무소속 주승용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61.4%인 16,001표를 득표하여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또 같은 날 실시된 여천군제2선거구 도의원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의 김길봉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일찍부터 여천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김대중 총재가 여천 공단지역을 방문하여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공을 들였음에도 무소속 후보자에게 참패를 당하였다. 전주시장선거에서 최저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지역적 지지기반인 여천에서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후보들이 낙선함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향후 당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제1회 지방선거 당시 여천군수 후보의 지지율은 50.3%였으나 당시 보궐선거에서는 32.3%에 불과하여 18% 포인트의 민심이 새정치국민회의에 등을 돌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신한국당은 자만한 김대중 총재와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다시 한번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라는 당의 원칙이 설득력을 더하게 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반겼다.

10) 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부근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를 피해 인근해상으로 이동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신순범 의원이 호유해운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정근진 전 여천군수 등이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호유해운 정해철 전 사장 등이 사법 처리되었다.

〈표 2-26〉 1996. 8. 5. 여천군수 보궐선거 득표상황

(단위: 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새정치국민회의 조남선	무소속 박정곤	무소속 주승용	계		
46,699	27,929 (59.8%)	8,439	1,634	16,001	26,074	1,855	18,77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다. 1996. 9. 12. 노원구청장 재선거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는 제1회 지방선거에서 최선길 구청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정치적 상황은 여천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여 후에 실시된 선거로 여당의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항하여 양당(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양당은 1996년 6월 4일 첫 합동의총을 열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0여 차례 합동의 총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조체제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당시 여야는 1996년 8월 28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검찰조사 결과발표를 계기로 ‘20억 원+ α ’ 설¹¹⁾의 실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새정치국민회의는 격렬하게 반발하며 강삼재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고소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당보를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당초 소극적이었던 자유민주연합도 노원구청장 재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강삼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에 동조하였다. 반면 신한국당은 더 이상 소모전을 삼가지며 계속 정면대응을 자제하였지만, 여야 모두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한국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으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자유민주연합 김용채 전 의원을 사실상 연합공천 형식으로 내세

11) 1996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당시 중국에 체류 중이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격려차원에서 20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총재가 시인한 20억 원 이외에 돈을 더 받았을 것이라는 이른바 ‘20억 원+ α 설’을 제기하였다.

왔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도 양당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며 ‘선거공조’를 다졌다. 특히 김대중 총재는 연설회에서 “이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자유민주연합과 손잡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조를 제의하는 등 대통령선거 전초전을 방불케 하였다.



▶ 노원구청장 재선거 정당연설회(1996년 9월 7일 서울 중계동 근린공원)

선거결과 선거인수 394,149명의 23.4%인 92,047명이 투표하였고, 김용채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54.1%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이같은 투표율은 전주시장보궐선거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천군수 보궐선거나 15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 선거는 야권공조의 실험무대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을 끌었으나, 저조한 투표율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의 정치불감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선거결과를 두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야권공조의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신한국당은 자치구·시·군의 장의 공천배제에 따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며 폄하하였다.

〈표 2-27〉 1996. 9. 12 노원구청장 재선거 득표상황

(단위: 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자유민주연합 김용채	무소속 송광선	무소속 이기재	계		
394,149	92,047 (23.4%)	48,823	7,163	34,184	90,170	1,877	302,10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라. 1996. 11. 18 오산시장 보궐선거

경기 오산시장 보궐선거는 유태형 시장이 사망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노원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 지 두 달여 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였다. 노원구청장 재선거의 승리로 고무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합동의총을 열고 다시 한 번 결속을 다졌다. 양당(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정책공조를 취하며 여당의 독단에 의한 국회운영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양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에 따른 국정조사권 발동, 안기부법 개정 등에 대해 강경방침을 정함에 따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또한 1996년 11월 1일 후일 'DJP연합'의 분수령이 된 '11·1 목동회담'에서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의 사신(使臣)격인 자유민주연합 김용환 사무총장이 만나 'DJP연합'의 틀을 논의했다. 이 때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집권 후 내각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내각제 개헌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한국당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자치구·시·군의 장의 공천배제를 관철시킬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도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자유민주연합과 선거공조에 합의한 후, 자유민주연합 유관진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결국 자유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 2인이 입후보하여 특별한 쟁점 없이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과정 중에 오산시가 통상 선거일 공고 10여일 전에 시행해오던 부재자신고 안내공문을 선거일 공고 하루 전에 발송하는 바람에 부재자신고 홍보기간이 짧아졌다. 이로 인해 부재자신고인은 74명에 그쳤다.

선거결과 선거인수 46,903명의 43.1%인 20,193명이 투표하였고, 유관진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의 38.5%인 7,54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권은 김영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고조됐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야권공조가 일궈낸 또 한 번의 개가라고 평가한 반면, 후보를 내지 않은 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불과할 뿐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표 2-28〉 1996. 11. 18 오산시장 보궐선거 득표상황

(단위: 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자유민주연합 유관진	무소속 유재일	무소속 정기철	계		
46,903	20,193 (43.1%)	7,549	5,457	6,585	19,591	602	26,71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3 장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6. 4. 11 실시)

개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4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1996년 4월 11일 실시하게 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1년 8개월 정도 앞두고 실시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대중 전 평화민주당 총재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계복귀를 공식선언한 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향후 대권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였다.

선거전은 초반부터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바꾼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이 지역에 따라 2자 또는 3자 대결 구도를 보였다. 선거과정에서 신한국당은 세대교체와 정국안정을 위해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정론을 내세웠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여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는 개헌저지선인 3분의 1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견제론으로 맞섰다. 통합민주당은 3김 정치 청산과 새로운 개혁정치 실현을, 자유민주연합은 보수적 가치실현을 주장하였다.

선거결과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신한국당은 34.5%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46.5%인 139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지만 원내 과반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고,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얻어 제3당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데 그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

선거 후 신한국당은 정국운영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소속과 통합민주당의 일부 당선자를 영입하여 제15대 국회 개원 전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9절 _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4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김대중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정계에 복귀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5·6공파의 단절을 선언하며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분열된 민주당은 정치개혁시민연합과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을 발족시킴으로써 정치권은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새로운 ‘4당 체제’가 성립되었다. 한편 김대중 총재가 20억원의 정치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제14대 대통령선거자금 논란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김영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 ‘안정론’, ‘견제론’, ‘세대교체론’, ‘보수론’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었다.

1.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연설을 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재개한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은 선거가 끝난 지 20여 일 후인 1995년 7월 18일 공식적으로 정계복귀 의사를 밝히고 신당창당을 선언하였다.

김대중 이사장은 정계은퇴 번복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국정의 위기상황’

과 ‘민주당의 파벌정치’를 정계복귀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당내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당창당을 결심했다”며 신당 창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계복귀 선언의 실체는 지방선거 승리에 고무된 김대중 이사장의 네 번째 대권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와 신당 창당 선언은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비난성명이 이어지는 등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왔다. 김대중 이사장이 정계복귀 선언을 하자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박범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계원로답지 않게 말을 끝없이 바꾸며 국민들을 우롱해온 김 이사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분당의 당사자인 민주당도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정치후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민주당 이부영 부총재는 1995년 7월 19일 C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3김 세력 말고 신뢰할 만한 새로운 세력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 이사장의 창당선언은 곧바로 민주당의 당내 계파갈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창당파(동교동계), 반대파, 그리고 중도파로 나뉘어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창당파는 이기택 총재의 잔류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이기택 총재 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김대중 이사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 54명이 신당 창당에 참여하였다(이들 중 지역구국회의원들은 바로 민주당을 탈당하였으나, 일부 전국구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탈당하지 않고 한동안 민주당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합류하였다).

신당 창당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는 권노갑 김근태 김상현 김영배 김옥두 문희상 박상천 박지원 신계륜 신기남 신기하 이종찬 안동선 정대철 한화갑 조세형 등이 있었다. 박상규 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TV사회자 유재건, 신낙균 여성유권자연맹회장 등도 신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를 비롯하여 김원기·이철·홍기훈·의원 등은 신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다.

김대중 이사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1995년 8월 11일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명으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지구당 창당 등 본격적인 창당작업을 시작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는 9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이사장을 총재로 추대하는 등 창당을 완료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새정치국민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신청을 하여 1995년 9월 11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립 절차도 마쳤다. 이로써 새정치국민회의는 여당인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제1야당이 되었고, 42석의 민주당, 22석의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새로운 4당 체제를 형성하였다.



▶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1995년 9월 5일)

2. 비자금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4,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정계에 파문이 일어났다. 박계동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원조 전 의원을 통해 비자금 4,000억 원을 차명계좌로 시중 은행에 분산 예치하였고, 그중 300억 원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되었다며 예금 잔고 증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4,000억 원 비자금설은 1995년 8월 1일 서석재 당시 총무처장관이 앞서 제

기한 적이 있었다.¹²⁾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단순히 소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대 왜곡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구체적인 물증과 관련 인물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간의 루머로 치부할 수 없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을 폭로한 다음날인 1995년 10월 20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300억 원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이우근 전 지점장 등 관련자 7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문제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4년 8개월간 경호실장을 지낸 이현우가 1995년 10월 22일 자진출두하면서 서소문지점에 예치된 300억 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통치자금’으로 조성해 쓰다 남은 자금이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1995년 10월 26일까지 비자금 입출금 실무책임자인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을 소환하고 1차적으로 비자금 조성액 1,500여억 원과 잔액 990여억 원을 밝혀내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야 3당’은 일제히 대여공세를 시작하였고, 여론도 악화되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27일 비자금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성명의 발표를 통해 “재임 5년간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조성된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은 자신의 책임 아래 대부분 정당 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는 데 보탬”며 비자금 조성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퇴임 당시 사용하고 남은 비자금은 1,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경위와 비자금 사용처, 제14대 대통령선거자금 지원액수 등에 대해서



▶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사건관련 기자 회견
(1995년 10월 19일)

12)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은 1995년 8월 1일 기자들과 만찬 중 비보도를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 쪽의 실력자가 대리인을 통해 4,000억 원의 가·차명계좌를 자금출처조사 없이 실명으로 전환해 주면 2,000억 원을 정부에 내놓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된 후 정치적 파장이 일자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8월 4일 그를 총무처 장관직에서 경질하였다.

는 해명하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과성명 발표 이후에도 검찰의 계좌추적 작업은 계속되었고, 이현우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규모와 잔액규모를 확인한 검찰은 1995년 11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

통령은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기업인 명단, 사용처 및 국내외 은닉재산 유무에 대해 ‘모른다’,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결국 조사를 시작하지 보름만인 11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검찰은 1995년 12월 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조성한 비자금 4,189억 원과 사용처 3,690억 원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현우, 이원조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뇌물수수)로 기소하였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으로 규정되면서 12·12 군사반란과 더불어 5·6공화국 세력들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이후 이 돈의 사용처와 함께 제14대 대통령선거 자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불러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 직전, 1995년 10월 27일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총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거운동으로 고생하는 데 대한 격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자유당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 수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2년 제14대 대



▶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관련 언론보도(조선일보 1995년 11월 17일)

통령선거 때에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에게도 선거자금 외에 별도로 1,000억 원가량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비자금 문제는 선거쟁점화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제14대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한 정치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주자유당은 1995년 11월 9일 강삼재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대중 총재와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과거 평화민주당 창당과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유보 등 정치적 격동기마다 정치자금 수수설이 난무했다면서 김대중 총재가 시인한 20억 원 이외에 돈을 더 받았을 것이라는 이른바 ‘20억 원+ α ’ 설을 제기해 대선자금 공방을 가열시켰다. 이에 따라 대선자금과 관련한 민주자유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커졌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기간 내내 여야 간의 선거쟁점이 되었다.

3.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고 1주일 정도가 지난 1995년 11월 24일,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민주자유당에 지시하여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별법 제정은 1993년 5월 13일 광주문제를 “역사에 맡기자”는 김영삼 대통령 자신의 특별담화 내용을 뒤집은 것이었다. 특히 민주자유당에는 정호용·허화평·허문도 의원 등 5·18 관련자들이 있었고, 당시 ‘정계개편’과 ‘5·6공 단절’론이 거론되는 등 계파 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내분으로 번질수도 있어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지 6일 후인 1995년 11월 30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2장.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상황” 참조). 검찰은 이전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적이 있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22명이 1993년 7월 19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고소·고발을 해오자,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1994년 10월 29일 발표했었다. 이때 검찰은 ‘12·12’가 하극상에



▶ 검찰이 경남 합천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압송하고 있다(1995년 12월 3일).

의한 군사반란이지만, 법적논쟁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대립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던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검찰은 일단 12·12 군사반란 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하였다. 이에 대해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반발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요구나 어떠한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날인 12월 3일 합천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행하여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하였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여 일이 지난 1995년 12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하였다. 이날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16년이 되는 날인데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담화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등 부정축재 사건은 잘못된 역사에서 시작된 파생물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상상을 초

월하는 부정축재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역사를 되돌리려는 과립치한 언행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도 하였다.

5·18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는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의 위헌성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법상 내란·외환과 균형법상 반란·이적죄 등을 저지르고 집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안’과, 이 법안을 근거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의 공소시효 정지를 명문화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995년 12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한때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며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반대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진통 끝에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혐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황영시 차규현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 등의 관련자도 기소하였다. 이때 기소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 2명, 현직 국회의원 4명, 전직 장관급 11명, 전직 차관급 4명 등 총 21명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6년 2월 16일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성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위헌성 문제가 일단락되자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1년 남짓 진행되었다. 재판결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명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관련 혐의자들도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들은 복역하다가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4일 후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인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고지

인 대구·경북에서 소위 ‘반(反) YS 정서’가 조성되어 민주자유당은 고전하였다.

4.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1995년 11월 중순 여야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민주자유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조기공천’, ‘정계개편’, ‘5·6공 단절’론 등을 거론하는 등 계파 간 갈등양상을 보이며 어수선하였다.

이런 시점인 1995년 11월 22일 민주자유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당명 변경 등 당의 쇄신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당명 변경을 포함하여 당헌·당규상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강삼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신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1996년 2월 6일)

이어서 12월 6일 민주자유당은 당무회의를 통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신한국당은 1996년 2월 6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당헌을 채택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날 ‘제15대 총선필승 공천자 전진대회’를 겸해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총재는 “임기 중 대통령중임제 도입이나 내각제 채택을 위한 어떤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개헌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제2의 건국”이고 “신한국당은 건전한 안정 세력과 합리적 개혁 세력의 대동단결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며 신한국당 출범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당명 변경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창당 6년 만에 ‘신한국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2절

선거제도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1994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실시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지역구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었고, 전국구국회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배분되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당별 득표율에 의해서도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별 득표율 간의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게 되었다.

1. 선거법 개정

선거법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첫 번째 개정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개정은 공명선거 장치 강화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처음 개정되었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선거법 개정협상에 들어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하였다.

가. 개정경위

선거법에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95년 2월 하순경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획정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수 편차가 8.8 대 1까지 벌어져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사회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구수 상·하한선을 1995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대 30만 명, 최소 7만 명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도·농통합으로 기존 선거구 2곳이 합쳐지면서 인구 30만 명 이하인 9개 지역을 분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기준만 제시하고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에 들어간 여야는 논란 끝에 1995년 7월 12일 최소선거구 통·폐합은 배제하고 30만 이상 선거구를 분구하여 기존 253개 지역구를 260개로 늘리고 전국구는 39명으로 줄이는 선거구 조정안에 합의하였다. 이 조정은 7월 15일 제176회 임시국회(1995. 7. 5~7. 15)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8월 4일 법률 495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여야 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식의 지역구 조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급기야 당해 선거구민들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을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획표’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논란 속에 지역선거구를 조정할 선거법 개정이 끝난 후 1995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여야는 다시 개정논의를 시작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은 그동안 선거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제재강화 및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 개정안을 토대로 여야 4당은 1995년 12월 13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하였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유급선거사무원 증원에는 여야가 일치된 입장을 보였고, 신한국당이 제시한 자원봉사자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이 제의한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할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계속된 실무 협상을 통해 여야 4당은 12월 19일 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자원봉사제의 폐지, 선전벽보 보완 첩부 허용, 소형인쇄물 종수 축소,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조정 등에 합의하였다.

실무협상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1995년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이 안은 내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12월 19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 결과 재석 204인 중 185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12월 30일 법률 제512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선거법 개정작업을 통해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27일 앞서 법률 제495호로 공포·시행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했다. 선거구 재협상에 들어간 여야 4당은 인구수 상·하한선, 인구수 기준일 등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1주일 이상 공전되기도 하였다.

임시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러 합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신한국당은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당초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96년 1월 24일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구 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여 결국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1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후 1월 27일 제178회 임시국회(1996. 1. 10~1996. 1. 27)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2월 6일 법률 제5149호로 공포·시행되었다.

나. 선거법 개정 주요쟁점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문제였다.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늘 선거구 획정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및 소선거제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보이는 정국구도에서 각 정당은 연고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성향이 있어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도 재연되었다.

1995년 4월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한 30만 명, 하한 7만 명을 기준으로 획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기준안을 토대로 협의에 들어간 여야의 입장 차이는 현격했다. 민주자유당은 7만 이하의 선거구 5곳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인구 30만 명 이하인 도·농통합시를 1개의 선거구로 하자고 맞섰다.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농통합시 9곳 중 7곳이 민주자유당 우세지역으로 민주자유당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인 반면 7만 명 미만인 전남 지역의 3곳은 민주당 우세지역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여야는 인구 30만 이상의 선거구만 분할하고 7만 이하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총 의석인 299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선거구는 237개에서 260개로 늘어났고 그 대신에 전국구 의석수는 62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권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충북의 보은·영동·옥천 선거구는 3개 군이 합쳐 1개의 선거구였으나 보은군과 영동군 사이에 위치한 옥천군이 단독선거구로 분리되면서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보은·영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것에 대해 ‘게리멘더링’ 의혹이 집중되었다.

이처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여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던 중 1995년 7월 26일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이석연 변호사 등은 선거법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27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4:1)를 넘어선 것이고 또 충북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는 매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인구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에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 위헌으로 보았고, 선거구역은 경제적·행정적 연관성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의 선거구역 획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야 4당은 ‘인구수의 상·하한선’, ‘도·농 통합시의 분할 여부’, ‘인구산정 기준일’을 두고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했다. 특히 선거일을 4개월여 앞두고 후보공천 등 선거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정당은 연고지역의 선거구수에 증감이 생김에 따라 선거구 조정 협상에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전개하였다.

신한국당은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36만 4,000명~9만 1,000명으로, 도·농 통합시는 분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으로 28만~7만 명을 주장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이러한 주장은 10만 명을 하한선 수준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의 11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지만, 7만 5,000명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통합대상은 5개 정도로 줄어든다는 이해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선거구 조정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인구 상·하한선 30만~15만 명을 제안하였다. 자유민주연합도 인구 상·하한선을 30만~7만 5,000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인구 상·하한선 문제와 함께 인구 기준일을 두고 여야 4당은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제출할 당시와 거의 1년여 차이가 나 선거구별로 인구증감이 두드러진 곳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구수 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지역선거구의 분구대상수가 달라졌고, 이를 두고 정당별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었다.

당초 4당은 실무협상에서 1995년 11월 30일을 인구 기준일로 잠정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인구 상한선 기준을 28만 명으로 적용하면 16개 선거구(영남권 4곳, 수도권 10곳), 30만 명으로 하면 6개 선거구(영남권 2곳, 수도권 4곳)가 늘어났다. 새정치국민회의가 우세지역으로 보고 있던 수도권의 선거구가 더 증가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던 대로 인구 기준일을 1995년 3월 1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11월 30일을 고수하였다.

여야는 협상 끝에 인구 상·하한선을 30만~7만 5,000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인구 기준일은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양안을 절충하여 1995년 6월 30일로 합의하였다. 다만 특례규정(부칙)으로 인구 30만 명이 넘는 부산 해운대구, 부산 북구, 인천 계양구, 전남 목포시 등 4곳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구·시·군의 일부 읍·면·동을 분할하여 인접 선거구에 편입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299석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지역구는 첫 번째 개정되었을 때보다 7개가 줄어들어 253개로 조정되었고, 전국구 의석수는 7석이 늘어나 46석이 되었다.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단형 소형인쇄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후보자가 직접 보완 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의 교육과정을 수학한 경력 등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당직자회의,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등 정당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기간중으로 개정하여 제한기간을 완화하였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졌으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다만 금치산 선고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법¹³⁾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지역구 253명, 전국구 46명)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하여 국회의원 총수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역구선거구수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237개에서 253개로 늘어나면서 지역구의원 정수는 16명이 늘어난 반면, 전국구의원정수는 16명이 줄어들었다(법 제20조, 제21조).

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는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하였다. 국회의원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3) 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함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5149호)을 말함.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3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거일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주의(임기만료 선거)와 공고주의(재·보궐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17일로 정해졌다(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임기만료 150일 내지 20일 전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7일에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후보자

후보자 등록 요건은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당원이 아닌 경우 관할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당원이 아닌 경우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하였으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완화하였다(법 제47조, 제48조).

후보자 등록기간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일이었으나 2일로 단축하였다. 후보자 기탁금은 후보자마다 1,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았다(법 제49조, 제56조). 기탁금은 지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반환하도록 하였고, 전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이 반환되었다. 반면 지역구후보자가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전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었다. 또한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귀속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하였다(법 제57조). 지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선거인명부사본 작성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선거공영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 선거운동

선거운동 분야에서는 우선 선거운동 제한대상에 변화가 있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제1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자 규정을 개정하여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에도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0조).

선전벽보 등의 게재내용에 있어서는 정규학력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많은 후보자들이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과장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제한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제4절 선거운동” 참조). 따라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전벽보 보완 첩부제도가 신설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 장소에 보완·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4조).

소형인쇄물은 종수를 축소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전단형 3종과 명함형 등 4종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었으나 책자형과 명함형소형인쇄물 각 1종으로 축소하였다(법 제66조).

정당활동과 의정보고의 제한기간이 완화되었다. 국회의원 후보가 지구당위원장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당직자 회의, 당원단합대회(일명 “사랑방좌담회”), 당원교육이 있었고,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제한기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빈발하여 1994년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를 개정하면서 ‘선거기간 중’으로 제한기간을 완화하였다(법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11조).

바.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은 ‘비목별제한주의’에서 ‘총액제한주의’로 바뀌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사무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등 총 7개 비목별로 산출하였고, 후보자들은 각 비목별로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금액 2,600만 원에 선거연락소나 읍·면·동수 및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총액으로 산출하게 하였

다. 또한 지출방법에 있어서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비용 지출액이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법 제121조, 제258조).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반드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127조, 제132조).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선거사무장이 회계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해당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34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결과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과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후보자도 국고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법 제57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1조).

사. 투 표

투표와 관련하여서는 투표용지 정당대리인 가인제도가 바뀌어 정당대리인 가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정당대리인은 투표용지의 인쇄·납품·검수·배부의 모든 과정에 입회하도록 하였다(법 제151조).

투표출구조사도 신설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마감시까지 여론조사를 금지하였다. 이후 1994년 제정된 선거법에서도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출구조사의 허용범위와 적용 범위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제8절 선거결과” 참조). 이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여 방송국·신문사 등이 선거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다만, 출구조사에 대한 경위와 결과를 투표마감시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167조).

아. 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전국구국회의원선거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도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을 1석씩 배분하도록 하였다(법 제 187조, 제188조).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얻은 정당에 1석을 우선 배분한 후,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했다.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신한국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사고지구당 및 증설된 지역구의 조직책을 선정하는 등 조기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체제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는 당의 분열과 통합, 신당 창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총선 준비가 늦어졌다. 또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였으나 공천현금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가.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사고지구당 및 신설지구당 조직책 인선을 시작으로 실무차원의 내부공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천 후보자들을 단수 또는 2~4배수로 압축하여 이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과 경쟁적으로 외부인사 영입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신한국당은 공식적인 공천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6년 1월말 상당수의 공천자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또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 박찬종 전 의원, 이흥구 전 국무총리 등 인지도 있는 외부인사도 대거 영입하였다.

신한국당은 1996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의 공천신청을 받았다. 4일간 공천신청을 접수한 결과 253개 지구구에 480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천 경쟁률이 비교적 낮았던 이유는 공천신청 전 실무차원에서 160개 내외의 지역구후보자를 단수후보로 압축하여 실질적인 공천 작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이었다. 공천경쟁률은 지역별로 당선가능성에 따라 심한 편차를 나타냈다. 즉 당선가능성이 높은 영남지역은 평균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열세지역으로 평가되던 호남지역의 평균 경쟁

률은 1 대 1에 불과하였다.

공천신청을 마감한 이후 신한국당은 당 기획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수후보 212곳, 복수후보 35곳, 미정 6곳의 심사초안을 마련하였다. 심사초안은 1996년 1월 31일 강삼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세기·이상득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겨져 최종적인 공천심사가 진행되었다. 신한국당이 제시한 기본적인 공천기준은 당선가능성, 도덕성, 참신성이었다. 또한 당선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정신에 배치되는 자, 5·6공 비리 연루자, 여론조사 부적격자 등을 공천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마친 공천심사위원회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순차적으로 253개 전 지역구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최종 공천결과 김윤환 대표위원은 경북 구미시을, 강삼재 사무총장은 마산시 회원구, 손학규 대변인은 광명시을에 공천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서정화(용산구)·이세기(성동구갑)·김영구(동대문구을), 부산에서 박관용(동래구갑)·서석재(사하구갑), 대구에서 유성환(중구), 인천에서 서한샘(연수구), 경기에서 목요상(동두천시·양주군)·이한동(연천군·포천군), 강원에서 한승수(춘천시갑), 충북에서 신경식(청원군), 충남에서 이완구(청양군·홍성군), 경북에서 이상득(포항시 남구·울릉군), 경남에서 하순봉(진주시을) 등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심사 결과 당초 신한국당이 공언했던 현역의원 40% 교체 등 대폭적인 세대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26명의 지역구의원 가운데 현역의원 33명이 공천에서 탈락하여 26.2%가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6명은 이미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탈락한 사람은 허삼수·금진호·곽정출·허재홍 의원 등 17명이었다. 따라서 실제 교체율은 13.5%였다. 제5공화국 세력에 대한 공천배제 기준이 반영되어 허화평(경북 포항시)·허삼수(부산 동구) 의원 등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관련자들은 공천에서 탈락되었다. 이와 달리 통일민주당 출신 인사들 중 상당수는 공천을 받아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공천자 253명을 계파별로 분류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범민주계 인사가 169명이었던 반면 범민정계 인사는 77명으로 상대적 열세를 보였다. 이는 3당합당 당시 민정·민주·공화 계파별 지분이 5 대 3 대 2였음을 고려하면 여당 내 세력분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의 지지자를 포섭하고자 탈이념적 공천을 추진하여 시민단체 소속 및 과거 재야단체 인물 등 상당수의 개혁세력을 영

입·공천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재오 전 민중당 사무총장을 서울 은평구을에, 김문수 전 노동인권회관 소장을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김철기 전 새누리신문 사장을 서울 중랑구갑에, 그리고 정성철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서울 강남구을에 공천하였다. 이외에도 과거 운동권 출신들 중 김영춘(서울 광진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등을 공천하였다. 여성 중에서는 유일하게 양경자를 서울 도봉구갑에 공천하였다.

공천자의 연령별 내역을 보면, 평균 54.9세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평균연령(55세)과 비슷했고 50·60대가 전체의 79.3%를 차지한 반면 30대·40대의 세대교체형 인물은 20.7%에 머물렀다. 직업별로는 관료출신의 진출비율이 늘어났고 경제인, 법조인의 진출 폭이 높았다. 김석원 쌍용그룹회장(대구 달성군), 제14대 전국구 의원인 이명박 전 현대건설회장(서울 종로구) 등의 기업인과,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경남 거제시), 홍준표 변호사(서울 송파구갑) 등의 법조인이 공천을 받았다.

신한국당은 1996년 3월 26일 새로이 영입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1번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2번에, 그리고 박찬종 수도권선대위원장을 21번에 공천하는 등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구후보자 46명을 발표하였다. 신한국당은 지역 및 직능대표성과 새 인물 수혈 및 민주화 기여도를 전국구 공천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국구 공천에서 신한국당은 직능단체 대표와 여성인사들을 상위권에 배정하고 지역 안배 등을 두루 고려하였으며, 청·장·노년층의 조화에 신경을 썼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의원과 민주계 원로인 김명윤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각각 3번과 4번에 공천하고, 김영선 부대변인과 최연소자인 이찬진 한글과컴퓨터사 대표를 당선권인 20번 이내의 순위에 공천하였다.

나. 새정치국민회의

1995년 9월 11일 창당등록을 완료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창당 직후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직강화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지구당 정비 및 조직책 인선을 시작하였다. 1996년 2월 초까지 진행된 당 조직정비를 통해 253개 지역구 중 182개의 지구당 조직책 인선을 완료하였고, 이어 1996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을 받았다.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253개 지역구에 372명이 신청하여 평균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신청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인식되던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 3.3 대 1, 전남 3.2 대 1, 전북 4.1 대 1 등으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구속 중인 최낙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에는 모두 14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에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공천신청자가 없어 인물난을 겪었다. 부산에서는 21개 지역구에 14명, 대구에서는 13개 지역구에 7명, 경북에서는 19개 지역구에 19명, 경남에서는 16개 지역구에 16명만이 공천을 신청하였다. 그 외 충청 등 비호남 지역 역시 전반적으로 공천신청이 저조하였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60명(47개 지역구), 인천 17명(11개 지역구) 경기 44명(38개 지역구)등 96곳에 121명이 신청하여, 1.3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조직책 인선을 통해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했기 때문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 신청자 중에는 18명이 비공개로 신청을 하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민주당 당적을 지니고 있는 전국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이유는 공천 시 입당원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 공개 신청할 경우 이중 당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민주당이 “이중 당적 전국구의원들이 통합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구당 창당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3명의 전국구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한 통합민주당 소속 전국구의원들의 당적 시비는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되었다. 검찰이 이들의 소환방침을 결정하자 결국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2월 16일 문제가 된 나병선(서울 성동구갑)·장재식(서대문구을)·김충현(마포구을) 의원에게 통합민주당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공천신청을 마감한 이후 조순형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권노갑 지도위원, 이종찬, 정대철, 김영배, 박상규, 김근태 부총재 등 9인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심사를 시작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민주주의 공헌도, 국가 및 지역발전 헌신성, 도덕성, 당 발전 기여도, 당선 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공천심사 기준으로 설정하고 공천심사를 진행한 끝에 1996년 3월 21일 최종적으로 253개 지역구 가운데 230개 지역구 공천자를 확정·발표하였다.

공천결과 이종찬 부총재가 서울 종로구, 신기하 원내총무가 광주 동구, 박지원 대변인이 부천시 소사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정대철(중구)·조세형(성동구을)·손세

일(은평구갑), 인천에서 조철구(서구), 광주에서 정동채(서구), 대전에서 선병렬(동구갑), 경기에서 문희상(의정부시)·최희준(안양시 동안구갑), 전북에서 정균환(고창군), 전남에서 한화갑(목포시 신안구을)·박상천(고흥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9.6%, 40대가 31.7%, 50대가 43.1%, 60대가 15.6% 공천되어 20~40대 젊은 정치신인들이 4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변호사 18명, 교수 17명, 관료출신 2명, 군 출신 5명, 기업인 15명, 언론인 13명 등 변호사와 교수들의 정계진입이 두드러졌다. 이들 중 대표적 인사로는 신기남(서울 강서구갑)·천정배(경기 안산시을) 변호사, 정동영 전 문화방송 기자(전주시 덕진구) 등이었다.

제야출신 등 개혁성향의 인물들도 상당수 공천을 받았다. 김근태 전 통일시대국민회의집행위원장이 서울 도봉구갑에 공천되었고, 김민석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서울 영등포구을에서 공천을 받는 등 30명 이상의 개혁적 인사가 공천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등 5명을 공천하여 다른 당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심사과정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호남권의 세대교체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였다. 당 내부에서 떠돌고 있던 이른바 ‘호남 물갈이’의 규모는 공천심사 전부터 새정치국민회의의 주요 난제였다. 최종 공천결과 호남지역 37곳의 지역구 중 17명의 현역의원이나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교체되어 45.9%의 높은 교체율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에 잔류했거나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 경우 등 자연적으로 교체된 8곳을 배제하면 실질적인 교체는 22%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내용적으로 유준상(전남 보성군·화순군)·박태영(전남 담양군·장성군) 의원을 포함한 4선과 3선 의원 각각 2명, 재선 의원 3명 등 중진급 인사 7명이 공천에서 배제되어 호남지역 교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23일 전국구후보자를 발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전국구후보자 공천에 앞서 참신한 신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전국구공천과 관련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진행된 전국구 공천 결과 총 46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1번에는 정희경 선거대책위원회공동의장, 2번에는 박상규 부총재, 3번에는 이성재 변호사를 공천하였고, 3공화국 당시 외무부장관을 지낸 이동원을 7번에 공천하였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가 목표로 내세운 100석 확보를 위한 배수진으로 김대중 총재를 전국구 14번에 공천하였다. 정희경 의장(1번)을 포함하여 신낙균 부총재(8번), 한영애 당무위원(11번)등 여

성 3명을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위 순번에 공천하여 다른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다.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은 1995년 7월 민주당 분당사태 이후 대부분의 호남 및 수도권 의 조직이 새정치 국민회의로 넘어가면서 조직책 인선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민주당은 1995년 12월 4일 ‘개혁신당’¹⁴⁾과 공식적 통합선언¹⁵⁾을 한 이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지분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조직책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당보다 공천자 선정 작업이 지연되었다. 통합민주당은 1996년 1월이 돼서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조직책공모와 외부인사 영입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조직책 인선 과정에서 상당한 당내 갈등을 겪었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직책 선정은 곧 후보자 공천과 직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계파 간에 지분문제를 두고 대립하였고, 조직책 탈락자들 또한 탈당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통합민주당은 내부갈등과정을 거치면서 2월 26일에서야 202곳의 조직책 인선을 완료하였고, 현역 국회의원과 잔류한 지구당위원장은 대부분 조직책에 유임되었다.

이후 통합민주당은 1996년 3월 8일 제정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무현 전 부총재 등 당내 인사 10명과 외부 교수 3인 등 13명을 위원으로 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후보자 공천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른 정당과는 달리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 것은 당내 갈등을 야기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밀실공천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도덕성, 정치적 자질과 능력, 전문성, 참신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하였고, 3월 15일 1차 공천자 219명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러나 34개 지역구는 공천을 보류하였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20개 지역구 중 13곳밖에 공천자를 내지 못하는 인물난을 겪었다. 이후 통합민주당은 6명을 추가로 공천하였으나, 전체 공천자는 253개 지역구 중 225명에 그쳤다.

14) 개혁신당은 장을병 전 성균관대학교 총장, 홍성우 변호사, 박형규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 3김 청산과 세대교체, 지역활거구도 타파를 내걸고, 1995년 11월 27일 창당된 정당이다.

15) 양당의 통합으로 통합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으로 등록된 날짜는 1995년 12월 21일이었다.

공천 결과 장을병·김원기 공동대표는 각각 강원 삼척과 전북 정읍에, 이기택 상임고문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에 공천되었다. 서울에는 노무현(종로구)·홍성우(강남구갑), 부산에는 김정길(중구·동구), 경기에는 장경우(안산), 경남에는 이규정(울산시 남구을) 등을 공천하였다. 37명의 현역의원 중 홍영기·황의성 의원 등 지역구 출신 2명과, 박일 전 대표 등 전국구 의원 11명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공천신청을 포기하여 후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통합민주당의 공천자 평균연령은 47.7세로 원내 4당 중 가장 낮았으며, 40대 이하가 56%, 50대는 36.9%, 60대는 6.8%로 비교적 젊은 인사를 상당수 공천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공천자는 157명으로 전체 69.7%를 차지하였다. 직업·경력별로는 재야 및 시민운동세력이 주류를 이루었다.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72명(32%)으로 가장 많아 공무원과 법조인이 주축인 신한국당이나 전·현직 의원과 기업인이 많은 자유민주연합과 대비되었다. 이는 지난 1995년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기존 구성원들이 대거 이탈하였고, 이후 개혁신당과 통합하면서 개혁성향의 젊은 신인들이 충원되어 이 공백을 메웠기 때문이었다.

재야출신으로는 현역의원인 이철(서울 성북구갑)·유인태(서울 도봉구을)·제정구(경기도 시흥시) 의원과, 장기표 전민중당정책위원장(서울 동작구갑) 등이 공천되었고, 서경석 전 경실련사무총장(서울 양천구갑), 서상섭(인천 연수구) 등 시민·사회운동가와 고진화(서울 강서구을)·이재경(서울 강남구을) 등 학생회장단 출신 14명도 공천을 받았다. 법조계 인사는 18명이, 학계 인사는 9명이 공천을 받았다. 한편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부영 전 의원은 3·1절 특별사면조치에 의해 피선거권이 회복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갑에 공천을 받았다. 반면 서울 강서구을 조직책 노회찬은 공천 대상자였으나 1989년 '인노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대신 서울 중구 조직책이었던 고진화가 강서구을에 공천을 받았다.

지역구 공천에 이어 통합민주당은 1996년 3월 26일 전국구 공천자 28명을 확정·발표하였다. 통합민주당은 전국구 공천에 있어서도 지역구 공천에서 적용했던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 개혁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1번에는 이중재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공천하였고, 여성층을 배려하여 이미경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2번에 공천하였다. 이어 3번에는 임춘원 의원을, 5번에는 김홍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공천하였다. 그러나 임춘원 의원의 전국구 3번 공천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공천헌금설이 제기되면서 당내에서 돈 공

천 논란과 함께 외부 비판을 불러왔다. 통합민주당은 당내·외 비난이 일자 결국 1996년 3월 27일 임춘원 의원의 공천을 철회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합민주당도 선거기간 중 공천헌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라. 자유민주연합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유민주연합과 신민당(대표자 김동길, 박찬종)의 합당으로 출범한 자유민주연합은 지방선거가 끝나자 미루었던 합당 전 두 정당의 중복 지구당 20개를 정비하는 등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조직정비를 시작하였다. 1995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260개 지구당의 조직책 공모에는 302명이 응모하여 1.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적으로 조직책 선정을 완료한 자유민주연합은 해를 넘겨 1996년 3월 9일 한영수 선거대책위원회본부장, 김용채 부총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최종적인 공천심사를 실시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설정한 공천기준은 당선 가능성, 경륜, 자립능력 등이었다. 공천심사를 완료한 후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3월 13일 당무회의에서 1차 공천자 208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11명을 추가로 공천하여 자유민주연합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19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도 다른 정당과 같이 지역간 공천자 편중이 나타났다. 자유민주연합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전남·북에서 15개 선거구, 부산·경남에서 14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는 등 호남 및 경남 지역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드러냈다.

공천결과 김종필 총재는 충남 부여군에, 김복동 수석부총재는 대구 동구갑에, 박준규 최고고문은 대구 중구에 공천되었다. 서울에는 김용채(노원구을), 대구에는 박철언(수성구갑), 대전에는 강창희(중구), 경기에는 이대엽(수정구), 강원에도 황학수(강릉시갑), 충북에는 구천서(청주시 상당구)·정우택(진천군·음성군), 충남에는 김용환(보령시)·변웅전(서산시·태안군), 경북에는 김화남(의성군) 등을 공천하였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김화남(경북 의성군), 정종복(경북 경주시) 등 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을 영입하여 공천하였다.

공천자 중 전·현직 의원은 54명으로 전체 공천자의 24.7%였고, 기업인이 30명으로

13.7%, 전직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출신이 22명으로 10%를 차지하여 전·현직 의원과 기업인 출신들이 공천자의 주축을 이루었다. 한편 현역의원 중에는 14명이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 중 김동길, 박준병 의원 등 6명은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박철언 전 의원이 부인 현경자 의원의 지역구를 넘겨받은 것과 같은 지역구 승계에 의한 교체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현역의원 공천탈락자는 정태영(논산시·금산군)·김진영(청주시 상당구) 등 2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50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7%, 40대가 19%, 60대가 21%였다. 50·60대 공천자가 70% 이상으로 대다수를 이루었던 것은 보수지향의 자유민주연합이 세대교체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공천한 결과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지역구에 이어 1996년 3월 26일 전국구 공천자 41명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러나 하위순번 6명은 후보자등록에서 등록을 포기하여 실제 자유민주연합의 전국구 후보자는 총 35명이었다. 공천결과 전국구 1번은 정상구 부총재, 2번은 한영수 선거대책본부장, 3번은 이진개 전 대전고등검찰청장, 4번은 김허남 당 재정위원장이 각각 공천을 받았다. 당선 가능성이 10번 이내에는 김광수 전 의원, 지대섭 광주·전남지부장, 정상천 의원, 이동복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이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10번 이내에 여성 공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자유민주연합도 전국구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헌금설이 제기되었다. 구 신민당 출신 이필선 부총재는 전국구 공천에 탈락한 후 당에서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며 이른바 30억 공천헌금설을 제기하며 공천의 공정성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검찰수사로 비화되었다. 또한 김복동 수석부총재, 김동길 선거대책위원회의장 등 신민계 인사들이 이필선 부총재의 공천탈락에 반발하여 계파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자유민주연합은 공천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마. 기타 정당

앞의 4개 정당 외에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무당파국민연합, 대한민국당, 21세기한독당, 친민당 등 4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김종권 전 의원을 중심으로 무소속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선거 직전인 1996년 3월 18일 창당한 무당파국민연합은 당 대표인 한병채 전 의원을 대구 중구에, 김종권 전 의원을 경북 울진·영양·봉화군에 공천하는 등 56명을 공천하였다. 또한 김옥선 선거대책위원회공동의장과 윤영오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을 전국구로 공천하였다.

1994년 7월 8일 창당된 대한민주당은 최봉수를 강원 영월·평창군에 공천하는 등 총 6명을 공천하였다. 1996년 3월 25일 정당 등록된 21세기한독당은 유관석을 대전 유성구에 공천하는 등 총 5명을 공천하였고, 1992년 11월 19일 정당으로 등록된 친민당은 당 총재인 권정수(충남 논산시·금산군) 1명만을 공천하였다.

2.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등록 상황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1996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구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후보자는 253개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후보자등록 결과 전국구후보자 161명, 지역구후보자 1,389명이 접수하여 총 1,550명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 특히 전국구 의석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도 배분됨에 따라 각 정당은 연고지역 외에서도 득표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지역구 후보자의 경쟁률이 높아졌다.

1) 지역구후보자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는 253개 지역구에 총 1,389명이 등록하여 평균 5.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정당추천후보자는 8개 정당의 995명이었고, 무소속후보자는 394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이 253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등록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새정치국민회의는 230명, 통합민주당은 225명, 자유민주연합은 219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그 밖에 무당파국민연합 등 기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68명이었다.

무소속후보자로는 홍사덕(서울 강남구을)·정몽준(경남 울산 동구) 등이 등록하였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주노총), 노동정치연대, 노점상연합 등 재야·노동조합 출신들 다수가 무소속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허삼수 허화평곽정출 김동권 신진욱 등 신한국당의 공천탈락자들도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반(反) 김영삼 정서'가 표출되고 있던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하였다. 무소속 출마자

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28.4%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후보자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수 1,052명, 경쟁률 4.4 대 1)에 비해 그 수도 늘어났고,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경쟁률은 1967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등록접수(전남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

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정당별 득표율에 의해 전국구의석을 배분하게 됨에 따라 주요 4개 정당이 모두 200개 이상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무소속후보자도 많이 출마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3개 선거구에 104명이 등록하여 8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역선거구에서는 경북 경산시·청도군에 신한국당 이영창 후보,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후보 등 무려 1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13 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별 경쟁률에 있어서 전남은 17개 선거구에 71명이 등록하여 4.2 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영암군선거구는 각각 2명의 후보자만이 출마하여 개별 지역선거구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직업별로 전체 지역구후보자 1,389명 중 정치인이 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03명이었다. 이외 변호사 83명, 상업 55명, 교육자 53명, 건설업 39명, 농축산업 37명 등이었고, 기타 312명이었다. 특히 변호사의 수가 두드러졌는데 제13대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각각 31명과 40명의 변호사가 출마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1,1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중퇴 109명, 고졸 79명, 전문대졸 20명의 순이었다. 그 밖에 중졸 이하 학력보유자도 49명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보자가 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399명, 30대가 221명, 61세 이상이 154명, 20대가 15명의 순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은 1,368명이었고, 여성후보자는 단 21명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자 수는 제13대와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각 13명과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였다.

2) 전국구후보자

전국구후보자는 의원정수 46명에 5개 정당에서 총 161명을 등록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46명을 등록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이 35명, 통합민주당이 28명, 무당파국민연합이 6명을 등록하였다. 전국구후보자의 경쟁률은 제 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2.5 대 1(의원정수 62명에 154명 등록)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전국구후보자의 직업은 정치인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은 9명이었다. 그 외에 상업 17명, 변호사 7명, 회사원 6명, 기타 27명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중퇴 10명, 고졸 이하 7명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45명, 60대 이상이 31명, 20대~30대가 2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9명, 여성이 22명이었다. 여성의 경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13명, 제 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16명이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국구 의석수가 종전 선거 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은 더 늘어난 것이었다.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구후보자 후보자 등록접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3-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단위: 명)

정 당 명	합 계	지 역 구	전 국 구
합 계	1,550	1,389	161
신 한 국 당	299	253	46
새정치국민회의	276	230	46
통 합 민 주 당	253	225	28
자유민주연합	254	219	35
대 한 민 주 당	6	6	-
무당파국민연합	62	56	6
21세기한독당	5	5	-
친 민 당	1	1	-
무 소 속	394	394	-

나. 등록무효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선거 전까지 4명의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는 새정치국민회의 조동옥(대구 동구갑), 통합민주당 서정대(대구 달서구갑), 자유민주연합 이수만(서울 중구), 21세기한독당 안방자(서울 서초구을) 후보로 총 4명이었다. 등록무효 사유는 4명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합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어 등록무효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어났다. 통합민주당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그 당원이 되었으므로 이중 당적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의 자필 서명이 된 탈당신고서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3.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신고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선거법에서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공개 의무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전년도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19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였다. 신고된 후보자들의 재산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대상재산 평균액은 11억 3,045만 8,000원이었다.¹⁶⁾ 이 가운데 지역구후보자 평균액은 10억 1,226만 5,000원이었고, 전국구후보자 평균액은 20억 4,684만 9,000원이었다. 전국구후보자들의 등록재산 평균액이 지역구후보자들의 평균액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특히 자유민주연합의 전국구후보자 평균액이 42억 3,779만 8,000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일 전에 등록대상재산을 이미 공개했을 경우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들 및 1급 이상의 전직관료 출신 후보자 237명은 확인서로 재산신고를 대신하였다. 하지만 후보자가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유권자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산신고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이들이 선거 전에 신고한 재산은 관보나 국회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최초 공개한 이후에는 재산 변동 상황만을 공개하므로 전체적인 재산등록상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4. 기탁금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및 전국구후보자의 기탁금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후보자마다 1,000만 원이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

16) 등록재산 평균액은 후보자등록신청 전에 이미 재산내역을 신고·공개한 현역 국회의원 등의 재산액을 제외한 것이다.

금 총액은 지역구 138억 9,000만 원, 전국구 16억 1,000만 원 등 155억 원이었다. 이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120억 6,000만 원에 비하여 28% 증가한 액수였다. 기탁금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4대 후보자수보다 344명이나 많았기 때문이다.

기탁금은 지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반환하도록 하였고, 전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이 반환되었다. 반면 지역구후보자가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전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었다. 또한 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귀속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은 후보자는 936명(60.4%)명이었으며, 기탁금 반환 총액은 93억 6,965만 7,000원이었다. 나머지 614명(39.6%)의 기탁금은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42억 6,696만 9,000원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기탁금 반환대상자 중 당선자는 299명이었고, 득표수 반환요건을 충족한 후보가 637명이었다. 국고귀속 대상자 중 득표수반환요건에 미달한 후보자는 610명이었고,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4명이었다.

〈표 3-2〉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귀속상황

(단위: 천 원)

구분	기탁금액 (후보자수)	공제 금액			과태료 공 제	이 자	반환금액 (후보자수)	국고귀속 (후보자수)
		계	선전벽보 비 용	선거공보 비 용				
합 계	15,500,000 (1,550명)	1,879,310	390,720	1,488,590	2,200	18,136	9,369,657 (936명)	4,266,969 (614명)
지역구	13,890,000 (1,389명)	1,879,310	390,720	1,488,590	2,200	16,183	7,817,776 (781명)	4,206,897 (608명)
전국구	1,610,000 (161명)	-	-	-	-	1,953	1,551,881 (155명)	60,072 (6명)

제4절 선거운동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1년 8개월 정도 앞두고 이른바 ‘신 4당 체제’가 형성된 뒤 치러지게 되었다. 각 정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와 결부하여 안정과 견제론을 주장하였고, 구 정치질서 타파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3김 청산과 세대교체론을 거론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경제는 1996년 들어 경기하강 국면을 맞게 되고, 특히 교역조건의 악화로 경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자, 각 당은 경제안정화 정책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 부분에 관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가.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1996년 1월 22일 영입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 의장에, 박찬중 전 국회의원을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여 선거대책기구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3월 6일에는 서울 이세기, 부산 최형우, 경기 이한동, 강원 한승수 등 각 지역의 핵심인물을 선대위 부의장으로 임명하여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였다.

1) 선거전략

신한국당은 ‘안정론’과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안정론’은 선거 때마다 늘 여당이 반복하여 주장하는 전략이었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신한국당이 개혁의 완성과 국정의 안정을 이유로 안정론을 다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신한국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세대교체론’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를 겨냥하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슈였다. 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자유당이 주장했던 것으로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1996년 2월 6일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전진대회’를 겸해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 없는 안정은 정체, 안정 없는 개혁은 혼란”이라며 개혁과 안정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이러한 기본전략 속에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전구호로 “안정 속의 개혁”, “넓은 정치나 미래 정치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등을 내걸었다. 안정론은 김윤환 대표위원과 이회창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토론 및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신한국당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문광고와 당내 유세단 연설을 통해 끊임없이 ‘안정론’을 전파하였다.

세부 득표전략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였다. 야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수도권에서는 세대교체와 개혁을 내세웠다. 재야출신을 포함한 30~40대의 젊고 개혁적인 인사를 수도권에 다수 공천하였고, 이를 통해 젊은 유권자 및 부동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젊은 후보들로 ‘푸른정치 젊은연대’를 구성하여 깨끗한 정치를 선언하는 등 ‘개혁벨트’를 형성하고 집권당이 가진 보수적 이미지를 개혁 지향적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에서의 득표율을 제고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한편 지역적 공약을 앞세워 집권당의 안정의식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영남권에서는 경제관련 공약을 부각시키고, 새정치국민회의가 견고한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호남권에서는 탈지역주의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략 하에 신한국당은 수도권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영남지역에서는 자유민주연합과의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야당에 대한 전략에서는 ‘세대교체’를 내세워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김대중, 김종필 두 야당 대표에 대해 지역불모정치의 주동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는 ‘정계은퇴 번복한 신뢰성 없는 인물’, ‘20억+α’, ‘부도덕한 인물’ 등으로 규정하고, 김종필 총재에 대해서는 ‘수구세

력', '독도문제의 책임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선전하였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신한국당이 영입한 이회창·박찬종 등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2) 선거공약

신한국당은 1996년 3월 8일 '깨끗한 정치 봉사하는 행정'을 기치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개혁에 역점을 둔 15개 핵심과제와 10개 분야 100개 항목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신한국당이 제시한 15개 핵심과제는 ①깨끗한 정치문화 창출 ②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③생활물가 안정 ④중소기업 지원 ⑤농어업 육성 ⑥교육개혁 실천 ⑦도시영세민 삶 보장 ⑧근로자가 대우받는 사회 ⑨노인복지 장애인 권익증진 ⑩여성 사회참여 확대 ⑪청소년의 밝은 성장 유도 ⑫쾌적한 환경조성 ⑬남북안보태세 강화 ⑭도시 교통난 해결 ⑮수준 높은 문화생활 영위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 보수 및 근무개선을 약속하였고, '탈북동포지원 기본법'을 제정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면서 북한붕괴론이 대두되고 있던 시점에서 탈북자 문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숙한 선진경제, 중소기업 육성, 농·어촌 지원 등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성숙한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규제완화·조세합리화 등을 내걸었다. 즉 물가는 3%로 안정시키고, 규제개혁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규제기한을 명시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일몰조항(sunset-clause)을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고, 농민·영세업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음성소득과세를 강화해 줄어든 세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1998년까지 매년 2조 원씩 지원하고 공제사업기금도 1998년까지 3,000억 원을 늘리겠다는 등 지원 중심정책을 주로 제시하였다. 셋째, 농·어촌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자 위주의 쌀값 정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식품, 약품 안전본부와 여섯 개의 지방청을 신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을 배려하며, 1998년까지 최저생계비 100%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원법’을 제정하여 규제지역과 수혜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혜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 평가 개선과 종량제 정착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성차별 개선위원회의 신설 및 여성차별문제 해결도모, 1997년까지 보육시설에 1조 3,000억 원 투자,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여성 공천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0년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고, 컴퓨터 전용교실을 100% 설치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하였고,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율화도 제시하였다.

나.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6일 정대철 부총재와 정희경 지도위원회부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권노갑 이종찬 조세형 신낙균 등 당 중진들을 부의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1) 선거전략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전략의 핵심을 ‘견제론’과 ‘경제제일주의’에 두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호도 ‘독선을 견제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로 설정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가 내세운 견제론은 여당의 독선을 막고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새정치국민회의가 국회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자유민주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내각제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내각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 이후 내각제 개헌 논쟁으로 정국불안이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막기 위해 소위 ‘개헌저지론’을 내세웠다. 또한 여당이 내세운 ‘안정론’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견제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견제안정론’을 유권자 설득의 논리로 내세웠다. 여당의 독주를 막고 유신체제 이래 15년간 민주화투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헌정질서

와 법치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세력은 ‘새정치국민회의’ 라는 것이었다. 특히 신한국당이 여당 과반수 의석확보를 통한 안정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새의 ‘양 날개론’ 을 내세워 이를 반박하였다. 즉 여야를 새의 양 날개에 비유하여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구도에서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던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자금 문제’ 도 이와 연계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도 국회 3분의 1 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등권론’ 의 논리를 펼쳤다. 즉,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경제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새정치국민회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3분의 1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거공약에서도 경제관련 공약을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수권능력과 대안정당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처럼 경쟁정당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전략도 병행하였다. 신한국당에 대해서는 ‘5공의 적자’, ‘대선자금의 부도덕성’, ‘김영삼 대통령의 3독(독주·독단·독선)’, ‘경제·사회·외교의 총체적 실패’ 등을 지적하며 비난하였다. 특히 장학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신한국당의 부패와 비도덕성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2중대의 의혹’, ‘선거 후 소멸 가능성’, ‘대안이 될 수 없는 정당’ 이라고 공격하고, 자유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수구 반동노선’ 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정당에서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비판하던 ‘3김 정치’ 와 ‘구세대 정치’ 라는 약점에 대해서는 신·구세대 공존론을 내세워 극복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2) 선거공약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1일 민생안정에 기반을 둔 ‘경제제일주의’ 정책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선거공약은 경제제일주의를 선거구호로 내걸었듯이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재벌정책 등 세부공약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치·행정 분야에서 검찰총장·국가안전기획부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인사를 포함한 국회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단체장 소속 지방경찰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제일주의 지향을 목표로 물가안정, 대기업 활동의 자율화, 중소기업의 제도개혁을 통한 지원, 경제구조 개혁 등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공약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의 안정 운용, 공산품 불공정행위의 단속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둘째, 대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 외에는 그 활동을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화에 맡기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신한국당의 중소기업 지원이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과 달리 새정치국민회의는 각종 제도개혁을 내세웠다. 즉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특별기금 설치, 부분보증제도 실시,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전담 은행화 등 제도개혁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넷째,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입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근로세 대폭 인하를 제시하면서 세정 개혁으로 탈세 방지를 통해 보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인·사업소득·종합토지세의 인하를 공약하는 등 보수화된 정책도 일부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 100% 지급, 식품·의약품청 설치 등을 제시하였고,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 대책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환경영향 평가원 설립을 제시하였다. 여성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에서 여성에게 25% 이상의 할당제 실시,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여성부의 신설 등을 공약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GNP의 5%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급당 정원을 40명으로 감축하고 유아교육을 1년간 의무교육화하며, 1998년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은 1996년 2월 23일 이중재 고문과 홍성우 최고위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

고, 강창성·장경우·이부영·노무현 의원 등을 부위원장장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켰다. 공천자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3월 21일이 돼서야 후원회 행사를 겸한 공천자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1) 선거전략

통합민주당의 선거전략은 '3김 정치의 종식' 과 이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젊은 정당' 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이 비판하던 신한국당 2중대론, 대권후보 부재 등에 대하여는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워 '세대교체론' 으로 맞서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선거구호로 '굿바이 3김, 웰컴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30대 김대리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내세워 젊고 새로운 세대의 정당임을 부각시켰다. 또한 "3김에 줄서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길을 마다한 통합민주당 후보에 대한 격려를 부탁한다" 며 지역주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통합민주당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깨끗한 정치의 성공여부를 시험하는 무대이고 민주당의 몰락은 한국정치의 몰락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통합민주당은 '3김 청산' 이라는 주요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의 구시대적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병행하였다. '3김 정치' 로 대변되는 세 정당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1인 맹주정당, 대선자금 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정당' 이라고 비난하였다. 신한국당에 대해서는 '즉흥주의 정책에 의한 실정',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분당' 을, 자유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군사 쿠데타 원조' 를 강조하며 비판하였다.

한편 다른 3당과 달리 지역적 기반이 취약했던 통합민주당은 비교적 지역적 성향이 낮은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관건이라는 판단 하에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민주당은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해돋이 희망벨트' 로 명명하여 단일화된 득표 전략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규모의 정당연설회를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개최하였다.

2) 선거공약

통합민주당은 정치개혁에 주안점을 둔 150대 공약을 개발하여, 일차적으로 1996년 2월 16일 정치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9일 여성분야 9대 공약 발표, 3월 13일 농어촌 분야 14대 공약발표 등 각 분야의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통합민주당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은 시민단체에서 내세운 개혁적 공약을 많이 반영하였다. 이는 특히 재벌에 관한 정책, 노동, 환경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직선거에 있어서 예비선거제 도입을 주장하였고, 국가·지방경찰의 이원화를 제시하였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정의실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정의를 강조하였다. 재벌정책의 경우 계열사 채무 보증한도를 200%에서 100%로, 출자액 한도를 25%에서 10%로 낮추는 등 문어발식 기업구조 억제 및 재벌의 기업소유·지배 구조 등의 개편을 약속하였고,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개혁지향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제개발비 예산을 10% 이상 증액할 것과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확충도 제시하였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하면서 실효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감소를 보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노동 분야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도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정을 약속하였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저소득 생계비 100% 지원 및 사회복지 예산을 2000년도까지 GNP의 5%까지 올릴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파산 대책수립과 통합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으로는 기존의 정무 2실을 여성처로 전환하고, 2000년도까지 5급과 7급 공무원 중 20%에 대해 여성 할당제 실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규정 추가 등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선거공약으로 수용하여 김영삼 정부의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급당 정원을 40명으로 감축하고, 2000년도까지 유치원 취원율을 80%로 증대시키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라.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3월 2일 박준규 고문과 김동길 고문을 의장으로 하고, 김복동 의원과 김용환 의원 및 박철언 전 의원 등을 부의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 선거전략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륜정치’와 ‘보수안정론’을 선거전략의 기조로 삼았다. 이는 집권경험이 있는 유일한 보수야당임을 내세우며 다른 야당과 차별화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권정당임을 강조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전구호도 “연습 정치 한 번이다. 경륜 정당 밀어주자”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보수정당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안정론과 관련해 “다른 당에서도 보수·안정을 강조하지만 붉지도 회지도 않은 회색이 더 문제다”라고 보수논쟁을 제기하여 다른 정당과 차별화하며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수안정론과 경륜정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는 전략도 전개하였다.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문민독재’, ‘경제실정’, ‘턱비공 개혁’ 등의 비난을 쏟아내었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도 “대통령병 환자”라고 몰아세웠다.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대안 없는 폭로 정당”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보수정당을 자임하면서도 당의 이미지가 ‘노인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젊은 보수, 푸른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젊은층을 공략하는 전략도 병행하여,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젊은이 녹색축제’를 열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청년층에 접근하는 등 젊은층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다른 정당과 달리 내각제 개헌을 전면내세워 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국가의 총체적 불안의 원인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하며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독단과 실정을 대통령제의 한계성과 연결시켜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 속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내각제 개헌 실현을 위한 무대로 규정하고 그 실현주체인 자유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2) 선거공약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3월 9일 ‘편안한 정치·책임정치 구현’, ‘작은 정부 큰 시장 실현’, ‘복지사회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17개 부문 89개 항목의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선거공약은 신한국당의 개혁이 급진적이었다는 전제 하에 이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자유민주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내각제 실현이었다. 자유민주연합은 한국 정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1회 지방선거부터 줄곧 주장해 왔다. 즉 내각제는 자유민주연합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같은 공약이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안기부장·검찰총장 등 주요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개혁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금융실명제를 포함한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이 급진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를 획기적인 개선하기 위해 자금출처의 조사제 폐지, 금융거래의 엄격한 보장,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와 개발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경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상향조정 및 대출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공약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물가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합리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공기업의 조속한 민영화를 약속하는 한편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완화와 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부부재산 합계액의 50%로 인정하고, 소득세 법상의 배우자 공제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행정기관 평가와 민간전문기관 평가로 2원화하여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적인 확대실시를 제시했다. 이외에 사학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부금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 기타 정당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이외에도 무당파국민연합, 대한민주당, 21세기한독당, 친민당 등 4개 정당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들 정당 중 무당파국민연합을 제외하고는 언론이나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무당파국민연합은 무소속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대구·경북지역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선거 직전인 1996년 3월 18일 창당된 정당이었다. 무당파국민연합은 3월 20일 김종권·김옥선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선거체제를 구축하였다. 무당파국민연합은 기존 정당의 사당화를 비판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유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무당파국민연합은 기존의 1인 독재에 의해 사당화된 정당이 지역주의를 조장하였고 이것이 정치 불안을 가져왔으며, 이같은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당파국민연합은 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가 가지는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무소속후보자들이 정당이라는 형식으로 결합한 연합체의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기성정당에 대한 비판을 선거구호로 내세웠으나 선거운동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는 개인의 경륜·약력과 지역발전 공약 부분을 부각시켰다.

2. 선거운동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996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였다. 선거운동은 주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방송연설, 정당·후보자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현수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방법이 다양해졌다.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지구당 개편대회나 의정보고회 또는 당원연수회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이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가.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후보자(전국구후보자는 소속 정당)가 작성하여 1996년 3월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1996년 4월 1일까지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구가 설치된 시의 동 지역은 인구 1,000인에 1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동 지역은 인구 700인에 1매, 읍 지역은 인구 500인에 1매, 면 지역은 인구 200인에 1매(단, 인구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자연마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락마다 1매)의 비율이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총 851,270(지역구 514,481, 전국구 336,789)매의 선전벽보가 첩부되었다. 법정 첩부매수는 854,820(지역구 515,311, 전국구 339,509)매였으나 일부 후보자 및 정당이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 첩부매수를 다 첩부할 수 없었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뿐만 아니라 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당·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과 선거구의 상황에 따라 정치적 쟁점, 지역발전, 개인적 자질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신한국당의 경우 김윤환 대표(경북 구미시읍)는 “구미의 자랑, 경북의 희망”, 서석재 선대위 부의장(부산 사하구갑)은 “큰 인물 큰 정치”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후보자의 역량을 과시하였고, 이한동 선대위 부의장(경기 포천시)은 “우리의 선택, 내일의 영광”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대철 선대위공동의장(서울 중구)은 “솔직해서 좋다”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1인 독주 견제, 경제살리기”라는 문구를 통해 당의 기본적인 선거전략을 병기하였다. 조세형 선대위 부의장(서울 성동구을)은 “큰 일할 일꾼, 우리 성동이 키웁시다”라며 인물과 지역을 연계하였고, 이종찬 선대위 부의장(서울 종로구)은 “종로의 한 표가 정권을 바꾼다”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통합민주당 후보자들은 당이 선거전략의 기조로 내세운 도덕성과 개혁성을 상징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노무현 선대위 부위원장(서울 종로구)은 “올바른 정치 진실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강창성 선대위 부위원장(서울 용산구)은 “당신은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의 희망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충남 부여군)는 “5000년 가난 몰아내고 조국 근대화 이룩한 의회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개인적 역량과 자질을 부각시켰고, 박준규 선대위

의장(대구 중구)은 “갈광질광 독재정권 우리가 심판하자”며 여당을 비판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김복동 선대위부의장(대구 동구갑)이 “대구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문구를 선전벽보에 게재해 반(反) 김영삼 정서를 자극하였다.

그 밖에 무소속 홍사덕 후보(서울 강남구을)는 “분단조국 생각하며 결정했습니다” 문구를 게재하여 자신이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를 표현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한편 선전벽보 보완첨부제도가 신설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한 선전벽보가 오·훼손된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법정 첨부수량의 30%까지 가능)을 받아 같은 장소에 교체 첨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43,081매가 검인 교부되었으며 이는 보완첨부용 검인 가능매수의 16.8%였다.

〈표 3-3〉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보완 첨부용 선전벽보 검인상황

(단위 : 매)

구 분	계	신한국당	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민련	기타정당	무소속
검인매수	43,081	11,906	7,722	6,468	6,348	1,532	9,105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에서 경력(학력·경력·학위·상벌)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후보자가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선거구

관내에 공고문을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경우에도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의제기된 사례는 총 52건으로 그 중 경력 등 허위사실을 이유로 49건이, 후보자 비방관련으로는 3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거나 무혐의로 판명된 사건은 37건이었으며, 15건은 증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15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10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선거구관내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위법사실을 알렸다.

선전벽보와 관련하여 첩부 지연과 훼손 등의 사건·사고가 있었다. 전북 군산시 관내 도서지역은 폭풍으로 인하여 행정선은 물론 항공기 운항이 어려워져 선전벽보 첩부가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서지역 22개 첩부장소에는 첩부마감 기한인 4월 1일까지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못하다가, 4월 3일에야 첩부할 수 있었다.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후보자(전국구 후보자는 제외)가 직접 작성·인쇄한 후 1996년 3월 3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인에게는 4월 1일까지, 매세대에는 4월 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한 매수는 총 81,570,758매(매세대 77,203,187매, 부재자신고인 4,367,571매)였다. 후보자들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공보를 4면 이내로 작성하였고, 소속 정당과 후보자별 전략에 맞추어 정책·인물·지역발전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자기당의 전국구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한국당의 경우 김중위 후보(서울 강동구을)는 “각하 정치는 9단이지만 통치는 초단입니다”라는 문안을 게재하여 직언을 할 수 있는 인물임을 나타냈고, 한승수 후보(강원 춘천시갑)는 “춘천발전 10년 이상 앞당기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는 문구를 내세워 지역공약을 부각시켰다. 한편 양정규 후보(제주 북제주군)는 “5선 의원의 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등 지역공약과 함께 실천능력과 의지

를 강조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손세일 후보(서울 은평구갑)는 “4·11 선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안정을 위한 실천 공약을 제시하였다. 박상천 후보(전남 고흥군)는 “큰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문안을 게재하여 후보자 약력과 그동안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특히 놓여준 지원을 포함한 지역발전공약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순형 선거대책본부장(서울 강북구을)은 “소신과 원칙, 의정활동 1위 강북이 키운 대쪽정치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민주·민권 실현을 위해 본인이 걸어온 길을 강조하였다.

통일민주당 장경우 후보(경기 안산시을)는 “프로가 좋다! 초보는 싫다”라는 문구를 통해 3선의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능력을 강조하였고, 김정길 최고위원(부산 중구·동구)은 “당선유혹 뿌리치고 명분택했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공보에 게재하여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부각시켰다.

자유민주연합의 김용채 부총재(서울 노원구을)는 “옆집도 이사 간대요!! 각광받던 신도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는 문안을 게재하여 지역발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담았다. 안택수 후보(대구 북구을)는 “싫다. 못 참겠다. 북에서 알아보자”,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무능정권의 연습정치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김영삼 정권에 대한 비판과 후보자 본인의 경력을 알렸다. 무소속으로 옥중출마한 정호용 후보(대구 서구갑)는 “상처받은 대구 명예 되찾자 TK역사!!”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대구지역의 ‘반(反) 김영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삼 정서' 를 자극하였다.

한편 학력 게재요건이 강화되면서 허위경력 게재에 관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광주 북구에서는 1996년 4월 1일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인 박광대(광주 북구갑)의 선거사무원인 정태성이 신한국당 정경주 후보의 선거공보에서 시의회의장 경력이 '2년' 임에도 '4년' 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경력사항 허위게재에 대해 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정경주 후보는 의뢰원고에 오류가 있었고 출판기획사에 이에 대한 수정을 위임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명서를 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4월 11일 각 투표소에 이 내용을 게시하고 문제를 종결하였다.

인천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에서는 1996년 4월 6일 통합민주당 정해남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윤명선이 새정치국민회의 이기문 후보의 선거공보·책자형·명함형 소형인쇄물에 '전국금속노련 인천지부 고문변호사' 라고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며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기문 후보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받아 이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이 아님을 이의제기자 윤명선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윤명선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취소를 요청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이기문 후보는 '전국금속노련 인천지부' 의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전국금속노련 인천지역 대표자회' 의 고문변호사이며, 대표자회는 전국금속노련의 공식기구가 아니라며 인천 계양구갑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다. 인천 계양구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자문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금속노련 인천지역 대표자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소명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첩부하여 알렸다.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 누락 시비가 일기도 하였다. 서울시 중랑구을선거구의 통합민주당 조명원 후보 측이 신내제1동 지역에 배부된 일부 선거공보 봉투 속에 조명원 후보의 선거공보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조명원 후보 측은 누락된 것이 총 12세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랑구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하여 조명원 후보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4세대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를 직접 전달하고, 조명원 후보에게 누락세대의 주소와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명원 후보 측은 이에 불응하고 1996년 4월 2일 16세대에 자신의 선거공보가 누락되었다는 보도자료를 공표하였다.

다. 소형인쇄물

후보자(전국구 후보자 제외)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형과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각 1종씩 작성·배부할 수 있었다.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권자수에 상응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배부하였다. 반면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제출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4월 1일까지, 매세대에는 4월 2일까지 선거공보와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한 매수는 총 79,643,235매(매세대 75,430,916매, 부재자신고인 4,212,319매)였다.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8면 이내에서 작성하였고, 선거공보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전국구후보자는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자기당의 전국구후보자 명단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한국당 후보자들의 소형인쇄물은 획일적인 정당의 선거슬로건이나 지역구 공약보다는 경력과 능력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많았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후보(부산 동래구갑)는 “한국 정치의 심장, 청와대에서 큰일을 해냈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갈 도약의 시대, 박관용의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안정과 개혁, 합리적 정치를 추구해왔음을 강조하였다. 최병렬 후보(서울 서초구갑)는 “나라살림 해본 사람이 서초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정치·행정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손학규 대변인(경기 광명시을)은 “정치 바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등의 문안을 게재하여 21세기 미래형 정치인에 의한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자의 소형인쇄물에는 주로 신한국당의 부도덕성과 무능,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겼다. 추미애 후보(서울 광진구을)는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대통령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대선자금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자신을 ‘한국의 대치’로 명명하며 여성의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였다. 한화갑 후보(목포시·신안군을)는 “왜 한화갑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지역발전과 더불어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대답을 게재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연계시켰다. 정균환 후보(전북 고창군)는 “신한국병 치료약은 어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소형인쇄물



신한국당 손학규 후보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후보



통합민주당 장을병 후보



자유민주연합 박철언 후보

에 있습니까?”, “김영삼 정권 3년은 총체적 실패작” 등을 문안에 게재하며 견제론과 수평적 정권교체를 호소하였다.

통합민주당 후보자들은 3김 청산과 통합민주당의 개혁성을 강조하였다. 장을병 공동대표(강원도 삼척시)는 “굿바이 3김”, “웰컴 장을병!”, “이제 3김씨는 제발 그만”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3김 정치 종식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조순 서울시장과 최각규 강원도지사와 협력할 것”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규택 의원(경기 여주군)은 “고양이에 게 생선을 맡기면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5·6공 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고 3당합당을 거부한 자신의 지조와 소신을 강조하였다.

자유민주연합 후보자들의 소형인쇄물에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성토가 주류를 이루었다. 박철언 후보(대구 수성구갑)는 “대구·경북의 본패를 보여줄 유일한 대안, 박철언”을 내세워 김영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또한 그동안 자신이 이룬 지역발전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변웅전 후보(충남 서산시·태안군)는 “햇바지라 몰아붙인 문민독재 끝장내자”라는 구호와 함께 김영삼 정권에 대한 비판과 30년 동안의 방송경험을 부각시켰다.

소형인쇄물 역시 선거공보와 마찬가지로 허위경력 게재에 대한 논란이 다소 일었다. 성남시 수정구선거구 신한국당 유제인 후보가 책자형 소형인쇄물 7면 일부에 성남시민모임 대표 이용상의 성명 및 사진과 함께 자신이 지은 수필집을 읽은 소감을 게재하였다. 언뜻 보면 마치 성남시민모임이 유제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자 성남시민모임은

유제인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각 언론사와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방송연설

방송연설은 각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후보자 2명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송연설은 전국구후보자만 할 수 있었고, 지역구후보자는 할 수 없었다.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정당이 부담한 후, 선거결과 당해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에 당선자가 있을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주었다(보전금액은 “제3장. 제5절 선거비용” 참조).

전국구후보자를 추천한 5개 정당 중 무당과국민연합을 제외한 4개 정당(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4회(텔레비전 2회, 라디오 2회)의 방송연설을 하였다.

신한국당은 ‘대쪽’ 이미지로 잘 알려진 이회창 선대위의장과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박찬중 수도권대책위원장을 연사로 선임하였다. 박찬중 수도권대책위원장은 1996년 4월 9일 연설을 통해 “공천 암거래는 신성한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공천헌금에 대해 맹 비난하였다. 그는 김대중·김종필 두 총재를 겨냥하면서 신한국당은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양김보다 젊고 깨끗한 사람을 내세울 것이라며 세대교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1996년 4월 4일에 발생한 북한군의 판문점 진입을 거론하면서 정국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회창 선대위의장의 후보자 방송연설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실시되었다. 그는 지역주의와 봉당정치에 얽매인 정치구조에서의 여소야대는 안정을 해치고 혼란만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한국당 선거전략의 기초였던 안정론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와 소설가이자 TV토크쇼 사회자 출신의 김한길 대변인이 연사로 나왔다. 1996년 4월 7일 김한길 대변인은 신한국당의 안정론은 영구집권논리와 다름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번 여당하면 영원한 여당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신한국당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김영삼 정권 3년간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무장지대 부인 및 판문점 시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북풍’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고자 하였다. 1996년 4월 10일 연설에 나선 김대중 총재는 이회창 선대위의장의 안정론에 맞서 견제론을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미국과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를 비교하면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경제실패를 집중 공략하면서 경제등권론을 주장하였다.

통합민주당은 김홍신 선대위 대변인과 전국구 2번에 공천된 이미경 후보가 연사로 나섰다. 1996년 4월 7일 이미경 후보는 신한국당이 승리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독단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고, 새정치국민회의가 승리하면 지역분열과 국회의원 줄서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자유민주연합이 승리하면 3공과 5·6공 수구부패 정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며 여당과 두 야당을 모두 비난하였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통합민주당 지지를 호소하였다. 1996년 4월 9일 연설에 나선 김홍신 대변인은 통합민주당의 3김청산 전략에 입각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 총재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학로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을 폈고,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공격하였다. 또한 김종필 총재는 과거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제3국에 조정제의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이동복 선대위 대변인과 한호선 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연사로 선임하였다. 1996년 4월 9일 이동복 대변인은 정치·경제·사회·안보의 불안을 제기하면서 신한국당 후보를 적게 당선시키는 것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종말은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험과 경륜의 보수적 가치를 지닌 자유민주연합이야말로 대안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마.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지역구마다 2회씩 개최할 수 있되, 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513회의 합동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는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합동연설회가 유권자들의 주

목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어 합동연설회가 아니더라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거리에서 후보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상은 합동연설회의 청중수로 나타났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합동연설회 평균 청중수는 2,800여 명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평균 청중수 4,200여 명보다 무려 1,400여 명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에 조직적으로 청중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려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청중이 지지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면 일제히 합동연설회장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은 주로 정치적 쟁점사항과 지역발전에 관해 연설하였다. 신한국당 후보들은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여당의 개혁정책을 부각하고 안정속의 개혁을 위한 과반수 의석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신한국당 백용호 후보(서울 서대문구을)는 “현 정권의 개혁이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개혁은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개혁성을 부각하였다. 이재오 후보(서울 은평구을)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는 이유와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른바 ‘5불5가론’을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화투쟁을 오래 해온 본인이 당선돼야 현재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을 볼모로 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 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개혁세력의 진정한 주체임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 후보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세력이라고 비난하였다. 부산 중동구 합동연설회에서는 정의화 후보가 지역주의에 편승한 자극적인 연설로 청중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정의화 후보는 1996년 3월 31일 합동연설회에서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이다. 부산에서 YS를 밀어주지 않으면 YS는 내시가 돼 개혁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내시론’을 주창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 후보들도 지역발전 공약을 주로 내세우면서 제14대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한 뒤 장학로 축재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실정과 개혁의 허구성에 대해 비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명규 후보(전남 광양시)는 “검찰은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떡값으로 21억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그 돈으로 떡을 하면 우리 도민이 다 먹고도 남는다”며 측근 비리를 꼬집었다. 또한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15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낱알이 밝혀내겠다”며 김영삼 정부를 비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이공규 후보(충남 서천군)는 “21억 원은 떡값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천의 한 공무원이 단돈 1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시키느냐”고 장학로 사건을 역설적으로 비난하였다. 한편,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을 싸잡아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새시대 정치의 개혁주체임을 강조하였다. 통합민주당 이기택 후보(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는 “부패정치, 1인 지배정치, 지역할거주의가 판을 치는 3김 시대는 종식돼야 하고 3김 이후의 대안은 이기택과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지역주의 정치 종식을 주장하였다.

합동연설회 중 특히 주목을 끈 곳은 소위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선거구였다. 이 선거구에는 기업인 출신으로 잘 알려진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 종로구에서만 4선을 했던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5공 ‘청문회 스타’로 알려진 노무현 통합민주당 후보,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알려진 텔런트 김을동 자유민주연합 후보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종로구 합동연설회에서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는 경제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도시가스 보급률과 주택자가율 등 경제통계 지표상 종로가 서울 25개 구 중 24등”이라고 지적한 뒤 “기술경제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인 출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며 지지를 호소했다.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찬 후보는 “이번

선거는 김영삼 정권의 3년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의미를 부여한 후 여당이 실정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통합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자신의 저서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후보가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뒤,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야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민주연합 김을동 후보는 "정치 1번지 종로가 불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며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치가 될 수 있도록 장군의 손녀를 밀어 달라"고 연설하였다.

종로구 합동연설회뿐만 아니라 상당수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자가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비방하는 연설을 경쟁적으로 하였고, 그에 따른 물의사례도 발생하였다. 1996년 4월 2일 밀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일곱 번째로 연설에 나선 무소속 박상웅 후보자가 "신한국당에서는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자금을 전달하고 있고, 기호 7번인 박종택 후보는 자기 동생을 통하여 20만 원씩, 200만 원씩 자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양심선언 내용이라며 녹음기를 연설회에 설치된 마이크에 갖다댄 후 청중들에게 "잘 안 들리면 앞으로 나와서 들어라"라며 증거물을 들어 보였다. 이에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상웅 후보에게 합동연설회장에서 녹음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한편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상웅 후보는 이에 불응하고 신문지에 싣 증거물(돈)을 "이것 다 갖다 먹어라", "이 돈 먹고 짝어라"라며 연단 아래로 던졌다. 합동연설회가 끝난 후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상웅 후보를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박상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선거가 끝난 후 법원은 1996년 10월 31일 박상웅 후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동연설회장을 방문하여 시비가 일어난 곳도 있었다. 1996년 3월 30일 강원도 강릉시갑선거구의 합동연설회장에 최각규 강원도지사(자유민주연합)가 참석하여 선거구민들과 악수를 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지역구에서 출마한 자유민주연합 황학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강릉시갑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최각규 도지사는 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조문한 후 수행원 1명과 합동연설회장을 방문하여 주위에 있던 주민들과 악수를 하며 의례적인 인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최각규 도지사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였다.

바. 정당·후보자 연설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은 지역구마다 2회(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추가되는 구·시·군마다 각 1회씩을 더한 횟수) 이내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는 2개 이상의 구·시·군에 걸쳐 한 장소에서 1회 5시간 이내에서 공동으로 연설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다. 이 연설회는 정당이 주관할 때에는 ‘정당연설회’, 후보자 등이 주관할 때에는 ‘후보자연설회’라고 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지만 정당연설회나 후보자연설회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개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1,365회의 정당·후보자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법정 개최횟수 3,067회의 44.5%였다.

〈표 3-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연설회 개최 상황

(단위: 회, %)

정 당 명	법정개최횟수	개최횟수		
		계	단독개최	공동개최
계	3,067	1,365 (44.5)	921	444
신 한 국 당	555	330 (59.5)	236	94
새정치국민회의	505	296 (58.6)	201	95
통 합 민 주 당	494	193 (39.1)	141	52
자유민주연합	479	277 (57.8)	74	203
기 타 정 당	148	22 (14.9)	22	-
무 소 속	886	247 (27.9)	247	-

※() 안은 법정횟수에 대한 개최비율임. 기타정당은 대한민주당, 무당파국민연합, 21세기한독당, 친민당임.

신한국당은 정당연설회의 주요 연사로 이회창 선대위의장, 박찬종 수도권선대위원장, 김윤환 대표, 이흥구 선대위 고문 등을 내세웠다. 이회창 선대위의장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을 6

대 4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연설하였고, 박찬중 수도권 선대위위원장은 거의 수도권에 집중하였다. 김윤환 대표위원은 대구와 경북지역을, 이흥구 선대위고문은 호남과 충청지역을 맡았다. 이회창 선대위의장과 박찬중 위원장은 주로 이벤트식 연설을 하였는데, 하루 평균 6~7회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이회창 의장은 주로 '3김 정치 타파'와 '2000년을 향한 선택'을 주제로 연설을 많이 하였고, 박찬중 위원장은 '신한국당의 자기 변신', '가난한 선거'를 강조하였다. 신한국당 정당연설의 특징은 연예인 자원봉사단이 대거 출연하여 청중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었다. 연예인을 앞세운 정당연설회는 특히 지방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당연설은 주로 김대중 총재가 도맡았고, 정대철 선대위의장이 중심이 된 이른바 '그린캠프 21'이 보조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주로 수도권 연설에 집중하였지만, 호남에서도 2회 유세를 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100회 이상의 지원유세를 하였다. 김대중 총재의 정당연설에는 신낙균 선대위 부의장 그리고 MBC 전 앵커인 정동영 후보, 텔런트 출신의 정한용 후보 등 대중에게 친숙한 후보들을 대동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연설 내용은 '견제론', 그리고 '대선자금', '경제등권주의' 등 정치적 쟁점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그린캠프21은 주로 이벤트 위주의 유세를 벌였다.

통합민주당은 지도부 인사가 대거 지역구에 출마하는 바람에 체계적인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인지도 높은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수도권의 정당연설회에 집중하였고, 이종재 선대위원장, 김홍신 대변인 등은 전국적으로 지원유세를 하였다. 정당연설회에 앞서 통합민주당은 멀티큐브로 홍보 영상물을 방영한 후 후보들이 합창하는 등 축제형식으로 정당유세를 이끌어갔다. 연단에는 "정치를 확 바꿉시다"라고 게재되어 있는 그림 배경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였고, '3김 청산 박 깨뜨리기' 행사 등 청중 참여 행사와 레이저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주로 김종필 총재가 연사로 나섰다. 김종필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고, 내각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1보3혁론'(하나의 보수정당 대 세 개의 혁신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연습정권 대 경험정권', '경제를 망친 자 대 경제를 일군 자' 등의 구호를 내걸어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세단은 강원·대전·충남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유세활동을 전개하였다. 영남권에서는 박준규 선거대책위원회의장과 박철언 전 의원이 유세활동을 하였다.



▶ 자유민주연합 정당연설회

사.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전국구 후보자 제외)와 그 배우자는 도로변이나 광장·공터·시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나 대담(일명 ‘거리유세’)을 횡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정당·후보자연설회’는 사전에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연설을 하지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연설·대담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대면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이에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차량 1대와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각 1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연설·대담을 진행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통해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통합민주당 노무현 후보(서울 종로구)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길거리 농구를 하게 하여 청중들을 모으고, ‘즉석 거짓말 대회’, ‘그림 전시회’ 등으로 시선을 묶는 이벤트성 유세를 하였다. 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서울 송파구갑)는 자신의 이미지 캐릭터인 ‘모래시계’를 활용한 멀티비전 홍보물로 유권자의 시선을 끌었다. 새정치국

민회의 선별후보(대전 동구갑)는 연설·대담 차량을 야광으로 만들었고, 같은 당 박우섭 후보(인천 남구갑)는 남녀 한 쌍이 등장하는 마당극 형식의 유세를 펼치는 등 다분히 이벤트 요소를 가미하였다. 또한 서울 강서구를 통합민주당 고진화 후보는 '3김 정치의 외발정치'를 외치며 외발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였고, 인천 연수구 홍기택 후보(무소속)는 아파트 단지에서 높이 8m의 리프트에 올라 '고공유세'를 벌이기도 하였다.

공개장소의 대담·연설에서는 로고송을 통한 선거운동도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각 후보자는 중앙당에서 제작한 로고송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로고송을 경쟁하듯이 내보냈고, 이로 인하여 연설·대담장 주변은 로고송 경연장을 방불케 하였다. 쉽고 기발한 가사로 개작한 로고송은 이미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에게 후보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후보는 인기가수의 곡을 개사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 자유민주연합 강경식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로고송 사용이 정당연설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에서는 로고송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을 피하여 경쟁적으로 로고송을 틀어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듬해 1997년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로고송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유세장소의 공간적 제약도 논란을 불러왔다. 연설을 할 만한 공개장소가 많지 않아서 후보자들은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택가 또는 상가 근처에서 주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로고송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회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후보자 측과 주민·상인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상당수 후보자는 오전이나 밤 늦은 시간에 연설을 하지 않았다.

아. 기타 선거운동

앞서 기술한 방법 이외에도 각 후보자는 현수막, 경력방송, 방송 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현수막’은 지역구후보자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수에 상응하는 매수를 게시할 수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지역구후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후보자 현수막을 검인하고 있다.

보자 1,389명이 전국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법정 게시매수는 총 21,322매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들이 법정 게시매수를 다 게시하지 않아 실제로 게시된 매수는 20,975매였다.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오손되었을 때에는 후보자가 교체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교체된 매수는 총 9,663매였다.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과 그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 선거구명만 게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거구호는 게재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대통령선거에서만 현수막에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있었다.

‘경력방송’은 한국방송공사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 및 기타 주요한 경력 등을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하여 후보자마다 1분 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각각 2회씩 실시하였다. 한국방송공사 외의 방송국(종합유선방송사 포함)에서도 지역구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텔레비전 2,966회, 라디오 512회 실시하였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은 방송시설(종합유선방송국 포함)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후보자를 대상으로 횡수제한 없이 연설할 수 있었다. 앞의 “제3장. 제4절. 2. 라. 방송연설”과의 차이점은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송사에서 부담한다는 점과, 연설자가 지역구후보자라는 점이였다. 이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은 주로 지방 방송국이나 종합유선방송국에서 그 지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개최된

방송연설회 횟수는 텔레비전 1,111회, 라디오 22회였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법에 규정된 공명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지역구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방송국이나 일반 일간신문사 등의 언론기관도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가 주관한 대담·토론회 50회, 언론기관주관 대담·토론회 118회가 개최되었다.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강화 YWCA)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일부 후보자들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서비스사와 연계하여 대화방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신한국당 김영춘(서울 광진구갑)·김덕룡 후보(서울 서초구을), 새정치국민회의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통합민주당 김왕석(서울 동작구을) 후보 등 60여 명의 후보자들이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후보자들은 각자의 대화방에서 기호, 공약, 학력, 성장배경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네티즌의 의견도 접수하였다. 각 정당은 정당차원의 ‘신한국텔’, ‘새정치포럼’, ‘민주당 대화합의 큰 마당’, ‘자민련의 게시판’ 등을 운영하였고 각 당의 대화방에 후보자들의 작은 방도 만들어 네티즌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PC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의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법선거를 유발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하이텔의 ‘제15대 총선 이용자 게시판’에는 각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들의 글이 상당수 게재되었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된 이후 천리안, 나우누리 등 각 PC통신망 내 이용자들의 토론장은 각 후보측에 의해 거의 ‘점유’ 되다시피 하였다. 후보자 소개나 유세 안내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글들이 늘어났다. 한 회사원은 “김대중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비방성 글을 게시하여 후보자 비방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에 총 80회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자당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편 정당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신문광고를 냈다.

신한국당은 시리즈로 ‘김구편’, ‘만머느리편’ 등의 신문광고 게재했다. “너희는 오늘 역사를 바로 세워라”(역사 바로 잡기), “국회의원 후보를 모집합니다”(인재론)를 비롯하여 젊은 층의 시선을 끌기 위해 당시 인기배우였던 최진실을 등장시켜 “진실이 신한국으로 갑니다” 등의 내용을 광고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4대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솔직한 게 좋아요”, 경제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멸치가 기가 막혀”라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신한국당의 약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들의 공감을 유도하였다.

통합민주당은 3김 정당과 1대 3구도를 형성한다는 기본전략을 신문광고에서 드러냈다. 3김을 상징하는 말라비틀어진 멸치 3마리가 담긴 쟁반에 “반찬 좀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을 달고 “국민에게 입맛을 돌려줄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습니다”라는 문안을 집어넣어 통합민주당이 대안정당임을 호소했다.

자유민주연합은 보수원류임을 알리는 광고를 하였다. “자세히 보십시오! 정치색맹은 빨간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보수정당은 자민련뿐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축구심판 복장의 여성당원이 레드카드를 들고 ‘낙제정권’, ‘대통령병’을 외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공격하였다.

3. 선거쟁점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이전 선거에서처럼 민주 대 반민주 등 이념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명확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없었다. 그 대신 선거 때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안정론과 견제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 등이 선거쟁점이 되었다.

가. 안정론과 견제론

안정론과 견제론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반에 걸쳐 여야가 공방을 벌인 쟁점이었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의 완성을 위해 과반수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과 독단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여당의 안정론을 반박하며 견제론으로 맞섰다.

여야 간 안정론과 견제론 공방은 선거 전 이미 시작되었다. 1996년 2월 말 김영삼 대통령은 인도 방문 시 수행기자단과의 오찬자리에서 “80년대 후반 여소야대 때 노사분규를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런 불행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안정론에 근거한 여당의 과반수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여소야대 때는 98%의 의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정도로 정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나,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출현한 뒤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즉각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연합 또한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였던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정치 불안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여소야대가 곧 혼란이라는 논리를 반박하였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안정론과 견제론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득표 전략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이를 쟁점화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안정론과 견제론을 둘러싼 공방은 선거기간 내내 유세 및 기타 선거운동에서의 주요 주제로 활용되었다. 1996년 3월 28일 경기도 김포·군포 등 수도권 지역 정당연설회에서 신한국당 이회창 선대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견제론은 3김 정치구도와 당리당략에 따른 지역분당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침체된 경기와 어려운 경제는 정국이 확실치 않아 생겨난 불안정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돼야 해결되는 만큼 현 정부가 남은 책임을 완수하여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신한국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며 새정치국민회의의 견제론에 대

한 비판과 함께 안정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3월 31일 서울 서대문구갑 정당연설회에서도 “야당의 견제론은 잘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요 정당연설회 등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 신한국당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28일 광진구을, 강동구갑 등 6개 서울지역 정당연설회에서 김대중 총재의 연설을 통해 “야당이 의석을 많이 얻는다고 정국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거대여당이 횡포를 부릴 때 정국불안이 오는 것”이라며 신한국당의 과반수 안정론을 반박하는 한편 견제세력 육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날 정대철 선대위의장도 서울 성북구 정당연설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회의에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달라”며 견제론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1996년 4월 4일 경기 구리, 양평, 여주, 하남 등 수도권과 충청 음성, 청주 등 충청지역을 순회하는 정당연설회에서 “집권여당은 지금까지 절대안정의석을 갖고 있었으나 오히려 낡은 국면을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따라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얻어야 정치가 안정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신한국당의 안정론을 비판하였다. 또한 “절대권력을 흔내주고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견제론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나.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공방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선거자금 문제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가장 큰 선거쟁점이 되었다. 쟁점의 핵심은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김영삼 후보는 3,000억 원 이상을, 김대중 후보는 ‘20억+ α ’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도 100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거과정에서 대선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한 당은 새정치국민회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거의 모든 선거유세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새정치국민회의가 국회 3분의 1 의석을 확보할 경우 ‘대선자금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받은 돈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1996년 3월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윤환 신한국당 대표위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토론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비

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과 당에 확인해 보니 대선자금 명목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대중 총재의 '20억+ α ' 설을 규명하라며 역으로 새정치국민회의를 공격하였다. 그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에 관한 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자금 계좌 100억 원설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3,000억 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대선자금 공방이 전개되고 있던 1996년 3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 기사가 대구 매일신문에 게재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매일신문은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립내각 출범으로 대선자금을 다 주지 못했지만 김영삼 후보자에게 쓸 만큼의 정치자금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노재현 인터뷰 기사로 실었다. 이에 대해 3월 14일 노재현은 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였고, 신한국당도 이를 부인하였으나 야3당은 "김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자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렬해졌다.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당연설회 및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한목소리로 신한국당을 공격하였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대선자금 논란'과 '20억+ α 설', '110억 설'과 관련하여 3김은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전략의 핵심인 '3김 청산'과 연계하여 3당을 동시에 비난하였다. 1996년 3월 28일 통합민주당 홍성우 위원장은 중구 정당연설회에서 "전·노 씨의 부정한 돈을 받아 챙긴 세 김씨가 대선자금, 20억+ α , 110억 수수설을 은폐하기 위해 전·노 재판을 세기의 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세력이 3김의 부패정치를 깰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4월 9일에는 김홍신 대변인이 후보자 방송연설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씨는 검은 돈의 내막을 숨긴 채 3김씨와 흥정을 하고 있다", "특히 노씨에게 돈을 받은 3김씨는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고 있다"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도 대선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시켜 나갔다. 1996년 4월 2일 용산구 정당연설회에서 오유방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저지른 실정은 국민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회에 들어가 김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를 파헤치는 청문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의 비자금은 통합민주당이 폭로한 것이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의의 출현으로 긴장한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흘린 정보를 2중대인 민주당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연계를 거론하면서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여야는 선거기간 동안 끊임없이 대선자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간 공방은 대선자금 수수 자체를 규명하려는 것보다는 각 당의 득표전략에 의해 비방과 선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다.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

선거일을 20여 일 앞둔 1996년 3월 21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정희경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이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동거녀와 그녀의 형제들 명의로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위장 투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 정희경 새정치국민회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이 장학로 사건을 폭로하고 있다.(1996년 3월 21일)

문제는 개혁과 사정,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도하던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곧바로 선거쟁점이 되었다. 장학로 실장은 1996년 3월 21일 검찰조사를 받은 후 3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신한국당은 강삼재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잘못된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페어플레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폭로

전보다 정책대결을 통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인 대결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해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1996년 3월 23일 김홍신 선대위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심복의 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장학로 실장이 가지고 있던 거액이 대선 때 쓰고 남은 자금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장학로 실장의 비리 의혹을 대선자금과 연계시켜 신한국당을 공격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연합도 3월 23일 김종필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측근의 부정축재는 김영삼 정권의 부패 타락상과 개혁의 허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한국당을 비난하였다.

이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장학로 부정축재사건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되었다. 특히 1996년 3월 30일 검찰이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인과 정당관계자 등으로부터 모두 27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중 이권청탁 등과 관련하여 14개 기업체로부터 받은 6억 2,200만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장학로를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자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4월 1일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장학로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뜻을 내비치며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국민회의는 27억 중 6억 2,200만 원밖에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수사가 너무나 신속히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기대와 상식을 벗어난 축소·왜곡수사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신한국당을 비난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1996년 3월 31일 제주시 정당연설회에서 “장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면서 충격을 느꼈다”,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도구가 되어 표적·왜곡사정으로 일관해온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 처리는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하며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통합민주당 또한 검찰수사와 신한국당에 대한 공세에 가세하였다. 3월 31일 관악구 정당연설회에서 홍성우 선대위원장은 “청와대의 정보를 마음대로 팔아먹은 장학로 씨 사건을 비서관 한 명의 개인적 비리로 치부해 종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김영삼 대통령과 검찰은 권력핵심부의 관련여부를 재수사하라”며 비난을 쏟아내었다.

라. 전국구후보 공천헌금 공방

야당은 내부적으로 공천헌금설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었다. 공천헌금설은 이후 당 내부분쟁에 그치지 않고,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야당의 공천헌금 시비는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왔고, 여당은 공세를 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천헌금 시비는 새정치국민회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된 유준상 의원(전남 보성군·화순군)이 ‘20억 공천헌금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두고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공천 장사를 했다”며 비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사실무근이라며 공천헌금설을 일축하였다. 특히 1996년 3월 1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한길 대변인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기택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이 공천헌금을 받은 후 당에 내놓지 않고 중간에 착복했다며 오히려 통합민주당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이기택 상임고문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로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 같은 주장은 새정치국민회의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아 문제가 생기자 이를 모면해 보려는 수단이다”라고 반격하였다.

공천헌금 논란은 이후 새로운 공천헌금설이 터지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태영 의원과 재력가 국창근 후보의 공천헌금설이 퍼졌고, 이에 대해 검찰이 국창근 후보의 차명계좌를 추적하여 인출된 8억 원의 사용처와 박태영 의원의 2억 원 공천헌금 여부를 조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공천헌금설에 대한 검찰조사는 장학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검찰수사 관계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며 맞대응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서울 3개 지역구를 순회하는 정당연설회를 통해 공천헌금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한 뒤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1조 원이 넘는 대선자금을 ping ping 써놓고도 이제 와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우리 당에 공천헌금이라는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전국구후보 공천헌금 공방 (조선일보 1996년 3월 14일)

자유민주연합도 전국구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이필선 부총재가 공천헌금설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확대시켰다. 1996년 3월 30일 이필선 부총재는 당으로부터 3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이 문제는 검찰조사로까지 이어져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은 공천헌금설을 양김 정치의 부패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쟁점화하였다. 1996년 3월 28일 부천시 정당연설회에서 신한국당 박찬중 수도권 선대위원장은 “장학로 사건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와중에 뒤로 공천 장사를 하며 돈 잔치를 벌이는 속임수 정치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며 야권의 공천과동을 비난하였다. 이회창 선대위의장을 비롯하여 정당연설회 등의 연사로 나선 신한국당 지도부도 야당의 공천헌금설을 집중 공격하였다.

통합민주당 홍성우 선대위 위원장은 1996년 4월 2일 동작구갑지구당 정당연설회에서 “3김 씨가 노태우 씨로부터 받은 돈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부정인데 장학로 사건, 국민회의의 공천헌금, 김종필 씨가 공화당 시절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정치자금 등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3김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비난하였다. 이미경 선대위부위원장도 “불법 정치자금도, 공천헌금도, 측근 비리도 없는 민주당은 오직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깨끗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와 개혁정치를 표방한 통합민주당도 임춘원 의원을 전국구 후보 3번으로 공천하였다가 당내 반발로 공천한 지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잡음이 일어 공천헌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되었다.

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장시위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1996년 4월 4일 북한은 판문점 대표부 담화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며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였다. 또한 선언 직후 판문점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3일 동안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곧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신한국당은 이회창 선대위의장, 박찬중 수도권대책위원장의 유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급선무”라며 이 문제를 안정론과

연계시켰다. 신한국당은 북한 및 안보문제를 선거이슈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표명하였으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북한의 무장시위를 선거전략에 이용하였다. 1996년 4월 8일 이한동 국회부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및 경기 오산·화성 정당연설회에서 “안정희구세력은 국가운영의 마지막 보루”라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4월 10일 박찬중 수도권대책위원장은 서울지역과 경기도 유세에서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아직도 잠재적 전쟁국가이고, 국가안보가 외부의 도전에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의 안정의식은 필수”라며 안정론을 주장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비무장지대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늦게 논평을 내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996년 4월 6일 김한길 선대위 대변인은 “북한의 동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만약 국가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대중 총재도 1996년 4월 6일과 7일 정당연설회에서 북한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후, “확고한 안보태세와 평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했었는데 김영삼 정부는 16번이나 대북정책을 바꿔 이같은 긴장관계가 초래되었다”며 김영삼 정부를 비판하였다.

통합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과거처럼 정부와 여당이 안보문제를 악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신한국당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게도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위원이었던 통합민주당 이부영 후보는 1996년 4월 6일 “북한 동향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 책동을 벌이는 것이 분명한 만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과민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사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4월 4일 이동복 선대위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사건을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북한의 공갈외교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미외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면서도 1996년 4월 6일 서울 정당연설회에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대북관계 및 외교능력 부재를 비판하였다.

바. 세대교체론

세대교체론은 또 다시 형성된 소위 '3김 정치' 에 대한 비판과 연계되어 여야 간에 큰 쟁점이 되었다. 특히 '3김 정치'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통합민주당이 세대교체론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입인사인 이회창 선대위의장, 박찬종 수도권대책 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내세워 김대중·김종필로 상징되는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과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세운 것이 세대교체였다.

통합민주당은 3김 정치는 1인 중심의 비민주적 정당운영과 그에 따른 패거리 정치·줄 세우기 정치를 수반한다며 이를 청산하기 위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대교체가 필요한 사례로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의 정치, 김대중 총재의 1995년 분당 획책 등을 들어 비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세대교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쟁점화했으나 결과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으며 더 이상 세대교체론은 선거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대중 총재의 연령을 문제 삼아 그를 정계에서 은퇴시키려는 인위적 세대교체론에 반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더 나아가 수도권에 30~40대의 비교적 젊은 후보자들을 내세워 '역세대교체론' 과, '노·장·청 세대결합론' 을 주장하며 반격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보다 더 강력하게 세대교체론에 반발하였다. 자유민주연합 박구일 정책위의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민심이반을 호도하고 정적제거를 위한 대중조작 수단으로 세대교체론을 활용하고 있다며 세대교체는 오로지 선거를 통해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대교체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실정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반박하였다.

사. 기타 쟁점사항

기타 선거쟁점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주장한 '경제등권론' 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연합이 거론한 '보수론' 등을 들 수 있었다.

'경제등권론' 은 1996년 3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거론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농촌과 도시,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백화점과 재래

시장, 지역과 지역의 권리가 같아서 모든 경제주체가 균형과 조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경제등권론을 주장하였다. 신한국당이 경제등권론에 대해 반박논평을 내자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3월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등권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구조를 고쳐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대중 총재는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경제등권론을 계속 거론하였다.

신한국당은 경제등권론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신한국당은 다섯 차례에 걸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지난 지방선거 때에는 지역등권론을 내세워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더니 이제는 경제등권론을 들고 나와 자본주의 경제의 부분적 문제점을 과장해 계층갈등을 조장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경제등권론을 비판하였다. 이회창 선대위의장은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서 경제등권론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경제등권론 자체를 부정하였다.

‘보수론’은 자유민주연합이 총선출정대회에서 유일 보수정당임을 선언하면서 거론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표만 모을 수 있다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포용한 회색정당들은 정치적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며 보수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신한국당은 자유민주연합의 보수론을 ‘사이비 보수’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보수성향 중산층의 이탈을 우려한 김윤환 대표위원 등 당 핵심인물이 번갈아 자유민주연합의 보수론을 비난하였다. 김윤환 대표위원은 보수주의의 원류는 집권당 내 보수세력이라고 주장한 후 지역감정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김종필 총재는 보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였다. 신한국당 박찬종 수도권선대위원장과 강삼재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연합을 기득권자들과 구세력이 합작한 ‘수구세력’, ‘위장보수주의’라고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통합민주당도 이기택 고문이 나서 “김종필 총재가 원조 보수를 자처하며 동정에 호소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치욕일 뿐”이라며 자유민주연합의 보수론을 비난하였다. 김홍신 선대위대변인도 “수구세력인 김종필 총재와 자유민주연합이 보수정당 운운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공격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보수논쟁과 관련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박지원 대변인이 비공식논평을 전제로 “군사독재의 사생아(신한국당)와 잔재(자유민주연합)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며 양당을 비난하였다.

제5절

선거비용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제도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먼저 선거비용 제한은 ‘비목별제한주의’에서 ‘총액제한주의’로 바뀌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신설하여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과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보전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1. 선거비용제한액

가.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액 2,600만 원에 선거연락소마다 600만 원, 읍·면·동마다 230만 원을 가산하고, 여기에 각 지역구의 인구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하였다. 지역구 인구수에 따른 가산액은 인구 20만 명 이하의 경우 1인마다 100원, 인구 20만~30만 명 이하의 경우에는 20만 명을 초과하는 1인마다 90원,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30만 명을 초과하는 1인마다 80원씩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공고한 지역구후보자의 전국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100만 원이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선거구로 1억 4,100만 원이

었고,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 북제주군선거구로 5,200만 원이었다. 지역구후보자 전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전국 평균제한액 1억 2,327만 원과 비교하면 34.3%가 감소된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이 줄어든 것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산출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된 이후 입후보예정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의 인쇄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법정 선거비용만으로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여 2000년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을 바꾸어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였다.

나.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액 3억 7,924만 6,000원에 전국구후보자 1인마다 257만 5,000원과 선전벽보 작성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다만 선전벽보의 경우 각 정당이 지역구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부수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전국구후보자의 정당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신한국당이 5억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국민회의 5억 1,300만 원, 자유민주연합 4억 8,400만 원, 통합민주당 4억 6,300만 원, 무당파연합 3억 9,800만 원 순이었다.

〈표 3-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천 원)

구 분	후보자수	선거비용제한액			
		기본액	후보자 업무추진비	선전벽보작성비용	계
신한국당	46	379,246	118,450	16,552	515,000
새정치국민회의	46	379,246	118,450	15,163	513,000
통합민주당	28	379,246	72,100	10,837	463,000
자유민주연합	35	379,246	90,125	14,008	484,000
무당파국민연합	6	379,246	15,450	2,919	398,000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1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으로 봄.

2.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선거법상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비용과 직무상 · 의례적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구당활동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 운영비용, 선거운동 준비비용 등은 제외되었다.

앞의 “2절 선거제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당활동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 · 금지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한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지구당 위원장들은 정당활동을 명목으로 당직자회의,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등을 통 · 반별로 돌아가면서 제한기간 전일까지 열었고,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운동으로 비쳐졌고 이들 비용들은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계상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이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인 8,100만 원의 57.1%에 불과한 4,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도되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거사상 유례없는 금권선거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신한국당이 전국 253개 지구당에 1억 원꼴로 모두 253억 원을 지구당지원비로 지출했다고 밝히자 정치자금 축소신고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정당운영과 의정보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사무소 설치 · 유지비, 경조사비 등도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거기간 중에도 ‘20당(當) 15락(落)’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선거비용은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선거가 끝나고 지역구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1996년 5월 11일(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수입 ·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는 없었다.

지역구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 · 지출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42억

4,672만 원이었고,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4,625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선거비용제한액(8,100만 원) 대비 57.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된 후 많은 후보자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많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후보자 중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자는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선거구의 신한국당 송훈석 후보로 1억 2,576만 7,000원(선거비용제한액 1억 3,200만 원의 95.3%)을 지출하였다. 반면 가장 적게 지출한 후보자는 마산시 합포구선거구의 무소속 정명준 후보로 389만 1,000원(선거비용제한액 1억 1,000만원의 3.5%)을 지출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결과 당선자들은 평균 6,08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위 득표를 한 후보자들은 평균 6,039만 4,000원, 3위 득표를 한 후보자들은 평균 4,790만 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전국구후보자를 등록한 5개 정당은 선거가 끝나고 1996년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개 정당은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무당파국민연합은 선거비용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개 정당이 지출한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18억 6,552만 원으로, 이 금액은 전국구 후보자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9억 7,500만 원)의 94.5%였다. 1개 정당이 평균 4억 6,63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지출상황

(단위: 천 원)

구 분	정당 및 후보자수	선거비용 제한액 합계	선거비용 지출액 합계	선거비용 제한액 및 지출액 평균		
				평균 제한액	평균 지출액	지출비율(%)
지역구	1,389명	114,567,000	64,246,720	81,000	46,254	57.1
전국구	4개 정당	1,975,000	1,865,520	493,750	466,380	94.5

3. 선거비용 확인 · 조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1996년 5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내역의 적법성과 진실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선거비용 사실조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407명과 국세청 직원 302명 등 총 1,709명이 참여하였다.

선거비용 확인 · 조사는 선거일 후 실시되었으나, 선거비용 수입 · 지출 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전부터 선거범위반행위 감시 · 단속과 병행하여 선거비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선거종료 후에는 이를 토대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확인 ·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거비용 서면조사는 선거비용 수입 · 지출 보고서가 제출된 후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와 정당회계보고서를 사전에 수집한 선거비용 관련 자료와 일일이 대조 · 확인하여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준수와 불법선거비용지출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였다.

선거비용 현지조사는 국세청 직원의 지원을 받아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선거기획사와 인쇄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선거운동원과 선거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선거운동원 등의 수당 · 실비 지급내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멀티비전 등 선거운동용 고가장비의 임차사용 현황, 정당 회계보고서의 선거운동성 지출내역 등이었다.

선거비용 실사 결과 총 1,064건(1,529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위반정도가 중대한 57건(115명)은 고발하고 69건(209명)은 수사의뢰하였다. 나머지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위반행위 유형 중에는 선거비용 수입 · 지출보고서의 축소 · 누락 등 허위보고가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선거인 ·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부행위(11.5%), 선거사무원 및 당원 등에 기부행위(8.5%), 지정된 예금계좌 외의 수입 · 지출(8.5%), 읍 · 면 · 동조직책에게 활동비 지급(4.6%) 등의 순이었다. 위법선거운동(4.1%)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1.1%)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 · 비속 및 배우자가 금권을 동원한 매수

〈표3-7〉 선거비용실사 결과 위반자 조치상황

(단위: 명)

조치구분	계	후보자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후보자 가족	선거 사무원등	자원 봉사자	선거인	업체 관련자	정당 당직자
합 계	1,529	153	47	1,046	7	42	31	42	26	135
고 발	115	14	10	45	1	5		1	11	28
수사의뢰	209	19	12	57	2	11	20	20	6	62
검찰 통보	10	6	1	3						
경고 등	1,195	114	24	941	4	26	11	21	9	45

행위, 기부행위, 각종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소위 ‘연좌제’에 관한 규정으로 제14대 국회의 원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1994년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당선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본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것은 모두 160건이었으며, 그 중에는 당선자도 2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당선자 중에는 각 정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996년 10월 11일 선거비용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최육철(강원 강릉을)·김화남(경북 의성) 의원 2명을 포함한 58명을 선거비용 허위 신고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남궁진(경기 광명갑)·조종석(충남 예산) 의원은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의 금품 살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조치결과에 대해 당해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였고, 소위 ‘연좌제’ 조항의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이던 여야는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단축’과 이른바 ‘연좌제 조항의 폐지’에 쉽게 합의하였다.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하였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와 관련으로 당선무효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까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이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고, 두 조항은 원래 규정대로 존속하게 되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제2절. 2. 나. 선거법 주요쟁점” 참조).

4. 선거비용 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전국구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 등이었다. 선거비용 보전은 지역구후보자의 경우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인 때 보전하였고, 전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보전되었다. 반면 지역구후보자가 후보를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국가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요건을 충족한 지역구후보자 781명에 대해서는 총 69억 8,560만 6,000원이 보전되었고,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4개 정당에는 총 14억 7,076만 원이 보전되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 608명에게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작성비용만 국고에 기속될 기탁금에서 보전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제3장.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참조).

〈표 3-8〉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별 비용부담 주체

구 분	국가	후보자·정당	비고
선거사무관계자 실비·수당		○	
선전벽보	작성비용	○	보전요건 후보자만 국가가 부담
	첩부·철거 비용	○	모든 후보자
선거공보	작성비용	○	보전요건 후보자만 국가가 부담
	발송비용	○	모든 후보자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	보전요건 후보자만 국가가 부담
	발송비용	○	모든 후보자
현수막 작성·게시		○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		보전요건 후보자만 국가가 부담
합동연설회	○		모든 후보자
정당·후보자 연설회		○	
PC통신·전화이용 선거운동		○	
투·개표 참관인 수당	○		모든 후보자

〈표 3-9〉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상황

(단위 : 천 원)

구 분	선거비용 보전 정당 및 후보자수	보전비용 내역				
		계	선전벽보 작성비용	선거공보 작성비용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방송연설 비 용
계	785	8,456,366	561,904	2,179,829	4,294,225	1,420,408
지역구	781	6,985,606	511,552	2,179,829	4,294,225	-
전국구	4	1,470,760	50,352	-	-	1,420,408

※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수임.

제6절

공명선거활동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공명선거활동에 참여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는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유권자에게는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특히 유권자들이 금품배격에 앞장 서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의 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에는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등이 이용되었다.

가. 언론매체 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방송광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 대담·토론, 인터뷰, 보도 자료 제공 등을 활용한 공명선거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고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신문 639회, 텔레비전 244회, 라디오 457회, 유선방송 11,623회, 간행물에 341회를 실시하였다. 대담·토론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160여 회 참석하여 기부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선거절차와 투표참여 등에 관한 자막·멘트는 23,000여 회를 내보냈다.

후보자등록일 전일인 1996년 3월 25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석수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지느냐, 과거의 과열 혼탁선거로 돌아가느냐의 분수령”이라며 정당·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홍보용 신문광고

4월 11일(목)은 모두 투표하러 가는 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듭니다

투표하러 가는 날
현명한 선택
정확한 기표

투표하러 가실 때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등록번호를 알고 가시면 영조(영조)가 위위 투표를 할리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표는 무효가 되니 주의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도장, 손도장으로 표를 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두군데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올다"와 같은 문자나 "2"와 같은 모양 등을 표시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후보자란 뒤에 표를 한 것

투표금지요항

국회의원선거투표

1	양	달	백용우
2	울	달	김영희
3	백	달	김소은
4	양	달	박영희
5	우	소	김인민
6	우	소	홍길철

○ **투표금지인** ○ **유효한 표**

○ **투표금지인** ○ **유효한 표**

○ **투표금지인** ○ **유효한 표**

No

이런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 ▶ 금품이나 음식·향음으로 표를 모으려 하는 후보자
- ▶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하는 후보자
- ▶ 같은 고창, 같은 문종, 같은 학교 등 연고를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 하는 후보자
- ▶ 심한 헐뜯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
- ▶ 불법선전물을 배부·첨부하는 후보자
- ▶ 도막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절차 및 후보자 선택기준 홍보(1996년 4월 4일)

4월 11일(목)은 모두 투표하러 가는 날

4월 11일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

내에게 주어진 권리는 정당하게 행사한다!

세상의 중심은 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고른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내가 골라주는 것은 도저히 잘못 수 없다.
내에게 주어진 권리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당당한 결정이 세상을 움직인다.
스승한 주권, 5인한 한 표의 자유인—
4월 11일 직접 행사하십시오!

투표하러 가실 때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 등록번호를 알고 가시면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투표를 할리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표는 무효가 되니 주의합니다.

- 기표소 밖에 있는 기표용구 이외에 볼펜, 도장, 손도장으로 표를 한 것
- "올다"와 같은 문자, "2"와 같은 모양 등을 표시한 것

이런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 ▶ 금품이나 음식·향음으로 표를 모으려 한 후보자
- ▶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한 후보자
- ▶ 같은 고창, 같은 문종, 같은 학교 등 연고를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 한 후보자
- ▶ 심한 헐뜯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및 투표절차 홍보(1996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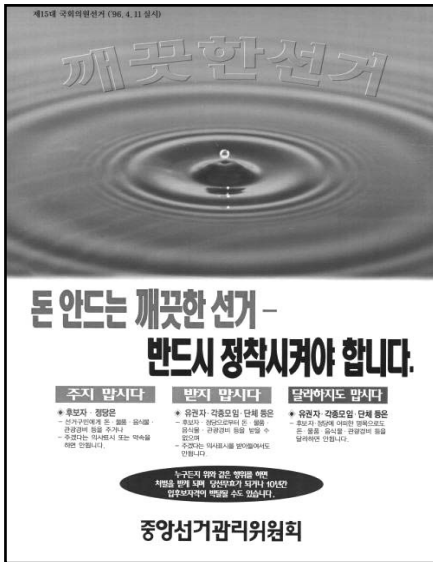
나. 인쇄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활동에 이용한 인쇄물로는 포스터, 전단, 책자, 공명선거 달력, 담뱃갑 광고, 홍보용 티슈 등이 있었다. 포스터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부행위제한 행위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18,800매를 제작하여 각종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 음식점, 노인정 등에 첨부하였다.

전단은 주로 국회의원선거구의 특성에 맞춰 시·도별로 제작하였다. 공명선거 스티커

71,140매를 제작하여 차량, 전화 부스, 엘리베이터 내부에 첩부하였고, 홍보용전단지 186,700매를 제작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 시 활용하였다. 책자로는 선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명선거회보(10회) 355,000부를 발행하여 여론주도층 등에 배부하였고, “깨끗한 선거 - 이젠 유권자가 앞장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홍보책자 142,000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달력 41,000부를 제작하여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민원실, 역, 터미널 등에 배부하여 선거 주요일정을 홍보하였다. 그 밖에 담뱃갑 1,000만 갑, 홍보용 티슈 735,000개, 쓰레기 봉투 170만 매에 공명선거 표어를 게재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홍보포스터 및 각종홍보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각종 선거제도 자료 및 교육교재

다. 시설물 및 기타 매체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활동에 이용한 시설물로는 현수막, 육교현관, 선전탑, 입간판, 게시판, 애드벌룬, 청사현관 등이 있었으며 경남에서는 소방헬기를 띄워 공명선거를 홍보하였다. 전국적으로 현수막 8,090매, 육교현관 69개, 선전탑 7기, 입간판 1,170개, 게시판 480개, 애드벌룬 7기, 청사현관 168개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물에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 - 유권자 앞장서면 됩니다”, “주지 않아 당당한 후보 받은 것 없어 자유로운 유권자”, “유권자의 자존심 -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 똑똑히 기억했다가 꼭 낙선시킵시다”, “마음에서 손끝으로 후회없는 주권행사” 라는 표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기타 홍보 매체로는 선거법 안내 비디오와 “달라지는 선거문화 - 선거선진국으로 달리다” 는 제목으로 홍보용 비디오 등 3종 3,300개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민원실, 역, 터미널,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직장교육 시 활용토록 하였다. 그 밖에 “주는 금품 - 부정선거, 받는 금품 - 타락선거”, “바르고 깨끗한 선거 유권자가 앞장서면 됩니다” 등의 내용과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뉴스 전광판에 677,000회, 싸인보드에 520,000회를 방영하였다.



▶ 서울시청 앞 광장에 게시된 선전탑



▲ 헬기를 이용한 공명선거 홍보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시작 전에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계도표어 현상공모, 공명선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선거기간에는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열린음악회’ 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선희 등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범시

민적인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활동에는 홍보용 티슈, 어깨띠 등과 선거법규집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연인원 1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36회의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활동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1996년 3월 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종 회의·대화·현장방문을 통해 중립실천을 주시시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관여 금지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을 강조하였다.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립된 공명선거대책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시도지사 15명과 시장·군수·구청장 230명을 포함한 총 245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선거중립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또한 6회에 걸쳐 공명선거추진 및 공무원 등의 엄정중립 실천을 지시하였다. 이어 1996년 3월 20일에는 김우석 내무부장관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공명선거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법질서가 지켜지는 선거,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실현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불법·타락 선거를 추방하겠다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을 주도한 단체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이라 한다)였다. 공선협(공동대표 이세중)은 1991년부터 활동한 연합단체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YMCA, 홍사단 등을 포함한 40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 후보자 1후보 3인 감시 운동 발대식(공선협)

공선협은 1996년 1월부터 선거일까지 한편으로 공정선거감시활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의식개혁운동을 벌였다. 공정선거 감시를 위해 선거부정 고발전화를 개통하여 위반사례를 수집하였다. 또한 후보자 1인당 3명의 감시요원을 붙이는 이른바 ‘1후보 3인 감시 운동’을 전개하여 항응 제공 및 금품살포,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를 감시하였다. 공선협은 총 7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¹⁷⁾

공선협은 유권자의식 개혁을 위해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협조를 부탁하며 연고주의 배격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고주의 타파 캠페인으로 ‘유권자 서약운동’도 벌였다. 선거일을 이틀 앞둔 1996년 4월 9일에는 20여 개 지역에서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후보선택기준을 제시한 ‘후보자 채점표’ 60여만 매를 배포하였다.¹⁸⁾ 또한 후보자 초청토론회 및 정당정책에 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 검증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공선협에 가입한 경실련(유재현 사무총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대표 한완상), 한국유권자운동연합 등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이

17)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1996, 『제15대 총선보고서』, 28쪽

18) 채점표에는 유권자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혈연·지역감정의 호소여부, 공약의 실천가능성여부,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는지 등 10가지 선택기준이 제시되었다.

별도로 공명선거 활동을 벌였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한국유권자운동연합 등 몇몇 시민 단체는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일반 주민들로부터 신고·제보를 받기도 하였다. 선거 일 이틀 전인 4월 9일에는 “이런 사람은 찍지 맙시다”라고 호소하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¹⁹⁾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각 정당의 정책평가비교표를 작성하여 공명선거 활동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선거법상 제약과 공정성·중립성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공선협이 1996년 2월 5일 선거에 참여한 4개 정당에 후원금 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건²⁰⁾은 시민단체가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공선협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의존해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지책으로 정당에 후원금 형식으로 기부를 받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시민단체 공명선거활동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공명선거활동 중 일부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경실련 등의 일부 시민단체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의 이력 등을 공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공표행위는 사실상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19) 참여연대는 「15대총선 유권자 행동수칙」을 제작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정축재한 후보, 금품항응을 제공하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후보, 당적변경이 잦은 철세정치인, 학력을 위조한 후보, 혈연·학연·지연에 의존하는 후보 등 찍어서는 안 될 16가지 후보 유형을 제시하였다(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0일).

20) 공선협은 1996년 2월 5일 “공선협의 사업과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후원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자유민주연합에 후원금을 요청하였다. 공명선거운동이 필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각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후원금을 요청하였는데(한겨레신문, 1996년 2월 9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2월 12일 후원금 요청을 취소하였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관계로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대권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가열되었고, 탈법과 금권선거가 만연했으며 그만큼 선거법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하였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인 1995년 10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로 나누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700명,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6,105명, 행정기관 파견공무원 2,322명 총 10,127명으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투입하였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고·제보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당은 물론이고, 향우회·산악회 등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총 7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이 적발 건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595건보다 146건이 많은 수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 정도가 중한 23건(3.1%)은 고발하고, 97건(13.1%)은 수사의뢰하였으며, 나머지

는 경고·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표 3-10〉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
741	23	97	396	111	114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위반행위가 327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이 100건(13.5%), 연설회 등과 관련한 위반 74건(10.0%),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위반 56건(7.6%), 신문·방송 등 언론이용과 관련한 위반 33건(4.5%), 비방·흑색선전 32건(4.3%), 집회·모임 등 위반이 32건(4.3%)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전물이 일반유권자에게 배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체국에 불법선전물의 우송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11건의 불법유인물을 적발하여 우송을 중지시켰다. 또한 후보자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 5건을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정당·후보자연설회가 끝난 후 그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않은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검찰의 단속활동

대검찰청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96년 2월 1일 '선거사범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선거단속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저해 7대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등 선거수사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검찰이 발표한 7대 선거사범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등 불법·흑색선전 행위, 자원봉사자 및 사조직 탈법선거운동, 후보자 테러·연설행위 등 선거폭력행위,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 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구·시·군정 보고회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교란행위 등이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

거사범 합동단속반 내에 ‘공무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였다. 또한 노동단체 및 재야·학생운동권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PC통신에 ‘선거사범 신고코너’를 개설하였다. 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가동하며 음성적이고 조직적인 금품수수 및 선거 브로커,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허위·변칙 처리, 의정활동을 병자하거나 지역신문 등을 통한 탈법 홍보, 정략적인 지역감정 조장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 등 ‘고질적인 공명 선거 저해 5대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경찰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전국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3,216명의 요원을 투입하여 24시간 선거사범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3,658명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선거사범 단속계획’을 시기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행위, PC통신을 이용한 신종선거사범, 금권선거를 중점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112범죄신고센터’에 선거사범을 신고 접수토록 하여 시민들의 고발창구를 확대하였다. 경찰은 집중적인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및 신고접수를 통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494건에 794명(구속 74명, 불구속 72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다²¹⁾.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검찰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범으로 총 1,995명을 입건하였다. 검찰은 이 가운데 713명을 기소하고,²²⁾ 나머지 1,282명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구속자는 175명이었다. 이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27명보다 67%가 늘어난 것이었다.

21) 경찰청, 1997, 『경찰백서』 302쪽

22) 대검찰청, 2004년 10월 15일 보도자료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이 667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과 선거폭력은 각 287명(14.4%), 279명(14.0%)이었다. 이외에도 불법선전 90명(4.5%), 신문방송 부정이용 79명(4.0%), 선거비용 부정지출 98명(4.9%)이었다. 기타 부정선거운동은 285명(14.3%)이었다.

〈표 3-1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현황

(단위: 명)

입 건	기 소	불 기 소
1,995	713	1,282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검찰에 기소된 선거사범 중 국회의원 7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이들의 지역구에서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들 중 구로구를 이신행 후보와 송파구갑 홍준표 후보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하였으나 상대편 정당에서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재정신청 제도는 1994년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즉 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고소·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함)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할 경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구하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1996년 4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 3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4·11 부정선거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정시비가 있었던 23개 선거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야 3당은 조사 후 문제가 된 지역의 신한국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구속수사와 기소를 요구하였다.

또한 야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진상조사 공동백서'를 발행해 여당인 신한국당의 불법사례를 폭로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화남 후보(경북 의성군)가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구속·수감되기 직전인 1996년 4월 27일 자유민주연합을 탈

〈표 3-12〉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 관련 위법사항 내역

선거구명	당선자 (정당)	위반자 (신분)	위반내용	형벌내역
서울종로구	이명박 (신한국당)	○이명박 ○이광철(회계책임자)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당선인 : 벌금 400만 원 ○회계책임자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구로구을	이신행 (신한국당)	○이신행	○기부행위	○벌금 250만 원(당초 검찰이 불기소하였으 나 재정신청에 의해 기소)
서울송파구갑	홍준표 (신한국당)	○홍준표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벌금 500만 원(당초 검찰이 불기소하였으 나 재정신청에 의해 기소)
인천계양구· 강화군갑	이기문 (새정치국민회의)	○이기문 ○유철중(회계책임자)	○기부행위	○당선인 : 벌금 500만 원 ○회계책임자 : 벌금 400만 원
강원강릉시을	최옥철 (신한국당)	○최옥철 ○권혁기(선거사무장)	○기부행위	○당선인 : 벌금 600만 원 ○선거사무장 : 벌금 400만 원
충남예산군	조종석 (자유민주연합)	○박근호(선거사무장) ○조성록(회계책임자)	○기부행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북의성군	김화남 (무소속)	○김화남	○기부행위	○벌금 1,000만 원

당한 것을 두고 표적·편파수사라고 비난하였다. 야당은 “검찰이 여당후보의 명백한 금품살포행위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야당 당선인은 아무런 혐의도 없이 탄압성 수사를 벌이는 등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김화남 당선인의 사법처리가 당의 정치적 의도와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공조 움직임을 ‘총선패배 호도용’이라고 반박하였다.

3. 주요 위반사례

가. 불법연설회 개최

통합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1996년 2월 10일부터 시국강연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다른 정당을 비난하고, 통합민주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국강연회가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연설회라며 박계동 의원에게

강연회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계동 의원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3월 15일 그를 고발하였다.

박계동 의원은 서울 강서구갑선거구에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검찰은 1996년 9월 25일 박계동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은 1998년 6월 30일 2심에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박계동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6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 금품제공

강원도 강릉시을선거구에 출마한 통합민주당의 최옥철 후보는 1996년 4월 6일 합동연설회에서 특정학교의 동문으로 보이는 사람 150여 명을 동원하였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4월 19일 이들을 유사기관·사조직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로 총 4,26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결과 최옥철 후보는 당선되었다. 검찰은 1996년 5월 25일 최옥철 당선자를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선거사무장 권혁기는 구속기소하였다. 1997년 8월 26일 제2심 법원에서 최옥철 당선자에게 당선무효 형량인 600만 원의 벌금형을 권혁기 사무장에게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최옥철 당선자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최옥철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인천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국민회의 이기문 후보는 지구당 사무국장, 각동 협의회장 등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5,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결과 이기문 후보는 당선되었으나, 1999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경기 의정부시선거구에 출마한 신한국당 홍문중 후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벽시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16명에게 84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거결과 홍문중 후보는 당선되었고,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편 정당이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결과 홍문중 당선자는 8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울 송파구갑선거구의 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원봉사자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

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야3당 후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거결과 홍준표 후보는 당선되었고, 검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새정치국민회의가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홍준표 당선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제2심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홍준표 당선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홍준표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다. 허위사실 공표

대전 대덕구선거구에서 출마한 자유민주연합 이인구 후보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선거결과 이인구 후보는 당선되었고, 재판결과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인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 선거비용지출보고서 등 허위작성

부산 남구을선거구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허종복 후보의 회계책임자 송효석은 로고송 제작비 610만 원과 앰프 구입비 340만 원 등 총 950만 원의 선거비용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송효석 회계책임자는 1997년 5월 15일 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선거구에서 출마한 무당파국민연합 이성일 후보는 명함형 소형인쇄물 제작비를 220만 원 축소 보고하고, 지정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 시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법원은 1996년 11월 15일 이성일 후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는 1996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고, 열람 및 공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1996년 4월 4일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등재대상은 1976년 4월 12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선거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으로 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했다.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선거인수는 31,488,294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68.6%였다. 이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 31,048,566명보다 1.4%가 증가한 수치였다.

〈표 3-13〉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단위 : 명)

인구수	선거인수		
	계	남자	여자
45,928,048	31,488,294 (792,363)	15,490,279 (753,049)	15,998,015 (39,314)

※ () 안은 부재자신고인수로 본수에 포함됨.

시·도별 선거인수는 서울이 7,393,013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도 5,298,160명(16.8%), 부산 2,672,285명(8.5%) 등의 순이었다.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352,799명(1.1%)이었다.

한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기간은 1996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하여 확정된 부재자수는 전체 선거인의 2.5%인 792,363명이었다. 이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수(756,832명)보다 4.7%가 늘어난 것이었다. 부재자신고인 중 군인은 전체 부재자신고인수의 76.6%인 607,224명이었다.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투표 대상자는 745,025명(전체 부재자신고인수의 94.0%)이었고, 거소투표대상자는 47,338명이었다.

2. 투 표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소는 일반투표소 투표에 앞서 1996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설치·운영되었다. 부재자신고인은 이 기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와 기관·시설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하였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전지역과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등은 예외적으로 종전의 방법대로 거소에서 투표를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순회투표를 실시하였다.

부재자투표소는 총 49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421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6개소는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는 주로 위원회 사무실,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



▶ 순회투표소(인천 팔미도 투표소)

실에 설치되었으며, 기관·시설의 투표소는 병원, 교도소, 요양소에 설치되었다. 순회투표소는 5개 시·도의 10개 섬에 6개소를 설치하였다.

부재자투표 상황은 총 부재자신고인 792,363명 중 744,912명이 투표하여 94.0%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전체의 94.0%인 700,435명이 투표하였고, 6.0%인 44,477명이 거소에서 투표하였다.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투표율 96.8%보다 2.8% 포인트 낮아졌다.

〈표 3-14〉 제15대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 현황

(단위: 명)

부재자 신고인수	투 표 수			기권수
	합계	부재자투표소 투표	거소투표	
792,363	744,912 (94.0%)	700,435	44,477	47,451

※ ()안은 부재자 투표율임.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송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된 부재자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되었고,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 개표장으로 이송되었다.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1996년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6,394개 투표소에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전 7시에 투표를 시작하였으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개시 시각을 오전 6시로 변경하여 중전 선거 때보



▶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봉인·봉합하고 있다.

다 투표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투표관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전국적으로 178,865명(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 95,525명, 투표사무원 83,340명)이었고, 정당과 후보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16,276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결과 총선거인수 31,488,294명 중 20,122,799명이 투표하여 63.9%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시간을 1시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71.9%)보다 무려 8% 포인트 낮았다. 또한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표 3-1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기권수
31,488,294 (792,363)	20,122,799 (744,912)	63.9% (94.0%)	11,365,495 (47,451)

※ ()안은 부재자신고인수로 본수에 포함됨.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의 투표율이 낮은 반면 제주, 경북, 전남,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이 나타났다. 경북이 71.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제주 71.1%, 전남 69.8%, 강원 69.3%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60.1%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으며, 부산 60.5%, 대구 60.9%, 서울 61.0%, 대전 63% 등 대도시의 투표율은 모두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표 3-1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현황

(단위: %)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투표율	61.0	60.5	60.9	60.1	64.5	63.0	61.5	69.3	68.3	68.7	68.3	69.8	71.7	66.0	71.1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용지 교부 착오

부산 해운대구 구포동 제6투표소에서 착오로 투표용지 2매를 선거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기표 후에 투표지 2매를 투표함에 투입하려는 것을 통합민주당 투표참

관인이 발견하였다. 투표지를 회수하여 확인한 결과 투표지 2매 중 1매는 기표되고, 1매는 기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기표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 하였고,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는 회수하였다.

2)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부산 서구 동대신동 제5투표소에서는 제3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선거인이 제5투표소에서 투표하여 한때 소란이 일었다. 제3투표소의 명부등재번호 1192번 윤상호가 투표소를 착각하여 제5투표소로 투표하러 왔고, 투표사무원도 제5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선거인으로 오인하여 '선거인명부 1192번'에 날인 후 투표하게 하였다. 이 선거인은 투표를 한 후 귀가하였고, 나중에 그 번호에 등재된 선거인 여태복이 투표하러 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태복은 자신의 번호에 다른 사람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대리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제5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투표를 한 윤상호가 이중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3투표소에 연락하고, 이의를 제기한 여태복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투표가 끝난 후 이 문제로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다. 무소속 광정출 후보의 투표참관인들이 제3투표소 1192번 윤상호가 한 투표는 대리투표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투표함을 개표소에 운송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투표함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투표가 끝난 후 9시간이 지난 1996년 4월 12일 새벽 3시경에야 개표소로 운송할 수 있었다.

3) 특정 후보에게 투표권유

경남 거창군에서는 같은 마을에 사는 거소투표대상자 3명을 찾아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도록 권유하고, 이들로부터 부재자투표 회송용봉투를 전달받아 우체통에 대신 투입하였다가 발각되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이 한 부재자투표를 무효처리하였다.

3. 개표

1996년 4월 11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한 뒤 전국 302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대구 달서구갑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오후 6시 5분에 시작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34,183명(구시군선거관리



▶ 개표사무원들이 계수기로 투표지 매수를 확인·점검하고 있다.

위원회위원 2,670명, 개표사무원 31,513명)의 인력을 동원하였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10,764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선보인 계수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개표시간을 평균 3시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북 군산시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개표가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2일 오전 8시에 끝나자 당선인 299명이 결정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투표선거구가 없어 지역구후보자는 모두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자

개표결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8개 정당 중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4개 정당은 지역구와 전국구에서 모두 당선자를 냈으나 나머지 4개 정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였다. 무소속후보자는 16명이 당선되었다.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은 신한국당으로 총 299명의 후보자 중 139명이 당선되어 46.5%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총 276명의 후보자 중 79명(28.6%), 자유민주연합은 총 254명의 후보자 중 50명(19.7%), 통합민주당은 총 253명의 후보자 중 15명(5.9%)이 당선되었다.

〈표 3-17〉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인수 및 득표상황

(단위: 명)

정당명	당선자수			득표수	득표율(%)
	계	지역구	전국구		
합 계	299	253	46	19,653,073	100.0
신한국당	139	121	18	6,783,730	34.5
새정치국민회의	79	66	13	4,971,961	25.3
통합민주당	15	9	6	2,207,695	11.2
자유민주연합	50	41	9	3,178,474	16.2
대한민주당	0	0	0	3,114	0
무당파국민연합	0	0	0	177,050	0.9
21세기한독당	0	0	0	1,693	0
친민당	0	0	0	571	0
무소속	16	16	0	2,328,785	11.9

1) 신한국당

여당인 신한국당은 유효투표총수의 34.5%를 득표하여 지역구 121명, 전국구 18명으로 총 139명(전체 의석의 46.5%)이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에 참여한 8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었다. 그러나 선거 전에 목표로 내세웠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또다시 여소야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주자유당의 득표율(38.5%)과 당선자수(149명)와 비교하면 각각 4.0% 포인트 낮아졌고 의원수로는 10명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20% 이상 고르게 득표하였다. 특히 부산에서 55.8%의 득표율로 21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되었고, 경남과 경북에서는 46.5%와 34.9%의 득표율로 42개 선거구 중 28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냈다. 또한 야권 강세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각 36.5%, 33.2%, 38.2%의 득표율로 수도권 전체 의석수 96석 중 54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13개 선거구 중 2곳에서만 당선되어 당시 대구지역에서 거론되던 소위 ‘반(反) YS정서’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북에서 단 1명만이 당선되었다.

신한국당 후보자 가운데 김윤환 대표(경북 구미시을), 강삼재 사무총장(마산시 창원구), 서정화 원내총무(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손학규 대변인(경기 광명시을), 이세기 서울시지부장(서울 성동구갑) 등 주요 당직자 대부분이 당선되었다. 이외에 서울에서 이명박(종로구), 박성범(중구), 김덕룡(서초구을), 부산에서는 서석재(사하구), 최형우(연제구), 박관용(동래구갑) 등이 당선되었고, 대구에서는 강재섭(서구을), 인천에서는 이윤성(남동구갑), 이경재(계양구·강화군을) 등이 당선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이한동(경기 연천군·포천군), 김문수(부천시 소사구), 목요상(동두천시·양주군), 강원도에서는 한승수(춘천시갑) 충북에서는 신경식(청원군), 전북에서는 강현욱(군산시을), 경북에서는 이상득(포항시 남구·울릉군), 권정달(안동시을), 경남에서는 황낙주(창원시을), 김기춘(거제시), 제주에서는 현경대(제주시) 등이 당선되었다. 반면 중진의원 중 5선의 이자현, 4선의 황명수·김용태·유한열·이민섭, 3선의 김기배 후보 등은 낙선하였다.

전국구에서는 이회창 선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홍구, 이만섭, 김명윤, 권영자, 김수한 등 전국구 순위 18번까지 당선되었다. 배수진을 치고 전국구 21번을 받았던 박찬중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은 낙선하였다.

2)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유효투표총수의 25.3%를 득표하여 지역구 66명, 전국구 13명으로 총 79명이 당선되어 제1야당의 지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 전 개헌저지선인 국회의석 3분의 1(100석)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호남지역 37곳의 선거구 가운데 36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신한국당이 54명 당선된 데 비해 새정치국민회의 30명만이 당선되었다. 특히 영남권과 기타지역에서는 10% 미만의 낮은 득표율을 보이며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주요 당직자 가운데 유재건 부총재(서울 성북구갑), 김근태 부총재(서울 도봉구갑), 조순형 사무총장(서울 강북구을) 등이 당선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추미애(광진구을)·김원길(강북구갑)·신기남(강서구갑) 등이 당선되었고, 인천 조철구(서구), 광주 신기하(동구)·정동채(서구), 경기도 천정배(안산시을)·최희준(안양시 동안구갑) 등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종찬(서울 종로구)·정대철(서울 중구) 부총재를 비롯하여 조세형, 한광옥, 김덕규, 박실, 장석화, 김병오, 박지원 등 중진 의원 다수가 낙선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전국구에서는 정희경 선대위의장을 비롯하여 김한길·신낙균·권노갑·이동원 등 전국구 순번 13번까지 당선되었다. 따라서 14번을 배정받은 김대중 총재는 낙선하고 말았다.

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유효투표총수의 16.2%를 득표하여 지역구 41명, 전국구 9명으로 총 50명이 당선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지역적 기반을 둔 충청도는 물론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선전하여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의 약진을 이어가며 제2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충남·충북에서 40% 내외의 득표율로 전체 28곳의 선거구 중 24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대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자유민주연합이 35.8%라는 높은 득표율로 24.5%를 득표한 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로 앞서 13개 선거구 중 무려 8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0%대 수준의 낮은 득표율로 5명만이 당선되었다.

자유민주연합 주요 당직자 가운데 지역구에서 김종필 총재(충남 부여군), 박준규 최고고문(대구 중구), 김복동 수석부총재(대구 동구갑) 등이 당선되었다. 이외에 대구 안택수(북구을)·박철언(수성구갑), 대전 강창희(중구)·이양희(동구을), 경기 이재창(파주시), 강원 황학수(강릉시갑), 충북 구천서(청주시 상당구)·정우택(진천군·음성군), 충남 김용환(보령시)·변웅전(서산시·태안군) 등이 당선되었다. 전국구에서는 한영수 부총재를 비롯하여 이진개·이동복 후보 등 순위 9번까지 당선되었다.

4)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1.2%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9명, 전국구에서 6명으로 총

15명이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야당에서 제3야당으로 밀려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대도시권과 강원에서 10%를 약간 웃도는 득표율을 보였고, 그 밖에 지역의 득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수도권인 경우 선거기간 내내 전략적으로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 1명을 비롯하여 단 4명만이 당선되었다.

통합민주당 후보자 가운데 지역선거구에서는 이부영 최고위원(서울 강동구갑)이 유일하게 서울에서 당선되었고, 제정구 사무총장이 경기 시흥시에서 당선되었다. 이외 강원도에서 장을병 대표(삼척시), 경북에서 권오을(안동시갑), 경남에서 이규정(울산시 남구을) 등이 당선되었다. 전국구에서는 이미경, 김홍신 등 순위 6번까지 당선되었다. 통합민주당의 당선자 가운데 이규택·최옥철·황규선 당선인은 탈당한 후 신한국당으로 입당하였다.

5)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앞의 4개 정당 외에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무당파국민연합을 비롯하여 대한민주당, 21세기 한국당, 친민당이였다. 이들 정당은 무당파국민연합이 0.9%를 득표한 것을 제외하고 0.1% 미만의 낮은 득표율을 보이면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4개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된다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1996년 4월 13일부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무소속후보자는 394명이 출마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1.8%를 득표하며 16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후보자들의 득표율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0.3%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당선자수에서는 오히려 5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 특히 대구에서는 득표율이 29.7%로 신한국당 후보자들보다 높았다. 경북에서는 33.3%의 득표율을 보이며 5명이 당선되었고, 경남과 제주에서도 30% 내외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무소속후보자 중 서울에서 홍사덕(강남구을), 대구에서 서훈(동구을)·이해봉(달서구을), 경기에서 박종우(김포군), 충북에서 김영준(제천시·단양군), 경북에서 임진출(경주시을)·허화평(포항시 북구), 경남에서 김용갑(밀양시)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표 3-18〉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 명단

정당별	당선자수	당선자 성명 (가나다 순)
신한국당	139	<p>〈지역구〉 강경식, 강삼재, 강성재, 강재섭, 강현욱, 권익현, 권철현, 김석원, 김광원, 김기수, 김기재, 김기춘, 김길환, 김덕룡, 김도연, 김동욱,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영구, 김영일, 김영진, 김운환, 김윤환, 김인영, 김정수, 김종하, 김중호, 김중위, 김진재, 김찬우, 김총일, 김태호, 김학원, 김형오, 김호일, 나오연, 남평우, 노기태, 노승우, 류용태,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명환, 박범진, 박성범, 박세직, 박우병, 박종웅, 박주천, 박헌기, 박희태, 백남치, 변정일, 서상목,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서한샘, 손학규, 송훈석, 신경식, 신상우, 심정구, 안상수, 양정규, 오세응, 유홍수, 윤한도, 이강두, 이강희, 이경재, 이국현, 이명박, 이사철, 이상득, 이상배, 이상현, 이상희, 이성호, 이세기, 이신범, 이신행,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웅희, 이원복, 이윤성, 이응선, 이재명, 이재오,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임인배, 장영철, 전용원, 정영훈, 정의화, 정재문, 정형근, 조진형, 주진우, 차수명, 최병렬, 최연희, 최형우, 하순봉, 한승수, 한이현, 함종한, 허대범, 현경대, 홍문준, 홍인길, 홍준표, 황낙주, 황병태 (이상 121명)</p>
		<p>〈전국구〉 강용식, 권영자, 전석홍, 김 덕, 김 철, 김명윤, 김수한, 김영선, 박세환, 신영균, 오양순, 윤원중, 이만섭, 이흥구, 이회창, 정재철, 조용규, 황우여 (이상 18명)</p>
새정치 국민회의	79	<p>〈지역구〉 국창근, 김민석, 김경재, 김근태, 김명규, 김병태, 김봉호, 김상우, 김상현, 김성곤,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원길, 김인곤, 김진배, 김충조, 김태식, 김홍일, 남궁진, 박광태, 박상천, 박정훈, 박찬주, 배종무, 설 훈, 손세일, 신기남, 신기하, 안동선, 양성철, 유선호, 유재건, 윤철상, 이기문, 이길재, 이상수, 이석현, 이운수, 이해찬, 이 협, 임복진,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한용, 정호선, 조성준, 조순승, 조순형, 조찬형, 조철구, 조홍규, 채영석, 천정배, 최선영, 최재승, 최희준, 추미애, 한화갑 (이상 66명)</p>
		<p>〈전국구〉 권노갑, 길승흠, 김종배, 김한길, 박상규, 박정수, 방용석, 신낙균, 이동원, 이성재, 정희경, 천용택, 한영애 (이상 13명)</p>
자민련	50	<p>〈지역구〉 강창희, 구천서, 권수창, 김고성, 김범명, 김복동, 김선길, 김용환, 김종필, 김종학, 김철환, 김현욱, 김화남, 류종수, 박준규, 박구일, 박신원, 박종근, 박철언, 변웅전, 안택수, 어준선, 오용운, 이병희, 이규규, 이상만, 이양희, 이원범, 이의익, 이인구, 이재선, 이재창, 이정무, 정석모, 정우택, 정일영, 조영재, 조종석, 함석재, 허남훈, 황학수 (이상 41명)</p>
		<p>〈전국구〉 김광수, 김허남, 이건개, 이동복, 정상구, 정상천, 지대섭, 한영수, 한호선 (이상 9명)</p>
통합민주당	15	<p>〈지역구〉 권기술, 권오을, 이규정, 이규택, 이부영, 장을병, 제정구, 최육철, 황규선 (이상 9명)</p>
		<p>〈전국구〉 김홍신, 이미경, 이수인, 이종재, 조중연, 하경근 (이상 6명)</p>
무소속	16	<p>〈지역구〉 권정달, 김영준, 김용갑, 김일윤, 김재천, 박시균, 박종우, 백승홍, 서 훈, 원유철, 이해봉, 임진출, 정몽준, 허화평, 홍사덕, 황성균</p>
계	299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 당선자는 전주시 덕진구선거구에서 출마한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후보로 97,858표를 얻었다. 반면 경북 고령군·성주군의 신한국당 주진우 후보는 13,424표를 얻고도 당선되어 최소득표 당선자가 되었다. 한편 광주 북구갑의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후보는 유효투표총수의 92.7%를 획득하여 최고득표율로 당선되었고, 반면 경북 경산시·청도군의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후보는 24.2%의 최저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이 137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재선이 67명(22.4%), 3선 48명(16.1%), 4선 21명(7.0%), 5선 15명(5.0%), 6선 4명(1.3%), 7선 5명(1.7%), 8선 1명(0.3%), 9선 1명(0.3%)의 순이었다. 당선자들의 직업은 현역 의원(113명)과 정치인(119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변호사가 24명, 약사·의사가 10명, 교육자가 8명, 상업이 4명, 출판업이 3명, 무직이 2명, 광공업과 회사원이 각 1명이었고, 기타 직업은 1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당선자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당선자는 69명이었고, 이외 60대가 58명, 30대가 10명이었다. 그러나 20대 당선자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290명인 반면, 여성은 단 9명에 불과해 여전히 남녀 편차가 심하였다. 그러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함 운송 지연

전북 군산시을선거구에서는 투표함 회송 장애로 개표가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옥도면 개야도에 설치된 옥도면제1투표구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군산시을선거구 개표소인 학생종합회관으로 회송하던 중 4월 11일 오후 9시경 투표함 회송용 선박인 군산해양산업대학교 실습선의 스크류가 폐 어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군산시을선거관리위원회는 해경에 지원을 요청하여 해경경비정을 투입하였으나 어두운 데다가 파도가 높게 일어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지 못하고 다시 개야도로 옮겼다. 이 투표함은 다음날인 4월 12일 새벽에서야 군산시을선거구 개표소로 운송되었다. 이로 인해 군산시을선거구의 개표는 전국에서 가장 늦은 4월 12일 오전 8시에 끝났다.

2) 투표지 분류 오류

춘천시을선거구 신동면 제1투표구 개표과정에서 투표함 개함 후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던 중 신한국당 이민섭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70매가 통합민주당 유남선 후보의 표로 분류되었다. 이를 발견한 신한국당 개표참관인들이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표가 10여 분간 지연되었다. 춘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과정을 거쳐 이민섭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70매가 개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잘못 분류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잘못 분류된 투표지는 바르게 분류되었고, 개표도 재개되었다. 개표완료 후 이민섭 후보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개표결과 예측 오류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KBS, MBC, SBS 등 TV방송 3사는 동서리서치·월드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갤럽 등 5개 여론조사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거나 전화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4월 11일 18시 투표종료와 동시에 보도하였다. 이때 보도된 내용은 지역구에서 신한국당 155석, 새정치국민회의 59석, 자유민주연합 26석, 통합민주당 5석, 무소속 8석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표결과는 신한국당 121석, 새정치국민회의 66석, 자유민주연합 41석, 통합민주당 9석, 무소속이 16석으로 나타나 방송사의 당선자 예측결과는 표본오차($\pm 4.3\%$)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였다.

개표 전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당선자를 확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조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경기·강원·경북 등에서 예상 당선자와 실제 당선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압승이던 신한국당의 예상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경기 이천시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 이영문 후보가 2위인 무소속 이희규 후보에게 19.6%포인트 앞서 당선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개표 결과 두 후보가 아닌 통합민주당의 황규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방송사들의 심각한 예측오류에 대해 개표가 끝난 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KBS, MBC, SBS 등 TV방송사는 1996년 4월 13일 메인뉴스를 통해 공동사과문을 발표했다.

4. 선거소송

선거법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후보자들은 1992년 5월 12일까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가. 선거소송 제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총 9건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모두 5건이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동시에 주장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이 4건이었다. 이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31건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었다.

선거소송의 청구이유는 주로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당선자의 허위학력,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방치 등이었다.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를 이유로 선거소송을 제기한 후보자는 대부분 1,000표 이내의 표차로 낙선된 경우였다.

나. 선거소송 처리결과

대법원에 제기된 9건의 선거소송 중 6건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였고, 나머지 3건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선거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여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이 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취하된 6건의 소송제기 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소송 제기자와 당선자의 표차가 1,000표 이내였다. 법원에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를 검증한 결과 원래의 표차에 큰 변화가 없자 소송 제기자들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였다.

기각된 3건의 기각사유는 대법원에서 후보자별 투표지를 검증한 결과 당락에 영향이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표 3-19〉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 처리결과

선거구명	소송구분	소송제기자	소송제기 이유	처리결과
서울서대문구갑	당선무효	신한국당 이성현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1996년 11월 22일 기각
서울 동작구갑	선거무효	국민회의 박문수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	1996년 11월 22일 기각
서울 구로구갑	선거무효	신한국당 김기배	당선자의 허위학력 게재와 불법선거운동의 묵인·방치	1997년 2월 26일 취하
대구 수성구갑	선거 및 당선무효	무소속 이선동	컴퓨터 조작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표부정	기각(증거부족)
강원 춘천시을	당선무효	신한국당 이민섭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1996년 7월 11일 취하
강원 홍천군·횡성군	선거 및 당선무효	무소속 유재규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1996년 8월 29일 취하
충북 청원군	선거 및 당선무효	자민련 오효진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1996년 10월 8일 취하
경북 문경시·예천군	당선무효	무소속 이승무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1996년 8월 19일 취하
경남 진주시갑	선거 및 당선무효	신한국당 정필근	개표의 부정확 및 계수착오	1997년 2월 21일 취하

5. 선거결과 특징

가. 국회의원선거사상 최저 투표율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63.9%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71.9%보다 무려 8%포인트가 낮았다. 이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낮은 것이었다.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투표시간을 1시간 더 늘렸는데도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표 3-20〉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

선거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투표율	95.5	91.9	91.1	90.7	84.3	72.1	76.1	73.2	73.0	77.1	78.4	84.6	75.8	71.9	63.9

이처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는 첫째, 전체 유권자의 56%에 달하는 20~30대의 과반수 정도가 기권하는 등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²³⁾을 보면 20대가 44.0%, 30대가 62.8%를 기록해 평균투표율보다 각각 19.9%, 1.1% 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20대가 56.8%, 30대가 72.1%였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12.8%, 9.3% 포인트 낮아졌다.

둘째, 전국적인 선거쟁점이 없는데다 여야 모두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한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지 못해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투표율 하락은 선거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합동연설회장의 청중수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후보자들의 거리유세(공개장소 연설·대담)도 유권자들의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기권한 이유를 조사²⁴⁾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 ‘개인적 용무가 바빠서’ 기권한 사람이 2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9.0%), ‘회사 등 업무 때문에’ (18.2%), ‘찍을만한 후보가 없어서’ (17.5%)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9%),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기권한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는 ‘개인적 용무’ 때문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 무관심’이 기권한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1992년 대통령선거 비자금 문제,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 공천헌금 문제 등은 소위 ‘찍을 사람이 없다’는 유권자들의 불신을 확산시켰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러한 쟁점들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 및 실망감이 더욱 커졌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62쪽.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기권원인 조사 분석』, 14쪽.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재연

선거결과 이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야 4당은 각 당의 연고지역에서 상대 정당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화되어 나타났다. 이때에는 '3당 합당'으로 형성된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구도는 특정정당의 연고지역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서 '3당 분할구도'가 그대로 재연되었다. 즉 신한국당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지역에서, 자유민주연합은 충청지역에서 상대 정당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3당의 연고지역에서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신한국당은 부산·경남의 총 44석 중 38석(86.4%)을 얻었으나 호남지역에서 1석, 충청지역에서 3석밖에 얻지 못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지역의 총 37석 중 36석(97.2%)을 차지하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의석을 거의 석권했으나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서는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자유민주연합은 충청지역에서 총 28석 중 24석(85.7%)을 얻었으나 부산·경남과 호남지역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3당은 연고지역에서 득표율이 더욱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신한국당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48.6%보다 3.4% 포인트 높은 52.0%의 지지도를 얻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호남지역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62.0%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지역주의가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민주자유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무소속 후보자가 대거 당선되는 등 민주자유당에서 탈피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급속히 상승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신한국당이 얻은 24.5%보다 11.3% 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의석수도 신한국당에 비해 7석이 더 많았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 통합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투표율과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선거였음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통합민주당의 전체 득표율은 자유민주연합에 비해 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석수

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연합의 총 의석인 50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석에 그쳤다. 자유민주연합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충청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득표하여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역적 기반이 없는 통합민주당은 득표의 집중력이 떨어져 자유민주연합에 비해 당선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 표 3-21〉 제14대 국선과 제15대 국선 지역별 득표율 비교

(단위: %)

선거별	정당별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북·충남
제14대	민자당	48.6	48.2	24.4	40.1
	민주당	13.8	8.7	62.0	22.6
제15대	신한국당	52.0	30.5	17.6	27.8
	국민회의	5.4	1.5	71.6	8.4
	자민련	5.2	27.5	0.7	47.0

각종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 등의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항상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기존 정치권이나 기성 정치인들이 선거 때에 지역주의를 청산하기보다는 지역구도를 이용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최우선 선거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 지역대결구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었다.

다. 정치신인 대거 당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정치신인이 대거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선거결과 전국구를 포함하여 전체 당선자 299명의 45.8%인 137명이 초선이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39%인 117명이 초선이었다.

정당별로 정치신인의 면면을 보면 신한국당이 박성범 이신범 김기춘 맹형규 이사철 홍문종 김학원 권철현 이상현 등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국민회의가 추미애 정세균 유재건

김민석 김근태 신기남 정동영 등 40명이었다. 이외 자유민주연합이 안택수 정우택 이양희 변웅전 등 26명, 통합민주당이 권오을 장을병 등 7명이었고, 무소속당선자 중 초선은 임진출 박종우 등 8명이었다. 정당별 당선자 중 초선 비율은 자유민주연합이 52.0%, 새정치국민회의가 50.6%로 절반이 넘었고,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40.3%와 46.7%가 초선이었다. 무소속당선자도 50%로 절반이 초선이었다.

하지만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과거 선거에 비해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볼 수 없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정치신인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인구수 변동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운 지역선거구가 증가하여 정치인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서울·경기의 지역구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82개 선거구였으나,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96개로 14개 선거구가 증가했다. 또한 정당체제가 3당 체제에서 4당 체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 신인들을 많이 공천했기 때문이었다.

유권자들의 정치신인에 대한 지지현상도 여야 간에 일관되어 나타나지도 않았다. 신한국당은 현직 국회의원의 25.5%를, 새정치국민회의는 36.1%를 정치신인으로 공천하였는데, 이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여당인 민주자유당 45.4%, 야당인 민주당 31.8%와 비교할 때 야당은 비슷했으나 여당은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였다. 하지만 당선율을 보면 신한국당은 91.6%, 새정치국민회의는 29.4%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라. 서울에서 여당이 다수의석 차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서울의 47개 선거구 중 57.4%인 27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 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이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은 주로 야당의원들의 당선율이 높았기 때문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한 것은 특별하게 받아들여졌다.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등장하여 기존 정치인들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후, 중선거구제(1선거구에서 2인 선출)로 치러졌던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의 28석 가운데 14석을 여당(민주정의당)이 차지한 것이 종전선거까지 최고의 기록이었다. 제12대·제13대·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여당이 각각 28석 중 13석(46.4%), 42석 중 10석(23.8%), 44

석 중 16석(36.4%)을 차지하여 한 번도 야당보다 많이 당선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여당인 신한국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비교하면 득표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신한국당은 36.5%, 새정치국민회의는 35.2%로 1.3%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여당(민주자유당)이 얻은 득표율은 34.8%였으며, 야당(민주당)이 얻은 득표율 37.2%로 2.7% 포인트 차이가 났었다. 이와 같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간의 득표율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수가 크게 차이가 난 것은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지역의 선거구 중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간에 득표율 차이가 5% 이하의 근소한 표차를 보인 선거구는 21곳이 있었는데 그 중 14개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야권의 분열도 신한국당이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으로 분열되어 경쟁을 벌인 것이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호남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분열한 것이 비 호남표를 분열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1996. 5. 30~2000. 5. 29) 중 전국구 15명, 지역구 21명으로 총 36명의 국회의원이 궐원되었다. 궐원된 전국구의석은 후임자가 그 의석을 승계받았고, 궐원된 21곳의 지역선거구에서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전국구국회의원은 총 15명이 궐원되었다. 궐원 사유는 사망 1명, 사직 4명, 퇴직 10명이었 다. 사직은 주로 지역구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나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원직을 그만둔 경우였다. 퇴직은 1997년에 발생한 한보특혜 대출비리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거나, 신당에 가입하기 위해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국구국회의원이 궐원되면 그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했던 정당의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의석을 승계받았다.

〈표 3-22〉 제15대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상황

궐원된 자	궐원 사유	승계자	승계일
신 한 국 당 이만섭	1997년 10월 28일 퇴직	김찬진	1997. 10. 29
한 나 라 당 이회창	1997년 12월 19일 사직	이찬진	1997. 12. 19
한 나 라 당 정재철	1997년 12월 26일 퇴직	김정숙	1998. 1. 9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1997년 12월 26일 퇴직	송현섭	1998. 1. 9

결원된 자	결원 사유	승계자	승계일
자유민주연합 한호선	1998년 4월 6일 사직	강중희	1998. 4. 10
한 나 라 당 이흥구	1998년 4월 14일 퇴직	조익현	1998. 4. 16
한 나 라 당 이찬진	1998년 5월 16일 사직	안재홍	1998. 5. 18
통 합 민 주 당 조중연	1998년 11월 17일 사망	이형배	1998. 11. 23
새정치국민회의 김한길	1999년 3월 3일 퇴직	이훈평	1999. 3. 5
자유민주연합 정상천	1999년 4월 2일 사직	송업교	1999. 4. 7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1999년 5월 25일 퇴직	김태랑	1999. 5. 27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2000년 2월 7일 퇴직	주양자	2000. 2. 8
자유민주연합 송업교	2000년 2월 15일 퇴직	박상복	2000. 2. 21
한 나 라 당 김 철	2000년 2월 26일 퇴직	황승민	2000. 3. 4
한 나 라 당 윤원중	2000년 3월 9일 퇴직	박창달	2000. 3. 14

※ '한나라당' 은 1997년 11월 24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임.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의 결원은 총 21명이었다. 결원사유는 사망 6명, 사직 6명,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6명, 한보특혜 대출비리 사건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3명이었다. 지역구국회의원이 결원된 2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가장 많은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전에는 제5대 국회의원의 임기(1960. 7. 29~ 1961. 5. 16) 중에 총 1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가장 많았었다. 그러나 제15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이보다 6개가 더 많은 2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표 3-23〉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수

구분	제헌 국선	제2대 국선	제3대 국선	제4대 국선	제5대 국선	제6대 국선	제7대 국선	제8대 국선	제9대 국선	제10대 국선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제14대 국선	제15대 국선
합 계	9	8	5	8	15	6	7	1	1	-	-	-	5	11	21
재 선거	1	-	-	8	4	1	3	-	-	-	-	-	2	-	6
보궐선거	8	8	5	-	11	5	4	1	1	-	-	-	3	11	15

제15대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1997년 3월 5일부터 1999년 6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치러졌다. 이 중 1997년 3월 5일부터 1997년 12월 18일까지 실시된 4회의 재·보궐선거는 김영삼 정부 기간에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6월 17일까지 실시된 나머지 4회의 재·보궐선거는 김대중 정부 기간에 치러졌다.

〈표 3-24〉 제15대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상황

선거일	선거실시 선거구	선거구분	선거 실시사유
1997. 3. 5	인천 서구	보궐선거	1996년 12월 30일 조철구 의원(새정치국민회의) 사망
	경기 수원시 장안구	보궐선거	1997년 1월 13일 이병희 의원(자유민주연합) 사망
1997. 7. 24	충남 예산군	재 선거	1997년 4월 11일 조중석 의원(자유민주연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경북 포항시 북구	보궐선거	1997년 4월 17일 허화평 의원(무소속) 피선거권 상실
1997. 9. 4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보궐선거	1997년 7월 18일 권수창 의원(자유민주연합) 사망
1997. 12. 18	광주 동구	보궐선거	1997년 8월 6일 신기하 의원(새정치국민회의) 사망
1998. 4. 2	경북 의성군	재 선거	1997년 12월 26일 김화남 의원(자유민주연합) 당선무효
	부산 서구	보궐선거	1997년 12월 26일 홍인길 의원(한나라당) 피선거권 상실
	경북 문경·예천	보궐선거	1997년 12월 26일 황병태 의원(한나라당) 피선거권 상실
	경북 달성군	보궐선거	1998년 2월 17일 김석원 의원(한나라당) 사직
1998. 7. 21	강릉 강릉시을	재 선거	1998년 3월 24일 최욱철 의원(한나라당) 당선무효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	1998년 2월 21일 이명박 의원(한나라당) 사직
	경기 수원시 팔달구	보궐선거	1998년 3월 13일 남평우 의원(한나라당) 사망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보궐선거	1998년 3월 6일 김기재 의원(한나라당) 사직
	경기 광명시을	보궐선거	1998년 3월 6일 손학규 의원(한나라당) 사직
	서울 서초구갑	보궐선거	1998년 4월 29일 최병렬 의원(한나라당) 사직
	대구 북구갑	보궐선거	1998년 5월 2일 이의익 의원(자유민주연합) 사직
1999. 3. 30	서울 구로구을	재 선거	1998년 12월 12일 이신행 의원(한나라당) 당선무효
	경기 시흥시	보궐선거	1998년 2월 9일 제정구 의원(한나라당) 사망
1999. 6. 3	서울 송파구갑	재 선거	1999년 3월 9일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인천 계양구·강화군갑	재 선거	1999년 3월 12일 이기문 의원(새정치국민회의) 당선무효

※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 24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임.

가. 1997. 3. 5 국회의원보궐선거

1997년 3월 5일 인천 서구선거구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선거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3·5 보궐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인천 서구선거구는 이 지역의 새정치국민회의 조철구 의원이 1996년 12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선거구는 이 지역의 자유민주연합 이병희 의원이 1997년 1월 13일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였다.

3·5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신한국당은 인천 서구선거구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절에서 “총선거”라고 한다)에 낙선한 조영장 전 의원을,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는 이호정 전 의원을 공천하였다.

총선거 이후 여당의 국회의원 영입과 부정선거 대책수립 과정에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가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워 신한국당에 맞섰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선거구에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조한천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는 자유민주연합이 이태섭 전 의원을 단일후보로 각각 공천하였다. 통합민주당은 수원시 장안구에 유용근 전 의원을 공천하였다. 무소속으로는 인천 서구에 백석득,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이대의·이학선이 출마하였다.

3·5 보궐선거는 한보철강의 부도와 관련한 금융부정 및 특혜비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야당 후보들은 이 문제에 김영삼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며 여당을 공격하였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3·5 보궐선거를 ‘한보사태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한보사태 관련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신한국당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의 망명과 이한영 피격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안보사건을 내세워 안보·치안공세로 대응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김대중·김종필 총재는 물론 양당 지도부가 정당연설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활동을 벌였다. 한편 민주당은 한보사태와 경제침체 등 여권의 실정을 공격하며 이기택 총재 등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 깨끗한 정당이미지를 강조하며 유권자들과 개별접촉방식으로 득표활동을 하는 등 지원활동을 벌였다. 3·5 보궐선거는 중앙당의 지원과 고위당직자의 연설회 참석 등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전이 진행되었다.

3·5 보궐선거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속에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과 무관심이 확대되면서 투표율은 2개 선거구 모두 30%대로 매우 낮았다. 개표결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모두 당선되어 두 야당의 공조체제가 성공을 거두었다. 인천 서구선거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조한천 후보가 당선되었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연합 이태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단일후보가 모두 당선된 직후 성명을 통해 “경제파탄과 한보사태 등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며 야권공조의 승리”라고 보궐선거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나. 1997. 7. 24 국회의원재·보궐선거

1997년 7월 24일 충남 예산군선거구와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구 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7·24 재·보궐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충남 예산군선거구는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1997년 4월 11일 대법원에서 선거

〈표3-25〉 3·5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인천 서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신한국당 조영장	새정치국민회의 조한천	무소속 백석두	계		
199,035	74,141 (37.3%)	24,070	42,503	5,517	72,090	2,051	124,89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경기 수원시 장안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신한국당 이호정	자유민주연합 이태섭	통합민주당 유용근	무소속 이대의	무소속 이학선	계		
169,346	55,392 (32.7%)	16,018	28,780	7,179	1,280	1,119	54,376	1,016	113,954

범위반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조종석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구는 무소속 허화평 의원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1997년 4월 17일 재판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충남 예산군선거구에는 신한국당과 자유민주연합 공천후보 2명이 출마하여 경쟁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오장섭을 공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체제 속에 선거범죄 연좌제로 당선무효가 된 조종석을 단일후보로 연합공천하였다.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구에는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가 출마하였고, 민주당에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이기택 총재가 무연고지인 포항에 직접 출마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대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박태준 후보를 지원하였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영남지역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박태준 후보를 영입하려는 양당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북구는 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무소속 박태준 후보의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신한국당은 두 지역 중 한 선거구에서라도 승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회창 총재의 고향인 예산군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 속에 예산군선거구의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도 공조의 일환으로 무소속 박태준 후보를 적극 지원하였다.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당의 활로와 이기택 총재의 재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함께 박태준 후보의 지원에 나서면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었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9건의 고발, 4건의 수사의뢰, 5건의 경고조치를 할 만큼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졌다.

예산군선거구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 정당연설회에 함께 참석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1997년 7월 23일 충남 예산)

총재간의 대리전 성격을 보였다. 이회창 대표는 원적지가 예산군임을 부각시키며 신한국당의 충청권 진입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고, 반면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는 충청권 수성에 전력을 쏟았다.

관심이 높았던 만큼 7·24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높았다. 예산군선거구는 68.5%, 포항시 북구선거구는 63.1%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충남 예산군선거구에서는 오장섭 후보가 당선되었고,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는 두 야당의 지원을 받은 무소속 박태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는 공조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자유민주연합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충청권에서 패배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편 포항 북구에서 패배한 이기택 민주당 총재는 책임을 지고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표 3-26〉 7·24 재·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충남 예산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신한국당 오장섭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계		
77,326	52,936 (68.5%)	26,608	23,312	49,920	3,016	24,3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신한국당 이병석	민주당 이기택	무소속 박태준		
166,075	104,814 (63.1%)	17,801	35,137	47,884	3,992	61,261

다. 1997. 9. 4 국회의원보궐선거

경기 안양시 만안구선거구의 자유민주연합 권수창 의원이 199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4일 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9·4 보궐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게 되

었다. 야당은 선거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공방이 불리하게 전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신한국당은 총선거에서 350여 표차로 낙선한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공천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공조하여 김일주 후보를 단일후보로 공천하였다. 무소속으로는 김영호 후보가 출마하였다.

9·4 보궐선거는 12월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실시되는 선거인 데다가 수도권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예비선거’ 성격을 띠었고, 이에 따라 여야는 총력전을 펼쳤다. 야당은 한보사태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국정개입,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쟁점으로 삼아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연계시키려고 하였다.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종필·김대중 총재가 양당 고위당직자들과 함께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이른바 ‘DJP공조’를 과시하며, 야권단일후보가 당선되어야 야권이 대통령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고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보궐선거의 의미를 지역선거로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9·4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3.1%였다. 선거 결과 자유민주연합 김일주 후보가 신한국당의 박종근 후보를 약 27% 포인트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야당은 연합공천을 통한 선거 승리로 대통령선거의 후보단일화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패배한 신한국당은 책임소재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갈등을 빚었다.

〈표 3-27〉 9·4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경기 안양시 만안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신한국당 박종근	자유민주연합 김일주	무소속 김영호	계		
180,322	59,763 (33.1%)	18,067	33,550	7,074	58,691	1,072	120,55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라. 1997. 12. 18 국회의원보궐선거

광주 동구선거구의 새정치국민회의 신기하 의원이 1997년 8월 6일 'KAL기 괄 추락사고' 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 보궐선거에는 2명이 출마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이전 민주정의당 소속이었던 이영일 전 의원을 공천하였다. 한나라당(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1997년 11월 24일 만든 정당임)은 김용옥 광주 동구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1997년 12월 11일 한나라당 김용옥 후보가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선거풍토로 투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따라서 새정치국민회의 이영일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김용옥 후보의 사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광주 동구의 보궐선거가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감정을 유발하려는 한나라당의 전략적 술수라고 비난하였다.

마. 1998. 4. 2 국회의원재·보궐선거

1998년 4월 2일 경북 의성군, 문경·예천, 달성군, 부산 서구 등 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4·2 재·보궐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4·2 재·보궐선거는 실시되는 지역이 모두 영남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경북 의성군선거구는 자유민주연합 김화남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어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부산 서구와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는 각각 한나라당 홍인길 의원과 황병태 의원이 한보특혜대출비리 사건 연루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북 달성군선거구는 한나라당 김석원 의원이 재계복귀를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4·2 재·보궐선거는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처음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였다. 따라서 여야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즉 이전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새정치국민회의가 여당이었고, 한나라당은 야당이였다.

공동정부를 구성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합공천을 통해 부산 서구와 대구 달성군에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오규와 엄삼탁을, 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의성군에는 자유민

주연합 신국환과 김상윤을 공천하였다. 한나라당은 정문화 전 부산시장을 부산 서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박근혜를 대구 달성군에, 신영국 전 국회의원을 문경시·예천군에, 정창화를 의성군에 공천하였다. 국민신당(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1997년 11월 11일 창당된 정당임)은 부산 서구와 의성군 등 두 선거구에 이종혁과 신진욱을 공천하였다. 무소속으로는 부산 서구와 경북 문경시·예천시선거구에서만 총 8명이 출마하였다. 특히 부산 서구는 무소속 후보가 무려 7명이나 등록하여 10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후보자들은 지역발전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경제과탄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을 공격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영남 푸대접론’과 ‘영남인 정치보복’ 등 지역적 정서를 자극하며 맞섰다. 특히 대구 달성군선거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후보를 내세워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투표결과 대구 달성군 59.4%, 부산 서구 45.7%, 경북 문경시·예천군 66.3%, 경북 의성군 73.9%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4개 선거구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부산 서구와 대구 달성군선거구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정문화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위와 1만 표 이상의 큰 표차로 손쉽게 당선되었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모든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선거결과를 두고 김대중 정부의 실정과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4개 선거구에서 양당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이 약 3개월 전인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얻은 득표율보다 더 높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였다.

〈표 3-28〉 4·2 재·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대구 달성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박근혜	새정치국민회의 엄삼탁	계		
94,605	56,223 (59.4%)	34,271	20,563	54,834	1,389	38,38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부산 서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정문화	새정치국민회의 정오규	국민신당 이종혁	무소속 강진수	무소속 곽정출	무소속 김창국	
123,740	56,496 (45.7%)	21,235	7,732	4,570	835	11,400	330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무소속 윤형철	무소속 이송학	무소속 최경석	무소속 최기복			계
		874	3,996	3,981	748	55,701	795	67,244

● 경북 문경시·예천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신영국	자유민주연합 신국환	무소속 이상원	계		
115,655	76,682 (66.3%)	34,932	33,640	5,854	74,426	2,256	38,973

● 경북 의성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정창화	자유민주연합 김상윤	국민신당 신진욱	계		
63,481	46,896 (73.9%)	18,958	17,015	9,610	45,583	1,313	16,585

바. 1998. 7. 21 국회의원재·보궐선거

1998년 7월 21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7·21 재·보궐선거”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대구 북구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광명시를, 강원도 강릉시를 선거구로 총 7곳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같

이 여러 곳에서 7·21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직하였기 때문이었다.

서울 종로구선거구는 한나라당 이명박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 서초구갑선거구는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서울시장선거에,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는 한나라당 김기재 의원이 부산시장선거에, 대구 북구갑선거구는 자유민주연합 이의익 의원이 대구시장선거에, 경기도 광명시을선거구는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이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직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구는 한나라당 남평우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강릉시을선거구는 한나라당 최옥철 의원이 총선거 때에 선거사무장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 4,26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1,700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1998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궐원된 7명의 국회의원 중 1명(자유민주연합 이의익)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7·21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3개월 전에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 이어 연합공천에 합의하고, 강릉시을선거구를 제외한 6개 선거구를 3곳씩 나누어 단일후보를 공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종로구에 노무현 부총재, 수원시 팔달구에 박왕식 전의원, 광명시을에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공천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서초구갑에 박준병 사무총장, 해운대구·기장군을에 김동주 전 의원, 대구 북구갑에 채병하를 공천하였다.

한나라당은 종로구에 정인봉 변호사, 서초구에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사회자로 잘 알려진 박원홍, 해운대구·기장군을에 안경률, 대구 북구갑에 박승국, 수원시 팔달구에 남경필, 광명시을에 전재희 전 광명시장, 강릉시을에 조순 총재를 공천하였다. 국민신당은 서초구갑에 박찬중 상임고문, 수원시 팔달구에 김정태, 강릉시을에 유현수 등 3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무소속은 7개 선거구에 10명이 출마하였다.

7·21 재·보궐선거는 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면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노무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조순 한나라당 총재, 박준병 자유민주연합 사무총장, 박찬중 국민신당 상임고문 등 당의 핵심인물 이면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특히 수도권권의 4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서 여권은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빼앗긴 수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였다.

여야는 선거운동기간 중 김대중 정부의 안보정책, 민생치안,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개입, 관권·금권선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후보자·정당 간 경쟁이 과열·혼탁양상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초구갑에서 13건, 해운대구·기장군에서 16건, 광명시을에서 17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과열경쟁 속에 선거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해운대구·기장군과 강릉시을, 광명시을선거구에서는 50%대의 투표율을 보였고, 그 외의 선거구에서는 40%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선거구의 투표율은 26.2%로 가장 낮았다. 개표결과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서초갑, 대구 북구갑, 수원 팔달구, 강릉시을 등 4곳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종로구와 광명시을 2곳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에서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를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7·21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7개 선거구 중 6곳이 당초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유했던 지역이고, 여기에서 여당 후보가 3명 당선되었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표 3-29〉 7·21 재·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서울 종로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정인봉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무소속 한석봉	계		
144,375	48,693 (33.7%)	20,993	26,251	974	48,218	475	95,68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서울 서초구갑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박원홍	자유민주연합 박준병	국민신당 박찬중	무소속 배종달	무소속 이종률	계		
141,705	53,223 (37.6%)	23,446	19,093	4,600	377	5,281	52,797	426	88,482

● 부산 해운대구 · 기장군을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안경률	자유민주연합 김동주	무소속 오규석	계		
79,932	46,580 (58.3%)	15,192	20,568	10,325	46,085	495	33,352

● 대구 북구갑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박승국	자유민주연합 채병하	무소속 안경욱	무소속 조원진	계		
124,200	49,411 (39.8%)	23,046	14,308	9,114	2,453	48,921	490	74,789

● 경기 수원시 팔달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남경필	새정치국민회의 박왕식	국민신당 김정태	무소속 손민	무소속 정관희	계		
186,116	48,674 (26.2%)	21,356	20,695	3,654	1,964	563	48,232	442	137,442

● 경기 광명시을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전재희	새정치국민회의 조세형	계		
115,923	58,892 (50.8%)	28,558	29,901	58,459	433	57,031

● 강원 강릉시을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조순	국민신당 유현수	무소속 최각규	무소속 최경운	계		
85,160	46,538 (54.6%)	28,181	3,779	12,989	1,153	46,102	436	38,622

사. 1999. 3. 30 국회의원재 · 보궐선거

1999년 3월 30일 서울 구로구을과 경기도 시흥시선거구 등 2곳에서 국회의원 재 · 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3·30 재 · 보궐선거”라고 한다)가 치러졌다. 구로구을선거구는 한나라당의 이신행 의원이 총선거 때 주민 27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혐의로 1998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경기도 시흥시선거구는 한나라당 제정구 의원이 1998년 2월 9일 사망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합공천을 통하여 구로구을에 새정치국민회의 한광옥 전 의원, 시흥시에 자유민주연합 김의재를 공천하였다. 한나라당은 구로구을선거구에 당선무효된 이신행 의원의 부인 조은희를 공천하였고, 시흥시선거구에는 장경우 전 의원을 공천하였다. 이외에도 청년진보당 최혁과 무소속 조평렬이 구로구을선거구에서 출마하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과거 한나라당의 경제파탄 책임론을 거론하는 한편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IMF체제를 극복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나라당은 3·30 재 · 보궐선거를 김대중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로 규정하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를 제기하며 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3·30 재·보궐선거에도 각 정당이 중앙당 인력을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대거 내려보내 여야 간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동별로 책임구역을 맡아 득표전을 펼치면서 어느 재·보궐선거보다도 과열·혼탁 양상을 보였다.

3·30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구로구율이 40.8%, 시흥시가 32.2%였다. 개표결과 구로을 선거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한광옥 후보가, 시흥시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연합 김의재 후보가 당선되었다. 두 선거구는 당초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3·30 재·보궐선거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공동정권의 완승이라고 평가되었다.

3·30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과열·혼탁선거의 후유증이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구로구을선거구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들을 각종 '특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상의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6개월을 딱 채운 1999년 9월 30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3·30 재·보궐선거가 총체적으로 불법 선거였다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새정치국민회의가 두 선거구에서 최소한 50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한겨레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취하하였다.

〈표 3-30〉 3·30 재·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서울 구로구을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조은희	새정치국민회의 한광옥	청년진보당 최혁	무소속 조평렬	계		
128,734	52,540 (40.8%)	20,495	27,826	2,163	1,495	51,979	561	76,19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경기 시흥시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장경우	자유민주연합 김의재	계		
167,045	53,868 (32.2%)	25,217	27,851	53,068	800	113,177

아. 1999. 6. 3 국회의원재선거

1999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갑선거구와 인천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 등 2곳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이하 이 절에서 “6·3 재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송파구갑선거구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는 새정치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이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으로 1999년 3월 9일과 3월 12일 대법원에서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6·3 재선거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실시되어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또한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경색된 정국 하에서 실시되어 선거전이 치열하였다.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합공천을 통해 송파갑선거구에는 자유민주연합 김희완을,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송영길을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송파구갑에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총재의 사위인 고승덕 변호사를 공천 후보로 결정하였으나 그가 출마를 포기하자 이회창 총재를, 계양구·강화군갑에는 안상수를 공천하였다.

6·3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깨끗한 선거’, ‘중양당 개입 자제’ 등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전의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양당의 총력지원이 이어지면서 과열경쟁이 벌어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검찰청장 부인 등에 대한 이른바 ‘옷 로비 사건’이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내세워 여당을 집중 공격하였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의 지속과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였지만, 옷 로비 사건에 대한 계속된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여론악화로 고전하였다. 선거결과 한나라당 후보자가 2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되었다.

〈표 3-31〉 6·3 재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서울 송파구갑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이회창	자유민주연합 김희완	무소속 임동갑	계		
151,243	70,190 (46.4%)	42,901	25,790	1,098	69,789	401	81,0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인천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한나라당 안상수	새정치국민회의 송영길	무소속 김요섭	계		
201,320	70,902 (35.2%)	38,557	29,333	2,348	70,238	664	130,418

4장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 12. 18 실시)

選舉史

개요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선거이면서 지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세 번째 치러진 선거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명이었으나 한나라당(신한국당과 민주당의 신설합당)의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자대결구도를 보였다.

선거전에서 이회창 후보는 조순 후보와 연대를 계기로 서민층의 안정과 신뢰를 부각시키기 위해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를 내세웠으며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 이후 '3김 청산'을 거론하였다.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김대중 후보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경륜을 강조하기 위해 '준비된 대통령'과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는 3김 청산을 통한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특히 1992년 대선자금, 한보사태에 뒤이은 김현철 비리사건,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등은 대통령선거를 가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거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장·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경제파탄 책임이 집중 거론되었고,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건강문제와 비자금 조성의혹이,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불복과 청와대 지원설이 각각 제기되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선거 결과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40.3%를 얻어 38.7%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1.6%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역대 선거사상 두 번째로 근소한 표차의 당선이었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특정지역의 권력독점, 정경유착을 낳은 '구 정치질서'가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동'(강원권 영남권)에서 김대중 후보는 '서'(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하여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 1년 8개월여 만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정국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신한국당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에 대해 무차별 영입교섭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제15대 국회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재편되었다. 이에 맞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동으로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는 제15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2개월여 동안 개원이 지연되었다.

1996년 12월말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로 정국은 다시 한번 급속하게 경색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노동관계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고, 노동계의 총파업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입장에서 선회하여 노동법 재심의를 국회에 요구하게 되었고 여야는 협상을 벌여 이를 재개정하게 되었다.

노동법 재개정 합의로 수습되는 듯했던 정국의 혼란상황은 뒤이어 터진 한보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김현철의 비리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점증되어갔다. 특히 이 두 사건으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민심이반 현상은 계속되었다. 한편 한보사태 이후에도 경제침체는 더욱 심화되어 대농, 기아, 진로그룹 등 대기업의 도산사태가 이어졌다. 결국 경제는 환란(換亂)을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개월여까지 선거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지각변동을 겪었다. 신한국당은 후보교체 논란으로 내분에 휩싸이면서 결국 분열되었고,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국민신당을 창당한 후 대통령

선거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통령후보단일화에 합의하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후보로 확정하였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후보로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1. 노동관계법 개정안 기습처리 파동

1996년 5월 초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해 온 정부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금지조항 삭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1996년 12월 23일 노동관계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였다. 이어 12월 26일 새벽 6시경 신한



▶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안 등 기습처리 (1996년 12월 26일)

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계류 중인 11개 법안과 함께 기습적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야당과 노동계는 여당의 노동관계법개정안 기습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노동관계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노동관계법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김수환 국회의장과 오세웅 부의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주도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6년 12월 28일에는 700여개 사업장 근로자 38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파업규모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

1997년에 들어서도 노동계의 파업사태는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계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파업지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대응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자와 기업인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참고 견뎌야 한다”며 노동관계법의 재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입장에 대해 종교계, 학계, 사회단체까지도 크게 반발하며 일제히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월 11일 각계 원로 2,00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1월 15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여론이 이처럼 악화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월 21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 영수회담을 열고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 뒤 노동계는 총파업 방침에서 선회하여 시한부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파업투쟁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노동관계법안의 재개정에 착수하여 40여 일간의 재협상 끝에 1997년 3월 8일 3당 총무회담에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에 합의하였고, 3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에서 출발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신한국당의 기습처리로 노사 대립을 가져와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였고, 뒤 이은 한보사태와 김현철의 각종 이권개입 사건과 겹치면서 민심이반 현상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1997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단기 외화유동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간의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일명 '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 환란(換亂)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중 한국 경제는 수출 주종품목인 반도체와 철강가격이 급락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엔저(円低)현상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237억 달러에 달하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²⁵⁾

1997년에 들어서도 경기회복이 지연되었고,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제일은행(한보철강 주거래은행)에 대해 '요주의 기관'으로 평가를 내렸다. 일본에서는 국내은행 일본지점들이 단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리가 올랐다. 이에 한국은행은 2월 초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청산능력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 3월초 외환보유고는 280억 달러가 되었다. 뒤이어 3월 중순 삼미특수강의 법정관리가 발표되었다. 3월 하순에는 지방중금사의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어 4월 중순에는 10여 개 은행들이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협약' (일명 "부도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진로그룹이 첫 번째 적용기업이 되었다. 하순에는 30여 개 중금사가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약에 가입하였다. 5월에는 삼립식품, 대농그룹의 '부도방지협약'이 이루어졌으며, 한신공영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 6월 하순에는 어려움을 격던 기아그룹이 자구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금난이 심각해진 기아는 7월 15일 부도유예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기아그룹의 금융부채는 모두 9조 4천억 원에 달했다.

1997년 8월 25일 원화 환율은 900원을 돌파했다. 9월초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에 이어 9월 23일에는 기아그룹이 전격적으로 화의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국내기업들의 부도와 금융시스

25) 연합뉴스, 1998, 『연합연감(1997)』, 359쪽

템 불안과 때마침 불어닥친 동남아 지역의 외환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용위기로 치달았다. 이로 인해 해외 차입금 금리가 상승하거나 차입이 끊기고, 시중은행의 장단기부채 등급을 일거에 떨어뜨려 차입난을 가중했다. 급기야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금융기관과 기업이 국내 외환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997년 10월 중순 기아사태가 법정관리신청으로 결론나면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10월 23일 홍콩의 주가가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떨어뜨렸다. 이 영향으로 환율은 950원을 넘어섰다.

1997년 11월에 들어서도 기업의 부도사태는 계속되었다. 11월 1일에는 해태그룹이, 11월 4일에는 뉴코아 그룹이 화의신청을 하였다. 11월 10일에는 환율이 한때 1,012원까지 오르고, 17일에는 1,000원이 넘는 가운데 외환시장이 마비되기도 했다. 11월 18일에는 외환당국의 개입포기로 원화 환율이 1,012.8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틀째 외환기능이 마비되었다. 11월 20일 임창열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환율은 제한폭인 10%까지 급등하여 1,139원에서 거래는 중단되었다. 급기야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임창열 부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이어 12월 3일 합의내용의 준수를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합의내용에는 성장률 3%, 소비자 물가상승률 5% 이내, 긴축통화정책 실시, 금융개혁법안 1997년 이내 처리, 부실금융기관 폐쇄, 자본자유화 조기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경제살리기'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요구도 거세졌다. 또 제15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과정에서



▶ 임창열 부총리의 IMF구제금융 신청 발표(1997년 11월 21일)

각 후보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각 후보들은 선거초반 ‘경제과탄 책임’ 소재에 대해 공방을 벌였고 선거중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재협상’ 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3. 한보특혜 대출비리 사건

한보특혜 대출비리 사건이란 한보그룹의 총수인 정태수 회장이 주력사업인 한보철강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권력형 금융부정과 특혜대출비리 사건이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통칭하여 ‘한보사태’ 라고 불리었다.

한보사태는 1997년 1월 23일 한보그룹의 한보철강이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되었다. 한보철강이 부도 처리되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한보특혜대출의 배후와 관련하여 김현철(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을 ‘젊은 부통령’ 에 비유하며 그의 개입의혹을 제기하였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연일 5조 원에 이르는 금융권 대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였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수성 국무총리에게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 때부터 검찰 수사와 관계부처의 조사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검찰은 전·현직 은행장 3명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 검찰에 소환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1997년 1월 30일)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한보사태에 휩싸이게 되었고 연루의혹이 제기된 의원들마다 반발과 부인성명이 잇따랐다. 특히 특혜대출 압력을 행사 한것으로 지목된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은 “나는 혹 불면 날아가는

터레기(터럭의 경상도 사투리)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몸통이 따로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이 말은 그 뒤 한보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몸통의 실체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정치인과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검찰은 1997년 2월 19일 정태수 총회장과 제일은행장 등 금융관계자를 비롯하여 신한국당 홍인길·황병태 의원을 대출 알선수재 혐의로, 신한국당 정재철·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을 국정감사 무마용 금품 수뢰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김현철은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적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자유민주연합도 몸체는커녕 깃털이 붙은 날개조차도 건드리지 못하였다며 비난했다. 특히 한보그룹이 서류와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김현철의 저서가 무더기로 발견되자 김현철의 한보사태 연루의혹은 점차 커졌다. 이에 김현철은 사실무근이라며 연루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였다. 고소인(김현철)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현철은 한보사태와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한보사태 수사를 종결했다. 그 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현철의 한보사태 연루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곧이어 김현철이 개인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대외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보사태 정국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7년 3월 11일 박정식(서울 G남성클리닉 원장)이 김현철과 한보그룹 정보근 회장은 헬스크립 회원권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여 이용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폭로하면서 한보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시민단체들도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설 줄 것을 촉구하였고, 때마침 진행된 한보사태 첫 공판에서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보특혜 대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지자, 한보사태 재수사 논란이 광범위하게 번져나갔다. 결국 김현철은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임을 밝혔고, 검찰의 한보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1997년 3월 21일 검찰 - 감사원 - 은행감독원 - 국세청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신한국당 의원 13명,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4명, 자유민주연합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1명 등 모두 33명의 정치인을 소환조사하였다. 2개월 여 동안 조사를 끝낸 검찰은 5월 22일 직무관련으로 뇌물을 수수한 새정치국민회의 김상현·신한국당 노

승우 의원과 최두환·박희부·하근수·김옥천·정태영 전 의원, 문정수 부산시장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수환 국회의장, 신한국당 김윤환·김덕룡 의원 등 정치인 24명과 한보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준 임춘원 전 의원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무혐의 처리하게 된 데 대해 검찰은 모두 선거자금 또는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에도 김현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다며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여야 3당은 1997년 2월 12일 총무회담을 열고 한보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하지만 김현철의 증인채택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청문회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박경식(서울 G남성클리닉 원장)이 ‘김현철의 한보사태 연루의혹’을 폭로한 후 김현철이 청문회 증인에 응할 것이라고 입장변화를 보였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정상화되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997년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45일간 운영되었으며 김현철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박경식,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현철의 국정개입과 정부 고위직 인사 및 15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내었지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종반에는 위증자 고발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파행 상태에서 활동을 끝냈다.

한보사태로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뇌물성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수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관련법률이 대폭 개정되었다. 여야 간 정치자금의 형평성문제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였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또 후원회의 연간기부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개정되었다.

4. 김현철(김영삼 대통령 차남)의 비리사건

1997년 3월 11일 서울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철이 이흥구 총리 임명 사실도 먼저 알고 있는 등 정부의 각종 요직인사에 개입하였다”고 김현철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성명을 내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이를 수사하고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 청탁만으로 죄가 되지 않으며 비리의혹을 폭넓게 조사하여 금품수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소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한보철강 설비수입과 관련하여 2,000억 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지역민영방송사 선정과정 개입 의혹,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개입 의혹, 한보 전환사채 소유 의혹, 정부·언론사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계속 번져나갔다. 결국 검찰은 1997년 3월 하순 김현철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주)심우 대표 박태중의 회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김현철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두양그룹·대동주택 등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5월 17일 김현철을 구속하였다. 또한 박태중과 전 안전기획부 운영차장 김기섭을 고속도로 휴게소 및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6월 5일 김현철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현철이 6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이권청탁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모두 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김현철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 ‘나라사랑본부’로부터 대통령선거자금 잔여금으로 추정되는 120억 원을 넘겨받아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김기



▲ 김현철 구속관련 언론보도(동아일보 1997년 5월 17일)

김현철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두양그룹·대동주택 등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5월 17일 김현철을 구속하였다. 또한 박태중과 전 안전기획부 운영차장 김기섭을 고속도로 휴게소 및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6월 5일 김현철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현철이 6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이권청탁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모두 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김현철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 ‘나라사랑본부’로부터 대통령선거자금 잔여금으로 추정되는 120억 원을 넘겨받아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김기

섭에게 나누어 관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돈의 구체적인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재판에 회부된 김현철은 1997년 10월 13일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의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1월 3일 전격적으로 보석이 결정되어 풀려났다. 1998년 2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때에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999년 4월 9일 열린 상고심에서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범죄 사실은 심리가 불충분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이어 6월 23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김현철은 징역 2년에 벌금 10억 5천만 원과 추징금 5억 2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현철은 재상고하였으나 7월 27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세간에서는 '8·15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받아들여졌고,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현철의 사면은 이루어져 잔여형기(1년 6월)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김현철 비리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 잔여금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한 공개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5. 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DJP연합)

'DJP연합'은 '호남·충청·대구·경북'을 한데 묶어 '반 PK 지역연합'을 구축하여 한나라당을 압박할 의도로 성립된 지역연합의 한 형태였다. 따라서 1990년의 '3당 합당'의 정국구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하지만 3당 합당이 '호남 대 비호남'이었다면 'DJP연합'은 그에 반대되는 '역 3당 합당'의 지역연합구도였다.

'DJP연합'이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은 첫째, 1996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 당내에서 '양김(김대중·김종필) 불가론'이 번져가는 위기상황에서 대권구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 모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DJP연합'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여당인 신한국당의 인위적 정계개편에 맞

서 양당 간 결속을 다지면서 태동하였고, 그 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96년 7월 초 정계개편 논란 끝에 열린 제15대 국회에서 양당은 합동의원총회를 20여 회나 개최하며 국회 문제에 대하여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1996년 6월에는 양당 간 정책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각종 법안과 정책수립 시 정책연합을 추진하였다.

정책공조를 추진하던 양당은 공조체제를 ‘선거공조’로 확대하여 1996년 9월 12일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와 11월 18일 경기 오산시장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켜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그 뒤 1997년 3월 치러진 인천 서구와 수원장안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단일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공조’ 체제를 다져온 양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이후 1997년 7월 중순부터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 협상을 본격화하였다. 양당은 1997년 10월 15일을 테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내각제 개헌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시한을 넘겨가며 마무리 협상을 벌여 마침내 내각제를 매개로 한 단일화 협상을 사실상 매듭짓고 합의문 시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 27일 김대중 총재가 김종필 총재의 자택을 전격 방문하여 회동을 갖고 후보단일화 협상을 종결지었다. 이로써 전당대회 직후 4개월 여에 걸친 협상 끝에 ‘DJP연합’이 성립하게 되었다. 합의내용은 김대중 총재를 단일후보로 내세우는 대신 김종필 총재는 차기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고 각료배분과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 양당의 배분비율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19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후보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된 후 곧바로 무소속 박태준



▶ ‘DJP연합 합의문’ 조인식(1997년 11월 3일)

의원을 포함하는 3자 연대에 나섰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회동한 다음날인 1997년 10월 28일 박태준 의원과 회동을 갖고 자유민주연합 총재직을 제의하면서 입당을 권유했고, 박태준 의원은 11월 4일 입당했다. 자유민주연합은 11월 2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태준 의원을 당 총재로 선출했고, 김종필 총재는 명예총재에 추대되었다. 이로써 ‘반 한나라당’ 세력을 일체화하는 이른바 ‘DJT연대’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DJP연합’은 본질적으로 양김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이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 하더라도 상승효과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는 ‘DJP연합’과 더 나아가 ‘DJT연대’를 이뤘음에도 지지도가 급속히 상승하지 않았던 데에서 근거한 것이었다. 또 자유민주연합은 당내 반발도 거셌다. 자유민주연합 이의익·박종근·안택수 의원 등 대구 출신 의원 3명은 대구·경북의 ‘반 DJ’ 정서를 이유로 탈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 충청권 의원들도 김종필 총재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6.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신한국당 탈당과 국민신당 창당

1997년 7월 21일 실시된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대회 직후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²⁶⁾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자유민주연합 김종필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정치국민회의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지지도는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신한국당의 당내에서는 후보교체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정권재창출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당 안팎의 시련을 겪고 있던 이회창 후보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격 건의하였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김대중 후보의 태도가 ‘사과와 반성 후 사면’이라는 입장에서 ‘조건없는 용서’로 바뀌자 영남 민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김대중 후보보다 먼저 사면을 건의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건의는 청와대가 거절하여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이회창 후보와 김영삼 대통령 간에는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회창 후보 교체 요구도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

26) 1997년 7월 21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각 후보자의 지지도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35.6%),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23.6%),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후보(8.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1997년 7월 23일 6면).

1997년 8월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김대중 후보와 반전되어 20%대로 하락한 반면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이인제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30%에 육박하여 김대중 후보와 견주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고무된 이인제 경기지사는 출마명분을 쌓기 위해 이회창 후보에게 당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후 독자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 잔류를 설득하였지만 이인제 경기지사는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라며 9월 8일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한 후, 9월 13일 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독자출마를 공식선언하였다.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탈당사실이 알려지자 경선 당시 이인제 후보를 지지했던 유성환·송천영·박태권·이철용·유승주·송광호 전 의원 등이 동반 탈당하였으며, 조연하 전 국무부위원장, 신도성 전 통일원장관 등도 신당창당에 합류하였다. 창당받기인들은 세를 모은 뒤 1997년 10월 14일 ‘국민신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열고 장을병 국회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창당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4일 잠실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구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국민신당에 입당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총재로 선출하는 한편 이인제 전 경기지사를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했다. 창당대회를 마친 국민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신청을 하였고, 11월 10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등록절차를 마쳤다.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석재·김운환·한이헌·박범진·이용삼·김학원·원유철 의원 등이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신당창당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국민신당의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신당이 창당된 후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국민신당 청와대 지원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신당은 해명과 고발로 맞서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로써 ‘국민신당 청와대 지원설’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였다.



▶ 국민신당 창당대회 (1997년 11월 4일)

7.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건의가 무산된 후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급기야 1997년 9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한국당의 비주류 측은 이회창 대표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며 ‘보수대연합’과 ‘후보교체’ 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노선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세력이 충돌하였고, 후임 대표 인선 문제를 두고는 이회창 대표와 김윤환 고문간에 갈등을 빚었으며 점점 내분양상으로 번져나갔다.

이처럼 당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신한국당은 1997년 9월 30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회창 대표를 새 총재로 선출하고 이한동 고문을 대표최고위원에 지명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추대하였다. 총재에 선출된 이회창 총재는 김윤환·김덕룡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당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 후 이회창 총재는 ‘대쪽’, ‘법대로’ 이미지를 내세우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김대중·이인제 후보에 이어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1997년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정치자금 외에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자금의 일부를 금융실명제 이후 불법으로 실명 전환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일어날 극심한 국론분열과 수사 기술상 대통령선거 전에 끝마치기가 어렵다며 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회창 후보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회창 총재의 지지율은 정체현상을 보였고, 민주계의원들은 ‘이회창 후보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만섭 고문이 전격 탈당하여 국민신당에 합류하였고, 민주계 의원들이 동반 탈당하는 등 내분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한편 민주당의 이기택 전 총재는 포항 북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야권에서 제3 후보로 거론되던 조순 서울시장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순 전 서울시장은 총재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조순 총재가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후에도 개혁파 의원들과 갈등은 계속되었고, 외부인사의 영입부진 등으로 인해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지율 정체현상은 계속되었다. 결국 조순 총재는 ‘건전한 세력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김대중·김종필 총재 간 후보단일화 협상 타결로 정치적으로 공멸할 수 있다고 본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대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조순 총재가 후보사퇴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회창 총재는 “3김 청산의 원칙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합당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양당은 1997년 11월초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의 회담을 통해 당 대 당 통합을 전격 선언하였다.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 ‘당 대 당 원칙에 의한 연대’, ‘대통령 후보단일화’, ‘당명과 당원·당규의 통합’, ‘3김 정치 청산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4개 항에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13일에는 대통령후보는 이회창, 당 총재는 조순이 맡는다는 내용의 후보 단일화 합의내용을 공식발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11월 2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합당대회를 열고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고, 민주당 조순 총재를 초대 총재로 선출하였다. 또 이회창 후보는 명예총재로 추대됐으며, 신한국당 이한동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로 지명되었다.

이회창 총재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30년 묵은 3김 장기구도를 물리칠 때가 됐다”, “집권하면 최우선 과제로 물가를 잡고, 가능한 한 모든 정책을 강구해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며 금융실명제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합당을 완료한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신청을 마쳤고, 11월 24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등록절차도 마쳤다. 이후 이회창 후보는 지지도가 급상승하여 김대중 후보와 선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의 당 대 당 통합을 통한 대통령선거 연대추진을 위해 창당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기보다는 ‘DJP 연합’ 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겨냥해서 통합된 정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대회(1997년 11월 21일 대전충무체육관)

제2절

선거제도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까지는 「대통령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가 치러졌으나, 그 후 1994년에 각종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제15대 대통령 선거도 새로 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선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중요한 변화는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서 선거운동 방법을 옥외집회 중심에서 TV방송토론과 연설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였다.

1. 선거법 개정

1994년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상황에 맞게 1997년 11월까지 두 차례 더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두 번의 개정은 계기나 방향에 있어 대조를 보였다. 첫 번째 개정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여야 간 갈등 상황에서 정치 현실을 고려한 선거운동의 확대 및 선거비용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은 한보사태 이후 드러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구조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자,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해 선거운동의 규모나 횟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가. 개정경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 인위적 정계개편 파동으로 장외투쟁을 벌인 여야는 쟁점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7월 8일 제180회 임시국회(1996. 7. 8~9. 1)를 소집하여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996년 7월 24일 첫 회의를 열고 신한국당 김중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한국당 박헌기,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새정치국민회의, 11월 11일 김진배 의원으로 교체), 자유민주연합 이진개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선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8월 10일부터 1997년 2월말까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어진 제181회 정기국회(1996. 9. 10~12. 18)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야당이 예산안과 OECD 비준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야 3당 총무와 김중위 위원장의 4자 회담으로 진행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약 4개월 여에 걸친 협상 끝에 방송광고 횟수 증가 및 국고부담, 선거사무원 증원, 선거사무원 수당보전, 선거공영제 일부 확대, 선거운동 방법 개선 등 핵심쟁점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와 같은 협상과정을 거쳐 완성된 선거법 개정 법률안은 정치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심사한 후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1996년 12월 13일 제181회 정기국회의 제20차 본회의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중위 위원장을 대리한 새정치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표결에 부쳐져 재석 240명 중 찬성 226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2호로 공포·시행되었다.

1997년 1월말경 불거진 한보사태와 뒤이어 터진 김현철의 비리사건 등으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여야 3당 총무는 회담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관계법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민주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배제에 대한 항의농성으로 지체되다가 1997년 8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신한국당 목요상 의원(1997년 9월 9일 김중위 의원으로 교체)을 선출하고 김학원, 김진배, 이진개 의원을 간사에 선출하여 특위구성을 마쳤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 1997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활동하여 의견의 접근이 쉬운 의제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끝나감에도 선거공영제 범위, 텔레비전 토론방식, 정당 활동의 제한 범위 등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쟁점사항과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된 사항 모두를 김종위 위원장과 3당 총무간의 4자회담으로 넘겼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도 쟁점사항인 선거공영제의 범위, 텔레비전의 토론방식, 정당연설회 횟수 등은 대통령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절충을 벌여 1997년 10월 31일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합의안은 같은 날 제185회 정기국회(1997. 9. 10 ~ 12. 18) 제13차 본회의에서 넘겨졌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1월 14일 법률 제5412호로 공포·시행되었다.

나. 선거법 개정의 주요쟁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야 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 ‘공영방송사 TV 대담·토론회’, ‘정당연설회 제도’, ‘연합공천 법정화’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는 소위 ‘연좌제’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실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실사 결과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고발된 의원은 20명이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5절 선거비용” 참조). 그러자 선거법협상에 나선 여야는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도의 폐지에 쉽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까지 가세하여 정치개혁에 역행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다시 협상에 나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자유민주연합과 새정치국민회의는 폐지를 주장하였다. 다만 새정치국민회의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협상을 계속한 결과 여야는 새정치국민회의 안에 합의하였다. 그러

나 시행시기를 두고 신한국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위반자는 구법에 따르도록 하자고 주장하였고, 이 법으로 당선무효될 위기에 처한 의원이 있었던 자유민주연합은 소급하여 폐지하자고 맞서 끝내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거법이 정치적 흥정도구로 전락되었다고 거세게 비난하자, 여야는 1997년 2월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그 후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공영방송사²⁷⁾ TV 대담·토론제도’는 처음 개정 시 불완전한 제도였으나 두 번째 개정 시 보완되었다. 첫 개정 협상에서 여당은 한 후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하였고, 야당은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대담·토론의 의무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절충하여 원하는 후보자만 초청하여 토론회를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제도는 방송사의 의무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토론회의 횟수도 규정되지 않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공영방송사로서는 규제가 많은 이 제도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존의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 방법을 택할 수 있어 시문화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두 번째 선거법개정 협상을 하면서 공영방송사의 텔레비전 대담·토론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TV토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영방송사에 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당연설회 제도’에 대해 여당은 처음에는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라는 제도개혁 협상의 취지에 맞게 폐지하고 텔레비전 토론회 및 소규모 옥내집회로 선거운동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후보자와 국민 간의 직접 대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시·도별로 1차례씩 옥외 정당연설회를 허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야당은 대규모 집회를 이용하여 여당을 공격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반면에 여당은 이를 봉쇄하려는 입장이었다. 협상 결과 여당은 정당연설회 횟수를 축소하자는 야당 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어긋난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협상에 들어간 여야는 옥외집회를 폐지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옥내연설회 횟수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무제한 허용하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50회로 제한하자고 주장하였

27)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말한다.

다.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하락한 이회창 총재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분위기를 일신할 만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결국 여야는 정당연설회를 시·도마다 2회 이내와 구·시·군마다 1회씩 옥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정당연설회 개최횟수는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연합공천 법정화’는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것이었다. 두 야당은 정당 간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후보를 포기한 측도 단일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후보연합공천제 도입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후보는 한 명을 내고 국고보조는 두 몫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새정치국민회의는 후보를 양보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투표용지에 양당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것과 선거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이에 대해 정당정치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유례도 없는 제도라며 강력 반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인쇄물 종수를 축소하고 현수막 개시 매수를 줄였으며,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옥내로 한정하면서 개최횟수도 대폭 줄였다. 또한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경력방송 횟수를 증편하고 공영방송사 대담·토론회를 신설하였으며, 언론기관 토론회의 대담기간을 연장하였다. 한편,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인쇄물제작비용, 현수막 제작·게시비용, 신문·방송광고비용, 방송연설 비용, 선거사무원 수당은 기탁금 반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20세 이상으로 같았으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민에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추가하였다

(법²⁸⁾ 제15조, 제16조). 이는 1987년 대통령선거법 개정 당시 야당의 반대로 폐지하였던 거주 요건을 다시 추가한 것이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7장, 제2절 헌법 개정 발의”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8장, 제2절 선거제도” 참조). 다만 공무상 이유로 인한 파견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나.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법정화하여 선거일 결정에 따른 정치적 논란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선거과열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기간은 28일에서 23일로 5일 정도 줄였다(법 제33조, 제34조).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임기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2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이 불확실하였다.

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무소속후보자의 경우는 5개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정당추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을 경과한 후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추가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선거기간 단축과 연관되어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3일이, 추가등록기간은 1일이 단축되었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기탁금은 후보자마다 균등하게 5억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그리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기탁금 중에서 과태료와 불법선전물 대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반면, 후보자를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선전벽보 작성비용

28) 이 장에서 법이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5412호)을 말한다.

을 국가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법 제56조, 제57조).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기탁금은 3억 원이었으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7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사본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였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7 미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사본비용과 국고부담 연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였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방송연설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라. 선거운동

선거운동 주체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법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8조, 제60조). 하지만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하여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일정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 자원봉사자 수당제공 등 어떤 명목의 금품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모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법 제135조, 제230조).

선거운동 방법이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특정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법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선거운동의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최하는 정당·후보자 연설회 외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신설하여,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연설원 등은 확장장치를 사용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반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후보자 연설회의 옥외집회는 폐지하였고, 개최횟수는 시·도마다 2회와 구·시·군마다 1회로 축소하여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하여 5분의 1로 대폭 줄어 들었다(법 제77조, 제79조).

미디어 매체에 의한 선거전을 위해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의 횟수를 증편하였고, 그 밖에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²⁹⁾는 그의 부담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공평하게 후

29)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자를 말한다.

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74조).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하면 방송광고는 후보자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 5회 이내에서 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회 이내로 확대하였다. 또 방송연설은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5회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11회 이내로 확대하였다. 경력방송도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으로 8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신문광고 게재횟수는 일간신문에 각 4회 이내였으나 총 70회로 제한하였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광고를 허용하였다(법 69조).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기관 대담·토론회는 횟수제한을 없앴고, 단체와 공영방송사 대담·토론회를 신설하였다.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는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개최할 수 있었으나 선거기간 전 120일부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은 가능하도록 하였고, 선거기간 중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신설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변단체, 후보자 관련단체, 사적 모임 등을 제외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영방송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텔레비전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3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다(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또한 토론회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설치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의무화하고 반론보도 청구권을 신설하였다(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그 밖에 선거운동으로 현수막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구·시는 관할동수 이내, 군에 있어서는 읍마다 2매 이내, 면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축소하여 구·시·군마다 3매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7조).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표지판·표찰·수기·어깨띠·마스코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8조). 또 자필서신, 개인용 컴퓨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109조)이 신설되었다. 이 중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선거비용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그 총액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선택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법 제121조, 제258조).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통제를 강화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에 의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상으로 선거운동용 자동차 또는 확장장치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을 선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였다(법 제127조, 제129조 제132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해당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34조).

선거공영제도는 확대되어 선거 결과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현수막의 제작·게시비용,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비용,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비용, 선거사무원 수당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선전벽보 작성비용을 보전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135조).

바. 투표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법 제150조).

부재자 투표소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법 제148조).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도입 당시 10일간 운영되었으나 효율적인 부재자투표소 관리를 위해 투표기간을 단축한 것이었다.

투표용지의 위조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대리인 가인제도’는 ‘인쇄날인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당대리인은 투표용지 인쇄·납품·검수·배부과정에 입회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당추천위원 가인제도는 그대로 존속하였다(법 제151조, 제157조). 정당대리인 가인제도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후에 폐지되었다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부활되었다.

선거권자들에게 투표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투표통지표 제도’는 ‘투표안내문 제도’로 대체되었다(법 제153조). 투표통지표 제도는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도입되었고, 교부자의 불법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자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교부자를 감시하기 위해 교부입회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뒤 간접선거로 폐지되었다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부활되었다. 하지만 매선거 때마다 관련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94년 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투표안내문’ 제도로 변경되었다.

사. 개 표

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투표함의 도착 순위에 따라 시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장소로 옮겨서 개함하며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하도록 하였다(법 제175조, 제176조).

아.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87조).

〈표 4-1〉 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비교

구분	제14대 대통령선거	제15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거주요건)	○ 40세 이상의 국민	○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 추가
기탁금액	○ 3억 원	○ 5억 원
선전벽보 첨부기준	○ 읍·동은 인구 500인·면은 인구 200인에 1매 비율로 첨부	○ 읍은 250인, 면은 100인, 동은 500인에 1매 비율로 첨부
소형인쇄물 증수·배부	○ 책자형 3종, 전단형 1종 ○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배부	○ 책자형, 전단형, 명함형 각 1종 ○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발송
신문광고 횟수	○ 각 일간신문에 각 4회	○ 70회 이내 (정치자금모금 광고 가능)
정당·후보자 연설회 장소·횟수	○ 개표구별 5회이내에서 개최 ○ 집회장소는 옥내 및 옥외 가능	○ 시·도마다 2회, 구·시·군마다 1회 ○ 집회장소를 옥내로 한정
공영방송사 TV 토론회	○ 규정 없음	○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
방송연설 횟수	○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TV·라디오방송별로 각 11회 이내
방송광고 횟수	○ TV·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TV·라디오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후보자 경력방송 횟수	○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3회 이상	○ 한국방송공사가 TV·라디오별 각 8회 이상
단체의 대담·토론	○ 규정 없음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없음 ○ 선거기간 전에는 개최불가
언론기관 대담·토론	○ 선거운동기간 중 TV·라디오방송별로 각 3회 이내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없음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기간을 연장
선거비용 보전 대상	○ 방송연설 비용 중 일부 (후보자가 행한 각 3회, 연설원이 행한 각 2회)	○ 신문광고의 70회 비용 ○ 방송광고 30회 비용 ○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비용 ○ 현수막 제작·게시비용 ○ 유급 선거사무원 수당
투표용지 전국통일 기호	○ 규정 없음	○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추천후보자는 전국적 통일된 기호 부여
선거범죄 조사권	○ 규정 없음	○ 선거범죄 조사권 도입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규정 없음	○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설치
반론보도청구권	○ 규정 없음	○ 선거보도 반론보도 청구권 신설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주요 4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한 것은 당내 민주화와 대통령선거 후보의 국민적 지지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내경선 후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출마하거나 합당과 후보단일화 협상을 통해 연대에 나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당내경선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

신한국당은 당내경선을 통해 이회창 후보를 선출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도 경선을 실시하여 김대중·김종필 총재를 각각 대통령선거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주당은 조순 전 서울시장을 영입하여 후보로 선출하였다.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된 여야 주요 4당은 대통령선거전 승리를 위해 ‘합중연횡’에 나섰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면서 이회창 총재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후보단일화 협상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후보로 확정하였다. 한편, 신한국당 후보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한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국민신당 창당대회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이회창·김대중·이인제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가. 한나라당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월 초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통령후보 지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기습처리 파동에 따른 여파와 뒤이은 한보특혜대출비리 사건, 김현철의 한보사태 연루설 등으로 여론이 악화

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행한 특별담화에서 “신한국당의 후보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경선과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국정쇄신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겠다는 의미로 연초의 강력한 지명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 발표로부터 시작된 신한국당의 경선은 처음부터 ‘이회창 대 반이회창’의 경쟁으로 진행되었다. 1997년 3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시 한보사태 재수사로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정국수습 차원에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사실상 후보경쟁은 시작되었다. 이어 3월 24일에는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이인제 경기지사 출신을 선언함으로써 당내경선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모두 9명이 경선에 나서 이른바 ‘9룡(龍)’으로 불리었으나, 6월 3일 김윤환 고문이, 7월 18일에는 이홍구 고문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경선일을 이틀 앞두고 7월 19일에는 박찬중 고문이 전격 사퇴하여 최종적으로 6명이 경선을 치렀다.

경선초기 경선후보의 당 대표직 겸임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경선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다른 경선후보들의 대표직 사퇴요구에 대해 이회창 대표는 ‘당 대표와 경선관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였다. 이후 당 대표직 사퇴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당내 인사들이 각각 범민주계 모임인 ‘정치발전협의회’와 구민정계 중심의 ‘한나라회’를 결성하는 등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정치발전협의회는 ‘반이회창’을 주도하며 대표체제를 허물고 단일후보 추대를 모색하였으나 내부분란으로 와해되기도 하였다. 결국 7월 1일 이회창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신한국당은 이만섭 의원을 대표서리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하였다.

경선은 1997년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23일간 실시되었다. 경선후보자등록 기간은 7월 2일까지였으며, 경선운동 방법으로는 선전벽보·소형인쇄물과 합동연설회 외에 전화를 통한 경선운동 등이 허용되었다. 경선후보자등록 결과 이홍구, 김덕룡, 박찬중, 이한동, 최병렬, 이회창, 이수성, 이인제 등 8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7월 18일과 19일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이홍구 후보와 박찬중 후보가 사퇴하여 최종 후보자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

경선후보들은 각기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경선운동을 펼쳤다. 경선후보자 합동연설회

는 1997년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합동연설회에서 기호 1번 김덕룡 후보는 주로 문민정부 개혁의 계승발전을 내세웠다. 기호 3번 이한동 후보는 경륜·도덕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를, 기호 4번 최병렬 후보는 경륜·능력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으며, 기호 5번 이회창 후보는 법과 원칙, 부정부패 척결과 원칙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기호 6번 이수성 후보는 경제 회생과 민족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을 주장하였으며, 기호 7번 이인제 후보는 40대 젊은 지도자의 장점과 함께 ‘세대교체’를 주장하였다. 특히 이인제 후보는 신한국당 경선 전에 각 방송사에서 개최된 대권주자 TV토론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였고, 경선기간에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총재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등 강세를 보였다.

경선운동은 초반부터 후보자 비방 등과 열 양상을 보였다. 이수성 후보의 가계 비난 괴문서가 의원회관과 언론사 주변에 나돌면서 후보들 간에 인신공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상호 비방전으로 확대되는 등 타락선거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회창 후보가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했다”고 박찬종 후보가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가 ‘알맹이 없는 정치공세’, ‘당내 분란조장’이라고 일축하는 등 이 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어 경선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선운동을 끝낸 신한국당은 1997년 7월 21일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1차 투표 결과 이회창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12,049표 중 4,955표(41.1%), 이인제 후보 1,774표(14.7%), 이한동 후보 1,766표, 김덕룡 후보 1,673표, 이수성 후보 1,645표, 최병렬 후보 236



▶ 신한국당의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회창후보 (1997년 7월 21일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

표 순이었다. 이처럼 이회창 후보가 1위를 차지하였지만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가 11,622표 중 6,922표(59.6%)를 얻어 4,622표(39.8%)를 얻은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이회창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21세기를 향한 새 지평의 길을 활짝 열었다. 경쟁했던 모든 동지들이 굳게 손을 잡고 힘을 모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밝혔으며, 경선 후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는 이회창 후보를 다시 당 대표로 지명하였다.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권을 향한 정치적 행보는 빨라졌으나, 야권에서 제기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파문으로 지지율은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당내 민주계와 대립하였고, 의원들의 탈당과 후보교체 논쟁을 벌이며 내분을 겪었다. 결국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탈당한 후 독자출마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경선 당시 이인제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계 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동반 탈당하여 신한국당은 전력의 큰 손실을 입었다. 그 뒤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 조순 후보와 연대에 나서 양당 통합을 이끌어 내었고, 199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으며, 이회창 총재는 창당대회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후보로 추대되었다.

나.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 정대철 부총재와 김상현 지도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분당 책임’과 ‘대통령선거 출마에 대해 회의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김대중 총재는 1996년 5월 중순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자신의 2선 후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종필 총재와의 연대가 가시화되면서 김상현 지도위의장 등 김대중 총재의 출마를 반대하는 측은 호남권·충청권의 지역연대가 실현되면 당내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강연회 개최 등으로 경선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권도전 행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갔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경선실시에 따른 내부조직의 정비를 위해 1997년 1월 하순 대의원 수와 후보선출방법 등에 대한 경선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3월에 접어들어 정대철 의원·김상현 지도위의장·김근태 부총재 등이 범야권 통합을 위해 국민경선제 실시를 제안하여 갈등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 총재 측은 금권타락 선거, 공권력의 개입과 정보기관의 공작가능성, 과도

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경선제 실시를 반대하였다. 결국 4월 2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표결 끝에 국민경선제는 부결되었으며, 주류 측이 내세운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정규정에 의한 경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재15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총재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대통령후보 경선에는 김대중 총재와 정대철 부총재 2명이 등록하였고, 총재후보 경선에는 김대중 총재와 김상현 지도위원회 의장이 출마하였다. 당초 독자출마설이 나돌았던 김상현 의장은 한보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4월 중반 불출마 선언 후 정대철 부총재를 측면지원하기로 하고 총재 후보로만 등록하였다.

경선과정에서 “거목에 꽃을 피우자”, “선택은 끝났다”는 구호로 대세론을 내세운 김대중 총재가 시종 우위를 보였다. 정대철 후보는 김대중 총재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김상현 총재 후보는 대통령선거후보와 총재의 역할 분담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특히 김상현 총재후보의 ‘대권·당권분리론’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외로 호응을 얻자 김대중 후보 측은 긴장하였고 한때 ‘김상현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경선종반에는 정대철 후보 측에서 경선 불공정을 제기하여 후보 진영 간에 감정 대립 양상이 일기도 하였다.

한 달간의 공식 경선운동을 끝낸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5월 19일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와 총재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전당대회장의 최종 연설회에서 김대중 후보는 자유민주연합과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총재·대통령후보의 통일된 지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반면 정대철 후보는 자유민주연합과의 대통령후보 단



▶ 새정치국민회의의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김대중 후보(1997년 5월 19일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

일화는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성사되어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선투표 결과 전체 유효투표 4,157표 중 김대중 후보가 77.5%인 3,223표를 얻어 907표를 얻은 정대철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총재 경선에서도 김대중 후보는 3,057표를 얻어 1,072표를 얻은 김상현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김대중 총재는 생애 네 번째로 대통령선거 도전길에 오르게 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를 위해 총재직을 사퇴하고 다른 유능한 인물이 당무에 전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불개입, 헌법상 총리권한의 보장,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운영 등 내각제적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각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해 자유민주연합과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국대의원 대회 직후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과 4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DJP 연합’을 이끌어 냈으며, 이에 따라 김대중 후보는 양당의 단일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다. 자유민주연합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50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한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초까지 국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한국당으로 이적하여 한때 당세가 위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정치국민회의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잇단 승리를 거두면서 예전의 위세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에 들어 당론인 내각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이어 연초부터 한보사태와 김현철 국정개입 등 비리사건이 잇따르자 대통령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지 않고, 새정치국민회의와는 개헌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단일화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김종필 총재는 제15대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4월부터 독자 출마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자유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다른 경쟁자 없이 김종필 총재를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1997년 6월에 들어와 한영수 부총재가 경선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경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의 후보경선은 1997년 6월 8일 김종필 총재와 한영수 의원이 경선후보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선운동 과정에서 한영수 후보는 주류 측의 ‘불공정 행위’를 비난하기도 하였지만 김종필 총재의 시종 압도적인 우세 속에 진행되었다.

경선운동을 끝낸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6월 24일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였다. 경선투표 결과 김종필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3,190표 중 2,575표(80.7%)를 얻어 554표(17.4%)를 얻은 한영수 부총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후보와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김종필 총재는 1987년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선 데 이어 생애 두 번째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김종필 총재는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에서 “신한국당 정권은 실패했고, 무능하고 잘못된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21세기 위대한 한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내각제 선호세력, 안정 회귀세력, 미래 지향세력은 결집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통령에 반드시 당선되어 제15대 국회임기 안에 내각제 개헌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전당대회 직후 여론조사 결과 김종필 총재의 지지도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당선권에서 계속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 뒤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 후보단일화 협상을 벌였고, 마침내 1997년 10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마지막 회동을 통해 양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 인해 김종필 총재는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양보하고 후보군에서 중도하차하였다.

라. 민주당

통합민주당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김 정치와 지역할거주의 청산을 내걸고 나섰으나 전국구를 포함하여 15석에 머물러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좌절되었다. 선거 직후에는 이규택 당선자의 탈당을 시작으로 4명의 당선자가 추가 탈당하여 11명의 국회의원만 남게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당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1996년 6월 4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이규택 상임고문을 총재로 선출하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1월 들어 이규택 총재

계열과 개혁인사 계열 간 내분이 심화되면서 결국 개혁파가 ‘국민통합추진회의’를 결성하고, 별도 사무실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양분되었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1997년 7월 당의 재건을 위해 자신의 출생지인 포항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지원을 받은 박태준 후보에게 크게 패했다. 이에 이기택 총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조순 서울시장 영입에 착수하였다. 조순 서울시장은 당시 야권에서 제3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고, 국민통합추진회의를 통한 후보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택 총재가 조순 서울시장에게 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총재 추대를 제의하였고, 조순 서울시장이 이를 수락하였다.

민주당은 1997년 8월 28일 전국 대의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고 조순 전 서울시장을 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어 9월 11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대의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조순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조순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집권층이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총리와 내각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순 후보는 전당대회 후에도 국민통합추진회의와 화합에 실패하고, 외부인사 영입이 부진하여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조순 후보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지지도는 한자릿수에 머무는 등 정체현상을 보였다. 결국 조순 후보는 건전세력과의 연대를 위해 마음을 비웠으며 다른 후보와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뒤 민주당은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합당하였고, 조순 후보는 한나라당 총재로 선출되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의 김원기 대표를 비롯하여 김정길·노무현·유인태·원혜영 등은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으며, 제정구·김홍신·이수인·이미경·이철·김원웅·홍성우 등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민주당의 정당활동은 종료되었다.

마. 국민신당

“앞서 제1절 선거전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한국당에서 탈당한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국민신당을 창당하였고 창당대회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추대되었다. 이인제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과거에 집착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교체를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신한국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중에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지만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하자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탈당하여 독자 출마했다. 이로 인해 선거기간 중 줄곧 ‘경선결과 불복’이라는 명예와 함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바. 건설국민승리21

노동관계법 과동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진 민주노총은 1997년 3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7월 24일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기로 결의하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과 함께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국민승리21’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권영길 위원장은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참된 개혁과 진보의 정치를 펴 정권교체와 세대교체를 뛰어 넘는 진정한 세력교체를 이룩하겠다”고 천명하며 땀 흘려 일하는 보통 봉급생활자 및 평범한 납세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 기타 정당의 후보자 추천

앞에서 언급한 정당들 외에 제15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는 공화당과 바른나라정치연합, 통일한국당이 있었다. 공화당은 1997년 8월 29일 중앙당 창당대회 및 제15대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열어 허경영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결정하였다.

통일한국당은 1997년 10월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신정일 총재를 추대하였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신정일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한일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이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나라정치연합은 1997년 10월 14일 창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추대식을 갖고 김한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총재 겸 제15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김한식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21세기 선진대국을 이루기 위해 남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 후보자등록

제15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이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했다. 각 후보진영의 경쟁은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도착경쟁에서부터 시작됐다. 등록 접수는 오전 9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각 당 후보대리인들은 ‘등록 1호’를 차지하기 위해 한두 시간씩 일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나왔다.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신당, 건설국민승리21³⁰⁾, 공화당의 5개 정당이 등록시작일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여 접수 순위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추첨결과에 의해 공화당의 허경영 후보가 가장 먼저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뒤이어 국민신당 원유철 사무1부총장이 이인제 후보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이 김대중 후보의 등록신청을, 한나라당 김영일 기획조정위원장이 이회창 후보의 등록신청을,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후에는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가 김두성 대변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고, 11월 27일에는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후보가 등록하였다. 후보자등록 결과 모두 정당추천 후보자였으며, 총 7명이 접수하여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보다 1명이 적었다.

후보자의 기호(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추천 후보자 순으로 정했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의 게재순위는 국회 다수의석 순으로 정했고, 국회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추천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소속정당 명칭의 가, 나, 다 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호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1번,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30) 선거법상 정당의석과 정당명칭, 후보이름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승리21은 공화당에 앞서 기호를 배정받기 위해 1997년 11월 22일 정당등록 신청 때 당명을 ‘건설 국민승리21’로 고쳐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번,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3번,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4번, 공화당 허경영 후보 5번,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후보 6번,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가 7번으로 결정되었다.



▶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접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모든 후보자는 선거법규정에 따라 1996년 말 현재 본인 소유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었고, 이전에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이미 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개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등록 전에 이미 재산을 공개했던 이회창, 이인제 후보도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의하면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가 84억 67만 1천 원을 신고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10억 3,353만 1천 원), 공화당 허경영 후보(9억 9천만 원), 새정치국민회 김대중 후보(9억 7,033만 3천 원),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8억 2152만 4천원)를 신고하였으며, 그 밖에 권영길 후보(6억 9,200만 7천 원),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후보(1억 2천만 원) 순이었다.

〈표 4-2〉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상황

(단위 : 천 원)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재산사항
1	한나라당	이회창	1935. 6. 2.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제25대 국무총리 · 제15대 감사원장	1,033,531
2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1925. 12. 3.	목포상업학교 졸업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 국회의원(6선)	970,333
3	국민신당	이인제	1948. 12. 11.	서울대 법대 졸업	· 노동부장관 · 민선경기도지사	821,524
4	건설국민승리 21	권영길	1941. 11. 5.	서울대농대 졸업	· 민주노총위원장 · 언론노련위원장	692,007
5	공화당	허경영	1947. 7. 13.	서울신학교 3년중퇴	· 신민당 부총재 · 신민당 13대 대통령후보	990,000
6	바른나라 정치연합	김한식	1946. 8. 7.	서울대 음대 졸업	· 한사랑선교회대표 · 월드컵선교단 이사	120,000
7	통일한국당	신정일	1938. 5. 3.	경북대 대학원 철학과 졸업	· 제13대 대통령입후보 · 주한이라크 명예영사	8,400,671

3. 기탁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마다 5억 원으로, 후보를 등록한 7개 정당에서 총 35억 원을 납부하였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반환하였다. 반면 후보를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된 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반환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기탁금에서 선전벽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귀속하였다.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귀속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귀속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한나라당 이회창·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에게는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가 반환되었다. 기탁금 반환금액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5억 71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

민신당 이인제 후보 4억 9,844만 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4억 9,817만 원 순이었다. 반면, 반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권영길·허경영·김한식·신정일 후보의 기탁금은 선전벽보 작성비용을 보전하고 나머지 19억 3,628만 원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7인 경우 반환되었다. 그 때에는 8명 중 3명은 돌려받았고, 5명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표 4-3〉 제15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반환 및 귀속 상황

(단위: 천 원)

구분	기탁금액	이자	공 제 액		기탁금 반 환	기탁금 귀 속
			과태료 및 대 집행비용	선전벽보 작성비용보전액		
계	3,500,000	4,946	13,620	57,707	1,497,331	1,936,288
한 나 라 당 (이회창 후보)	500,000	713	-	-	500,713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500,000	726	2,550	-	498,176	-
국 민 신 당 (이인제 후보)	500,000	712	2,270	-	498,442	-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500,000	699	1,400	13,722	-	485,577
공 화 당 (허경영 후보)	500,000	712	600	14,664	-	485,448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후보)	500,000	685	6,800	14,756	-	479,129
통 일 한 국 당 (신정일 후보)	500,000	699	-	14,565	-	486,134

제4절 선거운동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은 합당 또는 후보단일화 협상을 통해 후보를 확정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며 선거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시작된 경제파탄의 실상이 드러나자 각 후보 진영에서도 경제위기 해결능력이 대통령선거 최대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선거전략과 선거공약도 여기에 맞춰 수립하였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출범한 한나라당은 경제안정과 신뢰성을 부각하기 위해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강조하였고, 김영삼 대통령 탈당 후에는 “3김 청산”을 선거구호로 내세웠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과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후 선거운동의 핵심 전략을 “정권교체”로 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경제대통령”을 내세웠다. 국민신당은 기득권 세력의 낡은 틀을 변화시킬 후보임을 알리기 위해 “젊음”과 “강한나라”를 강조하면서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가. 한나라당

신한국당은 1997년 10월 22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 한다) 위원장에 김윤환, 박찬중, 김덕룡 의원을 임명하고 전국 16개 시·도별 선대위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2명으로 구성된 중앙선대위부위원장단을 구성하고 선거준비체제를 완료하였다. 그 뒤 민주당과 합당으로 출범한 한나라당은 김윤환 고문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를 공동선대위 의장으로 임명하였고, 공동선대위원장에 14명의 당 중진인사를 배치한 후, 100여 명에 달하는 선대위부위원장단을 구성하여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였다.

1) 선거전략

합당 후에는 선거를 앞두고 대선구도가 이회창·김대중·이인제 후보의 3자 구도로 정립되자 한나라당은 이회창·김대중 양자대결구도로 압축시키면서 ‘반 DJP’ 표를 지지세력으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선거구호로 내걸고 이회창·조순 연대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문민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중산층의 안정감과 신뢰성을 이끌어낸다는 선거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고 ‘3김 청산’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이회창-조순 연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제현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실명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전향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경제위기 해결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의 만남”이란 주제로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가 함께 전국을 순회·홍보하기로 했다. 지역별 산업별 정책공약도 중앙당이 아닌 현장방문 발표 형식으로 바꿔 안정적이면서도 실천적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문민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위해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지적돼온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경부고속철도 건설, 역사바로세우기 작업 등에 대해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경제회생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산층 이상의 안정회구 심리를 자극하기로 하였다. 다른 후보의 ‘경제파탄책임론’에 대해 여당과 정치를 함께한 야당도 책임이 있다며 ‘공동책임론’을 내세워 공세를 무력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안정감과 신뢰성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나라가 부도났는데 “정권교체”, “내각제 개헌” 주장을 하여 집권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1당이 집권해야 안정된다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의원숫자가 적어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안정감 있는 위기관리능력은 이회창과 한나라당 밖에 없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로 하였다.

득표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권역별 상승전략을 세웠다. 대구·경북지역은 ‘반 YS정서’를 고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이인제 후보를 압도적으로 눌러 DJ를 이길 수 있는 여권 후보로 위상을 굳히고, 충청·강원지역과 수도권지역에서 김대중 후보와 양강대결을 벌여 승세를 잡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인제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된

다”고 이른바 사표론을 주장하며 영남지역의 부동표를 흡수하기로 하였고, 충청지역에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민주연합이 배제당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선거홍보 전략은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를 선거구호로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등 각종홍보물을 이회창 후보의 깨끗한 이미지를 집중 부각, 강조하고 경륜을 겸비한 새 시대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 유권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구호로 “그래도 이회창”이라는 구호를 통해 흩어진 범여권 보수층과 부동층 흡수에 나섰다.

2) 선거공약

한나라당은 1997년 12월 3일 정치·행정, 경제·과학기술, 사회·복지·환경, 교육·문화, 통일·외교·안보분야의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150개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돈 안드는 선거’와 ‘자율경제’라는 기본적인 국가운영의 틀 속에서 공약을 개발했다. 하지만 경제공약 내용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주요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는 2000년대 초 선진 경제대국 진입을 위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3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물가상승률을 2~3%대로 유지하며 금리를 6~7% 수준으로 인하하여 2000년도 안에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농촌발전기본법의 제정 등 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 밖에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대통령제 권력구조 보안을 위한 책임 국무총리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장 경선제 및 교차투표제를 도입하며 원내총무를 의총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자질 검증과 비리를 막기 위해 주요 고위임명직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정부패청산위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대통령 산하에 ‘21세기 첨단정부기획단’과 민간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정부경영진단기구’를 설치하고 다단계 지방행정구조를 축소·조정하며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선거의 효율화를 위해 기초단체장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를 분

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도로 15,000km를 정비하며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시·도 자치단체장에 여성보좌관제(1~2급)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환경분야에서는 반사회범죄 누범자 격리법(삼진아웃법)을 제정하고 체불임금 지불보장제도를 신설하며 고령자 고용률 3% 이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이행, 국민연금 100% 가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고령자의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의 고용·승진 시에 여성에게 30%를 할당하고 전국구국회의원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국민총생산의 6% 수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축소하며 유치원 공교육화,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 완전실시, 학교전담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문화예산을 임기 내에 1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남북 당국자간 문화공동선언 추진, 통일문화특구 설치,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며 방북자들의 고향돕기 사업투자의 허용,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고향방문, 남한 방문과 텔레비전·라디오 상호개방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을 미·일, 미·독 협정 수준으로 개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의 위안부 문제의 보상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새정치국민회의

야권 후보단일화를 마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1997년 11월 11일 공동선대위의장에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를 임명하고, 상임고문에 박태준 의원을, 공동수석부의장에 새정치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유민주연합의 김복동 수석부총재를 임명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선대위원으로는 국회의원, 당무위원, 원외지구당위원장, 특위위원장 등 700여명을 위촉하여 중앙공동선거대책회의의 조직구성을 완료한 후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1) 선거전략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총재를 포함하는 이른바 'DJT연대'가 마무리된 1997년 10월말 쫘 구체적인 기본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DJT연대'가 타결되었음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지율이 정체되자 선거운동의 핵심전략을 '정권교체'로 정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 등에 대해 정책 비전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거구호는 "준비된 대통령, 경제대통령"으로 정하고 선대위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권역별 책임제를 통해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중점 부각시키기로 하였다. 선거정국은 이회창·이인제 후보가 2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과거 '다자구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다자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3김 청산' 주장에는 이회창 후보가 5·6공과 문민정부의 최대 수혜자임을 부각하여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국민신당이 주장하는 '세대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폐기보다는 위기관리능력 등 준비된 경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는 'YS신당'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지지도를 끌어내리고 이회창 후보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제과탄책임론을 집중 추궁하기로 하였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중점 부각시키기 위해 김대중·김종필·박태준 3명이 나란히 경제현장을 방문하고 정책발표회를 여는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집권비전 제시와 정책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민주당 조순 총재와 합당한 뒤 지지율이 급속하게 오르자 '경제과탄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하였다. 동시에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연합 박태준 총재를 미국과 일본에 파견하여 금융지원을 요청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부문에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1년 반 안에 극복', '집권 후 국제통화기금과 재협상' 등 경제위기 극복 능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선거홍보 전략으로는 모든 일정을 TV토론과 연설회 중심으로 짜고 당 조직과 자금 등 당력을 TV토론, 연설, 광고 등 '미디어전'에 집중 투입키로 하였다. 또 모든 선거홍보의 기본목표를 '안정과 경륜'으로 정하고 김대중 후보의 경륜을 부각시켜 "든든해요 김대중", "준비된 대통령", "믿음직한 대통령", "경제대통령"을 대선홍보전의 선거구호로 정하였다. 또 '정권교체'라

는 선거전략을 바탕으로 ‘DJT 연대’를 통한 화합과 안정의 정치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내각제를 홍보하기로 하였다. 구전홍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부동산을 일 대 일로 접촉, ‘DJT연대’와 김대중 후보의 대세론을 홍보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2) 선거공약

새정치국민회의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경제공약 부분을 일부 수정한 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극복과 금융실명제유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7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발표전 자유민주연합과 ‘국가보안법’과 ‘금융실명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발표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에서는 세계 5강 진입기반을 위해 2000년대 초반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 연평균 경제성장률 6~7%, 물가상승률 3% 이내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음성적인 돈 흐름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규제 등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시가배당제를 도입하고 산업구조조정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공정경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농어가부채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100% 자급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입법을 통한 보완을 주장하면서도 골격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에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1년 반 정도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며 제도개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정치보복·차별대우·대통령친족 부당행위 금지법 등 3금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행정규제 철폐와 정부업무 민간이양을 위하여 정부개혁추진위를 설치·운영하고, 주요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행정제도로는 내무부 폐지와 함께 ‘지방자치체’를 신설하고, 지방경찰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재정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보안법의 보완·존속과 선거권 기준연령 인하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정경분리원칙 하에 남북 직교역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 대한 집중투자와 북한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고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며 금강산·설악산의 관광특구 지정, 남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장비개선과 기술 집약형 과학군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확충하고, 대학교육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며 초등학교 학교급식 의무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하며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을 폐지하고, 정부예산의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며 공영방송의 교양문화프로그램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문화권역별로 전통문화예술학교를 건립하고, 한국영화 의무상영 비율 유지와 한국영화 전용관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환경분야에서는 복지예산을 30% 이상 확대하고 의료보험을 통합하며, 여성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부의 신설 또는 대통령 산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의석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국무위원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며 남녀분리 호봉제 폐지와 산전·후 휴가를 12주로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도시 자동차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며 비무장지대에 자연생태계 공원 조성과 한반도 내 핵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 국민신당

국민신당은 1997년 11월초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목표로 신한국당 탈당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선대위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중량감 있는 인사의 영입이 늦어지면서 중앙선대위의 인선은 전반적으로 지체되었다.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둔 11월말 명예선대위원장에 이만섭 총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서석재·장을병 최고위원을, 10여 명의 최고위원을 지역별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이어 박찬중 전 한나라당 고

문을 선대위 의장으로 임명하여 선대기구 구성을 완료하였다.

1) 선거전략

국민신당은 당초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선거전을 김대중 후보와 양자 대결로 유도하려 하였으나 ‘신한국당·민주당 합당’ 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 로 선거정국이 김대중 대 이회창 후보의 대결구도로 정립되자 우선 2위로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사안별로 수립된 전략에 맞춰 대응하기로 하였다. 선거구호는 “세대교체” 로 정하고, 이인제 후보의 강점인 “젊음” 을 부각시키기 위해 ‘버스투어’ 를 통해 지역을 순회하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청와대의 신당지원 의혹 등에 쏠린 현재의 대통령 선거의 이슈를 내각제 찬반문제로 전환하여 선거정국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과 대통령제 지키려는 세력간의 대결구도로 몰고 간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DJT연대’ 를 내각제를 통한 권력 나눠먹기로, ‘이회창·조순 연대’ 를 5·6공 복원세력의 등에 업혀 내각제 개헌에 야합하려는 세력으로 각각 규정하고 집중적인 홍보공세를 펼쳐 시너지효과를 차단하려 하였다.

선거홍보 전략의 주 공략대상을 안정보다 변화를 선호하는 20~40대로 정하고 TV토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3김 청산을 통한 정치권 “세대교체” 를 홍보하기로 하였다. 신문과 TV광고, 선거홍보물, TV토론회 등 홍보의 기본 목표는 “일하는 대통령”, “젊은 한국, 강한 나라” 이미지로 정하고 이인제 후보가 단순히 ‘젊은 후보’ 가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거쳐 국정수행능력을 갖춘 후보라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기 위한 선거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박정희를 닮은 젊고 참신한 민주적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즉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박정희의 이미지에다 자신의 젊음을 합쳤다. 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세대교체” 와 장기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미지가 상이하다는 비판으로 홍보전략에서 배제했다.

2) 선거공약

국민신당은 1997년 11월 초순부터 강연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그동안 개발된 100개 공약을 모아 발표하였다. 국민신당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에서는 금리를 2002년까지 7% 수준으로 낮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대외통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하고 금융안정대책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당 총재직의 분리를 추진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며 각료·감사원장·대법원장·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현재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고,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하며 주민투표·주민발안제도 도입과 법정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경찰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이원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한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및 조기통일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남북 무역협정 체결, 남북 직항로 개설, 남북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남북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등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 밖에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과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등도 제시하였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교육선진국 진입을 위해 교육재정을 GNP대비 6% 이상 확보하고 유아교육기간을 학제화하며 2000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광고 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을 막기 위한 방송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대학입학 전형방식을 다양화하고 학생선발권을 전면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예산을 GNP 대비 10% 수준까지 증액하고,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며 노인 실버타운 건설, 장애인 창업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과 재정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비민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건설국민승리21

건설국민승리21은 노동계와 재야 출신인사들을 주축으로 선거대책본부와 정책·홍보·조직 등 집행기구, 자문교수단, 직능위원회, 20~30대 청년이 주축이 된 ‘푸른21’ 등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위원장에 진보정치연합 대표인 노회찬을 임명하여 선거대책기구 구성을 완료하였다.

1) 선거전략

건설국민승리21은 IMF 사태로 선거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정리해고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는 계기로 삼아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공단주변의 근로자와 회사원을 상대로 지지도를 높여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위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재벌해체’, ‘반재벌·반특권·선진사회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2) 선거공약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국가보안법과 안전기획부법 폐지를 제시하였다. 행정부처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을 해체하여 예산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하며, 내무부와 공보처는 폐지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지원과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며 방위비를 절반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은행 독립과 재벌체제 해체를 제시했다. 또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행정체계를 수립하고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식품검역제도를 강화하며, 직거래를 통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교육·문화분야에서는 교육재정을 GNP 대비 7%로 확보하고, 11년 무상교육

실시를 제시했다. 또 정부예산의 1.5%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고 영화심의제를 폐지하며, 민족사 정립을 위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평생고용을 보장하고 주당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실업 억제 대책으로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마. 기타 정당의 선거전략과 공약

공화당의 허경영 후보는 ‘조선왕조’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신 세종대왕 시대’ 구현을 구호로 내걸었다. 그는 평생 ‘빈민사업’에 헌신한 경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거운동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다. 당의 상징 꽃과 마스코트도 각각 무궁화와 황소였다. 선거공약으로는 조선왕조를 부활하여 왕에게 외교권만 부여하자면서, 대통령 사면권 폐지, 국회의원제도 폐지, 직능단체의 장이 의원이 되는 의회제도 실현, 핵 보유, 금융실명제 폐지, 화폐개혁, 주민세·소득세·자동차세 등 직접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바른나라정치연합의 김한식 후보는 대학생 등 청년층과 기독교인을 두 주축으로 해 득표전략을 세웠다. 목사인 김한식 후보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각 지방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시간을 이용 ‘사랑의 정치’와 ‘내 탓 나부터 운동’을 강조하였다. 선거공약으로는 정치·외교·국방정책에서 흡수 통일 배제, 탈북자 수용방안,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경제주체 간 갈등 구조 해소, 교육환경 평가제를 통한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립, 언론 독립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는 ‘한얼교’ 창시자로 “민족정기 말살과 정치인·경제인 등 지도층의 진실성 부족이 경제파탄을 초래하였다”며 ‘한얼정신 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주요 구호로 내세웠다. 선거공약으로는 정부축소, 비무장지대에 제3의 국가를 설립, 기술과 고급 두뇌 해외 송출, 학교 교육 개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2. 선거운동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비해 그 주체, 기간, 방법 등이 크게 달라졌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금지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선거운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연설원 등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미성년자,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등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운동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총 22일간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선거운동기간 28일에 비하여 5일이 줄어들었다. 여야가 선거과열을 막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기간을 5일 단축함에 따라 선거운동기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선거운동방법’은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14가지)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법에서 금지·제한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선거운동으로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방송연설, 방송광고, 신문광고, 정당연설회,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었다. 특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와 공영방송 텔레비전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주요 선거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작성하여 1997년 11월 30일까지 전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3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가로변의 건물벽면이나 담벼락 등에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동은 인구 500인에 1매, 읍은 인구 250인에 1매, 면은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이었다. 다만 동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인구 1,000인에 1매의 비율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120,591 개소에 총 844,137매의 선전벽보가 첩부되었다.

후보자들은 선전벽보에 자신의 사진과 선전구호 등을 게재하였다. 기호1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라는 선거구호를 게재하였다. 자신의 깨끗한 정치적 이

미지와 경제에 밝은 조순 총재와 연대하였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기호2번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든든해요”, “경제를 살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경륜과 안정감 및 경제난 극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호3번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젊은 한국, 강한 나라”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기호4번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는 태극기와 한반도를 조합한 바탕위에 자신의 소형 사진을 넣고,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문구를 게재하였고, 기호5번 공화당 허경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과 선거공약을 게재하였다. 기호6번 바른정치연합 김한식 후보는 “사랑의 정치”라는 구호를 게재하여 화합을 강조하였다. 기호7번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얼정신 신정일”이라는 구호를 게재하여 한얼사상을 강조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나. 소형인쇄물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소형인쇄물은 책자형과 전단형 두 가지였다. 책자형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 모두 후보자가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부재자신고인이나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할 수는 없었다.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1997년 12월 3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정 제출매수는 16,140,030매였는데, 이를 전부 제출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및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3명뿐이었다. 나머지 후보는 일부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소형인쇄물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하지 못한 것이다. 제출된 책자형 소형 소형인쇄물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매세대에는 12월 6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월 8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발송된 수량은 55,061,668매(부재자신고인 3,672,030매, 매세대 51,389,638매)였다.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1997년 12월 9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법정 제출매수는 15,268,930매였다. 법정 제출매수가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비해 적은 것은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발송하지 않고 매세대에만 발송하기 때문이었다. 전단형 소형인쇄물도 역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명의 후보만 법정 제출매수를 다 제출하였고, 나머지 후보는 일부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1997년 12월 1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하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발송된 수량은 77,424,119매였다.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법정 제출매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비해 871,100매가 적었으나, 발송매수는 오히려 22,362,451매가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다른 4명의 후보자들이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보다 더 많이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1매 이내로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 더 많이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후보자별 구체적인 소형인쇄물 제출내역 및 발송 상황은 <표 4-4>와 같다.

〈표 4-4〉 제15대 대통령선거 소형인쇄물 제출 및 발송상황

(단위 : 매)

후보자	구분	책자형 소형인쇄물			전단형 소형인쇄물		
		법정 제출매수	후보자 제출매수	선관위 발송매수	법정 제출매수	후보자 제출매수	선관위 발송매수
계		112,980,210	57,105,251	55,061,668	106,882,510	79,546,111	77,424,119
한 나 라 당 이회창		16,140,030	16,140,030	15,568,961	15,268,930	15,268,930	14,777,880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	16,140,030	15,568,961	〃	15,268,930	14,777,880
국 민 신 당 이인제		〃	16,140,030	15,568,961	〃	15,268,930	14,777,880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	900,918	837,001	〃	15,125,010	14,699,870
공 화 당 허경영		〃	7,527,965	7,341,830	〃	5,923,471	5,782,700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	256,278	175,954	〃	7,541,455	7,625,484
통 일 한 국 당 신정일		〃	-	-	〃	5,149,385	4,982,425

후보자들은 소형인쇄물에 자신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상대편 후보의 단점을 공격하는 내용을 주로 게재하였다. 기호 1번 이회창 후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표지에 선전벽보에 게재한 것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내지에서는 구시대 3김 세력과 정치개혁 세력간의 대결로 부각시키기 위해 문답식으로 “거짓말, 속임수, 경선불복,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하회탈춤에 등장하는 과거승의 탈을 상징적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을 실은 뒤 “몸도, 마음도 낡은 구시대 인물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777 경로당으로는 곤란합니다. 벌써 은퇴시켜야 했을 흑백 TV처럼 장식품이 아니라면 21세기까지 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김대중 후보를 겨냥하였다.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시비를 의식하여 자신의 공군 장교 시절 사진도 넣었다. 조순 총재와 손을 잡은 사진과 함께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의 만남”이라고 게재하여 두 정치인의 결합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하였다.

기호 2번 김대중 후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표지에 20대 여성모델을 넣고, “든든해요 김대중”이란 글자만 게재하여 단순화하였다. 내지에는 클린턴 대통령,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자신의 정치적 경륜을 부각시켰다. 또 자신의 저서 『대중참여 경제론』 일부를 게재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경제에 자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회창 후보를 겨냥하여 “나라 망친 정권과 그 정권에서 요직을 맡다가 옷만 바뀌 입은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도력도, 경륜도, 비전도 갖추지 못한 준비 안 된 후보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게재하였다. 반면에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후보임을 강조하였다. 책자형 소형인쇄물 16면 중 6개면은 경제, 교육, 복지,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제에 관한 공약을 요약하여 게재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사례도 함께 게재하였다.

기호 3번 이인제 후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표지는 선전벽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젊고 강함을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내지에서는 찌그러진 깡통을 배경으로 “거지 한국! IMF 경제 식민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자식 병역문제로 국군 통수권조차 행사 못할 사람”이라고 게재하여 이회창 후보를 겨냥하였다. 또한 “나눠먹기식 내각제”라고 게재하여 김대중 후보도 겨냥하였다. 병역문제를 의식하여 자신의 육군 병장 때 사진을 싣고, “행동하는 일꾼 대통령”이라는 제목 아래 주먹을 불끈 쥐거나 쌀가마니를 지는 모습 등을 게재하며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기호 4번 권영길 후보는 “이제는 진보정치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자신이 서 있는 모습과 양옆으로 진보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자신의 경력 등을 게재하였다. 기호 5번 허경영 후보는 ‘핵 주권과 경제적으로 강력한 한국건설’, ‘공화당의 10대 혁명공약’ 등을 게재하였다. 기호 6번 김한식 후보는 “사랑의 정치”라는 선전구호 등을 게재하였다. 기호 7번 신정일 후보는 자신의 정치·경제적 활동상황에 관한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소형인쇄물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한때 난처한 입장에 놓이기도 하였다. 한나라당은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거짓말과 속임수의 상징으로 ‘과계승 탈’ 그림을 넣었다. 이에 대해 전국불교운동연합이 1997년 12월 5일 성명을 내고 불교와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항의하였다. 또한 조계사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3개 불교단체 대표들이 모여 성토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한나라당은 12월 7일 김태호 사무총장 명

의로 불교계 각종단의 총무원장들에게 사과서한을 보냈고, 조순 총재가 조계사를 찾아가 사과하였다. 다음날 이회창 후보도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을 찾아가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월주 총무원장이 이회창 후보의 솔직하고 정중한 사과의 뜻을 불교계를 대표해 수용하겠다고 밝혀 파계승 탈 문제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소형인쇄물



다. 현수막

현수막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3매까지 게시할 수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법정 게시매수는 총 909매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법정 게시매수는 총 3,838매(구·시는 관할 동수, 군은 읍마다 2매, 면마다 1매)였는데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909매로 대폭 줄어들었다. 방송과 신문 등의 매체가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현수막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선거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및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법정 게시매수 909매를 다 게시하였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882매, 허경영 후보는 416매, 김한식 후보는 526매, 신정일 후보는 391매밖에 게시하지 못하였다.

현수막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 정당명, 정당의 상징 마크나 심벌, 선거구호 등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선거구호를 게재할 수 없었으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게재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자신을 최대한으로 선전할 수 있

는 짝막한 선거구호를 게재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현수막에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라고 게재하여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와 경제에 밝은 조순 총재와의 연대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든든해요 - 경제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정치적 경륜과 안정감 및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인제 후보는 “나라도 경제도 젊어집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이회창 김대중 후보에 비해 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



라. 방송연설

방송연설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11회 이내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 후보 측에서 총 44회(후보자 22회, 연설원 22회)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었다. 1회의 방송연설 시간은 20분 이내였다. 방송연설 시간대는 각 후보자 측에서 정하되, 그 시간이 중첩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하였다.

방송연설에 의한 선거운동은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 때에 도입되었다가 유신시절인 1972년 제7대 대통령선거 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1년 제12대 대통령선거 때에 부활되어 제15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유지되었다. 방송연설 횟수가 제12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합하여 8회(후보자 6회, 연설원 2회)였으나, 제13대 및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20회(후보자 10회, 연설원 10회)로 늘어났고, 제15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다시 44회(후보자 22회, 연설원 22회)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방송연설이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송연설은 비용이 높아서 유력 후보자가 아니면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회창 김대중 후보를 제외하고는 법정횟수의 방송연설을 모두 실시한 후보자는 없었다. 이인제 후보도 7회밖에 못하였고, 권영길 후보는 1회만 하였으며, 나머지 후보는 1회도 하지 못하였다.

〈표 4-5〉 제15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상황

(단위 : 회)

후보자별	구 분	계	텔레비전	라디오
	후보자			
기호 1번 한 나 라 당 이회창	후보자	22	11	11
	연설원	22	11	11
기호 2번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자	22	11	11
	연설원	22	11	11
기호 3번 국 민 신 당 이인제	후보자	3	3	-
	연설원	4	4	-
기호 4번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자	1	1	-
	연설원	-	-	-

※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후보는 방송연설을 하지 않았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주로 분야별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3김 청산을 주장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연설의 주제를 “안정이나 혼란이냐”로 잡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IMF 재협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일관된 입장과 김대중 후보의 주장을 대비시켜 “이회창은 안정, 김대중은 혼란”이라는 논리를 펴며 김대중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도 하였다.

이회창 후보의 연설원으로는 한나라당 조순 총재를 비롯하여 최병렬 이부영 제정구 김홍신 의원 등이 나섰다. 김홍신 의원은 방송연설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정계은퇴 및 복귀에 대해서 “말 바꾸기 명수”, “거짓말쟁이 김대중”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든든해요 김대중”이 아니라 “불안해요 김대중”이라는 말도 하였다.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도 연설원으로 나와 이회창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와 강직함 등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또한 연설원으로 나서 이회창 후보가 깨끗한 정치인이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2번 김대중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주로 자신의 정치역정을 설명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지역감정 극복 등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특히 김대중 후보는 방송연설의 30% 정도를 경제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는 경제 실정의 주요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으며, 정권교체만이 경제해결의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설 말미에서 자신은 “이 선거가 마지막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후보의 연설원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 및 박태준 총재 등이 나섰다. 또한 주부,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등이 나서서 방송시간대별 주요 시청자 층에 따라 주제를 차별화하는 연설을 하였다. 노무현 부총재는 “후회 없는 선택”이란 주제로 부산출신인 자신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게 된 심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1996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을 수해로 잃었다는 운영자가 “조국에 바친 아들, 가슴에 묻은 아들”이라는 주제로 자식을 잃고 난 뒤 아픔을 소개하는 연설을 하여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겨냥하기도 하였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강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을 일꾼 대통령, 젊은 대통령임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특히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는 한나라당의 ‘사표론’을 반박하고, “이인제를 찍으면 이인제가 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연설원으로는 박찬중 고문이 나서 “김대중·김종필·박태준 세트, 이회창·조순 세트, 이인제·박찬중 세트 중 어느 팀이 가장 젊고 유능한가”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마. 방송광고

방송광고는 1회 1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30회까지 할 수 있었다.

방송광고에 의한 선거운동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 처음 도입되었다. 그때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5회까지만 허용하였는데,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0회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방송광고 역시 방송연설과 같이 그 비용이 높아서 유력 후보자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회창·김대중 후보는 법정개최 횟수 60회(텔레비전 30회, 라디오 30회)를 모두 광고하였지만, 권영길 후보(9회)와 허경영 후보(30회)는 일부만 하였고, 나머지 이인제 김한식 신정일 후보는 1회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인제 후보는 TV 방송광고 2편을 제작해 놓았지만, 광고비용 부족으로 실제 광고는 하지 못했다.

〈표 4-6〉 제15대 대통령선거 방송광고 상황

(단위: 회)

후 보 자 명	계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기호 1번 한 나 라 당 이회창	60	30	30
기호 2번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60	30	30
기호 4번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9	9	-
기호 5번 공 화 당 허경영	30	30	-

※ 이인제·김한식·신정일 후보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았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승리의 노래’, ‘희망의 목소리’, ‘약속’, ‘퀴즈’, ‘택시’ 등 7편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승리의 노래’ 편 광고는 산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란 바탕에 기호 1번이 적혀 있는 대형 깃발을 들고 있는 장면과 대형선박을 진수하는 장면 등 여러 광경을 빠르게 전개시킴으로써 이회창 후보가 나라를 도약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택시’ 편 광고는 택시 안에서 기사와 승객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회창 후보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낫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퀴즈’ 편 광고는 방송앵커 출신인 이윤성 의원이 사회자로 출연하여 퀴즈풀이를 진행하면서 다른 후보자의 문제점은 부각시키고 이회창 후보의 좋은 점은 돋보이게 하는 내용이었다. 선거 중반에 방영된 ‘믿을 수 없는 사람’ 편 광고는 김대중 후보의 과거 정계은퇴와 복귀 과정, IMF 재협상 발언 등을 찍은 뉴스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김대중 후보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DJ와 함께 춤을’, ‘아버지와 아들’, ‘젊은이들과 함께’, ‘팩시밀리’ 등 6편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DJ와 함께 춤을’ 편은 당시 대중가요 인기그룹의 노래를 배경으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및 박태준 총재가 등장하여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라는 멘트에 “그림”, “물론” 등으로 화답하는 내용이었다. ‘젊은이들과 함께’ 편 광고는 노무현·김민석·추미애 의원 등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들의 활동 장면 등을 보여주며 김대중 후보가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편 광고는 IMF 재협상론으로 김대중 후보가 공격당하던 시기에 방송되었는데, 아버지와 부도난 회사의 사장인 아들의 대화를 드라마 형식으로 엮어 경제위기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내용이었다.

바. 신문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일간신문에 총 70회 이내로 할 수 있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각 일간신문에 4회 이내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지 및 지방지를 포함할 경우 법정 광고 가능횟수가 260회 이상이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횟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총 광고횟수를 70회로 제한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비해 법정 광고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나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70회의 광고를 모두 하나의 일간신문에 하거나, 여러 일간신문에 분산하여 할 수 있었다.

신문광고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력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면 법정 광고횟수를 모두 채우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광고의 비용보다는 저렴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후보자들이 신문광고를 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법정 광고횟수인 70회를 다 하였고, 이인제 후보는 66회를 하였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6회 이내의 광고를 하였다.

〈표 4-7〉 제15대 대통령선거 신문광고 상황

(단위: 회)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통일한국당 신정일
70	70	66	6	4	3	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신문광고의 문안 중에는 “약속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인”, “유일한 선택 이회창”,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중반에 이르러 IMF 재협상론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자 김대중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냈다. 이때의 신문광고 문구 중에는 “네 탓? 내 탓? 바로 이것이 3김 정치의 고질입니다”, “김대중 후보의 국제통화기금 재협상 주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등이 있었다. 또한 “정치 9단의 40년 동지 김대중 후보는 제2의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아라” 라는 문구로 김영삼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신문광고(12월 3일 조선일보)

네 탓? 내 탓?

언제까지 경제파탄의 책임전가만 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3김 정치의 고질병입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저는 물론 정치권 모두에게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책임전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책임공방을 중지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회창의 경제 살리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장경유치의 고리를 끊어 IMF 아물 자유
- 금융실명제를 대폭 완화
- 할가 법안, 알리니 격정해소
- 중소기업 살리고, 농어촌 투자 강화
- 준비된 비자금이나 밀안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 튼튼한 경제를 약속하는 깨끗한 정치 - 이회창입니다.

1 유일한 선택
가용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경제실정 책임, 국제통화기금 재협상,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극복 등 일관성 있게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신문광고를 냈다. “구멍난 나라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를 부도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등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든든해요 김대중”, “경제외교력이 있는 든든한 대통령 김대중”, “한나라당이 망친 경제 김대중이 살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후보가 제일 낫다는 내용의 광고도 있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신문광고(11월 28일 동아일보)



구명난 나라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 "난 이제 여당이 아니요. 모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재인
김대중

지금의 IMF치욕은 인재(人災)입니다.
총리 3명, 경제부총리 3명, 전직리표 등 37명. 당경희에서 모든 경제정책 협의, 고등공무원의 파견근무 등- 지금까지 경제를 맡긴 주역들은 지금 한나라당에 모여있습니다. 당 이름만 바른다고 책임이 없어지고 갑자기 능력이 생기니까?

경제를 망쳐놓고도 또 정권 잡겠다고 합니다.
책임이려 하지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현 경제위기가 이제부터 경제지식을 배우고 숫자를 외워서 해결 가능한 것입니까?

국제 경쟁력을 가진 지도자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얻어내고 국력을 지킬 수 있는 최고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21세기 대통령,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가 망친경제
김대중이 살립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TV 광고 안내
 11월 28일 19:00 KBS1 TV(당선방송)
 11월 28일 20:00 MBC TV(뉴스쇼)
 11월 28일 20:00 MBC TV(뉴스쇼)
 11월 28일 20:00 KBS2 TV(당선방송)
 11월 28일 20:00 KBS2 TV(당선방송)
 11월 28일 20:00 KBS2 TV(당선방송)
 11월 28일 20:00 KBS2 TV(당선방송)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신문광고에 “젊고 강한 지도자, 이인제가 확 바꾸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유권자들에게 젊고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였다. 한나라당이 “이인제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주장을 하자 “이인제를 찍으면 이인제가 당선됩니다. 3%만 더 밀어주십시오”, “1%만 더 밀어주십시오” 등의 내용으로 이를 반박하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신문광고(12월 16일 중앙일보)

확 바꾸시다!

버림받은 선 나라,
깨끗한 이인제가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나라를 망친 사람에게, 다시 맡기시면 안됩니다.
깨끗한 이인제가이 실정국속의 고리를 풀 수 있습니다.
정치세력이 없는 이인제가이 혼신한 인재를 쓸 수 있습니다.
자세박이 있는 이인제가이 국민과함께 이를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표 쟁는 이인제가이 경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의 주어야 될 젊은이들에게 쏘아줍니다.
젊고 강한 이인제가이 뜻을 모아주십시오.
소중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신기미만을 이루어주십시오.
이인제가 반드시 정치야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인제를 찍으면
이인제가 당선됩니다. 1%만 더 밀어주십시오

**기
호
3
이
인
제**

* 일부 언론이 여론조사를 하지않는다



사. 정당·후보자 연설회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1회 5시간 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 이내,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정 개최횟수는 총 335회였다. 이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법정 개최횟수인 1,540회(308개 개표구마다 5회)에 비해 거의 5분의 1정도로 줄어든 수치였다.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이었다. 특히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유력 정당의 후보자 3명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중이 모이는 연설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청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그에 따른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여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각 정당에서 연설회 개최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15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어져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하여 연설회의 개최장소를 옥외가 아닌 옥내로 제한하고, 법정 개최횟수도 335회로 대폭 줄였다.

정당·후보자 연설회의 법정 개최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각 정당은 이 개최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가 200회로 가장 많이 개최하였고, 한나라당은 60회, 건설국민승리21이 28회, 국민신당은 6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정당은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표 4-8〉 제15대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연설회 개최 상황

(단위: 회)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60	200	6	28

※ 공화당 허경영,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는 정당·후보자연설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처럼 정당·후보자 연설회의 개최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다. 첫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사상 처음 개최되었고, 방송연설과 방송광고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당·후보자 연설회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당·후보자 연설회와 비슷한 새로운 선거

운동방법인 ‘공개장소 연설·대담’(일명 ‘거리유세’)이 허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유권자들이 연설회장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권자들은 안방에서 방송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정견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정당연설회장을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청중들이 모이지 않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정당·후보자 연설회 개최횟수가 200회로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는데 그 이유는 ‘DJP 연합’ 때문이었다. 즉,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가 충청도와 강원도를, 박태준 총재가 경상북도를 순회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소규모 연설회를 많이 개최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신당의 정당·후보자 연설회 개최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정당·후보자 연설회 대신에 지구당창당대회를 많이 개최했기 때문이었다.

정당·후보자 연설회에서 후보자나 연설원들은 정치철학 및 선거공약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상대 정당 후보자의 약점도 공격하였는데 선거종반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연설회를 통해 각 정당이 밝힌 내용은 앞의 ‘방송연설’과 ‘신문광고’ 등에서 기술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997년 11월 27일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연설회에서 “깨끗한 정치를 통해 망가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 다음날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연설회에서는 “기아자동차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아 경제위기가 왔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지도력은 국민에게 재앙”이라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돌렸다. 또한 그는 “김대중 후보가 경제의 잘못을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야당 총재로 있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느냐”며 정경유착이 빚은 폐해를 지적하고, 김대중 후보에게도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연설회를 통해 ‘국가부도사태 책임론’과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는 충남 경북 강원도를 순회하며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회를 많이 개최하였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충남 아산 연설회에서 “나라를 부도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였다. 그는 1997년 12월 2일에 제천, 충주, 음

성지역의 연설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경제과탄의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였다”, “국가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국가를 부도낸 정권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며 이회창 후보를 비난하였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12월 11일 속초, 동해, 정선지역의 연설회에서 “김대중 후보는 사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자신을 믿는다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아.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과 그 배우자 및 연설원(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2인)은 도로변이나 광장, 공터, 시장, 공원, 주차장, 대합실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었다. 선거법에서는 이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이라고 불렀는데, 일명 ‘거리유세’ 라고도 불렀다. 연설·대담에는 자동차 1대와 여기에 부착된 확장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대통령선거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었다. 앞에서 기술한 정당연설회는 개최장소(옥내)와 개최횟수(시·도마다 2회, 구·시·군마다 1회)의 제한을 받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개최하여야 하지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그러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 유용한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각 후보자측은 지명도가 높은 인사 등으로 새물결유세단(한나라당), 파랑새유세단(새정치국민회의), 장바구니유세팀 등의 유세반을 조직하여 전국을 돌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개최하였다. 연설내용은 주로 경제위기와 병역면제 의혹 등에 관한 것이었다. 선거종반에는 국제통화기금 재협상론, 이인제 후보와 관련된 사표론, 김대중 후보와 관련된 건강과 사상문제 등도 거론되었다.

기호 1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해 김대중 후보는 듣기 좋은 거짓말을 잘하는 후보자라고 비난하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극도의 혼란이 올 것” 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그는 “김대중 후보가 느닷없이 국제통화기금과 재협상론을 꺼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차손이 무려 25조 원이 났다” 며 김대중 후보의 국제통화기금 재협상론을 비판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에게 찍는 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표가 되어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를 도와주게 된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충남지역 유세에서 DJP 연대를 빚대어 “김종필 명예총재는 과거 정권마다 2인자를 하다가 또 다시 2인자를 하려고 하는데 충청인은 그렇게 자존심도 없느냐”며 김종필 명예총재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 이회창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이회창 후보의 연설원으로는 한나라당 조순 총재, 이기택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이한동 대표, 이철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이 나섰다. 이기택 의장은 항간에 김대중 후보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15대 대통령은 할 일이 많은데 선거 1주일을 앞두고 국민 앞에서 연설도 못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다”, “연설을 잘하는 김대중 후보가 국민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안에서 회의만 하고 있다”며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한동 대표는 김대중·김종필이 집권하면 내각제 개헌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이인제 후보를 뽑으면 모든 선거에 진 사람이 불복하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하며 이회창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철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 등은 김대중 후보의 국제통화기금 재협상론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였다고 하며, “집에 불이 나 온 가족이 불끄기에 급급하고 있는 마당에 부채질을 해대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김대중 후보를 비판하였다.

기호 2번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경제파탄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자신을 써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는 “경제를 망친 책임은 경제를 잘 모르는 김영삼 대통령 대신 모든 권한을 행사한 한나라당에 있다”, “나라 경제를 망친 총리·부총리·장관·청와대 비서관 등이 다 모여 있는 당이 한나라당이다”, “여당이 나라를 부도내 국민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했으니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하는 등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정권을 주면 혼란만 올 것이다”, “나라를 파탄낸 세력이 집권하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회창·이인제 두 후보는 초보 항해자이지만 자신은 노련한 항해 9단이며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김대중 후보의 연설원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 김민석 의원, 신계륜 전



▶ 김대중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의원 등과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 등이 나섰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김대중 후보의 사상을 의심했다면 그와 연대했겠느냐”며 주로 김대중 후보의 사상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노무현 부총재는 이회창 후보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민석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새정치국민회의의 파랑새 유세단은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파랑새 유세단은 서울 명동에서 ‘정권을 바꿉시다’라는 주제로 정권교체의 구호를 형상화한 ‘넥타이 바꿔 매기’ 행사도 펼쳤다. ‘넥타이 바꿔 매기’란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이 연설회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서로 넥타이를 바꿔 매는 것이었다.

기호 3번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공개장소 연설을 통해 김영삼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회창 후보에게 국가부도의 책임이 있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멀쩡한 아들들을 군대에 안 보낸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김대중 후보에 대해



▶ 이인제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서는 팔순을 바라보는 노쇠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젊은 대통령이 필

요하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한나라당에서 이인제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는 사표론을 제기하자 “이인제를 찍으면 이인제가 되지 왜 김대중이 되느냐”며 반박하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 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검은 돈을 5백억 원씩이나 끌어대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회창 후보를 비난 하였다.

기호 4번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는 전국의 공단지역을 돌며 주로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정경유착, 재벌구조 타파 등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권영길 후보는 1997년 12월 11일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MF에서 요구한 ‘대통령 후보 대국민 이행각서’에 서명한 후 “국제통화기금이 국회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한다”고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자.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 일간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1회, 인천케이블 TV네트워크와 경인일보 및 인천일보 공동주최로 3회 등 총 4회의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당초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개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전을 정견·정책 대결로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언론기관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언론기관 고유의 기능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7년 5월초 중앙일보와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위법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7년 7월초 “언론기관 또는 언론단체가 취재·보도 차원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위법성 시비를 가라 앉혔다.

선거일을 1개월 정도 남겨둔 1997년 11월 14일,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법성 시비는 완전히 사라졌다. 위법성 논란이 해결되자 대담·토론회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텔레비전 방송사 12회, 라디오 방송사 6회, 신문사 11회(텔레비전 방송사와 공동개최 7회 포함), 언론단체 1회로 총 30회의 대담·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대담·토론회는 1997년 6월 말까지는 주로 신문사와 방송사가 공동 주관하였다. 그러나 언론사 간의 경쟁으로 후보자의 출연 날짜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자 7월부터는 방송협회 주관으로 방송사 간 토론회 일정을 조정하였다.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자는 7월 전까지는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3당의 입후보예정자들이었다. 7월 이후에는 TV 방송 3사 보도본부장들로 구성된 TV토론실무위원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후보와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 당내 공식절차를 거쳐 최종 지명된 후보 등을 초청대상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러자 이 기준에 미달하여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입후보예정자 중에 토론회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반발한 사람도 있었다.



▶ 제15대 대통령선거 언론기관 대담·토론회(1997년 11월 17일 조선일보 주최)

대담·토론방식은 주로 패널리스트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이외에 연설 형식과 토크쇼 또는 오락프로그램 형식도 있었으나, 합동토론회 형식으로는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지율 변동에 따른 후보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후보자들은 지지율이 높은 때에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지율이 낮은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997년 7월 하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이회창 후보는 당시 합동토론회를 반대하였으나 지지율이 하락한 10월 중순경에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김대중 후보는 7월 하순경에는 찬성하였으나 지지율이 올라간 10월 중순경부터는 선거기간 중의 합동토론회 개최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두 후보에게 지지율이 뒤지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합동토론회에 참석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후보자 간의 의견차이로 합동토론회는 세 차례만 개최되었다.

언론기관에서 개최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동안의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주최측의 공정성 문제로 다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월간 『한국논단』이 1997년 10월 8일 주최한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KBS 등 방송 3사에서 5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된 이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김대중 X파일』이란 책자에 나온 내용의 진실 여부와 ‘오익제 방북 사건’ 등을 거론하고, “황장엽을 만나보았더니 김정일이 김대중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 김대중 후보에 대한 용공 의혹을 집중 제기하였다. 반면에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는 “연설을 들어보았더니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후보다”라며 편향적인 발언을 하였다. 토론회 방영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토론 진행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한 방송사에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³¹⁾.

차.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제15대 대통령선거일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공영방송사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출자한 방

31)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원우현)는 1997년 10월 21일 ‘한국논단 주최 대통령후보 사상 검증 대토론회’ 등 7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선거관련 심의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송법인인 문화방송(MBC)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 MBC와 SBS, YTN이 공동주최로 모두 4회가 개최되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일부 후보자들이 참석을 기피하여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를 필요로 하게 되어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공영방송사는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언론기관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많으며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두어 대담·토론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7년 11월 19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기구로 발족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방송법인에서 추천한 2명, 방송학계·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각 1명,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5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 등 총 11명이었다. 위원장은 유재천 한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7년 11월 20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가 토론회 일정과 초청 후보자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 기준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자’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로 정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초청대상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3명뿐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텔레비전 대담·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다만, 다른 정당의 반발을 고려하여 초청대상 기준에 미달한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1회의 대담·토론회를 더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총 4회의 대담·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명의 후보자가 참석한 대담·토론회의 주제는 회차별로 나누어졌다. 1997년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대담·토론회는 경제분야, 12월 7일 개최된 제2차 대담·토론회에서는 정치·외교·안보분야, 12월 14일 개최된 제3차 대담·토론회는 사회·문화분

야에 대한 것이었다. 기타 후보자들이 참석한 대담·토론회는 12월 14일 개최되었고, 토론주제는 국정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표 4-9>와 같다.

〈표 4-9〉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개최상황

(단위: 회)

구분	개최일자	참석 후보자	토론주제	비고
1차	1997. 12. 1. (월) 20:00~22:00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경제	
2차	1997. 12. 7. (일) 20:00~22:00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정치·외교·통일	
3차	1997. 12. 14. (일) 20:00~22:00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사회·문화	
4차	1997. 12. 14. (일) 10:00~12:00	권영길, 허경영, 신정일	국정 전반	김한식 불참

※ 4차 대담·토론회는 3차보다 10시간 먼저 개최되었으나 기술 편의상 4차라고 하기로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권영길 후보 등 기타 정당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대담·토론회를 당초 1997년 12월 10일(수요일) 오전 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이 자신들에게는 1회의 대담·토론회만 허용하고, 그것도 시청률이 저조한 평일 오전으로 정하였다며 반발³²⁾하여 일요일인 12월 14일로 조정된 것이었다.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사회자 1인이 하였고, 복수의 패널은 없었다. 토론회는 각 후보자별로 기조연설과 질문 및 답변, 반박과 재답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공영방송사 대담·토론회에 소요된 시간은 120분으로 방송3사의 시청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1분에서 1분 30초라는 짧은 답변시간과 지나치게 많은 단답형 질문 등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대결이 아닌 정치 공방으로 흘러갔다는 비판도 있었다. 각 회차별 대담·토론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권영길·신정일·허경영 등 3명의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초청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이 부여한 재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준에 못 미치는 4인의 후보자도 별도로 초청되어 방송토론회를 거쳤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다(1998. 8. 27 97헌마372 결정).

1) 제1차 대담·토론회(1997년 12월 1일)

제1차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1997년 12월 1일(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KBS 공개홀에서 KBS, MBC, SBS, YTN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 주제는 경제문제였다. 세 후보는 주로 '경제파탄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제파탄 책임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사실상 공조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공격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경제파탄의 원인인 정경유착을 저지른 장본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므로 우선적인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다음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정경유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공동책임론'을 폈다. 그러자 김대중 후보는 경제파탄을 야당이 책임지는 나라는 없으며, 한나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더욱 망칠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역시 경제파탄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이회창 후보가 현 정권에서 경제를 망친 인사들이 모두 국민신당에 있다고 반격하였다. 그러자 이인제 후보는 경제를 망친 인사가 모두 국민신당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반발하였다.

금융실명제에 대해 이회창, 김대중 후보는 실시유보 등을 주장하며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이인제 후보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금융실명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지금과 같은 초비상시기에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실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가정책의 경우 김대중 후보는 통화량 억제를 전제로 공정거래법 준수, 농수산물 도농간 직거래체제 확립, 생활필수품 가격억제, 소비자가 기업의 가격조작 및 공공요금의 인상을 감시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통화량 억제는 유동성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과 관계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고, 이인제 후보는 생활필수품가격 특별관리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업대책의 경우 세 후보자 모두 임금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실업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 후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주장하였고, 이인제 후보는 단기 대책으로 실업

자의 생활자금과 전직훈련을 위한 예산 3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실업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안정을 강조하였다.

세 후보자들은 경제문제 외에 다른 사안으로도 논쟁을 벌였다. 이인제 후보는 기초발언에서 유학 간 이회창 후보의 둘째 아들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그를 귀국시켜 키를 재야 한다며 이회창 후보를 공격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가 곧 사퇴할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반박하였다.

2) 제2차 대담 · 토론회(1997년 12월 7일)

제2차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 · 토론회는 1997년 12월 7일(일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MBC에서 KBS, MBC, SBS, YTN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토론 주제는 정치 · 외교 · 통일문제였다. 세 후보는 병역문제와 내각제 개헌, 안보 등에 관한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세 후보는 제1차 대담 · 토론회에 이어 제2차 대담 · 토론회에서도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관계자 모두에게 법적 · 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는 책임추궁은 하되 관료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회창 후보는 특별감사제나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30년간 정치를 하면서 강력한 야당을 이끌어온 김대중 후보도 경제파탄의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뿐만 아니라 3년 가까이 정권의 2인자였던 이회창 후보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격하였다.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 · 이회창 후보가 1996년 제15대 국회의 원선거 때에 내각제 저지를 호소하였는데,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개헌에 합의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내각제가 야권후보 단일화에 필요해 수락했으며, 내각제는 차선책이지만 21세기의 다양한 사회에 적합한 제도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그동안 내각제의

폐해를 수없이 지적해왔는데 소신이 바뀌었느냐며 공세를 취하였다.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한나라당 내에 내각제 찬성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인제 후보가 한나라당 김윤환·이한동 의원이 내각제 소신자임을 주장하자, 이회창 후보가 두 의원은 분명히 내각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며 반박하였다.

후보자 자신 및 가족의 병역문제를 놓고도 제1차 대담·토론회에 이어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그가 군대를 가지 않은 의혹,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는 그의 입영기피와 두 형의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되었다.

3) 제3차 대담·토론회(1997년 12월 14일)

제3차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1997년 12월 14일(일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SBS에서 KBS, MBC, SBS, YTN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의 토론 주제는 사회·문화문제였다. 세 후보는 주로 실업대책, 교육문제, 환경정책, 위성방송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진행된 관계로 토론주제와는 거리가 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 병역기피, 한나라당의 금품살포 기도설,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국제통화기금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 후보는 재협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회창 후보가 터무니없이 중상모략하고 있다면서 “이회창 후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후보냐”고 공격하였다. 이에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재협상이라는 말을 꺼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협상을 다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김대중 후보는 어느 나라 대통령후보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대중 후보는 국제적 불신이 생긴 원인은 정부가 부실 금



▲ 제3차 공영방송사 TV토론회관련 언론보도
(조선일보1997년 12월 15일)

용기관 정리에 대한 입장을 반복하고 단기 외채 450억 달러를 숨긴 탓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나 김대중 후보 모두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양쪽을 모두 비난하였다.

이회창 후보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대중·이인제 후보가 공조하여 “특권층에 대한 병역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자식을 둘이나 군대에 안 보내고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것이 과연 청소년 교육에 맞는가”라며 공격하였다. 이에 이회창 후보는 두 후보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거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서 자식의 문제를 놓고 건강부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격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전선을 지키는 현역 육군중령(대대장)이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이 되겠다는 상황에서는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어렵다며 양심선언을 하였다라는 주장도 하였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 소유 연수원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소문을 놓고 세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 이인제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한나라당이 돈을 빌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를 공격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한나라당이 사채시장에서 검은 돈을 끌어다 쓰려 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공격하였다. 김대중 후보도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탈세조장이며 부정선거 시도라고 합세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과 인건비가 없어 연수원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알아본 것이므로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20억 원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문제의 20억 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낸 선거위문금으로 당에서 공적으로 사용하였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과외 문제와 관련, 이회창 후보는 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대중 후보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을 주장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지원자 모두에게 입학할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인제 후보는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고교학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환경정책과 관련, 이인제 후보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방안으로 환경특별회계 신설과 환경세 부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필요하다면 환경세 신설도 좋다고 동의하였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환경특별회계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고, 환경친화정

책을 기본으로 삼아 환경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해서 이회창 후보는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가보상과 같은 방법은 재원문제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대중 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조정과 함께 지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제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4) 제4차 대담·토론회(1997년 12월 14일)

제4차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1997년 12월 14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에서 KBS, MBC, SBS, YTN이 생방송으로 실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공화당 허경영 후보,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3명이 참석하였다. 바른나라 정치연합 김한식 후보도 참석대상이었으나 목사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 주제는 국정전반에 관한 것이었고, 패널리스트 없이 사회자가 12개 분야에 대해 공통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후보자 간의 상호토론은 하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는 국제통화기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번뇌 끝에 결심하였다며 삭발한 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영길 후보는 경제파국의 원인은 재벌체제와 정경유착 때문이라며 재벌해체를 주장하면서 재벌 총수를 사퇴시키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지 않고는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실업자 대책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제시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주 4시간만 줄여도 1백만 명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영 후보는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법통을 이은 후보자임을 내세우면서 화폐개혁, 금융실명제 완전 폐지, 직접세에서 간접세로의 완전 전환, 토·일요일 휴일 제도를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문제에서는 대학 명칭을 없애야 차별이 없어진다는 주장을 하였다.

신정일 후보는 전통사상인 한얼정신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라크 유전개발과 말레이시아 해안개발 등 해외투자 사례를 소개하고, 자신이 경제난 해결의 책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특별법을 만들어 이자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에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의 정보저장 장치에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유권자들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그 주체가 되었지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외)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었다.

후보자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과 유세일정 등의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였다. 또한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개설내용을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컴퓨터통신망에도 수록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한국텔’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당 기구와 강령 및 정책 등을 소개한 ‘신한국탐험’, 대변인 브리핑과 논평 등을 모은 ‘신한국 소식통’, 전국 지구당 소식을 담은 ‘우리 동네 신한국’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새정치 네트’와 ‘DJ포럼 97’이라는 2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육성 인사말과 식견, 정책방향,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사진, 저서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당 지도부의 면모를 소개한 ‘새정치국민회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정권교체 사례를 모아 놓은 메뉴도 있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와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특히 권영길 후보는 대학생 및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통신 올빼미’란 애칭의 사이버 자원봉사단을 구성한 후, 이들로 하여금 컴퓨터통신 가상대결방에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대통령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8월 초순경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PC통신망에 자주 언급된 내용은 ‘이회창 후보 국민여론 1위 되는 법’,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 등이었다.

PC통신을 이용한 사이버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사는 1997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네 개의 컴퓨터 통신업체와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이버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저녁에 한 명씩 나와 두 시간 동안 패널리스트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질문 내용은 주로 후보자와 김영삼 대통령과의 관계, 김영삼 정부의 개혁 평가, 김대중·김종필 연대, 이회창·조순 연대, 청와대의 신당 지원 설, 양심수 문제, 인터넷 상거래 과세 여부, 병역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토론회는 하이텔 등 4개 컴퓨터 통신업체가 문자로 생중계하여 45만여 건의 누적 접속자수를 기록하는 등 PC통신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타. 기타 선거운동

앞에서 기술한 선거운동 외에도 경력방송과 전화, 표지판, 표찰, 수기, 완장, 어깨띠,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경력방송은 한국방송공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명, 직업, 주요 경력 등을 후보자마다 2분 이내에서 총 8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KBS의 TV와 라디오에서 후보자 당 각각 8회씩 경력방송을 실시되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할 수 없었다. 각 후보자 진영은 전화 선거운동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 당원들을 동원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였다.

한나라당은 가족이나 친구가 군 복무 중인 당원들을 동원해 군부재자 투표 선거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12월 17일 밤 12시까지 한 당원이 10통의 전화를 하도록 전국 지구당에 지시하였다.

국민신당은 각 지구당사에 “전화걸기 운동을 확산시킵시다”라는 격문을 내붙이고 ‘전 당원 전화걸기를 통한 50표 득표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젊은층의 기권방지를 위해 모든 당원들이 투표일인 12월 18일 오전에 투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1인당 유권자 50명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참여를 권유하였다.

표지판, 표찰, 수기, 완장, 어깨띠,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홍보사항을 게재할 수 있었다. 표지판 등은 일정한 규격으로 작성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선거운동원 및 연설원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표지판 등은 주로 선거사무원들이 몸에 두르거나 지니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되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유권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 정당연설회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각 정당은 자기 당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희망돌이’를 마스코트로 사용하였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측은 젊고, 강한 일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벌’을 마스코트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선거쟁점

가.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논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첫 번째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김영삼 대통령의 제14대 대통령선거자금 공개를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두 논란 모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자금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4절 선거운동” 참조).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 논란은 ‘김현철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김현철이 측근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던 120억 원에 대해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대통령선거자금의 입금여부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 내역’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였다. 또 대통령선거자금 전모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고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 및 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은 파악됐으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자유당 경리부 회계를 맡았던 김재덕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당시 하루에 10억 원가량을 지출했으며, 총액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발표해 김영삼 대통령의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재덕이 당시 공조직 선거비로 사용한 3,100여억 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자유당에서 선거를 함께 치렀던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도 이에 합세하여 당시 민주자유당의 공조직 자금은 최소한 4,000억 원대에 이르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논란 끝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5월 3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992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한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지, 또 대통령선거자금과 정당운영비나 활동비를 어느 선에서 구분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자금 문제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한 야권도 대통령선거자금은 총액만 공개하고 중립 내각구성과 함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밝히면 정국수습에 협력하겠다고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 비자금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자금과 관련한 또 하나의 논쟁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머물고, 김대중·김종필 총재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성사 단계에 접어들 즈음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1997년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후보가 6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365개 친인척계좌로 동화은행 등에 조성·관리해왔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 외에 6억 3,000만 원을 더 받았고 대통령선거 이후 쓰고 남은 비자금의 일부인 62억 원을 불법으로 실명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선거를 70여 일 앞둔 선거정국에 파란을 일으켰다.

당사자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정치를 하면서 경제인과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도 대가 있는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고 지목한 친·인척으로 하여금 직접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다. 또 예금계좌 등 자료 확보는 관계 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였고, 자료 입수 과정은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를 겨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0월 21일 신한국당이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한 후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해온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비자금 의혹사건수사에 착수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로 국가 전체가 대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수사 기술상 대통령선

거 전에 완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수사유보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의 이 같은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영삼 대통령 있다고 보고 김영삼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회창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자신의 경선자금은 물론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의 의혹이 있다면 그것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또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당적을 떠나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탈당을 요구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신한국당 내에서는 후보교체론이 더욱 거세게 일었고 민주계 의원들은 ‘후보용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또 그들 중 일부는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에 입당하는 등 당 내분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는 후보교체론을 일축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당 조직을 개편하였고, 선거전에서 ‘3김 청산’ 론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나서게 되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직후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취임일 이틀 전인 1998년 2월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뇌물 및 조세포탈·무고 등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였고, 실명제 위반혐의로 고발된 강삼재·이사철 의원에 대해서도



▶ 김대중후보비자금관련 언론보도(조선일보 1997년 10월 23일)

무혐의 처리하였다. 검찰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5개 기업에서 39억 원이 평화민주당의 당 운영비와 선거자금 등으로 전달된 사실과 노태우 전 대통령 ‘소심회’ 비자금 계좌와 청와대 경호실계좌, 또 대우그룹에서 6억 3,000만 원이 당비 형태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김대중 당선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책임 논란

“앞서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지만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에는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문제를 두고, 뒤이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제파탄 책임론’은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양강대결구도가 정립되면서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되었고, 선거전에서 2위로 복귀하려는 이인제 후보가 가세하여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김대중·이인제 후보가 사실상 공조를 통해 이회창 후보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에서 여당과 함께 정치를 한 야당에게도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공동책임론’으로 반박하며 공방이 전개되었다.

1997년 11월 26일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첫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이인제 후보는 경제파탄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총리 부총리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한나라당에 있다며, 이회창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경제위기의 바탕에는 정경유착이 있다며 30년 이상 여당과 함께 정치를 해온 김대중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정치를 잘못된 책임을 야당이 지는 나라는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나라의 경제를 망친 주역들이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면 또 경제를 망칠 것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후보는 1997년 11월 28일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도 “경제를 망친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대신 모든 권한을 행사한 한나라당에 있다. 그러므로 IMF 사태의 해법은 경제를 망친 사람들이 정권을 내놓게 해 경제를 이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1997년 12월 2일 강릉과 주문진 등에서 열린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 구멍을 누가 뚫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배부터 뜨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3김의 30년 부패정치에 있다고 하고 3김 정치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경제과탄 책임론을 반박했다.

이인제 후보는 1997년 12월 5일 예산 시장에서 열린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국가과탄의 책임자로 김영삼 대통령, 강경식, 김인호, 이회창을 거론하며 “멀쩡한 나라를 망쳐놓고 어디 고개를 내밀고 정권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회창 후보를 비난했다. 또 국민신당은 논평을 통해 문민정부 초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당 대표를 지낸 이회창 후보는 경제과탄과 국정문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과탄의 책임’을 두고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통제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협의이행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이같이 초긴축재정을 요구하는 합의안에 대해 시민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경제과탄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규탄집회가 열리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합의안의 이면계약 의혹이 증폭되고 정부가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 여부를 놓고 세 후보는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 논란은 1997년 12월 7일 공영방송사 TV토론회에서 김대중·이인제 후보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을 거론하면서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대중 후보는 성장률을 너무 낮게 잡아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인제 후보 역시 성장률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으므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이미 협상이 끝난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 IMF 재협상관련 언론보도(조선일보 1997년 12월 13일)

실제 1997년 12월 8일에는 외국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20%를 돌파하는 등 금융 불안이 가속화됐고, 일부 증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충격이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금융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1997년 12월 11일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국제통화기금과 재협상을 주장하여 금융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며 재협상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국제통화기금과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준수하면서 추가협상을 의미한다”고 해명하였다. 국민신당 역시 현 단계에서 재협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재협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로써 경제과탄 책임론으로 공지에 몰렸던 이회창 후보는 반격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재협상론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김대중 후보를 비판하였다.

그 뒤에도 여야는 신문광고, 방송연설과 방송광고 및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IMF 재협상에 대한 자신의 일관된 입장과 김대중 후보의 말 바꾸기를 대비시켜 이회창은 ‘안정’, 김대중은 ‘혼란’이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려고 했다.

김대중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세가 강화되자 청와대에 발송한 자신의 IMF 이행 서한과 이회창 후보가 사인한 각서를 신문광고에 나란히 게재하면서, “누가 국민의 편이냐”며 반박했다.

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논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장남 이정연, 차남 이수연)의 병역면제 의혹은 병역면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고의적인 감량여부였다. 의혹이 증폭된 것은 야권의 공세도 있었지만 몸무게 미달로 인한 병역 면제가 흔치 않을 뿐더러 병역면제 시점이 이회창 후보가 대법관이라는 사회지도층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경제과탄의 책임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이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은 그 뒤 ‘후보사퇴’ 공방으로까지 발전됐다.

1997년 7월 24일 김동진 국방장관은 전날 새정치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이 이회창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장남 이정연은 1991년 2월 보충대에서 체중 미달

로 5급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돼 제 2국민역으로 편입됐고, 차남 이수연은 1990년 1월 보충대에서 체중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았으나 특수층 자체 관리대상으로 4급으로 상향조정돼 1991년 방위병으로 입대했다가 다시 체중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장남의 1991년 신체검사 당시 체중은 45kg, 신장은 179cm, 차남의 1990년 1월 신검 당시 체중은 41kg, 신장은 165cm이었다”며 “두 아들은 특수층 자체로 엄격한 관리를 받아왔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새정치국민회의는 병역면제과정의 부정개입 의혹을 제기하였다. 1997년 7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장남의 경우 병역법과 국방부령에 따라 무종판정을 내려 체중 변화를 관찰하도록 돼 있으나 곧바로 면제판정을 받았고, 차남은 1985년 첫 신체검사 당시에 비해 10kg 이상 줄어든 것은 의혹이 큰데도 체중변화관찰 절차 없이 면제 판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연일 야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의혹이 증폭되자, 이회창 후보는 7월 28일 한국방송협회 등이 공동주관한 TV토론회에서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제를 받은 것”이라며 체중미달로 면제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자식을 불법적 방법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한국당내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고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후보교체론’이 대두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의 분열조짐이 보이자, 이회창 후보는 1997년 8월 3일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고의적인 체중조절이 아니며 부정의혹에 대한 확증 없이 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부정적 정치행태라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회창 후보의 사과가 유감표명에 불과하고, 입대 전 병원에서의 검진기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이회창 후보의 방계가족에 대해서도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정연은 자신의 병역면제 사실이 계속 정치쟁점화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997년 9월 15일 소록도 나환자촌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떠났고, 이후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공방은 잠시 주춤해졌다.

한동안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조순

총재와의 연대를 기점으로 급속한 회복세³³⁾를 보였다. 하지만 1997년 11월 말경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국민신당이 합세하여 이회창 후보 처가의 병역 전력과 차남의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고의 감량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공방은 다시 선거쟁점화되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은 친인척 중 입영 대상자는 20명으로 면제자는 7명뿐이라고 반박하고, 김대중 후보에게는 건강문제를, 이인제 후보에게는 창당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맞대응하였다.

이러한 병역공방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까지 이어져 연설회 대담·토론회 등에서 세 후보자(이회창·김대중·이인제) 병역면제와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중 주요공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12월 1일 제1차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에서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밝히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이회창 후보의 차남을 귀국시켜 국민 앞에서 키를 재야한다”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가 곧 사퇴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응수했다.

병역공방은 1997년 12월 6일에도 이어져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대변인은 이인제 후보의 두 형의 병역미필 의혹과 이인제 후보 본인이 입영기피자로 분류돼 수년 동안 수배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후보는 첫째 형은 허약체질로 귀향조치 받았고 둘째 형은 보충역 편입 뒤 소집면제를 받았으며, 본인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고시공부를 하느라 입영통지서를 뒤늦게 전달받았으나 자신신고 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는데 무슨 의혹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1997년 12월 7일 제2차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인제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게 차남의 진료기록을 왜 안 밝히느냐고 하자 이회창 후보는 머지않아 시험이 끝나면 속 시



▶ 이회창후보 두아들 병역면제관련 언론보도 (동아일보 1997년 12월 11일)

33)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11월 15일 조사 시 30.3%였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11월 21일 조사 시 36.6%로 나타나 6.3% 포인트 상승세를 보였다.

원히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대중 후보는 한나라당은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은 진료 기록을 내놓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후보도 병역을 마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군통수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병역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이회창 후보 차남 이수연이 1997년 12월 10일 국내에 들어와 서울대 병원에서 신장을 측정한 결과 164.5cm로 밝혀졌다. 이에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 대변인은 “이인제 후보를 향해 경선불복이라는 굴레에 약속파기라는 또 하나의 굴레를 추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신당 박범진 사무총장은 “병역면제는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로 결정되는데도 신장 측정만 하느냐며 키만 자신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도 “‘키 재기 쇼’로 병역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국민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무청 직원인 이재왕이 “이정연이 체중을 고의감량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이 논란은 사정정국으로 비화되면서 선거종반까지 계속되었다.

1997년 12월 10일 오후 서울병무청 총무과 소속 이재왕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연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 수차례 병무청을 찾아와 자신과 체중감량을 의논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 당시 이정연은 미국에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이재왕의 양심선언은 새정치국민회의가 개입한 정치음모이며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왕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도 근거 없는 뒤집어씌우기라며 이재왕에 대한 금품수수설과 해외도피설을 퍼뜨린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대변인을 고발하였다. 이로써 병역정국은 사정정국으로 비화되었다.

그 후 1998년 11월 4일 이재왕은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11월 20일께 그는 백남치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조규태를 찾아가 “정연씨 병역문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증언해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연이 고의 체중감량 방법 등을 의논했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였다.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후 5년 후인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제기되었다. 이때에는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이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이정연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데서 촉발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병역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의 해명과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후보사퇴는 물론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면서 김대업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김대업도 한나라당이 자신을 ‘파렴치한 전과자’로 비하하였다며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고발하였다. 이처럼 김대업과 한나라당 사이의 고소·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이정연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는 85일간 계속되었으며, 2002년 10월 25일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정연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병역비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 김대업이 한인옥 여사가 연루되었다며 증거물로 제출한 녹음테이프도 제조연도가 녹음시점보다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 논란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 논란은 지지율 2위의 이인제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공동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이인제 후보 지원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신한국당은 국민신당의 창당자금 지원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김대중 후보와 양자 대결구도를 굳히려는 계획이었다. 그에 반해 새정치국민회의는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이 근접해오자 여권성향의 표가 이인제 후보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막아 ‘다자구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다. 또한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경제파탄과 김현철의 비리 사건 등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는 국민신당 창당일인 1997년 11월 4일에 맞춰 일제히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의혹을 제기했다. 신한국당은 김현철과 관련된 인사들이 국민신당 내에서 기획·정책·홍보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민신당 창당자금을 청와대에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청와대 비서진 일부가 이인제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청와대는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일축했다. 국민신당에서도 대통령선거구도가 이인제 대 김대중 후보의 양자구도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1997년 11월 5일에도 이어져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의 신당창당 자금 200억 원 지원의혹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신당 창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당은 청와대 지원설에 대한 논란을 방관할 경우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창당대회일까지 소요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청와대비서진이 표적이 되고, 때마침 개최된 신한국당 필승결의대회에서 이회창 지지자들로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상징표시물인 'O3 마스크트'가 훼손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 이후 신한국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전념하고, 새정치국민회의도 신한국당에 대한 견제에 주력하면서 국민신당 지원설에 대한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청와대 지원설로 지지율이 급락한 이인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3차례의 TV토론회를 통해 지지율 회복을 노렸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마. 김대중 후보 건강문제 논란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에 대한 논쟁은 김대중 후보의 고령문제로부터 시작됐다. 더욱이 유권자 접촉이 활발하던 김대중 후보가 10월 이후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이 김대중 후보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선거에 활용하면서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는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의 시선을 상대적으로 고령인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에 쏠리게 함으로써 국정수행에 흠결이 있음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치매에 걸렸다는 등 유언비어가 계속 나돌자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12월 1일 김대중 후보의 건강진단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김대중 후보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고 대통령 직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2월 6일 세 후보가 공인된 진료기관에서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공동검진 제의’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연세대 의대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는데도 서울대 의대 검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병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며 반박했다.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는 1997년 12월 7일 공영방송사 TV 토론회를 계기로 심화되었다. 토론회에 감기가 걸린 채 참석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이 대표’로 직함을 혼동하여 부르고, ‘재정경제원’을 ‘경제기획원’으로, ‘한나라당’을 ‘신한국당’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안면에 몇 차례 경련을 일으키자 한나라당은 김대중 후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거중반부터는 국민신당이 논쟁에 가세하여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997년 12월 9일 이인제 후보는 대구에서 10여 차례 공개장소 연설을 하면서 노쇠한 리더십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젊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월 10일에도 이인제 후보는 박찬종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연설회를 열고 “팔순을 바라보는 노쇠한 지도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없다”며 김대중 후보를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1997년 12월 13일 전국에 배포한 당보에서 당직자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김대중 후보의 사진을 크게 싣고, 그 밑에 ‘혼자서 절도 제대로 못하고’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또한 김대중 후보가 후보자 등록 후 지금까지 단 6차례의 거리유세밖에 하지 못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이기택 한나라당 선대위 의장은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 김대중 후보가 국민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안에서 회의만 하고 있다”며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같은 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부산지역 유세에서 “노쇠한 정치력으로는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면서 21세기 대통령은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면서 외교무역에 앞장서야 하는데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 박찬종 의장도 부산지역 유세에서 “김대중 후보는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나이 때문에 안 된다”며 “옥내 유세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체력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자 김대중 후보는 건강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1997년 12월 15일부터 수원, 성남, 안양 등 수도권지역을 순회하며 거리유세에서 군중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바. 북풍(北風)논란

분단 상황 하에서 선거철에 벌어지는 북한 관련 사건들은 이른바 ‘북풍’으로 불리며 후보

자들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김대중 후보에 대한 색깔시비는 지지도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제15대 대통령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97년 2월 황장엽 리스트 파문에 이어서 8월에는 ‘오익제 밀입국 사건’ 과 ‘새정치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의 남조선 명함 파문 사건’, 그리고 12월에는 ‘오익제 편지 사건’ 과 ‘윤홍준의 기자회견 사건’ 을 중심으로 북풍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기서는 그중 선거일에 임박해서 논쟁을 벌였던 ‘오익제 편지 사건’ 과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 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오익제 편지 사건’ 은 1997년 12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로부터 촉발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기자회견에서 1997년 8월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11월 말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냈으며, 12월 5일 서울의 한 국제우체국에 보관돼 있는 오익제 편지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은 1997년 8월 초 월북한 자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익제가 월북 전 김대중 후보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고, 미국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씌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과 경위 및 사실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새정치국민회의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1월말 김대중 총재에게 ‘북한 부주석 김병식’ 명의의 편지가 배달된 뒤 새정치국민회의 측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중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전기획부가 ‘편지사건’ 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치공작’ 이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권이 이런 선거부정을 저지른다면 국민과 더불어 정권을 상대로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것” 이라며 강력비난하였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대통령후보의 사상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 ‘색깔론’ 을 제기하며 공안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1997년 12월 7일 개최된 2차 합동 TV토론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김대중 후보는 오익제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남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는 편지 논란에 대해 ‘안기부의 정치공작’ 이라고 일축하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후보와 오익제의 관계에 대하여 잇달아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안전기획부는 ‘순수한 대공 사건’ 이라며 정치 공작설을 일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재미사업가를 자처하는 윤홍준이 베이징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후보와 북한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북풍논란은 한층

가 열되었다. 12월 12일 윤홍준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후보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북한 고위층과 물래 접촉을 시도했으며 지난 1971년 대통령선거부터 계속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 “김대중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태평화재단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접촉하고 있고,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지지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윤홍준은 일본 도쿄로 이동하여 12월 13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미교포 김영훈 목사 역시 12월 12일과 1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부주석 김병식이 김대중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3통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북한이 김대중 후보에게 자금 지원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2월 13일에는 오익제가 평양방송을 통해 자신의 밀입북 문제에 대해 김대중 후보와는 월북 직전까지 통일문제를 자주 상론해 왔으며, 김대중 후보의 3단계 연방제 안이 북의 연방제 통일안과 일부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는 투표일이 임박해 북한이 대남공작 음모극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음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익제가 김대중 후보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김병식 등 북한 대표들이 편지공세를 통해 김대중 후보 지지를 표명하였다면서 북한 지도급 인사들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선거종반에 이르자 새정치국민회의는 일련의 북풍논란이 북한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임을 주장하며 역공을 취했다. 새정치국민회 조세형 총재권한 대행은 “북풍사건은 대북경협을 전제로 한 이회창 후보와 북한의 비밀계약에 따른 공작”이라며 중간 대리인들의 인적사항과 이들이 교신한 팩스서신 사본을 공개하였다. 또 조세형 총재권한 대행은 “이같은 비밀계약으로 이루어 볼 때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지난 11월에 베이징에서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풍관련 언론본도 (조선일보 1997년 12월 14일)

위원장 대리와 두 차례 접촉한 것도 이회창 후보의 지시에 따른 공작차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북한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 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 김정일·이회창 커넥션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김대중 후보는 오익제 등 친북인사와 연결되었다는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김대중 후보의 레드콤플렉스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헛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한 후인 1998년 3월 31일 검찰은 ‘북풍사건수사기획단’을 편성하고 안기부 전·현직 직원, 비밀공작원, 대북접촉 여야 정치인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윤홍준에게 국가안전기획부 공작금 2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을 밝혀내었고, 5월 22일 선거법과 안기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윤홍준 등 10여 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오익제편지사건과 윤홍준기자회견사건은 북한측이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도하는 소위 ‘김대중 불가론’에 입각해 북한의 ‘통일선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합동으로 ‘대통령선거공작반’을 구성한 사실을 알고도 안기부가 이를 악용하여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해 정치공작에 나선 ‘남북한 공작정치의 합작품’으로 결론지었다.

제5절

선거비용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종전선거에 비해 선거비용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수입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지출은 선거운동의 자율화에 맞춰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방법을 선택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무상으로 선거운동용 장비를 대여한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가격 또는 임차가격을 선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인쇄물 비용 외에 현수막 게시비용, 신문광고비용, 선거사무장 수당을 보전하여 후보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1. 선거비용제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년 11월 10일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310억 4,000만 원으로 결정·공고하였다. 후보자들은 이 선거비용제한액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비목별 제한제도에 비해 후보자에 맞는 선거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각종 선거운동매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에서부터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든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4대 대통령선거의 367억 100만 원보다 57여억 원이 줄어들었다. 대통령선거 후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이 감소한 것은 새로운 선거법 제·개정으로 선임 가능한 선거사무원 수가 전체

59,058명에서 4,155명으로 감소하고 선거운동기간이 5일 정도 단축됨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등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밖에 소형인쇄물의 종수가 감소된 데다 그 발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고, 투·개표참관인수당도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증가한 것도 있었다. 방송연설 횟수가 20회에서 44회로 증편되어 62억여 원이 증가하였고,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에 설치하는 홍보시설물 설치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어 20억여 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이 28억여 원 증가하였고, 정당연설회가 옥내로 제한되어 그 임차료로 6억여 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방송광고 횟수가 10회에서 60회로 증편되어 5억여 원이 증가하였다.

2. 선거비용 수입·지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1998년 1월 30일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자가 미지급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적었다.

후보자 7명의 수입 총액은 약 427억 8,000만 원이었다. 후보자별로는 김대중 후보가 200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회창 후보가 약 143억 2천만 원, 이인제 후보가 56억 2천만 원, 권영길 후보가 14억 6,000만 원이었으며 신정일, 허경영, 김한식 후보 순이었다.

후보자 7명의 총 지출액은 623억 2,766만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89억 395만 원이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28.7%였다. 후보자별로는 김대중 후보가 261억 7,200만 원(제한액 대비 84.3%)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이회창 후보로 200억 8,144만 원(64.7%), 이인제 후보가 129억 9,396만 원(43.3%), 권영길 후보가 14억 8,279만 원(4.8%), 허경영, 신정일, 김한식 후보 순이었다.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비목별 지출액의 항목별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후보자가 어떤 선거운동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표 4-10〉 제15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지출상황

(단위: 천원, %)

후보자별	구분	선거비용제한액	지출액	제한액대비 지출율
한 나 라 당	이회창	31,040,000	20,081,445	64.7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	26,172,004	84.3
국 민 신 당	이인제	"	12,993,968	41.9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	1,482,795	4.8
공 화 당	허경영	"	826,658	2.7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	"	148,962	0.5
통 일 한 국 당	신정일	"	621,825	2.0

이회창·김대중 후보는 방송매체(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에 많이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선거운동비용은 비교적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제 후보도 자금난으로 방송광고는 하지 못했지만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은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력정당들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선거전에 치중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정당연설회를 법정개최횟수인 335회의 11.9%인 40회를 개최하였고, 구·시·군 연락소 비용으로 39억 5,146만 원(1개 선거연락소당 평균 1,238만 원)을 지출했다. 반면, 김대중 후보는 정당연설회를 200회(59.7%)를 개최하였고, 구·시·군 연락소 비용으로 61억 8,871만 원(1개 선거연락소당 평균 1,940만 원) 지출했다. 김대중 후보가 정당연설회를 많이 개최한 이유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재가 김대중 후보의 지지호소를 위해 충청권과 경북권에서 정당연설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인제 후보는 홍보인쇄물과 현수막에 의한 선거운동을 모두 실시하였다. 그러나 선거사무원 신고는 정원의 80%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선거비용 확인 · 조사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의 지출상황에 대해 확인 ·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선거비용 지출 확인 · 조사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시작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과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기간 전부터 단속과 병행하여 지출자료를 수집하였다. 선거비용 지출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이들 자료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 지출증빙서의 내용과 대조하며 사실 확인 ·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거비용 지출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 보고서,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와 정당회계보고서를 사전에 수집한 선거비용 관련 자료와 일일이 대조 · 확인하여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준수와 불법선거비용지출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였다.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방문 실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실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위원회와 교차하여 실사반을 편성 · 운영하였다. 현지 실사반은 선거기획사, 인쇄업체, 선거운동용 장비 대여업체, 현수막업체 등 선거와 관련 있는 모든 업체를 방문조사하였고, 업체관계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현지실사과정에서는 업체의 회계장부와 작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일이 대조 · 확인하였고, 상이하거나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 대표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당 · 실비의 금전 또는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33,321건의 선거비용 지출 실태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34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지출의 축소, 누락, 허위보고가 208건(5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초과지출 50건(14.3%), 계좌외 지출 37건(10.6%), 기부행위 21건(6.0%), 증빙서류 미구비 19건(5.4%) 등 순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중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한 8건(새정치국민회의 6건, 국민신당 2건)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219건은 경고, 122건은 주의조치하였다.

〈표 4-11〉 제15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 조치상황

(단위 : 건)

합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349	8	0	219	122

4. 선거비용 보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선전벽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 현수막 제작·게시비용, 신문·방송광고 비용,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였다. 선거비용보전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였으며,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전벽보 비용을 국고에 귀속되는 기탁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3명이었고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게는 선전벽보 비용을 국가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지급되었다. 국고에서 보전한 선거비용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선거비용보전 공고액의 91.9%인 116억 2,068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107억 2,694만 원,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76억 6,781만 원 순이었다. 기탁금에서 선거비용을 지급한 내역은 “제4장.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에서 기술하였다.

〈표 4-12〉 제15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상황

(단위:천 원)

구 분	계	선전벽보 비 용	소형인쇄물 비 용	현수막 비 용	신문광고 요 금	방송광고 요 금	방송연설 비 용	선거사무원 등수당
합 계	30,015,442	43,254	6,408,163	214,446	8,628,987	1,175,672	7,684,316	5,860,604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11,620,689 (91.9%)	14,980	2,137,830	85,919	2,937,060	587,836	3,412,408	2,444,656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10,726,942 (84.8%)	14,280	2,133,029	50,594	2,937,060	587,836	3,412,408	1,591,735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7,667,811 (60.7%)	13,994	2,137,304	77,933	2,754,867	0	859,500	1,824,213

※ 선거비용 보전비용 공고액은 12,642,445천 원임. () 안은 공고액 대비 실제 보전금액 비율임.

제6절

공명선거활동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선거활동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었다. 공명선거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시민단체는 종전 선거와 달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이라 한다)를 조직하고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의 목표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유권자 의식개선”과 “준법선거 풍토 조성”에 두고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텔레비전과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주권의식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강조하였고, 올바른 선택과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가. 언론매체 이용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은 주로 신문, 잡지·간행물,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광고나 대담·토론, 기고·인터뷰, 자막방송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배격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 및 투표참여 안내를 위하여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기업·단체의 사보·회보 등에 총 24,100회의 기부행위제한, 투표참여, 위원장 담화문 내용을 방송 또는 게재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대담·토론은 120회를 실시하였고, 기고·인터뷰는 973회, 자막방송과 진행자 멘트는 63,800회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영 위원장은 후보등록 첫날인 1997년 11월 26일 “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다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월 17일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신문광고

**깨끗한 선거문화!
밝고 건강한 미래의 시작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로 밝은 민주사회를 추종합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높은 신뢰를 주는 선거입니다.
공직이 있고 국민이 투신들여 열망이 넘치는 나라의
발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필요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6.21부터는 모든 기부행위를
직접하거나 재공표, 복제본, 복사, 또는 복제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 대상: 1997.6.21 ~ 1997.12.18
● 기부행위 대상: 1997.6.21 ~ 1997.12.18
● 기부행위 대상: 1997.6.21 ~ 1997.12.18
● 기부행위 대상: 1997.6.21 ~ 1997.12.18

중앙선거 표어 현상공모

1. 공모기간: 1997.6.21 ~ 1997.12.18
2. 공모대상: 국민 누구나
3. 공모분야: 중앙선거 표어
4. 공모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17개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공모내용: 중앙선거 표어
6. 공모대상: 국민 누구나
7. 공모기간: 1997.6.21 ~ 1997.12.18
8. 공모대상: 국민 누구나
9. 공모분야: 중앙선거 표어
10. 공모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17개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공모내용: 중앙선거 표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선일보 1997년 6월 21일

**“오늘은 대통령선거일
엄마 아빠 꼭 투표하세요!”**

오늘은 제15대 대통령선거일
앞으로의 150년, 새로운 세기의 길을 열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결정해야 하는 오늘!
홍익네기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현안이나 당쟁에 자취를 없애
귀중한 시간을 아깝게 허비
가장 길게는 행사합니다.
소중한 권리, 반드시 행사합니다!

투표하기 가장 바

●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전국 17개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방법: 투표용지 작성 후 투표함 투입

다음과 같은 투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 기표부 안에 있는 기표용구 외의
펜, 볼펜, 마스킹펜, 볼펜, 볼펜
● 투표용지 안에 있는 기표용구 외의
볼펜, 볼펜, 마스킹펜, 볼펜
● 투표용지 안에 있는 기표용구 외의
볼펜, 볼펜, 마스킹펜, 볼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동아일보 1997년 12월 18일

나. 인쇄매체 이용

인쇄물을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으로는 공명선거 참여 호소문, 홍보팸플렛, 기부행위제한 안내포스터, 투표절차안내도 등이 있었다.

공명선거 참여 호소문은 언론·종교·사회단체 지도자 등 6,900여 단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1,307,000장을 발송하였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후보자·유권자의 자세 등을 안내

하는 홍보팸플렛 225,900장을 제작하여 정당 등 기관단체와 민원실, 역 등의 공공장소에 비치하였다. 또한 기부행위제한안내 포스터 48,000매와 투표절차안내도 38,000매를 제작하여 정당, 행정기관 민원실, 은행, 지하철구내, 역·터미널 등 7,000개소에 첩부하여 홍보하였다.

그 밖에 투표참여 계도방송문안 62,0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배부하였고, 선거기간 6개월 전부터 공명선거희보를 제작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행정기관, 언론·종교·사회단체 등에 선거관리주요일정과 선거법·질의회답 등을 안내하였다.



▶ 제15대 대통령선거 홍보 포스터

다. 시설물 및 기타매체 이용

각종 전시 시설물을 이용한 매체로는 전동차, 선전탑, 육교 현판, 현수막, 입간판, 게시판, 비행선, 애드벌룬 등이 있었으며, 주로 기부행위 안내, 선거일·투표참여 등을 홍보하였다.

전동차를 이용한 홍보는 서울·부산지하철 전동차량 3,000량과 버스 6,900대에 공명선거와 선거일,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광고포스터를 첩부하였고,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정견·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깨끗한 한표, 깨끗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등을 게재한 선전탑 21기, 육교 현판 65개를 설치하였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는 “깨끗한 선거-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선거”,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정견·정책으로” 등을 게재한 현수막 7,200매를 게시하였고, “올바른 선택 밝은 미래”의 표어가 게재된 비행선 4기와 애드벌룬 15개를 띄워 홍보하였다.

기타 홍보매체로는 시청각매체가 있었는데 공명선거 홍보비디오와 가두방송용 카세트 테

이프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홍보용 비디오(21세기를 위한 우리의 선택)와 웅변대회 비디오(공명선거의 메아리)를 제작하여 각 기관·단체, 방송매체, 민원실, 역·터미널 등에 75,500여 회에 걸쳐 제공 또는 대여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각종 회의·강의·교육 등에 활용하였다. 투표참여 안내를 위해 가두방송용 테이프는 총 1,200여 개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까지 25,000여 회 방송하였다.

그 밖에 선거기간 전부터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지원 및 연계활동도 전개하였다. 전국적으로 4,000여 개 단체에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대한 권장공문을 발송하고, 사회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200여 개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참여 발대식을 지원하였고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 광장 등에서 52회의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 홍보용 비행선 및 선전탑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국무회의, 또는 담화문 등을 통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행위에 대한 단속의지와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천명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60여 일 앞둔 1997년 10월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1997년 11월 10일 고건 국무총리는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당부하였다. 이어 11월 1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입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사항 등 공명선거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방안을 논의하였다.

1997년 11월 18일에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련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선거관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모두가 당적을 갖지 않은 순수 중립내각이라며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엄정한 단속과 공평한 법집행 등 공명선거 과제 추진”을 당부하였다. 특히 “각 자치단체장들은 출선수범해 지방공무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1997년 11월 25일에도 고건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어느 당이든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정부는 엄정중립의 위치에서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활동한 단체로는 한국유권자운동연합,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전국시민단체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31개와 농민단체 등이 연대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지역연고주의 타파와 금권선거배격, 불공정보도 시정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금권선거 배격운동을 펼쳤고 유권자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후보자 선택기준을 홍보하고 언론보도 감시활동과 투표참여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해 논란을 벌이자 1997년 10월 14일 기

사회권을 열고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을 즉각 중지하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펼치라고 요구하였다. 같은 날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도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여당이 자기당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상대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폭력이라면서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전을 촉구하였다.

‘금권선거 배격운동’을 위해 공선협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청산해야 할 선결과제로 금권선거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 25일 발대식을 가진 뒤 1시간 동안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돈 정치 추방’을 위한 거리썰기 캠페인을 펼쳤다. 공선협은 선거과열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부정선거사례를 적발하여 그 중 금권선거와 관련하여 2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적발한 위반사례에는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후보 비방,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금전 및 향응제공 등이 있었다.

‘후보자 선택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후보자들의 신상 내역과 경력, 정책 등과 함께 텔레비전 토론 바로 보는 법 등을 담은 ‘유권자 수첩’을 펴냈다. 70쪽 정도인 수첩에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인기와 순발력에 치중하는 ‘탤런트 후보’를 가려내는 텔레비전 감상법이 실려 있었다. 이 유권자 수첩은 3,000여권이 발간되어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일반 유권자에게 무료로 배포 되었다. 또한 그들은 빠짐없이 투표하기, 정책과 능력을 보고 투표하기 등 유권자 행동 수칙 ‘과 국가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적은 후보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뉠대로 점수를 매겨 볼 것을 제안했다.

공선협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따져 볼 10가지 선택기준을 포함한 채점표를 제시하여 후보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 종합 점수에 따라 공정하게 주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였다. 10가지의 선택 기준은 안정적인 경제운영 능력 등 경제정책, 통일 비전과 지역감정 해소능력, 정치적 지도력과 국가경영 능력,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 제시 여부 등이었다. 공선협은 1997년 12월 5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15대 대통령 공명선거실천 캠페인’ 장소에서 후보자 채점표를 나눠주며 유권자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촉구하였다.

‘언론보도 감시활동’을 위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등 18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를 구성하고, 1997년 9월 13일부터 방송 3사의 후보에 관한 방송은 모니터하여 각 후보별 방

영시간과 연출화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분과에서도 8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중앙일간지 7개 신문을 대상으로 각 당 후보의 사진 게재 건수, 지면위치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공정정보도를 유도하였다.

‘유권자의 투표참여 운동’을 위해 공선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97년 12월 16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등 13개 지역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열고 “기권은 신성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구태를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 송파구에서는 공명선거를 선거구민들 스스로 이룩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주민 200여명이 모여 자율적으로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바선모)’를 결성하였다. 바선모는 감시단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신고·제보, 위원회와 연계한 서명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용품과 선거관련 자료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 후 바선모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모두 214개 구·시·군 지역에 설립되었다.

공선험의 공명선거캠페인(광주·대구)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선거운동 종반에 이르러 흑색선전과 폭로전이 있었으나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옥외유세가 금지된 데다 텔레비전을 이용한 토론, 연설, 광고 등 미디어선거전이 본격화 되어 금권·관권선거 등 기존의 불법선거운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선거사범 숫자도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12% 수준에 머물렀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및 경찰이었으며, 시민단체는 별도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주로 부정선거운동사례 수집과 고발로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6절. 3. 공명선거활동”에서 기술하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책자 15만 부를 제작하여 정당, 지방의회, 행정기관, 언론기관, 공명선거추진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또 설과 추석 및 관광철에는 그와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반사례예시를 제작하여 안내하였고, 일반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각 일간 신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12명 외에도 특별단속요원 4,659명과 자치구·시·군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3,077명, 공익근무요원 989명, 자원봉사자 3,915명으로 모두 14,652명을 시기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증원하여 단속활동에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활동 결과 300건(선거비용에 관한 위법행위 제외)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이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의 71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폭 감소한 것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의 경중이나 파급효과, 위반행위자의 수용자세 등을 감안하여 8건(2.1%)은 고발하였고, 52건(17.3%)은 수사의뢰하였으며 나머지는 경고,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검찰은 고발된 선거사범 8건에 대해 수사하여 그 중 5건은 기소하였고 나머지 3건은 기소유예 또는 내사중지 하였다. 또한 기소된 관련자 중 8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 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사의뢰한 52건은 검찰이 수사하여 11건을 기소하였고, 41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표 4-13〉 제15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의촉구	사직당국이첩	공명선거 협조요청
300	8	52	80	60	9	91

나. 검찰의 단속활동

검찰은 1997년 7월 25일 전국公安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범단속 및 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하였다. 이날 시달된 지침에서 검찰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기부행위, 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금품요구·수수행위, 후보자 비방 등 불법·흑색선전 행위, 사조직 및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 정당활동을 위장한 불법선거운동, 유권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후보자 테러·연설 방해 등 선거폭력행위,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교란행위 등을 8대 공명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선거법위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찰은 1997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주제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를 엄중 차단하는 등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정당 및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개입해 금품수수 등을

알선하는 선거브로커를 추적해 엄단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검찰력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찰은 1997년 11월 26일 전국 검찰에 선거상황실 및 선거전담반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 이후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 단체나 그 대표자 명의의 선거 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나 연설회 개최,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당원모집 등 정당활동 이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거법 벌칙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검찰과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경찰청은 1997년 9월 2일 전국경찰서에 추석을 틈탄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 경찰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을 ‘추석절 선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선물·음식물의 제공 행위, 지방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행위,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통·반장의 선거운동 관여 행위, 당원연수 등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심 관광행위, 위법선전물의 설치 및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찰청은 1997년 9월 20일에는 전국경찰서에 일제히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현장 채증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찰청은 또 기존의 수사전담반외에 형사기동대와 112 순찰차 요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선거과열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997년 10월 25일에는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원 단합대회 및 단풍관광을 빙자한 불법기부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특정정당 정강·정책홍보 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하도록 지시했다.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검찰이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입건한 선거사범은 391명이었다. 이중 약 33.0%인 129명이 기소되었고, 나머지 262명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2,258명이 입건되어 994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입건자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기소자수에 있어서는 거의 90% 가까이 격감한 것이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391명 중 흑색선전사범이 100명으로 25.6%를 차지하였으며, 금품선거사범은 58명(14.8%), 폭력선거사범이 43명(11%), 불법선전사범이 40명(10.2%), 기타 선거사범이 150명(38.4%) 등으로 나타났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하면 흑색선전사범은 87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선거사범이 대폭 감소했다.³⁴⁾

이처럼 선거사범이 줄어들게 된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대규모 청중동원에 의한 옥외집회가 줄어들었고, 텔레비전을 통한 미디어 선거의 활성화로 금품살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표 4-14〉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현황

선거별	선거일자	수리 (입건)	기 소	불 기 소				
				소계	기소 유예	무혐의	기소 중지	기타
제2대 대선	1952. 8. 5.	198	26	172	96	46	6	24
제3대 대선	1956. 5. 15.	355	22	333	85	81	131	36
제4대 대선	1960. 3. 15.	541	66	475	118	163	87	107
제5대 대선	1963. 10. 15.	784	203	581	101	112	74	294
제6대 대선	1967. 5. 3.	1,578	226	1,352	854	233	200	65
제7대 대선	1971. 4. 27.	1,453	331	1,122	371	492	227	32
제13대 대선	1987. 12. 16.	827	116	711				
제14대 대선	1992. 12. 18.	2,258	994	1,264				
제15대 대선	1997. 12. 18.	391	129	262				

34) 대검찰청,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사범 수사결과』 2-5쪽.

3. 주요 위반사례

가. 흑색선전 및 후보자비방

김대중 총재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한길소식』, 『김대중 X파일』 등의 책자를 제작하여 일 반선거권자에게 배부한 한길소식의 발행인 함윤식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불법우편물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1997년 12월 8일 부터 11일 사이 서울 은평·마포·서대문·동대문·성북·광진구 등 6개 지역의 우체국에 “우리 군은 병역을 기피한 지도자에게 충성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 100여 통이 발견되었다. 이 우편물에는 발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우편물 작성과 발송에 가담한 일반인 4명이 검거되었다. 이들 4명 중 고미래와 고두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재판에 회부되어 이순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구근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PC통신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례도 있었다. 정진우는 컴퓨터통신(하이텔)에 이회창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사포커스 기사를 인용게재하여 구속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나.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을 사흘 앞둔 1997년 12월 15일 중앙일보는 “대통령선거 양자 대결 압축”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대중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회창 후보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고, 이인제 후보는 상승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국민신당은 중앙일보가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중앙일보사와 홍석현 사장 등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신당 당원인 허용현은 1997년 12월 15일과 16일 ‘전국여론조사내역’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유인물³⁵⁾을 중앙당 당직자들의 학교 선·후배, 친지와 각 언론기관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전화부스, 지하철역, 빌딩, 화장실, 주택가 벽 등에 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35) 문화일보와 미국방송사 CNN명으로 된 이 유인물에는 ‘이제 승리가 확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인제 후보가 여론지지율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3% 이상 앞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겐 10% 이상 앞선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또 이 예상결과는 15일 현재 갤럽 미디어리서치와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상황이라는 설명까지 있었다.

와 관련으로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또 선거일을 하루 앞둔 1997년 12월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 대통령선거 편파보도를 비판한 한국기자협회보 특보³⁶⁾가 부천시 소사구 주택가 일대와 부산지역에 대량 살포되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배포 중이던 국민신당 수영지구당 사무국장 배태영 외 1명을 검거하였다.

다. 금품·음식물 제공

1997년 10월 31일 이주완 외 4명이 통일한국당 대구시지부 결성대회에서 청중을 동원하고 수십 명에게 1인당 3만 원을 제공했다. 선거가 끝나고 이주완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이은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봉구, 배건호, 서경만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에서는 1997년 12월 9일 한나라당 선거사무원인 김종문이 이회창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선거가 끝난 후 김종문은 재판에 회부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97년 12월 2일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새정치국민회의 제천·단양 정당연설회에 당원 박세진은 관광버스 4대를 동원하여 연설회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검찰은 조사 후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라. 선거관리 침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1997년 11월 26일 새정치국민회의 선거사무원인 김달문이 불법 당원집회를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김달문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선거당일인 1997년 12월 18일 국민신당 선거사무원 김윤겸, 이상범, 이재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광주군내를 순회하며 로고송을 방송하고 이를 단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였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이상범과 이재승은 기소유에 되었으나 김윤겸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6) 한국기자협회 특보에는 “국민여러분, 기자들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전국 46개 신문·방송·통신사 정치부 기자 1백3명 양심선언, 중앙일보 대선보도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공정보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마. 기타 위법행위

1997년 12월 18일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은 1997년 11월 20일과 12월 5일 실시한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였다. 발행인 권근술은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군단 10기 출신인 김정식은 1997년 9월 ROTC 동문회 소속 회원들에게 ROTC 출신인 김홍업이 김대중 후보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김정식은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9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의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고, 열·공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2월 11일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 등재 대상자는 1977년 12월 19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선거권자였다.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선거인수는 인구수의 69.3%인 32,290,416명이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 31,488,294명보다 802,122명이 늘어 2.5%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선거인수 29,422,658명보다 9.7%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4-15〉 제15대 대통령선거 인구수 및 선거인수 현황

(단위: 명)

인구수	선거인수		
	계	남자	여자
46,573,643	32,290,416 (801,130)	15,872,154 (755,198)	16,418,262 (45,932)

※ () 안은 부재자신고인수로 본수에 포함됨.

시·도별로는 서울이 7,358,547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22.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기 5,707,087명(17.7%), 부산 2,692,311명(8.3%) 경남 2,094,036명(6.5%), 경북 1,988,379명(6.2%), 대구 1,707,338명(5.3%) 순이었고,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도로 361,680명(1.1%)이

었다. 특히 영남과 호남을 비교하면 부산 등 영남권은 8,482,064명이고 광주 등 호남권은 3,781,383명으로서 영남권의 선거인수가 호남권의 선거인수에 비해 2.2배 많았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선거인명부의 허위·부정작성을 막기 위해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명부 작성과정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3,900명이었으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601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수가 줄어들게 되어 이 제도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98년 4월 30일 선거법 개정 시 폐지되었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 부재자는 199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신고를 받았다. 이기간 동안 부재자신고를 하여 확정된 부재자수는 전체 선거인의 2.5%인 801,130명이었다. 이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수(748,843명)보다 7.0% 늘어난 것이다.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소투표 대상자와 거소투표 대상자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부재자투표소투표 대상자는 748,573명으로 전체 부재자신고인수의 93.4%였다. 그리고 전체 부재자신고인 중 균인은 모두 620,590명으로 77.5%를 차지했다.



▶ 선거인명부 작성

2. 투 표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일반투표소 투표에 앞서 19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되었다. 부재자신고인은 이 기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와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하였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전지역과 격오지에 근무하는 균인·경찰 등은 종전대로 거소투표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구위원회가 직접 섬을 순회하며 투표를 실시하였다.

부재자투표소는 총 48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419개소, 기관·시설의 장이 70개소를 설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는 주로 위원회 사무실,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실에 설치되었으며, 기관·시설의 투표소는 병원, 교도소, 요양소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순회투표는 부재자투표 신고인을 대상으로 3개 시·군 4개 섬³⁷⁾에 설치되었다. 부재자투표소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505개)



▶ 부재자투표소 투표

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497개) 때보다 각각 16개소, 8개소가 줄어들었으며, 순회투표소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6개 섬이 줄어들었다. 순회투표소가 줄어든 이유는 투표자수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고, 생업을 이유로 투표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부재자투표 상황은 부재자신고인 총 801,130명 중 775,458명이 참여하여 96.8%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 중 730,896명(94.3%)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였고, 44,562(5.7%)명은 거소에서 투표하였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95.7%)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94.0%)보다 각각 1.1%, 2.8% 포인트 증가하여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된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였고,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 개표장으로 이송되었다.

37) 4개 섬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풍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황등도와 하왕등도, 전남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였다.

〈표 4-16〉 제15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현황

(단위: 명, 개)

부재자 신고인수	투 표 수			기권수
	합 계	부재자투표소 투표	거소투표	
801,130	775,458 (96.8%)	730,896	44,562	25,672

※ ()안은 부재자 투표율임.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제15대 대통령선거의 투표는 1997년 12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6,40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투표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으며, 투표소 수는 1,061개소가 많아졌다. 투표소수가 많아진 것은 선거인수가 늘어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구 관할구역 세분화했기 때문이었다.



▶ 투표개시 전에 투표사무원들이 공정한 투표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투표관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전국적으로 186,037명(투표구위원회 위원 98,219명, 투표사무원 87,818명)이었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66,013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투표는 1992년 대통령선거보다 1시간 일찍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오전에는 1992년의 동시간대 투표율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이면서 최종투표율은 80.7%로 마감되었다. 이 투표율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때 투표율 89.2% 비해서는 8.5% 포인트,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때 투표율 81.9%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제15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대통령선거 중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제7대 대통령선거(79.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다.

지역별로는 김대중 후보의 연고지역인 호남권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제5대 대통

〈표 4-17〉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상황

(단위: 명, %)

선거인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32,290,416	26,042,633	6,247,783	80.7

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출신 후보가 나오지 않은 대구 등 영남권의 투표율은 대체로 낮았다. 또한 광주가 전국 최고투표율을 기록한 데 비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의 지역기반인 충남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투표율은 세 후보 간 접전으로 소폭 상승 또는 하락에 그쳤다.

하지만 영남지역 연고후보가 없었고, 경제위기가 선거기간 중에 최고조로 다다르면서 선거 무관심이 팽배하였음에도 투표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선거 당일 겨울로서는 상당히 포근한 날씨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국제 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한 취업난과 경제위기가 젊은층과 대도시 유권자들의 투표의사를 자극했고, 셋째, 한보사태 등으로 드러난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욕구가 투표율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도 이회창·김대중·이인제 후보가 병역시비, 세대교체, 건강문제, 북풍관련 논쟁을 가열시키면서 선거쟁점화하였고, 이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도 투표율을 제고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97.0%를 기록한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89.2%)을 제외하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4-18〉 역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상황

선거별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투표율(%)	88.1	94.4	97.0	85.0	83.6	79.8	89.2	81.9	80.7

※ 초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외하였음. 제4대 대통령선거는 3·15부정선거를 말함.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 북한 경수로 건설 근로자 부재자투표 무산

북한은 1997년 12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함남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에 있는 한국근로자들의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경수로 건설현장에 파견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소속 직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여 거소투표 대상자에 추가하여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불허로 경수로 근로자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한국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체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KEDO 협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만일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정부는 북한과의 물리적 마찰을 우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7년 12월 8일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를 인편으로 금호지구에 반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였다. 정부는 12월 11일 통일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경수로 건설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제반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 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KEDO 직원은 소속 국가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이 부재자투표 실시를 방해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 기타 투표관련 사건·사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제1투표소에서 한나라당 투표참관인이 “한 남자가 투표지 대신 종이를 투입하고 투표지를 지참한 채 퇴소했다”고 주장하여 투표가 약 8분간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동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으며, 그 뒤 개표장에서 해당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고 동 투표함에 종이 등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서울 양천구 신월4동 제3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인이 투표용지 2장을 받아 모두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려다 투표구위원회위원에게 발각되었고 투표지 1매는 회수되었다. 투표구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회수된 투표지를 ‘훼손된 투표용지’로 처리하고 다른 선거인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하였다.

3. 개 표

1997년 12월 18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뒤 전국 303개 개표소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관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전국적으로 30,969명(구·시·군위원회 위원 2,610명, 개표사무원 28,359명)이었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11,048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전북 무주군 개표소로 1997년 12월 18일 오후 6시 40분에 시작되었다. 개표가 가장 늦게 끝난 곳은 서울 강남구를 개표소로 선거일 다음날인 12월 19일 오전 5시 45분에 끝났다.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개표결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 25,642,438표의 40.3%인 10,326,275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2위 이회창 후보는 9,935,718표(유효투표수의 38.7%)를 득표하였다.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는 390,557표로 득표율로는 1.6% 포인트 차이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의 표차 1,936,048표(8.2% 포인트 차)에 비하면 근소한 표차였다.

3위는 4,925,591표(19.2%)를 얻은 이인제 후보였다. 세 후보자가 전체 유효투표의 98.2%를 차지했고 그 외 후보들은 2% 미만을 득표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김대중 후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였고, 차점자인 이회창 후보는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1위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김대중 후보가 1위를 기록한 시·도는 서울, 광주, 전남, 전북 4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6개 시·도가 증가되었으며, 광주, 전남, 전북에서 94%가 넘는 지지를 얻었다. 연고지역인 호남권에서는 소폭상승에 그쳤지만 대전, 충남, 충북에서

11.4%~19.8% 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부산, 경남, 경북, 울산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으나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김영삼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비하면 2.8%~20.0% 포인트까지 적게 득표했다. 특히 대구 - 경북에서는 72.7%, 61.9%를 각각 득표했으나 부산·경남에서는 각각 53.3%, 55.1%를 득표하여 연고지역인 영남권에서도 남북으로 갈렸다. 다만 대구와 강원에서 각각 13.1%, 1.7% 포인트 상승했으나 영남권의 하락률을 상쇄하지 못했다.

3위를 한 이인제 후보는 어느 시·도에서도 1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반면 부산과 경남에서 30%를 넘게 득표율로 여권표를 잠식하여 상대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비교우위를 갖게 됐다. 즉 김대중 후보는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부산은 12.5%에서 15.3%로 경남은 9.2%에서 11.0%로 상승했다.

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국회에서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이라는 제목의 회견문에서 집권구상과 경제위기해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새 정부는 철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당선자가 당선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저한 경제개혁으로 IMF 구제금융이 하루빨리 필요 없게 되는 희망찬 앞날을 열 것이며”, “북한에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대화의 재개를 제안한다”고 밝히는 한편, “정경유착, 관치경제, 금융자율 훼손, 기업 파행운영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새 정부는 21세기로 가는 가교가 될 것이라면서 “21세기에 대비한 철학과 통찰력,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2개월여가 지나고,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종료된 다음날인 1998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였다.

〈표 4-19〉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단위 : 표, 인, %)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계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건설국민 승리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나라 정치연합 김한식	통일 한국당 신정일			
합계	32,290,416	26,042,633	25,642,438	9,935,718 (38.7)	10,326,275 (40.3)	4,925,591 (19.2)	306,026 (1.2)	39,055 (0.2)	48,717 (0.2)	61,056 (0.2)	400,195	6,247,783	80.7
서울	7,358,547	5,926,743	5,854,773	2,394,309 (40.9)	2,627,308 (44.9)	747,856 (12.8)	65,656 (1.1)	5,432 (0.1)	8,978 (0.2)	5,234 (0.1)	71,970	1,431,804	80.5
부산	2,692,311	2,124,010	2,094,406	1,117,069 (53.3)	320,178 (15.3)	623,756 (29.8)	25,581 (1.2)	2,252 (0.1)	2,211 (0.1)	3,359 (0.2)	29,604	568,301	78.9
대구	1,707,338	1,347,018	1,329,088	965,607 (72.7)	166,576 (12.5)	173,649 (13.1)	16,258 (1.2)	1,661 (0.1)	1,229 (0.1)	4,108 (0.3)	17,930	360,320	78.9
인천	1,639,655	1,311,512	1,292,611	470,560 (36.4)	497,839 (38.5)	297,739 (23.0)	20,340 (1.6)	1,915 (0.1)	2,356 (0.2)	1,862 (0.1)	18,901	328,143	80.0
광주	870,554	783,025	775,199	13,294 (1.7)	754,159 (97.3)	5,181 (0.7)	1,478 (0.2)	154 (0.0)	660 (0.1)	273 (0.0)	7,826	87,529	89.9
대전	881,474	692,821	682,893	199,266 (29.2)	307,493 (45.0)	164,374 (24.1)	8,444 (1.2)	1,028 (0.2)	1,352 (0.2)	936 (0.1)	9,928	188,653	78.6
울산	654,125	530,459	523,763	268,998 (51.4)	80,751 (15.4)	139,824 (26.7)	32,145 (6.1)	627 (0.1)	427 (0.1)	991 (0.2)	6,696	123,666	81.1
경기	5,707,087	4,600,005	4,535,524	1,612,108 (35.5)	1,781,577 (39.3)	1,071,704 (23.6)	47,608 (1.0)	7,077 (0.2)	8,035 (0.2)	7,415 (0.2)	64,481	1,107,082	80.6
강원	1,077,853	846,596	830,943	358,921 (43.2)	197,438 (23.8)	257,140 (30.9)	8,231 (1.0)	3,201 (0.4)	1,851 (0.2)	4,161 (0.5)	15,653	231,257	78.5
충북	1,015,921	805,496	789,816	243,210 (30.8)	295,666 (37.4)	232,254 (29.4)	10,232 (1.3)	2,784 (0.4)	2,313 (0.3)	3,357 (0.4)	15,680	210,425	79.3
충남	1,330,627	1,023,990	1,001,198	235,457 (23.5)	483,093 (48.3)	261,802 (26.1)	9,604 (1.0)	3,011 (0.3)	4,109 (0.4)	4,122 (0.4)	22,792	306,637	77.0
전북	1,391,537	1,190,190	1,169,189	53,114 (4.5)	1,078,957 (92.3)	25,037 (2.1)	4,189 (0.4)	943 (0.1)	4,981 (0.4)	1,968 (0.2)	21,001	201,347	85.5
전남	1,519,292	1,325,731	1,301,836	41,534 (3.2)	1,231,726 (94.6)	18,305 (1.4)	2,199 (0.2)	1,027 (0.1)	4,790 (0.4)	2,255 (0.2)	23,895	193,561	87.3
경북	1,988,379	1,574,454	1,539,608	953,360 (61.9)	210,403 (13.7)	335,087 (21.8)	22,382 (1.5)	4,177 (0.3)	2,476 (0.2)	11,723 (0.8)	34,846	413,925	79.2
경남	2,094,036	1,681,584	1,648,014	908,808 (55.1)	182,102 (11.0)	515,869 (31.3)	27,823 (1.7)	3,215 (0.2)	2,150 (0.1)	8,047 (0.5)	33,570	412,452	80.3
제주	361,680	278,999	273,577	100,103 (36.6)	111,009 (40.6)	56,014 (20.5)	3,856 (1.4)	551 (0.2)	799 (0.3)	1,245 (0.5)	5,422	82,681	77.1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1) 문화방송(MBC)의 출구조사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년 12월 16일 투표 당일에 실시하는 언론사의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에 대해 부분적 허용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사 등이 투표인에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해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여론조사 등을 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고려해 ‘누구를 찍었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 즉 ‘누구를 지지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등의 설문조사방법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방송 3사는 각기 설문조사한 내용을 비밀에 붙이면서 속보 경쟁을 하였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성급한 예측보도로 인해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전국 각 방송사에 편법에 의한 출구조사 결과보도를 자제하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협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KBS, MBC, SBS, YTN이 투표당일인 18일 오후 6시쯤 할 예정이었던 당락 예측방송을 밤 12시 이전에는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화방송은 정확한 예측보도를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이유로 방송협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 종료 직후 “김대중 후보가 39.9%의 지지율로 이회창 후보를 1%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격발표 하였다.

KBS와 SBS는 MBC측이 한국방송협회의 합의를 깨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후보별 예상 지지율을 발표한 데 대해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MBC는 3사 합의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MBC가 의뢰)이 실시한 투표자 조사가 선거법상 투표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갤럽과 MBC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논란이 됐던 문화방송의 당선자 예측조사방법이 선거법상 투표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였으나 실제예측이 적중한 데다 당선자가 이미 확정되고, 다른 후보들도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에서 처벌의 실익이 없다며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2) 기타 개표관련 사건·사고

서울 양천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밤 8시쯤 개표가 진행되다 인주액이 너무 많이 묻은 기표봉을 사용하여 찍은 표들이 잇따라 나와 개표참관인들이 “인주액이 너무 많이 묻은 기표봉을 사용하여 가로로 접게 되면 두 군데에 기표되거나 인주가 번져 무효시비가 붙을 수가 있다”며 이의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표들을 모아 추후 따로 판단하기로 하고 개표를 계속 진행하였다.

서울 영등포갑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오후 8시45분쯤 갑자기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개표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이날 사고는 과부하로 발생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준비한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여 2분 만에 개표를 속개하여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4. 선거결과 특징

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총 여섯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여섯 차례 정권교체는 혁명, 쿠데타, 군사반란 또는 전직 대통령의 불의의 사망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교체이거나 여당 내에서의 교체였다. 그러나 15대 대통령 선거결과 김영삼대통령에서 김대중대통령으로의 교체는 여당(한나라당)에서 야당(새정치국민회의)으로의 교체였다. 여야 간의 정권교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이유를 들 수 있었다.

첫째, 신한국당의 분열이었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경선 후 한때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파문으로 후보교체논란과 분열현상은 선거일 1개월 전까지 계속되었고 이인제 전 경기지사와 그를 동조하는 일부 의원의 동반탈당으로 당의 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인제 후보 탈당에 따른 후유증은 선거기간 중에도 영향을 미쳐 이회창 후보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인제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된다”며 지역정서를 자극하였다. 그러나 경남·부산지역에서 이인제 후보가 3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하여 여권성향의 표를 잠식하여 과거 선거와 달리 ‘영남

표'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김대중 후보는 영남표의 분산이라는 반사적 이익을 얻어 유리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김대중 후보는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부산은 12.5%에서 15.3%로, 경남은 9.2%에서 11.0%로 각각 상승했다.

둘째, 지역연합의 성공이었다. 김대중 후보,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로 이어지는 이른바 'DJT연대'를 통한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월등한 지지를 얻었다. 전통적인 '반 김대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지역에서도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은 이회창 후보보다 높았다. 'DJP연합'의 위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심지어 김대중 후보는 이인제 후보의 고향인 논산에서 1위를 하였고, 이회창 후보의 연고지역인 예산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다.

김대중 후보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DJP연합'으로 호남권과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지역에서 호남과 충청지역에 연고를 가진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승리하였다. 특히 인천과 경기에서는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7%포인트 이상 지지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DJP연합'에 따라 '반 김대중 정서'가 완화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효과적인 미디어 선거전략이었다. 미디어 매체(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 후보자 등 방송연설, 방송광고, 신문광고)를 이용한 선거전략을 타 후보보다 선거전에 적절히 활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선거운동 방식이 대규모의 집회에서 TV토론의 방식으로 바뀌어 유권자의 관심이 미디어 선거전에 집중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상대후보보다 미디어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선거때마다 제기되었던 이른바 색깔시비와 북풍논란의 확산을 막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특히 토론회와 시사 및 교양프로그램등에 출연해 국제통화기금사태,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 북풍, 병역특혜, 경제과단책임 등 선거쟁점등을 선점하였고, 정치 경륜과 '인간 김대중'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의 거부심리를 크게 약화시킨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현 정권의 실정과 경제과단 책임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자들은 저마다 '정권교체'(김대중), '안정'(이회창), '세대교체'(이인제)등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김영삼 정부의 실정 즉 노동법 기습처리 파동, 한보사태, 김현철의 국정운영 개입의혹,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이어지는 경제적 위기상황 속

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개혁과 변화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연고지역에서 표의 응집력이 상대 후보보다 높았다. 즉 김대중 후보는 연고지역인 호남지역에서 표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에서 이회창 후보가 영남지역에서 얻은 응집력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후보가 높은 지지를 얻은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의 경우 1992년 제14대 대통령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투표율은 87.2%로 전국 평균투표율 80.7%보다 6.5%포인트 높았으며, 김대중 후보에 대한 득표율은 94.4%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반면 이회창 후보가 우위를 보인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의 투표율은 일제히 하락하였다. 특히 경남과 부산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전남·전북에 이어 투표율 4, 5위를 기록했었으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평균투표율 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그 결과 영남지역의 투표율은 79.4%로 전국평균투표율 보다 1.3%포인트 낮았으며 득표율에서도 51.4% 내지 72.7%를 득표하는데 그쳐 평균 58.9%에 머물렀다.

〈표 4-20〉 제14 및 15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변화

(단위 : %)

시·도별 대 별	시·도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14대 대선	81.9	81.4	83.2	78.5	80.3	89.1	80.3	-	80.4	81.5	81.3	78.9	85.2	85.6	80.6	84.6	80.3
제15대 대선	80.7	80.5	78.9	78.9	80.0	89.9	78.6	81.1	80.6	78.5	79.3	77.0	85.5	87.3	79.2	80.3	77.1
증 감	감1.2	감0.9	감4.3	증0.4	감0.3	증0.8	감1.7	-	증0.2	감3.0	감2.0	감1.9	증0.3	증1.7	감1.4	감4.3	감3.2

나.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고착화

제15대 대통령 선거결과 표심의 가장 큰 특징은 표의 '동서분할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선거때부터 지속되어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사상논쟁으로 국민의 투표행태가 남북으로 나뉘어 박정희 후보는 남쪽인 영남과 호남지역 및 제주도에 높은 지지를 얻었고, 반면 윤보선 후보는 북쪽인 서울, 강원, 경기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른바 '남북현상' 이 나타났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영남출신인 박정희 후보자는 영남에서, 윤보선 후보는 호남에서 각각

우세한 지지를 받아 ‘동서현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동서현상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어졌다. 박정희 후보는 영남지역에서 76.2%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김대중 후보는 23.5%를 득표했다. 반면 호남지역의 경우는 호남출신인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절정을 이루었다. ‘1노 3김’의 4자 구도로 진행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출신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대구 출신인 노태우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경남출신인 김영삼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김종필 후보는 충청에서, 김대중 후보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전통적인 동서분할 현상이 한층 심화되어 나타났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의 대결로 진행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차점자인 김대중 후보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높은 득표를 했다. 강원도 출신인 정주영 후보는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었다.

‘동서분할 현상’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이회창 후보는 ‘동’ (강원과 영남권)에서, 김대중 후보는 ‘서’ (호남권 수도권 충청권)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하여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고착화 된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9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나 영남지역에서는 11% 내지 1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득표에 그쳤다. 충청지역에서는 ‘DJP연합’의 결과로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이회창(27.4%), 이인제(26.6%) 후보보다 무려 15%포인트 이상 높은 43.9%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DJP연합’의 효과는 수도권에서도 나타났다. 김대중 후보는 수도권중에서도 가장 큰 표밭인 서울에서 44.9%로 절반 가까운 득표를 했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각각 40% 가까이 득표하여 이회창 후보와의 득표격차를 벌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회창 후보는 영남지역에서 50%가 넘는 득표율과 강원에서 43.2%를 득표하여 김대중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호남지역에서 1.7% 내지 4.5%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또한 충청지역에서는 김대중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김대중 후보보다 2~4% 차이로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표 4-21〉 제13대, 제14대 대통령선거 시·도별 득표율

(단위: %)

구분	후보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13대	노태우	30.3	39.4	41.5	59.3	-	46.9	26.2	4.8	14.1	8.2	32.1	70.7	66.4	41.2	49.8
	김영삼	29.1	30.0	27.5	26.1	-	28.2	16.1	0.5	1.5	1.1	56.0	24.3	28.2	51.3	26.8
	김대중	32.6	21.3	22.3	8.9	-	11.0	12.4	94.4	83.5	90.3	9.1	2.6	2.4	4.5	18.6
	김종필	8.2	9.2	8.5	5.4	-	13.5	45.0	0.2	0.8	0.3	2.6	2.1	2.6	2.6	0.5
14대	김영삼	36.4	37.3	36.3	41.5	35.2	38.3	36.9	2.1	5.7	4.2	73.3	59.6	64.7	72.3	40.0
	김대중	37.7	31.7	32.0	15.5	28.7	26.0	28.5	95.8	89.1	92.2	12.5	7.8	9.6	9.2	32.9
	정주영	17.9	21.4	23.1	34.1	23.3	23.9	25.2	1.2	3.2	2.1	6.3	19.4	15.7	11.5	16.1
	박찬종	6.4	7.9	6.9	6.9	11.2	9.4	6.7	0.4	0.8	0.6	6.6	11.7	8.2	5.5	8.8

다. 근소한 표차의 당선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9회의 대통령선거 중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가장 적었다.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390,557표였다. 가장 적은 득표차를 보인 제5대 대통령선거 당시 당선자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차점자인 민정당 윤보선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156,026표였다. 하지만 제5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수는 12,985,015명이었으며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는 2.5배 늘어난 32,290,416명이었기 때문에 선거인수 대비 득표차는 더 적은 것이었다.

〈표 4-22〉 역대 대통령선거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상황

(단위: 표)

구분	대별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당선자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득표수	5,238,769	5,046,437	9,633,376	4,702,640	5,688,666	6,342,828	8,282,738	9,977,332	10,326,275	
차점자	조봉암	조봉암	-	윤보선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득표수	797,504	2,163,808	-	4,546,614	4,526,541	5,395,900	6,337,581	8,041,284	9,935,718	
표차	4,441,265	2,882,629	-	156,026	1,162,125	946,928	1,945,157	1,936,048	390,557	

라. 미디어 선거운동의 본격화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미디어 매체(신문·방송광고, 공영방송사 TV토론회·방송연설·경력방송)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당락이 안방에서 결정될 정도로 선거사에 새 장을 연 선거였다. 각 정당은 선거초반부터 선거의 승패가 결국 ‘TV브라운관’에서 결판난다고 보고 선거전략, 조직, 자금은 물론 후보의 일정까지 모두 미디어선거전에 맞추고 당력을 집중하였다. 또 각 후보 진영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 전문방송인과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부심했고, 미디어 선거전략이 이슈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바뀐에 따라 이에 걸맞은 쟁점과 논리개발에 힘을 쏟아 부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4차례에 걸친 공영방송사 TV토론회와 후보자·찬조연설일이 실시하는 11차례의 TV·라디오 방송연설, 20회의 TV광고 등이 22일 동안 집중됨으로써 유권자들은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후보자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텔레비전 토론은 경선불복이나 비자금 폭로, 북풍사건, 병역기피 의혹, 경제위기 극복 등 거의 모든 선거쟁점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며,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했다. 이는 네 차례의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³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의 인지경로에 관한 조사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49.8%, 신문매체가 27.3% 등 미디어매체가 77.1%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선거홍보물은 8.9%, 거리유세는 5.3%로 나타났다. 또 텔레비전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영향을 받았다’가 42.5%,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가 38.6%,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 18.8%로 응답해 텔레비전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지지후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같은 조사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부동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결정시기에 대하여 81.0%가 투표일 1주 이상 전에 이미 지지후보자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19%정도는 투표일 2~3일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일에 임박해서

38) 중앙선거위,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91쪽

집중되는 미디어 매체(TV 토론회, 방송광고, 방송연설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디어 선거전이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임에도 정책 토론보다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정치적 공방을 중심으로 한 토론행태, 또 일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토론회 운영, 군소후보에 대한 형평성 보장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공정성에 관한 미디어 평가에서 흑색선전, 상호비방의 접촉경로가 TV와 라디오 42.5%, 신문매체 14.9%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접촉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선거전의 부정적인 요인도 나타났다.

大韓民國

選舉史

부록



-
- 1_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 2_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 3_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4_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상황
 - 5_ 연표
 - 6_ 참고문헌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① 총괄

공화국	연번	선거명	선거일 (국민투표일)	요일	비고
제 1 공 화 국	1	제헌 국회의원선거	1948. 5.10	월	
	2	초대 대통령선거	1948. 7.20	화	
	3	제2대 국회의원선거	1950. 5.30	화	
	4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25	금	
	5	도회의의원선거	1952. 5.10	토	
	6	제2대 대통령선거	1952. 8. 5	화	
	7	제3대 국회의원선거	1954. 5.20	목	
	8	제3대 대통령선거	1956. 5.15	화	
	9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	수	
	10	시·읍·면장선거	1956. 8. 8	수	
	11	서울시·도회의의원선거	1956. 8.13	월	
	12	제4대 국회의원선거	1958. 5. 2	금	
	13	제4대 대통령선거	1960. 3.15	화	
제 2 공 화 국	14	제5대 국회의원(참의원)선거	1960. 7.29	금	
	15	제4대 대통령선거	1960. 8.12	금	
	16	서울시·도회의의원선거	1960.12.12	월	
	17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12.19	월	
	18	시·읍·면장선거	1960.12.26	월	
	19	서울시장·시도지사선거	1960.12.29	목	
제 3 공 화 국	20	제1차 국민투표	1962.12.17	월	
	21	제5대 대통령선거	1963.10.15	화	
	22	제6대 국회의원선거	1963.11.26	화	
	23	제6대 대통령선거	1967. 5. 3	목	
	24	제7대 국회의원선거	1967. 6. 8	목	

공화국	연번	선거명	선거일 (국민투표일)	요일	비고
제 3 공 화 국	25	제2차 국민투표	1969.10.17	금	
	26	제7대 대통령선거	1971. 4.27	화	
	27	제8대 국회의원선거	1971. 5.25	화	
	28	제3차 국민투표	1972.11.21	화	
	29	제8대 대통령선거	1972.12.23	토	
제 4 공 화 국	30	제9대 국회의원선거	1973. 2.27	화	
	31	제4차 국민투표	1975. 2.12	수	
	32	제9대 대통령선거	1978. 7. 6	목	
	33	제10대 국회의원선거	1978.12.12	화	
	34	제10대 대통령선거	1979.12. 6	목	
	35	제11대 대통령선거	1980. 8.27	수	
	36	제5차 국민투표	1980.10.22	수	
	37	제12대 대통령선거	1981. 2.25	수	
제 5 공 화 국	38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1. 3.25	수	
	39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985. 2.12	화	
	40	제6차 국민투표	1987.10.27	화	
	41	제13대 대통령선거	1987.12.16	수	
제 6 공 화 국	4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988. 4.26	화	
	43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26	화	
	44	시·도 의회의원선거	1991. 6.20	목	
	45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 3.24	화	
	46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12.18	금	
	4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6.27	화	
	48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6. 4.11	목	
	49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12.18	금	

② 대통령선거

구 분	선거일	선출방법	후보자수	당선인	비고
초대	1948. 7.20	간접선거 (국회)	3	이승만	
제2대	1952. 8. 5	직접선거	4	자유당 이승만	
제3대	1956. 5.15	직접선거	3	자유당 이승만	
제4대	1960. 3.15	직접선거	2	자유당 이승만	선거무효 (3·5부정선거)
제4대	1960. 8.12	간접선거 (국회)	12	민주당 윤보선	
제5대	1963.10.15	직접선거	7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6대	1967. 5. 3	직접선거	7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7대	1971. 4.27	직접선거	7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8대	1972.12.23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9대	1978. 7. 6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10대	1979.12. 6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최규하	
제11대	1980. 8.27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전두환	
제12대	1981. 2.25	간접선거 (대통령선거인단)	4	민주정의당 전두환	
제13대	1987.12.16	직접선거	8	민주정의당 노태우	
제14대	1992.12.18	직접선거	8	민주자유당 김영삼	
제15대	1997.12.18	직접선거	7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③ 국회의원선거

구 분	선거일	선출인원			지 역 선거구수	선거구제	비고
		계	지역구	전국구 (비례대표)			
제 헌	1948. 5. 10	200	200		200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2대	1950. 5. 30	210	210		210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3대	1954. 5. 20	203	203		20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4대	1958. 5. 2	233	233		23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5대	1960. 7. 29	233	233		23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6대	1963. 11. 26	175	131	44	131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7대	1967. 6. 8	175	131	44	131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8대	1971. 5. 25	204	153	51	15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9대	1973. 2. 27	219	146	(73)	73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0대	1978. 12. 12	231	154	(77)	77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1대	1981. 3. 25	276	184	92	92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2대	1985. 2. 12	276	184	92	92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3대	1988. 4. 26	299	224	75	224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14대	1992. 3. 24	299	237	62	237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15대	1996. 4. 11	299	253	46	25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 제9대 및 제10대 전국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말함.

④ 지방선거

구 분	선거일	지방자치 단 체 수	선거실시 지방자치 단 체 수	정 수	비 고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25	1,542	1,397	17,559	시의원선거 : 19개 시중 17개 시 실시 읍의원선거 : 75개 읍중 72개 읍 실시 면의원선거 : 1,448개 면중 1,308개 면 실시	
도회의원선거	1952. 5.10	9	7	306	7개도 실시(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미실시)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	1,491	1,458	16,961	시의원선거 : 26개 시중 25개 시 실시 읍의원선거 : 자료 없음 면의원선거 : 자료 없음	
시·읍·면장선거	1956. 8. 8	1,491	580	1,491	시장선거 : 26개 시중 6개 시 실시 읍장선거 : 76개 읍중 30개 읍 실시 면장선거 : 1,389개 면중 544개 면 실시	
서울시·도회의원선거	1956. 8.13	10	10	437	10개 시·도 모두 실시	
서울시·도회의원선거	1960.12.12	10	10	487	10개 시·도 모두 실시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12.19	1,518	1,468	16,909	시의원선거 : 26개 시 모두 실시 읍의원선거 : 82개 읍 모두 실시 면의원선거 : 1,360개 면 모두 실시	
시·읍·면장선거	1960.12.26	1,468	1,468	1,468	시장선거 : 26개 시 모두 실시 읍장선거 : 82개 읍 모두 실시 면장선거 : 1,360개 면 모두 실시	
서울시장·도지사선거	1960.12.29	10	10	10	10개 시·도 모두 실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26	3,562	3,562	4304		
시·도회의의원선거	1991. 6.20	866	866	866	15개 시·도 모두 실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시·도지사	1995. 6.27	15	15	15	
	구·시·군의장		230	230	230	
	시·도회의의원		890 (15)	890 (15)	972 (97)	비례대표선거구 : 15 비례대표정수 : 97
	구·시·군의회의원		3,750	3,750	4,541	

⑤ 국민투표

구 분	투표일	투 표 율 (%)	찬성투표율 (%)	비 고
제1차	1962.12.17	85.3	78.8	헌법 개정 (제3공화국 출범)
제2차	1969.10.17	77.1	65.1	헌법 개정 (3선 개헌)
제3차	1972.11.21	91.9	91.5	헌법 개정 (유신헌법)
제4차	1975. 2.12	79.8	73.1	유신헌법 찬반 및 정부신임
제5차	1980.10.22	95.5	91.6	헌법 개정 (제5공화국 출범)
제6차	1987.10.27	78.2	93.1	헌법 개정 (제6공화국 출범)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① 대통령선거

구 분	선거일(요일)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수	투표율 (%)	비고
				유효	무효	계			
초대	1948. 7. 20(화)	-	198	195	1	196	2	99.0	간접선거 (국회)
제2대	1952. 8. 5(화)	20,188,641	8,259,428	7,020,684	255,199	7,275,883	983,545	88.1	
제3대	1956. 5. 15(화)	21,526,374	9,606,870	7,210,245	1,856,818	9,067,063	539,807	94.4	
제4대	1960. 3. 15(화)	21,526,374	11,196,490	9,633,376	1,228,896	10,862,272	334,218	97.0	선거무효
제4대	1960. 8. 12(금)	-	263	253	6	259	4	98.5	간접선거 (국회)
제5대	1963. 10. 15(화)	26,278,025	12,985,015	10,081,198	954,977	11,036,175	1,948,840	85.0	
제6대	1967. 5. 3(수)	29,174,190	13,935,093	11,058,721	586,494	11,645,215	2,289,878	83.6	
제7대	1971. 4. 27(화)	30,839,687	15,552,236	11,923,218	494,606	12,417,824	3,134,412	79.8	
제8대	1972. 12. 23(토)	-	2,359	2,357	2	2,359	0	100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9대	1978. 7. 6(목)	-	2,581	2,577	1	2,587	3	99.9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1979. 12. 6(목)	-	2,560	2,465	84	2,549	11	99.6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1대	1980. 8. 27(수)	-	2,540	2,524	1	2,525	15	99.4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2대	1981. 2. 25(수)	-	5,277	5,270	1	5,271	6	99.9	간접선거 (대통령선거인단)
제13대	1987. 12. 16(수)	41,338,959	25,873,624	22,603,411	463,008	23,066,419	2,807,205	89.2	
제14대	1992. 12. 18(금)	44,107,551	29,422,658	23,775,409	319,761	24,095,170	5,327,488	81.9	-
제15대	1997. 12. 18(금)	46,573,643	32,290,416	25,642,438	400,195	26,042,633	6,247,783	80.7	-

② 국회의원선거

구분	선거일(요일)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수	투표율 (%)	비고
				유효	무효	계			
제헌	1948. 5.10(월)	19,190,877	7,840,871	7,216,942	270,707	7,487,649	353,222	95.5	
제2대	1950. 5.30(화)	20,178,641	8,434,737	6,987,040	765,036	7,752,076	682,661	91.9	
제3대	1954. 5.20(목)	20,178,641	8,446,509	7,492,308	206,082	7,698,390	748,119	91.1	
제4대	1958. 5. 2(금)	21,526,374	10,164,428 (323,773)	8,576,757	347,148	8,923,905	916,750	90.7	
제5대	1960. 7.29(금)	21,526,374	11,593,432	9,077,835	701,086	9,778,921	1,814,511	84.3	
참의원	1960. 7.29(금)	21,526,374	11,593,432	9,337,705	409,983	9,747,688	1,845,744	84.1	
제6대	1963.11.26(화)	26,278,025	13,344,149	9,298,830	323,353	9,622,183	3,721,966	72.1	
제7대	1967. 6. 8(목)	29,174,190	14,717,354	10,856,008	346,309	11,202,317	3,515,037	76.1	
제8대	1971. 5.25(화)	30,839,687	15,610,258	11,195,922	234,280	11,430,202	4,180,056	73.2	
제9대	1973. 2.27(화)	31,502,534	15,690,130 (342,081)	10,991,436	205,048	11,196,484	4,151,565	73.0	
제10대	1978.12.12(화)	36,228,754	19,489,490	14,812,443	210,927	15,023,370	4,466,120	77.1	
제11대	1981. 3.25(수)	37,768,977	21,094,468 (185,348)	16,207,325	190,520	16,397,845	4,511,275	78.4	
제12대	1985. 2.12(화)	40,361,844	23,987,830	19,974,643	312,029	20,286,672	3,701,158	84.6	
제13대	1988. 4.26(화)	41,578,821	26,198,205	19,642,040	208,775	19,850,815	6,347,390	75.8	-
제14대	1992. 3.24(화)	43,862,069	29,003,828	20,583,812	259,670	20,843,482	8,160,346	71.9	-
제15대	1996. 4.11(목)	45,958,885	31,488,294	19,653,073	469,726	20,122,799	11,365,495	63.9	-

※ ()는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수를 말함.

③ 지방선거

구 분	선거일(요일)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시의회의원 선거	1952. 4.25(금)	2,668,745	1,111,849	869,877 (97.5%)	21,851 (2.5%)	891,728	220,121	80.2
	1956. 8. 8(수)	3,734,564	1,578,678	1,207,171 (96.1%)	48,877 (3.9%)	1,256,048	322,630	79.5
	1960.12.19(월)	3,949,946	1,995,994	1,214,235 (97.2%)	35,019 (2.8%)	1,249,254	746,740	62.6
읍의회의원 선거	1952. 4.25(금)	1,750,102	734,538	631,003 (97.1%)	18,541 (2.9%)	649,544	84,9294	88.4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19(월)	1,877,544	989,574	745,291 (97.2%)	21,405 (2.8%)	766,696	222,878	77.5
면의회의원 선거	1952. 4.25(금)	13,464,032	5,689,917	5,171,720 (97.7%)	123,742 (2.3%)	5,295,462	394,455	93.1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19(월)	13,678,821	7,128,216	5,799,728 (97.2%)	169,009 (2.8%)	5,968,737	1,159,479	83.7
도회의원 선거	1952. 5.10(토)	14,836,791	6,358,383	5,013,524 (97.1%)	151,702 (2.9%)	5,165,226	1,193,157	81.2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	1956. 8.13(월)	19,140,219	8,421,772	7,031,854 (97.3%)	191,751 (2.7%)	7,223,605	1,198,167	85.8
	1960.12.12(월)	21,526,374	11,263,445	7,222,376 (95.1%)	373,376 (4.9%)	7,595,752	3,667,693	67.4
시장선거	1956. 8. 8(수)	500,106	209,815	173,708 (95.5%)	8,155 (4.5%)	181,863	27,952	86.7
	1960.12.26(월)	3,949,946	2,035,429	1,071,998 (96.5%)	38,945 (3.5%)	1,110,943	924,486	54.6
읍장선거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26(월)	1,877,544	1,021,388	714,952 (96.2%)	27,945 (3.8%)	742,897	278,491	72.7
면장선거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26(월)	13,678,821	7,228,937	5,647,849 (95.8%)	250,516 (4.2%)	5,898,365	1,330,572	81.6
서울시장·시도 지사선거	1960.12.29(목)	21,526,374	11,343,336	4,188,020 (95.2%)	211,400 (4.8%)	4,399,420	6,943,916	38.8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1991. 3.26(화)	43,422,640	28,301,580	12,907,978 (97.5%)	329,115 (2.5%)	13,237,093	10,830,051	55.0
시·도의회 의원선거	1991. 6.20(목)	43,467,306	28,416,241	16,239,098 (98.2%)	294,836 (1.8%)	16,533,934	11,549,090	58.9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995. 6.27(화)	45,571,787	31,048,566	20,646,858 (97.3%)	580,591 (2.7%)	21,227,449	9,821,117	68.4
				4,795,697 (97.4%)	126,541 (2.6%)	4,922,238	2,515,787	66.2
				19,423,204 (96.0%)	810,240 (4.0%)	20,233,444	9,362,269	68.4
				19,266,359 (96.3%)	735,163 (3.7%)	20,001,522	9,168,430	68.6

④ 국민투표

구 분	투표일(요일)	인구수	투표인수	투표자수				기권수	투표율 (%)	찬성률 (%)
				유 효		무 효	소 계			
				찬 성	반 대					
제1차	1962.12.17(월)	26,278,025	12,412,798	8,339,333	2,008,801	237,864	10,585,998	1,826,800	85.3	78.8
제2차	1969.10.17(금)	30,481,835	15,048,925	7,553,655	3,636,369	414,014	11,604,038	3,444,887	77.1	65.1
제3차	1972.11.21(화)	31,536,109	15,676,395	13,186,559	1,106,143	118,012	14,410,714	1,265,681	91.9	91.5
제4차	1975. 2.12(수)	33,290,921	16,788,839	9,800,201	3,370,085	233,959	13,404,245	3,384,594	79.8	73.1
제5차	1980.10.22(수)	37,589,091	20,373,869	17,829,354	1,357,673	266,899	19,453,926	919,943	95.5	91.6
제6차	1987.10.27(화)	41,338,959	25,619,648	18,640,625	1,092,702	295,345	20,028,672	5,590,976	78.2	93.1

3.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①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원식	민주당 조 순	친민당 박홍래	한국당 고순복	무소속 김명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박찬종	무소속 정기용	무소속 황산성	계			
합 계	7,438,025	4,922,210	1,001,446	2,051,441	25,054	10,488	9,992	17,728	1,623,356	6,156	97,709	4,843,370	78,840	2,515,815	66.2
종로구	154,097	102,407	22,018	45,389	585	196	151	272	29,668	213	2,164	100,656	1,751	51,690	66.5
중 구	111,245	74,722	17,230	32,388	484	146	98	257	21,330	98	1,378	73,409	1,313	36,523	67.2
용산구	194,174	127,768	28,832	51,612	761	305	260	505	40,507	179	2,345	125,306	2,462	66,406	65.8
성동구	252,032	166,467	33,189	71,732	981	455	393	753	52,119	222	3,147	162,991	3,476	85,565	66.0
광진구	273,776	180,834	34,220	76,593	912	470	463	638	61,233	188	3,211	177,928	2,906	92,942	66.1
동대문구	312,601	207,256	42,140	85,243	1,261	456	422	760	69,058	343	4,008	203,691	3,565	105,345	66.3
중랑구	313,096	204,549	39,085	81,646	1,410	567	601	795	72,695	259	4,226	201,284	3,265	108,547	65.3
성북구	360,168	237,957	48,352	102,112	1,449	675	520	865	74,880	346	4,958	234,157	3,800	122,211	66.1
강북구	287,802	185,324	34,053	82,271	1,108	459	416	729	57,056	345	5,556	181,993	3,331	102,478	64.4
도봉구	252,556	167,221	31,500	69,476	777	322	410	662	58,236	164	3,237	164,784	2,437	85,335	66.2
노원구	390,892	263,898	50,940	106,748	1,668	532	522	987	92,413	332	5,450	259,592	4,306	126,994	67.5
은평구	355,299	232,703	45,183	99,295	1,161	429	655	888	76,840	253	4,763	229,467	3,236	122,596	65.5
서대문구	269,147	179,617	36,902	78,851	1,038	408	419	682	54,544	224	3,546	176,614	3,003	89,530	66.7
마포구	296,511	196,404	40,731	82,645	1,110	435	342	652	62,904	252	3,873	192,944	3,460	100,107	66.2
양천구	323,468	217,860	43,722	89,695	975	448	374	752	74,077	242	4,283	214,568	3,292	105,608	67.4
강서구	340,989	227,005	49,304	88,369	1,021	574	438	872	77,338	267	4,714	222,897	4,108	113,984	66.6
구로구	268,256	177,020	32,633	72,274	1,214	497	453	757	61,629	212	4,025	173,694	3,326	91,236	66.0
금천구	199,909	129,174	23,410	54,935	789	394	270	510	43,479	187	2,779	126,753	2,421	70,735	64.6
영등포구	301,714	199,025	40,122	81,568	1,138	477	344	707	66,812	286	4,252	195,706	3,319	102,689	66.0
동작구	315,790	209,624	43,933	90,138	837	329	347	725	66,139	229	3,472	206,149	3,475	106,166	66.4
관악구	405,518	270,849	48,561	128,783	1,251	517	469	962	80,840	362	4,859	266,604	4,245	134,669	66.8
서초구	284,241	188,352	44,579	71,533	394	160	170	397	65,747	141	2,859	185,980	2,372	95,889	66.3
강남구	380,717	250,159	62,477	95,527	719	306	396	721	82,279	247	4,475	247,147	3,012	130,558	65.7
송파구	452,290	298,938	62,821	123,549	927	455	430	1,044	99,882	317	5,803	295,228	3,710	153,352	66.1
강동구	341,737	227,077	45,509	89,069	1,084	476	629	836	81,651	248	4,326	223,828	3,249	114,660	66.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부 산 광 역 시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문정수	민주당 노무현	무소속 김현옥	무소속 배상한	계			
합 계	2,658,224	1,760,404	885,433	647,297	169,652	20,008	1,722,390	38,014	897,820	66.2
중 구	49,868	32,557	17,624	10,615	3,191	320	31,750	807	17,311	65.3
서 구	131,457	87,524	45,565	29,918	8,756	1,090	85,329	2,195	43,933	66.6
동 구	115,074	78,263	41,821	26,777	6,920	693	76,211	2,052	36,811	68.0
영도구	145,911	93,551	46,819	36,763	6,814	871	91,267	2,284	52,360	64.1
부산진구	324,428	216,306	111,546	78,199	19,815	2,439	211,999	4,307	108,122	66.7
동래구	212,814	137,481	68,594	48,199	15,836	1,452	134,081	3,400	75,333	64.6
남 구	222,532	151,287	77,079	55,874	13,611	1,705	148,269	3,018	71,245	68.0
북 구	180,969	118,335	59,348	45,412	9,923	1,350	116,033	2,302	62,634	65.4
해운대구	201,765	129,542	59,526	52,312	13,016	1,611	126,465	3,077	72,223	64.2
사하구	254,950	162,628	83,897	58,196	15,513	1,793	159,399	3,229	92,322	63.8
금정구	210,987	140,972	68,013	54,249	14,365	1,402	138,029	2,943	70,015	66.8
강서구	51,825	38,680	21,023	13,099	2,669	876	37,667	1,013	13,145	74.6
연제구	170,586	112,840	56,572	41,794	11,454	1,089	110,909	1,931	57,746	66.1
수영구	140,440	93,663	48,287	31,964	11,035	919	92,205	1,458	46,777	66.7
사상구	196,634	129,423	64,292	50,609	10,141	1,527	126,569	2,854	67,211	65.8
기장군	47,984	37,352	15,427	13,317	6,593	871	36,208	1,144	10,632	77.8

대 구 광 역 시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해녕	자유민주연합 이의익	무소속 문희갑	무소속 안유호	무소속 이해봉				계
합 계	1,663,614	1,064,253	175,749	230,668	383,272	29,617	222,409	1,041,715	22,538	599,361	64.0
중 구	86,664	58,615	11,286	14,675	18,142	1,425	11,928	57,456	1,159	28,049	67.6
동 구	248,473	157,445	27,159	36,515	54,152	4,937	31,085	153,848	3,597	91,028	63.4
서 구	236,955	146,672	21,998	29,228	60,258	4,203	27,180	142,867	3,805	90,283	61.9
남 구	166,761	103,895	17,875	22,674	35,282	2,891	23,053	101,775	2,120	62,866	62.3
북 구	244,117	159,639	26,407	35,848	55,951	5,349	33,040	156,595	3,044	84,478	65.4
수성구	295,349	188,551	35,767	44,304	59,839	4,554	41,208	185,672	2,879	106,798	63.8
달서구	305,403	190,904	28,630	38,766	71,557	4,852	43,259	187,064	3,840	114,499	62.5
달성군	79,892	58,532	6,627	8,658	28,091	1,406	11,656	56,438	2,094	21,360	73.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인천광역시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기선	민주당 신용석	자유민주연합 강우혁	계			
합계	1,551,925	962,552	383,965	298,544	258,175	940,684	21,868	589,373	62.0
중구	53,355	35,250	15,695	9,603	8,773	34,071	1,179	18,105	66.1
동구	72,255	48,196	19,600	14,399	12,462	46,461	1,735	24,059	66.7
남구	296,370	183,466	72,612	52,532	54,660	179,804	3,662	112,904	61.9
연수구	126,764	81,851	35,192	22,457	22,823	80,472	1,379	44,913	64.6
남동구	254,738	156,405	60,802	48,508	43,994	153,304	3,101	98,333	61.4
부평구	329,497	195,837	74,167	68,164	49,566	191,897	3,940	133,660	59.4
계양구	166,361	98,430	37,520	35,966	23,170	96,656	1,774	67,931	59.2
서구	190,686	114,377	44,222	37,378	29,755	111,355	3,022	76,309	60.0
강화군	51,705	40,117	19,310	8,299	10,936	38,545	1,572	11,588	77.6
옹진군	10,194	8,623	4,845	1,238	2,036	8,119	504	1,571	84.6

광주광역시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동환	민주당 송인중	계			
합계	822,880	533,393	53,817	469,570	523,387	10,006	289,487	64.8
동구	106,854	69,337	8,222	60,015	68,237	1,100	37,517	64.9
서구	148,678	96,265	10,198	84,647	94,845	1,420	52,413	64.7
남구	167,527	108,589	10,446	95,686	106,132	2,457	58,938	64.8
북구	290,351	185,360	17,126	164,986	182,112	3,248	104,991	63.8
광산구	109,470	73,842	7,825	64,236	72,061	1,781	35,628	67.5

대전광역시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염홍철	민주당 변평섭	자유민주연합 홍선기	무소속 이대형	계			
합계	819,604	548,529	112,607	58,346	342,959	23,953	537,865	10,664	271,075	66.9
동구	185,210	122,346	25,255	12,715	75,862	5,418	119,250	3,096	62,864	66.1
중구	182,315	120,949	24,240	11,940	77,783	4,684	118,647	2,302	61,366	66.3
서구	252,749	171,652	33,733	18,078	110,848	6,529	169,188	2,464	81,097	67.9
유성구	71,445	50,017	12,322	5,848	27,590	3,130	48,890	1,127	21,428	70.0
대덕구	127,885	83,565	17,057	9,765	50,876	4,192	81,890	1,675	44,320	6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기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인제	민주당 장경우	자유민주연합 김문원	무소속 임사빈	계			
합 계	5,043,054	3,188,871	1,264,914	923,069	316,637	613,624	3,118,244	70,627	1,854,183	63.2
수원시 권선구	169,568	102,529	35,268	28,094	10,556	26,751	100,669	1,860	67,039	60.5
수원시 팔달구	149,619	91,484	33,792	23,214	8,929	24,045	89,980	1,504	58,135	61.1
수원시 장안구	167,146	101,389	34,999	26,001	12,228	26,130	99,358	2,031	65,757	60.7
성남시 수정구	181,291	110,971	39,330	42,027	9,878	17,439	108,674	2,297	70,320	61.2
성남시 중원구	190,201	113,965	41,540	43,186	8,992	17,813	111,531	2,434	76,236	59.9
성남시 분당구	181,552	115,926	52,532	35,335	9,912	16,567	114,346	1,580	65,626	63.9
의정부시	185,566	113,508	36,550	27,180	25,237	22,133	111,100	2,408	72,058	61.2
안양시 만안구	179,546	108,406	50,175	33,523	8,358	14,371	106,427	1,979	71,140	60.4
안양시 동안구	215,116	133,639	61,331	42,271	10,744	17,229	131,575	2,064	81,477	62.1
부천시 원미구	245,206	142,220	54,466	52,005	16,035	17,187	139,693	2,527	102,986	58.0
부천시 소사구	138,404	79,995	31,792	27,900	9,468	9,315	78,475	1,520	58,409	57.8
부천시 오정구	120,629	68,402	26,836	25,257	6,733	8,168	66,994	1,408	52,227	56.7
광명시	232,658	138,760	56,695	48,613	15,900	14,762	135,970	2,790	93,898	59.6
평택시	214,882	148,234	52,853	36,330	14,319	41,058	144,560	3,674	66,648	69.0
동두천시	50,416	36,151	12,000	7,703	4,978	10,580	35,261	890	14,265	71.7
양주군	63,378	44,001	10,083	7,526	7,151	17,677	42,437	1,564	19,377	69.4
안산시	310,884	178,645	71,762	63,308	17,502	22,877	175,449	3,196	132,239	57.5
과천시	48,331	32,119	15,164	8,949	2,521	4,962	31,596	523	16,212	66.5
의왕시	70,763	45,489	20,272	14,038	3,816	6,658	44,784	705	25,274	64.3
군포시	151,165	95,544	41,246	30,261	8,260	14,288	94,055	1,489	55,621	63.2
시흥시	86,452	55,508	23,183	18,738	5,470	6,871	54,262	1,246	30,944	64.2
구리시	93,902	56,795	21,262	15,018	5,950	13,255	55,485	1,310	37,107	60.5
남양주시	156,139	99,975	40,532	24,156	10,107	22,145	96,940	3,035	56,164	64.0
여주군	66,041	46,755	18,362	12,763	3,228	10,909	45,262	1,493	19,286	70.8
오산시	44,398	31,263	12,712	6,985	2,864	8,010	30,571	692	13,135	70.4
화성군	113,550	80,477	31,081	19,103	6,968	19,975	77,127	3,350	33,073	70.9
파주군	118,473	78,656	36,736	16,316	6,044	17,124	76,220	2,436	39,817	66.4
고양시	328,752	196,466	82,430	60,691	17,318	32,592	193,031	3,435	132,286	59.8
하남시	75,923	49,754	21,275	14,543	3,802	9,090	48,710	1,044	26,169	65.5
광주군	60,653	42,053	15,498	11,747	3,298	10,261	40,804	1,249	18,600	69.3
포천군	86,332	64,247	28,284	10,285	6,058	17,908	62,535	1,712	22,085	74.4
연천군	38,786	29,404	12,609	5,576	3,213	6,980	28,378	1,026	9,382	75.8
양평군	55,445	41,533	17,154	8,331	3,760	10,983	40,228	1,305	13,912	74.9
가평군	38,766	29,696	12,081	5,931	2,120	8,611	28,743	953	9,070	76.6
이천군	101,518	68,962	27,418	15,459	5,220	18,940	67,037	1,925	32,556	67.9
용인군	156,263	103,065	38,953	27,206	11,849	22,372	100,380	2,685	53,198	66.0
안성군	85,524	63,272	24,828	16,321	4,724	15,708	61,581	1,691	22,252	74.0
김포군	69,936	49,613	21,830	11,179	3,127	11,880	48,016	1,597	20,323	70.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강 원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상룡	자유민주연합 최각규	계			
합 계	1,048,490	783,999	260,004	500,894	760,898	23,101	264,491	74.8
춘천시	160,271	113,782	74,202	36,575	110,777	3,005	46,489	71.0
원주시	158,156	114,000	23,588	87,055	110,643	3,357	44,156	72.1
강릉시	151,881	112,460	15,021	94,658	109,679	2,781	39,421	74.0
동해시	66,766	50,249	8,555	40,417	48,972	1,277	16,517	75.3
태백시	44,180	33,530	9,677	22,968	32,645	885	10,650	75.9
정선군	42,245	32,082	10,906	20,102	31,008	1,074	10,163	75.9
속초시	53,583	39,177	15,817	22,384	38,201	976	14,406	73.1
고성군	27,887	22,021	7,590	13,762	21,352	669	5,866	79.0
양양군	22,156	18,345	4,568	13,144	17,712	633	3,811	82.8
인제군	24,179	19,422	7,612	11,225	18,837	585	4,757	80.3
삼척시	62,583	49,426	10,227	37,490	47,717	1,709	13,157	79.0
홍천군	53,255	40,113	23,923	14,731	38,654	1,459	13,142	75.3
횡성군	35,396	26,855	8,493	17,303	25,796	1,059	8,541	75.9
영월군	38,004	28,463	9,507	18,017	27,524	939	9,541	74.9
평창군	35,030	26,878	6,413	19,650	26,063	815	8,152	76.7
화천군	18,726	14,654	7,042	7,123	14,165	489	4,072	78.3
철원군	37,202	28,828	9,330	18,543	27,873	955	8,374	77.5
양구군	16,990	13,714	7,533	5,747	13,280	434	3,276	8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총 청 북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덕영	민주당 이용희	자유민주연합 주병덕	무소속 양성연	무소속 윤석조	무소속 조남성				계
합 계	972,170	706,480	159,911	168,209	250,105	25,603	27,880	54,748	686,456	20,024	265,690	72.7
청주시 상당구	140,577	95,524	15,684	19,056	46,632	2,706	3,919	5,563	93,560	1,964	45,053	68.0
청주시 흥덕구	190,241	124,241	21,651	25,849	57,846	3,706	5,287	7,720	122,059	2,182	66,000	65.3
충주시	144,061	104,187	36,547	20,068	30,159	3,746	3,184	7,490	101,194	2,993	39,874	72.3
제천시	98,390	71,282	22,769	13,216	15,920	2,648	3,167	11,475	69,195	2,087	27,108	72.4
단양군	31,427	24,422	5,102	3,848	4,309	922	946	8,336	23,463	959	7,005	77.7
청원군	83,670	62,802	12,907	13,847	24,698	2,176	3,703	3,139	60,470	2,332	20,868	75.1
영동군	45,507	35,558	9,031	12,885	7,054	2,218	1,481	1,615	34,284	1,274	9,949	78.1
보은군	35,660	28,530	5,454	12,800	5,642	1,218	824	1,758	27,696	834	7,130	80.0
옥천군	45,998	36,917	5,418	20,206	5,825	1,448	912	1,837	35,646	1,271	9,081	80.3
괴산군	59,085	46,517	10,958	9,814	18,316	1,896	1,481	2,282	44,747	1,770	12,568	78.7
음성군	58,103	45,556	8,701	8,433	21,249	1,739	1,794	2,276	44,192	1,364	12,547	78.4
진천군	39,451	30,944	5,689	8,187	12,455	1,180	1,182	1,257	29,950	994	8,507	78.4

총 청 남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중배	민주당 조중연	자유민주연합 심대평	계			
합 계	1,270,138	937,009	174,117	117,300	616,006	907,423	29,586	333,129	73.8
천안시	214,987	140,772	27,668	17,812	91,936	137,416	3,356	74,215	65.5
공주시	95,204	73,802	9,595	7,033	54,710	71,338	2,464	21,402	77.5
보령시	84,250	63,401	11,122	8,743	41,291	61,156	2,245	20,849	75.3
아산시	109,799	78,606	12,217	9,234	54,872	76,323	2,283	31,193	71.6
금산군	50,633	38,318	9,207	3,990	23,470	36,667	1,651	12,315	75.7
연기군	57,178	42,646	7,265	4,463	29,470	41,198	1,448	14,532	74.6
논산군	112,312	82,781	12,401	11,632	55,724	79,757	3,024	29,531	73.7
부여군	72,928	58,214	7,718	7,220	41,423	56,361	1,853	14,714	79.8
서천군	61,008	48,191	8,310	12,245	26,136	46,691	1,500	12,817	79.0
홍성군	71,311	53,948	13,812	6,460	31,877	52,149	1,799	17,363	75.7
청양군	33,407	26,102	4,582	2,846	17,529	24,957	1,145	7,305	78.1
예산군	78,174	58,555	11,668	5,722	39,551	56,941	1,614	19,619	74.9
서산시	94,706	70,379	13,399	8,115	46,858	68,372	2,007	24,327	74.3
태안군	50,068	37,934	14,431	4,259	17,942	36,632	1,302	12,134	75.8
당진군	84,173	63,360	10,722	7,526	43,217	61,465	1,895	20,813	7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북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현욱	민주당 유종근	계			
합계	1,360,350	1,001,959	319,452	653,295	972,747	29,212	358,391	73.7
전주시 완산구	187,192	129,236	38,025	88,694	126,719	2,517	57,956	69.0
전주시 덕진구	176,317	118,824	32,075	83,799	115,874	2,950	57,493	67.4
군산기	184,226	134,906	64,654	66,718	131,372	3,534	49,320	73.2
익산시	216,999	154,305	43,967	106,210	150,177	4,128	62,694	71.1
정읍시	105,011	79,299	18,486	57,972	76,458	2,841	25,712	75.5
남원시	75,847	60,867	17,590	41,395	58,985	1,882	14,980	80.2
김제시	92,989	70,589	23,326	44,990	68,316	2,273	22,400	75.9
완주군	62,137	47,333	14,369	31,340	45,709	1,624	14,804	76.2
진안군	30,324	24,523	7,951	15,701	23,652	871	5,801	80.9
무주군	23,335	19,097	6,631	11,863	18,494	603	4,238	81.8
장수군	22,677	18,163	5,872	11,604	17,476	687	4,514	80.1
임실군	33,116	26,679	8,804	17,041	25,845	834	6,437	80.6
순창군	29,349	23,868	8,080	14,998	23,078	790	5,481	81.3
고창군	60,453	47,559	13,796	31,996	45,792	1,767	12,894	78.7
부안군	60,378	46,711	15,826	28,974	44,800	1,911	13,667	77.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 라 남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전석홍	민주당 허경만	무소속 최문자	계			
합 계	1,504,598	1,144,447	277,386	769,538	(사퇴)	1,046,924	97,523	360,151	76.1
목포시	149,587	101,253	26,902	68,877	0	95,779	5,474	48,334	67.7
여수시	119,324	84,973	13,043	67,869	0	80,912	4,061	34,351	71.2
순천시	161,392	117,174	23,365	86,077	0	109,442	7,732	44,218	72.6
나주시	85,184	65,086	17,756	41,652	0	59,408	5,678	20,098	76.4
여천시	46,884	35,985	7,393	26,915	0	34,308	1,677	10,899	76.8
여천군	48,054	36,849	6,656	26,477	0	33,133	3,716	11,205	76.7
담양군	45,762	35,801	6,984	25,497	0	32,481	3,320	9,961	78.2
장성군	42,571	32,162	5,342	23,888	0	29,230	2,932	10,409	75.5
화순군	51,757	38,664	7,258	27,633	0	34,891	3,773	13,093	74.7
곡성군	31,524	25,432	5,387	16,657	0	22,044	3,388	6,092	80.7
구례군	26,642	21,685	4,284	15,256	0	19,540	2,145	4,957	81.4
광양시	82,828	66,402	19,033	43,932	0	62,965	3,437	16,426	80.2
고흥군	82,228	64,577	12,752	45,179	0	57,931	6,646	17,651	78.5
보성군	52,176	41,617	11,360	26,098	0	37,458	4,159	10,559	79.8
장흥군	42,785	34,187	9,266	21,725	0	30,991	3,196	8,598	79.9
강진군	39,344	30,867	11,447	16,664	0	28,111	2,756	8,477	78.5
완도군	51,862	42,046	9,133	28,239	0	37,372	4,674	9,816	81.1
해남군	74,269	58,806	16,772	35,571	0	52,343	6,463	15,463	79.2
진도군	33,364	26,880	7,408	16,220	0	23,628	3,252	6,484	80.6
영암군	45,024	35,823	17,938	14,281	0	32,219	3,604	9,201	79.6
무안군	53,459	40,578	10,950	25,860	0	36,810	3,768	12,881	75.9
영광군	53,881	41,613	10,568	26,599	0	37,167	4,446	12,268	77.2
함평군	38,526	30,170	7,200	19,853	0	27,053	3,117	8,356	78.3
신안군	46,171	35,817	9,189	22,519	0	31,708	4,109	10,354	77.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북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의근	자유민주연합 박준홍	무소속 이판석	계			
합 계	1,926,274	1,478,373	541,535	395,496	489,999	1,427,030	51,343	447,901	76.7
포항시 북 구	163,898	120,578	46,659	30,084	40,482	117,225	3,353	43,320	73.6
포항시 남 구	169,950	123,656	44,560	33,120	42,428	120,108	3,548	46,294	72.8
울릉군	8,270	7,260	3,827	949	2,315	7,091	169	1,010	87.8
경주시	197,729	147,489	54,907	40,144	47,903	142,954	4,535	50,240	74.6
김천시	107,079	83,253	28,354	29,795	22,129	80,278	2,975	23,826	77.7
안동시	134,533	105,012	38,404	16,006	47,069	101,479	3,533	29,521	78.1
구미시	188,611	134,378	34,843	59,336	37,303	131,482	2,896	54,233	71.2
영주시	96,324	76,438	24,819	10,658	38,478	73,955	2,483	19,886	79.4
영천시	90,388	69,742	26,373	15,159	25,373	66,905	2,837	20,646	77.2
상주시	97,054	78,342	28,944	23,736	22,058	74,738	3,604	18,712	80.7
문경시	67,980	54,076	18,622	17,690	15,747	52,059	2,017	13,904	79.5
예천군	50,580	40,622	15,845	8,166	14,528	38,539	2,083	9,958	80.3
경산시	112,683	81,368	28,254	22,269	27,811	78,334	3,034	31,315	72.2
청도군	42,662	34,662	23,441	5,010	4,515	32,966	1,696	8,000	81.2
고령군	27,995	22,396	6,560	8,559	6,325	21,444	952	5,599	80.0
성주군	40,543	33,537	12,525	10,561	9,177	32,263	1,274	7,006	82.7
군위군	26,178	21,901	8,495	5,476	6,947	20,918	983	4,277	83.7
칠곡군	59,718	45,383	13,643	15,996	14,401	44,040	1,343	14,335	76.0
의성군	66,406	54,052	21,410	13,074	17,500	51,984	2,068	12,354	81.4
청송군	28,316	24,299	9,729	5,110	8,655	23,494	805	4,017	85.8
영덕군	43,293	35,198	15,750	8,456	9,411	33,617	1,581	8,095	81.3
영양군	19,344	15,989	5,464	3,677	6,105	15,246	743	3,355	82.7
봉화군	36,714	29,209	11,390	5,147	11,332	27,869	1,340	7,505	79.6
울진군	50,026	39,533	18,717	7,318	12,007	38,042	1,491	10,493	7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남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혁규	자유민주연합 김용균	계			
합 계	2,621,029	1,914,773	1,177,397	666,756	1,844,153	70,620	706,256	73.1
창원시	294,098	198,352	122,666	70,643	193,309	5,043	95,746	67.4
울산시 중구	182,101	117,594	57,430	55,979	113,409	4,185	64,507	64.6
울산시 남구	189,610	126,847	68,238	54,925	123,163	3,684	62,763	66.9
울산시 동구	115,110	79,801	35,056	42,380	77,436	2,365	35,309	69.3
울산시울주구	122,104	87,330	48,172	34,959	83,131	4,199	34,774	71.5
마산시합포구	147,597	101,857	67,092	31,176	98,268	3,589	45,740	69.0
마산시회원구	143,176	98,715	65,441	30,626	96,067	2,648	44,461	68.9
진주시	222,709	172,285	110,549	55,740	166,289	5,996	50,424	77.4
진해시	87,935	70,771	46,233	22,371	68,604	2,167	17,164	80.5
통영시	95,146	73,616	51,887	18,809	70,696	2,920	21,530	77.4
고성군	51,861	41,897	25,443	14,645	40,088	1,809	9,964	80.8
사천시	85,135	65,916	41,439	21,648	63,087	2,829	19,219	77.4
김해시	168,046	117,968	77,424	36,596	114,020	3,948	50,078	70.2
의령군	30,555	25,399	16,215	8,076	24,291	1,108	5,156	83.1
함안군	50,480	41,559	25,472	14,159	39,631	1,928	8,921	82.3
창녕군	59,740	47,824	30,067	15,736	45,803	2,021	11,916	80.1
밀양시	93,485	70,923	46,427	21,580	68,007	2,916	22,562	75.9
양산군	103,366	71,967	47,616	21,924	69,540	2,427	31,399	69.6
거제시	98,760	76,354	54,126	18,870	72,996	3,358	22,406	77.3
하동군	48,352	39,125	25,013	12,340	37,353	1,772	9,227	80.9
남해군	51,619	41,127	26,197	12,467	38,664	2,463	10,492	79.7
함양군	37,727	31,187	17,672	11,836	29,508	1,679	6,540	82.7
산청군	35,698	29,421	19,927	8,263	28,190	1,231	6,277	82.4
거창군	52,844	42,423	26,898	13,407	40,305	2,118	10,421	80.3
합천군	53,775	44,515	24,697	17,601	42,298	2,217	9,260	82.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제 주 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자 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우근민	민주당 강보성	무소속 신구범	무소속 신두완	계			
합 계	348,191	280,197	89,000	66,406	111,205	6,961	273,572	6,625	67,994	80.5
제주시	163,863	127,311	42,089	20,830	59,144	2,954	125,017	2,294	36,552	77.7
북제주군	70,463	58,288	21,575	9,579	23,478	1,728	56,360	1,928	12,175	82.7
서귀포시	57,709	47,749	9,732	21,570	14,448	1,058	46,808	941	9,960	82.7
남제주군	56,156	46,849	15,604	14,427	14,135	1,221	45,387	1,462	9,307	83.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② 자치구·시·군의 장

서울특별시

● 종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배문환	민주당 정흥진	무소속 전재갑	계			
종로구	154,097	102,454	41,153	46,964	11,294	99,411	3,043	51,643	66.5

● 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장환	민주당 김동일	자유민주연합 정문철	계			
중 구	111,245	74,724	28,811	38,810	5,123	72,744	1,980	36,521	67.2

● 용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준우	민주당 설송웅	무소속 김중환	계			
용산구	194,174	127,768	40,529	72,880	11,102	124,511	3,257	66,406	65.8

● 성동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광하	민주당 고재득	자유민주연합 장문구	무소속 김원식	무소속 황인범				계
성동구	252,032	166,457	50,199	72,063	8,320	15,131	15,892	161,605	4,852	85,575	66.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광진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전명호	민주당 정영섭	무소속 김광해	무소속 전재성	계			
광진구	273,776	180,802	60,452	81,010	20,964	13,786	176,212	4,590	92,974	66.0

● 동대문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종심	민주당 박 훈	무소속 인택환	계			
동대문구	312,601	207,252	76,131	95,936	29,903	201,970	5,282	105,349	66.3

● 중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동만	민주당 이문재	자유민주연합 강병진	무소속 김장수	무소속 양재철				계
중랑구	313,096	204,539	49,194	90,675	33,497	6,675	19,391	199,432	5,107	108,557	65.3

● 성북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병용	민주당 진영호	무소속 황호산	계			
성북구	360,168	237,899	84,923	115,778	31,064	231,765	6,134	122,269	66.1

● 도봉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창신	민주당 유천수	자유민주연합 조성국	무소속 임익근	무소속 최순자				계
도봉구	252,556	167,200	53,364	68,314	16,733	20,648	3,874	162,933	4,267	85,356	66.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북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지성우	민주당 장정식	자유민주연합 박영식	무소속 백중원	무소속 이기택	무소속 이수춘	계			
강북구	287,802	185,319	46,808	88,941	12,079	15,300	15,808	1,347	180,283	5,036	102,483	64.4

● 노원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기재	민주당 최선길	자유민주연합 김동익	계			
노원구	390,892	263,936	90,979	126,775	39,099	256,853	7,083	126,956	67.5

● 은평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중태	민주당 이배영	자유민주연합 박영서	무소속 박남선	무소속 이영화				계
은평구	355,299	232,767	65,666	97,730	15,099	9,905	38,566	226,966	5,801	122,532	65.5

● 서대문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병석	민주당 이정규	무소속 고은석	무소속 김석검	무소속 이기형	무소속 정병훈	무소속 좌두행				계
서대문구	269,147	179,563	53,981	80,286	8,703	7,921	8,127	8,749	6,761	174,528	5,035	89,584	66.7

● 마포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삼섭	민주당 노승환	계			
마포구	296,511	196,370	83,275	108,017	191,292	5,078	100,141	66.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양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허완	민주당 양재호	무소속 염장호	계			
양천구	323,468	217,832	87,675	101,661	23,597	212,933	4,899	105,636	67.3

● 강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승정	민주당 유영	계			
강서구	340,989	227,026	86,973	133,445	220,418	6,608	113,963	66.6

● 구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익수	민주당 박원철	자유민주연합 여범규	무소속 안경달	계			
구로구	268,256	177,014	45,159	71,022	30,579	25,609	172,369	4,645	91,242	66.0

● 금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성환	민주당 반상균	자유민주연합 정홍권	무소속 한인수	계			
금천구	199,909	129,060	36,573	52,937	7,817	28,723	126,050	3,010	70,849	64.6

● 영등포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영목	민주당 김두기	무소속 강석률	계			
영등포구	301,714	199,049	80,949	94,530	18,437	193,916	5,133	102,665	66.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동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성준	민주당 김기욱	무소속 김동훈	무소속 이영민	계			
동작구	315,790	209,617	76,513	97,518	15,513	13,963	203,507	6,110	106,173	66.4

● 관악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형석	민주당 진진형	무소속 안두영	계			
관악구	405,518	271,039	102,567	137,932	23,963	264,462	6,577	134,479	66.8

● 서초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남호	민주당 이충우	무소속 이정환	무소속 차일호	계			
서초구	284,241	188,408	77,993	73,965	25,156	6,808	183,922	4,486	95,833	66.3

● 강남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권문용	민주당 박응격	무소속 김길웅	무소속 박종국	무소속 이윤길	무소속 정정봉	계			
강남구	380,717	250,159	108,210	92,196	13,593	7,922	12,704	8,959	243,584	6,775	130,558	65.7

● 송파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영근	민주당 김성순	무소속 이상목	무소속 전익정	계			
송파구	452,290	298,927	82,809	152,551	32,353	24,644	292,357	6,570	153,363	6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동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반총남	민주당 김충환	자유민주 연 합 정정휴	무소속 강대치	무소속 정안상	계			
강동구	341,737	227,057	71,308	103,473	10,870	7,923	28,300	221,874	5,183	114,680	66.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부 산 광 역 시

● 중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변종길	무소속 김용규	무소속 김창수	무소속 최수만				계
중 구	49,868	32,557	17,656	4,823	3,664	5,202	31,345	1,212	17,311	65.3

● 서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변익규	무소속 김영오	무소속 이승학				계
서 구	131,457	87,524	33,995	25,651	25,083	84,729	2,795	43,933	66.6

● 동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곽윤섭	무소속 박상욱	무소속 최종림				계
동 구	115,074	78,262	46,778	19,557	8,704	75,039	3,253	36,812	68.0

● 영 도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박대석	민주당 구용희	자유민주연합 노차태				계
영도구	145,911	93,544	48,999	14,501	26,786	90,286	3,258	52,367	64.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산진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하계열	민주당 최신도	무소속 강경식	계			
부산진구	324,428	216,309	120,905	34,107	55,138	210,150	6,159	108,119	66.7

● 동래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규상	계			
동래구	212,814	137,479	115,335	115,335	22,144	75,335	64.6

● 남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성재영	무소속 이영근	계			
남 구	222,532	151,270	64,646	82,529	147,175	4,095	71,262	68.0

● 북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권 익	무소속 김해규	무소속 우주호	무소속 원종수				계
북 구	180,969	118,334	58,024	11,723	36,439	8,376	114,562	3,772	62,635	65.4

● 해운대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서석인	계			
해운대구	201,765	129,644	90,052	90,052	39,592	72,121	64.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사하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박재영	무소속 김한규	무소속 류차열	무소속 박상도	무소속 임송봉				계
사하구	254,950	162,599	81,282	20,013	18,003	12,183	26,143	157,624	4,975	92,351	63.8

● 금정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윤석천	무소속 김문곤	계			
금정구	210,987	140,963	76,231	60,007	136,238	4,725	70,024	66.8

● 강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소상보	무소속 배응기	계			
강서구	51,825	38,682	16,631	20,861	37,492	1,190	13,143	74.6

● 연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박대해	무소속 김현근	계			
연제구	170,586	112,818	78,988	29,610	108,598	4,220	57,768	66.1

● 수영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신종관	무소속 권쌍현	무소속 김응상	무소속 박성환	무소속 허성준				계
수영구	140,440	93,582	52,003	12,111	8,935	9,153	8,239	90,441	3,141	46,858	66.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사상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서경원	민주당 박종기	무소속 윤덕진	무소속 이상덕	계			
사상구	196,634	129,424	49,149	18,351	40,552	17,299	125,351	4,073	67,210	65.8

● 기장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규석	무소속 구석기	무소속 권성학	무소속 김정근	무소속 최원구				계
기장군	47,984	37,347	10,083	7,472	5,014	8,207	5,409	36,185	1,162	10,637	77.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구광역시

● **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현중	자유민주연합 원유영	무소속 이수만	무소속 하경문	계			
중 구	86,664	58,614	17,268	17,192	10,288	12,033	56,781	1,833	28,050	67.6

● **동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권영환	자유민주 연 합 오기환	무소속 김현백	무소속 최규태	무소속 최제만	계			
동 구	248,473	157,441	35,102	38,917	35,716	(등록무효)	23,536	133,271	24,170	91,032	63.4

● **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의상	민주당 서중현	무소속 김동웅	무소속 김현모	무소속 조용목				계
서 구	236,955	146,671	39,362	(등록무효)	17,537	33,964	24,405	115,268	31,403	90,284	61.9

● **남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규열	무소속 이재용	계			
남 구	166,761	103,901	40,637	60,173	100,810	3,091	62,860	62.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북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도재호	무소속 이명규	계			
북구	244,117	159,596	59,663	95,780	155,443	4,153	84,521	65.4

● 수성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락순	무소속 김규택	무소속 이원형	무소속 정병국				계
수성구	295,349	188,502	48,938	55,583	53,748	25,161	183,430	5,072	106,847	63.8

● 달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대희	무소속 조용길	무소속 황대현	계			
달서구	305,403	190,897	53,169	37,910	93,761	184,840	6,057	114,506	62.5

● 달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하영태	무소속 양시영	무소속 윤석준	계			
달성군	79,892	58,530	18,482	21,898	15,807	56,187	2,343	21,362	73.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인 천 광 역 시

● 중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세영	민주당 류청영	자유민주연합 박호영	계			
중 구	53,355	35,252	16,989	12,457	4,455	33,901	1,351	18,103	66.1

● 동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창수	민주당 박형철	자유민주연합 이성웅	무소속 안기동				계
동 구	72,255	48,197	18,473	13,555	9,935	4,254	46,217	1,980	24,058	66.7

● 남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민봉기	민주당 김청일	자유민주연합 한기호	무소속 최창호				계
남 구	296,370	183,468	58,478	45,204	41,326	33,888	178,896	4,572	112,902	61.9

● 연 수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신원철	민주당 박규영	자유민주 연합 유덕상	무소속 김동규	무소속 최범식	무소속 한영환				계
연수구	126,764	81,827	24,255	17,326	11,173	2,447	12,545	12,336	80,082	1,745	44,937	64.6

● 남 동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국진	민주당 김용모	무소속 윤병수				계
남동구	254,738	156,593	57,747	59,093	35,960	152,800	3,793	98,145	61.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평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서정식	민주당 최용규	자유민주 연합 하창수	무소속 송청길	무소속 이도경	계			
부평구	329,497	195,836	55,727	90,826	23,308	10,656	10,915	191,432	4,404	133,661	59.4

● 계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희룡	민주당 이현진	자유민주연합 김성정	계			
계양구	166,361	98,428	35,882	37,706	22,826	96,414	2,014	67,933	59.2

● 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채중남	민주당 권중광	자유민주연합 문기현	무소속 조희형	계			
서 구	190,686	114,372	36,761	43,024	22,798	8,336	110,919	3,453	76,314	60.0

● 강화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충호	민주당 김선홍	무소속 곽상기	무소속 이영화	계			
강화군	51,705	40,113	13,289	20,855	2,610	1,889	38,643	1,470	11,592	77.6

● 응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건호	계			
응진군	10,194	8,623	7,359	7,359	1,264	1,571	84.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광 주 광 역 시

● 동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광현	민주당 박종철	무소속 위인백	계			
동 구	106,854	69,343	7,682	55,468	4,939	68,089	1,254	37,511	64.9

● 서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문영식	민주당 이정일	무소속 범진호	계			
서 구	148,678	96,250	11,152	77,974	5,457	94,583	1,667	52,428	64.7

● 남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동섭	민주당 정두채	무소속 강도석	무소속 김규수	계			
남 구	167,527	108,562	8,616	81,892	8,345	7,277	106,130	2,432	58,965	64.8

● 북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병남	민주당 김태홍	계			
북 구	290,351	185,323	29,361	152,626	181,987	3,336	105,028	63.8

● 광 산 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양해달	민주당 고재유	계			
광 산 구	109,470	73,835	5,985	66,015	72,000	1,835	35,635	67.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전광역시

● 동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김덕중	민주당 김덕경	자유민주연합 박병호	무소속 최옥현	계			
동 구	185,210	122,343	21,054	22,136	68,478	7,248	118,916	3,427	62,867	66.1

● 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송일영	민주당 김홍철	자유민주연합 전성환	무소속 배완섭	무소속 유병하				계
중 구	182,315	120,945	18,565	16,540	69,914	4,109	9,029	118,157	2,788	61,370	66.3

● 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박동구	민주당 이용복	자유민주연합 이현구	무소속 황진산	계			
서 구	252,749	171,731	26,730	24,253	104,052	13,574	168,609	3,122	81,018	68.0

● 유성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이병오	민주당 송석찬	자유민주연합 노세우	무소속 맹기석	무소속 유병수				계
유성구	71,445	50,022	9,386	20,764	11,927	4,078	2,728	48,883	1,139	21,423	70.0

● 대덕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김성기	민주당 김현세	자유민주연합 오희중	계			
대덕구	127,885	83,561	17,105	13,422	51,129	81,656	1,905	44,324	6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기도

● 수원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호선	민주당 고재정	무소속 심재덕	계			
수원시	486,333	295,360	86,876	94,893	108,027	289,796	5,564	190,973	60.7

● 성남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종태	민주당 김병량	무소속 김영복	무소속 오성수	무소속 유홍식	무소속 이용균	무소속 전해중				계
성남시	552,924	340,853	60,916	122,797	12,027	130,374	3,532	2,382	2,703	334,731	6,122	212,071	61.6

● 의정부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기형	민주당 홍남용	자유민주연합 박창규	무소속 견진필	계			
의정부시	185,566	113,469	33,792	39,070	23,141	14,917	110,920	2,549	72,097	61.1

● 안양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한세권	민주당 이석용	무소속 김규봉	무소속 김영호	무소속 심수섭	무소속 조한영				계
안양시	394,662	242,055	77,945	114,378	15,718	8,396	11,958	9,016	237,411	4,644	152,607	61.3

● 부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길홍	민주당 이해선	자유민주연합 김홍식	무소속 문성제	무소속 박인선	무소속 이강용	무소속 이창식	무소속 최선영				계
부천시	504,239	290,612	65,707	106,192	38,312	11,648	14,834	5,866	27,813	14,431	284,803	5,809	213,627	57.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광명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전재희	민주당 김태수	자유민주 연 합 문한욱	무소속 박영하	무소속 함병수	계			
광명시	232,658	138,778	58,274	53,961	13,486	5,534	4,771	136,026	2,752	93,880	60.0

● 평택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김선기	민주당 이계완	자유민주 연 합 허 정	무소속 서정석	무소속 이민호	무소속 이주상	무소속 최병호	무소속 한양석				계
평택시	214,882	148,228	41,529	21,977	10,455	2,484	17,102	26,329	7,480	17,322	144,678	3,550	66,654	69.0

● 동두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방제한	민주당 정인백	무소속 남상훈	무소속 박인범	무소속 이덕호	계			
동두천시	50,416	36,149	10,639	9,230	3,783	4,183	7,486	35,321	828	14,267	71.7

● 양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윤명노	민주당 권선안	무소속 김성수	무소속 백수현	무소속 홍원기	계			
양주군	63,378	44,001	13,703	9,269	9,450	5,894	4,018	42,334	1,667	19,377	69.4

● 안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상용	민주당 송진섭	자유민주연합 안병권	무소속 윤문원	계			
안산시	310,884	178,603	57,550	66,478	27,842	23,573	175,443	3,160	132,281	57.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과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이성환	민주당 민병학	자유민주 연 합 최영하	무소속 김경필	무소속 김판명	무소속 송학선	계			
과천시	48,331	32,119	8,696	6,731	4,471	4,751	790	6,253	31,692	427	16,212	66.5

● 의왕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류신열	민주당 신창현	계			
의왕시	70,763	45,485	20,750	23,849	44,599	886	25,278	64.3

● 군포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유병직	민주당 조원극	자유민주 연 합 이강원	무소속 김영재	무소속 백남규	무소속 이철두	계			
군포시	151,165	95,538	23,754	28,274	7,548	16,124	6,055	12,191	93,946	1,592	55,627	63.2

● 시흥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한상옥	민주당 정언양	자유민주 연 합 김인환	무소속 박명학	무소속 함홍규	계			
시흥시	86,452	55,512	15,525	19,197	8,015	7,333	4,193	54,263	1,249	30,940	64.2

● 구리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영순	민주당 나제민	자유민주연합 지흥우	무소속 이무성	계			
구리시	93,902	56,808	16,653	13,479	6,358	19,073	55,563	1,245	37,094	60.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남양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김현덕	민주당 안종목	무소속 김영희	무소속 원철호	무소속 이계선	무소속 이달승	무소속 이해일				계
남양주시	156,139	99,980	22,257	19,605	24,158	1,921	4,545	9,260	15,121	96,867	3,113	56,159	64.0

● 여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용국	민주당 원종재	무소속 임창선	무소속 한완수	계			
여주군	66,041	46,756	17,921	15,485	7,315	4,487	45,208	1,548	19,285	70.8

● 오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유태형	자유민주연합 최원빈	무소속 공호식	무소속 박신원	계			
오산시	44,398	31,263	13,415	2,534	3,710	11,027	30,686	577	13,135	70.4

● 화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일수	민주당 이호섭	무소속 홍인화	계			
화성군	113,550	80,491	33,203	17,833	26,153	77,189	3,302	33,059	70.9

● 파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송달용	민주당 조재문	계			
파주군	118,473	78,665	52,646	23,371	76,017	2,648	39,808	66.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고양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이성호	민 주 당 신동영	자유민주 연합 이훈섭	무소속 강태희	무소속 김익환	무소속 나진택	무소속 이청휘	무소속 정종득				계
고양시	328,752	196,461	57,962	65,689	15,698	10,448	7,824	13,203	8,667	13,282	192,773	3,688	132,291	59.8

● 하남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구자관	민주당 손영채	무소속 김영민	무소속 박영길	무소속 양인석	무소속 유병익				계
하남시	75,923	49,757	9,635	15,228	7,959	4,354	9,944	1,678	48,798	959	26,166	65.5

● 광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남재호	민주당 박종진	무소속 이주호	무소속 함영수	계			
광주군	60,653	42,054	12,010	17,626	6,581	4,614	40,831	1,223	18,599	69.3

● 포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대식	민주당 최용일	무소속 이보훈	무소속 이진호				계
포천군	86,332	64,245	22,827	7,648	3,566	28,587	62,628	1,617	22,087	74.4

● 연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중익	민주당 이한윤	무소속 이상천	계			
연천군	38,786	29,404	13,740	6,375	8,271	28,386	1,018	9,382	75.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양평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민병채	민주당 이병대	무소속 박수천	무소속 안광원	무소속 이강훈	무소속 이승원	계			
양평군	55,445	41,534	12,479	11,649	5,964	3,318	2,647	4,106	40,163	1,371	13,911	74.9

● 가평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양재수	무소속 이현직	계			
가평군	38,766	29,694	12,086	16,748	28,834	860	9,072	76.6

● 이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승우	민주당 신동찬	무소속 이재영	계			
이천군	101,518	68,963	35,957	18,715	12,294	66,966	1,997	32,555	67.9

● 용인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윤병희	민주당 나진우	자유민주연합 이범상	계			
용인군	156,263	103,056	39,919	36,922	23,414	100,255	2,801	53,207	66.0

● 안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종건	민주당 김정식	무소속 최병찬	무소속 한영식				계
안성군	85,524	63,273	19,704	15,783	6,677	19,413	61,577	1,696	22,251	74.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김포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임순기	민주당 이준택	무소속 유승현	무소속 유정복	무소속 이범돈	무소속 이순억	무소속 조한승	계			
김포군	69,936	49,603	10,748	7,280	2,015	18,298	719	3,530	5,553	48,143	1,460	20,333	70.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강 원 도

● 춘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배계섭	민주당 박환주	자유민주연합 김진협	무소속 장만준	무소속 최신근	무소속 한봉수	계			
춘천시	160,271	113,772	46,712	38,620	5,747	7,263	8,895	3,451	110,688	3,084	46,499	71.0

● 원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대중	민주당 한상철	자유민주연합 김기열	무소속 강태연	무소속 김창경	무소속 김호길			
원주시	158,156	114,023	14,380	23,743	32,662	2,409	1,883	4,266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나창희	무소속 박순조	무소속 원제윤	무소속 함영구	무소속 함영태	계						
9,289	5,679	10,493	4,087	1,652	110,543	3,480	44,133	72.1			

● 강릉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심기섭	민주당 심재종	자유민주연합 최찬규	무소속 김남수	무소속 김명기	무소속 조서환	무소속 최중규				계
강릉시	151,881	112,457	27,979	23,195	19,276	3,717	4,671	4,582	25,744	109,164	3,293	39,424	74.0

● 동해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인기	민주당 김형대	무소속 권영수	무소속 김형민	무소속 민철기	무소속 전역찬	무소속 홍순성				계
동해시	66,766	50,254	12,750	4,006	3,410	9,862	2,127	10,863	5,942	48,960	1,294	16,512	7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태백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홍순일	민주당 박무봉	무소속 권용진	무소속 김정남	무소속 김천수	무소속 박유순	무소속 손석암	무소속 정명진	계			
태백시	44,180	33,530	12,738	2,421	6,672	4,066	430	627	3,822	1,973	32,749	781	10,650	75.8

● 속초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관희	민주당 동문성	무소속 김용현	무소속 김충호	무소속 김효덕	무소속 백광호	무소속 전상기				계
속초시	53,583	39,178	6,886	9,094	7,562	3,946	3,493	825	6,465	38,271	907	14,405	73.1

● 삼척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일동	무소속 김종성	무소속 백점화	무소속 신현선	계			
삼척시	62,583	49,427	18,219	8,171	3,328	18,050	47,768	1,659	13,156	79.0

● 홍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춘섭	자유민주연합 이규형	무소속 전홍식	계			
홍천군	53,255	40,111	18,130	8,043	12,406	38,579	1,532	13,144	75.3

● 횡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재규	무소속 조태진	계			
횡성군	35,396	26,854	11,801	13,970	25,771	1,083	8,542	75.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영월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완영	민주당 박영훈	무소속 김태수	무소속 엄정갑	계			
영월군	38,004	28,464	8,498	4,811	9,275	4,987	27,571	893	9,540	74.9

● 평창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전찬수	무소속 김용욱	무소속 한영일	계			
평창군	35,030	26,879	7,492	10,562	7,962	26,016	863	8,151	76.7

● 정선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원창	무소속 고광운	무소속 이용운	무소속 최준규	계			
정선군	42,245	32,082	10,540	3,161	9,448	7,852	31,001	1,081	10,163	75.9

● 철원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호연	민주당 최종문	무소속 박성만	무소속 이근희	계			
철원군	37,202	28,829	9,947	6,722	2,145	9,143	27,957	872	8,373	77.5

● 화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길현배	무소속 김근배	무소속 이형용	무소속 홍은표	계			
화천군	18,726	14,654	4,009	3,492	951	5,723	14,175	479	4,072	78.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양구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임경순	계			
양구군	16,990	13,711	12,001	12,001	1,710	3,279	80.7

● 인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석규	무소속 이승호	계			
인제군	24,179	19,421	7,379	11,464	18,843	578	4,758	80.3

● 고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영구	민주당 황연배	무소속 김성진	무소속 이태영	무소속 황갑용	무소속 황종국	계			
고성군	27,887	22,021	8,820	2,400	1,219	1,413	1,225	6,303	21,380	641	5,866	79.0

● 양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명시	민주당 신명섭	무소속 손용만	무소속 오인택	계			
양양군	22,156	18,345	5,739	5,361	654	5,925	17,679	666	3,811	82.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청북도

● 청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지현정	민주당 권순영	자유민주연합 김현수	무소속 정진동	무소속 조성훈	무소속 채영만	계			
청주시	330,818	219,744	41,362	27,623	74,155	11,614	56,515	4,171	215,440	4,304	111,074	66.4

● 충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시종	민주당 류재홍	자유민주연합 정달영	무소속 정재현	무소속 한백현	계			
충주시	144,061	104,188	42,514	14,051	34,125	5,813	4,589	101,092	3,096	39,873	72.3

● 제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권희필	무소속 권희수	무소속 김용수	무소속 엄승호	계			
제천시	98,390	71,286	23,791	22,922	16,816	5,603	69,132	2,154	27,104	72.5

● 단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하모	민주당 박주진	자유민주연합 조창배	무소속 김면수	무소속 김삼열			
단양군	31,427	24,422	6,332	5,890	1,161	2,268	898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용근	무소속 박금돈	무소속 조수형	무소속 최순교	계						
2,385	1,030	2,530	944	23,438	984	7,005	77.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청원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권영	자유민주연합 변종석	계			
청원군	83,670	62,818	25,509	34,847	60,356	2,462	20,852	75.1

● 영동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완진	무소속 여범구	무소속 정환식	계			
영동군	45,507	35,560	14,093	9,716	10,435	34,244	1,316	9,947	78.1

● 보은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곽동국	민주당 김종철	무소속 박홍태	계			
보은군	35,660	28,528	12,050	12,155	3,512	27,717	811	7,132	80.0

● 옥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안철호	자유민주연합 박효근	무소속 유봉열	계			
옥천군	45,998	36,912	12,081	7,765	15,894	35,740	1,172	9,086	80.2

● 괴산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한식	민주당 김한목	무소속 안이신	무소속 황일성				계
괴산군	59,085	46,514	13,624	14,790	5,673	10,764	44,851	1,663	12,571	78.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음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수광	민주당 박덕영	자유민주연합 김윤식	무소속 경태현	무소속 정상현	계			
음성군	58,103	45,557	11,138	10,843	2,840	7,392	12,111	44,324	1,233	12,546	78.4

● 진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경희	민주당 윤광호	무소속 김영완	무소속 이범옥	계			
진천군	39,451	30,942	8,364	10,189	10,278	1,149	29,980	962	8,509	78.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 청 남 도

● 천안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류병학	민주당 전병규	자유민주연합 이근영	무소속 김광규	무소속 김동구	무소속 최건식				계
천안시	214,987	140,766	27,487	18,431	81,248	2,541	4,149	3,369	137,225	3,541	74,221	65.5

● 공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병하	자유민주연합 전병용	무소속 김선태	무소속 서정민	무소속 정경상				계
공주시	95,204	73,804	17,051	36,435	14,944	1,172	1,645	71,247	2,557	21,400	77.5

● 보령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신준희	자유민주연합 김학현	무소속 김동준	무소속 이대원				계
보령시	84,250	63,400	16,259	35,971	6,469	2,297	60,996	2,404	20,850	75.3

● 아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기영	자유민주연합 이길영	무소속 강희복	계			
아산시	109,799	78,607	17,790	31,490	27,096	76,376	2,231	31,192	71.6

● 서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춘식	민주당 김의경	자유민주연합 김기흥	무소속 김석현	무소속 조규선				계
서산시	94,706	70,380	9,403	11,266	31,045	1,635	15,010	68,359	2,021	24,326	74.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금산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행기	민주당 박찬중	자유민주연합 김현근	계			
금산군	50,633	38,316	13,316	5,325	18,027	36,668	1,648	12,317	75.7

● 연기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기봉	자유민주연합 홍순규	무소속 신상근	무소속 이성원	무소속 이재기	무소속 최부용	무소속 한종률				계
연기군	57,178	42,648	10,622	19,131	(등록무효)	917	1,322	1,013	5,613	38,618	4,030	14,530	74.6

● 논산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공병선	자유민주연합 전일순	계			
논산군	112,312	82,791	25,642	54,017	79,659	3,132	29,521	73.7

● 부여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성환	민주당 윤 건	자유민주연합 유병돈	무소속 김무환	무소속 김석기	무소속 유재갑	무소속 이상일				무소속 황공찬	계
부여군	72,928	58,212	7,916	2,895	30,256	4,693	1,178	6,777	1,149	1,325	56,189	2,023	14,716	79.8

● 서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청환	자유민주연합 박형순	무소속 이연직	계			
서천군	61,008	48,191	15,579	27,047	4,078	46,704	1,487	12,817	7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청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명환철	자유민주연합 정원영	계			
청양군	33,407	26,103	9,965	15,006	24,971	1,132	7,304	78.1

● 홍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갑영	민주당 한만동	자유민주연합 이종근	무소속 정락송	계			
홍성군	71,311	53,974	14,445	7,572	27,099	2,888	52,004	1,970	17,337	75.7

● 예산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종순	민주당 이항복	자유민주연합 권오창	무소속 이한식	계			
예산군	78,174	58,562	15,186	5,109	33,099	3,465	56,859	1,703	19,612	74.9

● 태안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진태구	민주당 박규웅	자유민주연합 윤형상	계			
태안군	50,068	37,930	12,603	3,448	20,590	36,641	1,289	12,138	75.8

● 당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홍근	민주당 손인교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무소속 김종성	무소속 최무재	무소속 한독석				계
당진군	84,173	63,370	10,992	9,014	24,306	10,460	2,366	4,380	61,518	1,852	20,803	7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북도

● 전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명근	민주당 이창승	무소속 이양재	무소속 정병우	무소속 정인영	무소속 태기표	계			
전주시	363,509	248,039	61,898	148,852	4,096	4,634	2,949	19,772	242,201	5,838	115,470	68.2

● 군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원형연	민주당 김길준	자유민주연합 신동안	무소속 고병태	무소속 송서재	무소속 조부광	계			
군산시	184,226	134,904	26,608	64,966	4,286	26,914	5,990	2,356	131,120	3,784	49,322	73.2

● 익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병준	민주당 조한용	자유민주연합 김용관	무소속 김복귀	무소속 박경철	무소속 염석호	무소속 이종화				계
익산시	216,999	154,304	25,011	87,600	4,664	2,257	10,743	4,440	15,263	149,978	4,326	62,695	71.1

● 정읍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 광	민주당 국승록	계			
정읍시	105,011	79,279	28,663	47,549	76,212	3,067	25,732	75.5

● 남원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동기	민주당 이정규	자유민주연합 이형배	무소속 하대식				계
남원시	75,847	60,862	12,493	25,202	18,228	3,065	58,988	1,874	14,985	80.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김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희운	민주당 곽인희	무소속 오석군	무소속 윤창호	무소속 이길동	무소속 이종달	무소속 조윤식	무소속 홍기혁	계			
김제시	92,989	70,596	13,380	30,868	1,862	2,370	10,629	2,198	2,958	3,974	68,239	2,357	22,393	75.9

● 완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충일	민주당 임명환	계			
완주군	62,137	47,334	16,408	29,259	45,667	1,667	14,803	76.2

● 진안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송남오	민주당 임수진	무소속 김규식	계			
진안군	30,324	24,523	9,675	11,866	2,136	23,677	846	5,801	80.9

● 무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한준	민주당 김세웅	무소속 박재하	무소속 이기철	무소속 이흥주	무소속 황재성				계
무주군	23,335	19,098	3,899	6,428	2,208	3,161	1,059	1,711	18,466	632	4,237	81.4

● 장수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장재영	민주당 김상두	계			
장수군	22,677	18,162	7,687	9,843	17,530	632	4,515	80.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임실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홍순균	민주당 이형로	무소속 최장범	계			
임실군	33,116	26,679	6,053	15,588	4,177	25,818	861	6,437	80.6

● 순창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임득춘	무소속 김근호	무소속 김홍필	계			
순창군	29,349	23,870	11,186	2,613	9,270	23,069	801	5,479	81.3

● 고창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정길진	무소속 안행연	무소속 이호종	계			
고창군	60,453	47,563	17,624	4,872	23,445	45,941	1,622	12,890	78.7

● 부안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허동일	민주당 강수원	무소속 정형모	계			
부안군	60,378	46,708	17,266	24,168	3,262	44,696	2,012	13,670	77.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 라 남 도

● 목포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남진	민주당 권이담	무소속 김천옥	무소속 이선교	무소속 정청호	무소속 차남윤	계			
목포시	149,587	101,255	3,949	54,423	5,750	18,920	6,962	8,529	98,533	2,722	48,332	67.7

● 여수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선규	민주당 김광현	계			
여수시	119,324	85,008	32,549	50,660	83,209	1,799	34,316	71.2

● 순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영기	민주당 방성룡	무소속 권준표	무소속 김동철	무소속 신준식	계			
순천시	161,392	117,175	10,658	64,753	19,733	4,111	14,701	113,956	3,219	44,217	72.6

● 나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김대동	무소속 나인수	무소속 송득영	계			
나주시	85,184	65,077	26,510	28,506	8,154	63,170	1,907	20,107	76.4

● 여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성환	민주당 정채호	무소속 서광식	무소속 이태주	무소속 조길환	무소속 주봉선	무소속 주형근	무소속 허영문	계			
여천시	46,884	35,985	7,912	15,192	2,051	2,212	2,385	2,988	697	1,849	35,286	699	10,899	76.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여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주두실	민주당 정근진	무소속 조남선	계			
여천군	48,054	36,848	9,640	18,558	7,269	35,467	1,381	11,206	76.7

● 담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문경규	무소속 윤기섭	무소속 전천수	계			
담양군	45,762	35,801	17,552	12,083	4,864	34,499	1,302	9,961	78.2

● 장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영남	민주당 김흥식	무소속 변선의	무소속 장흥기	계			
장성군	42,571	32,165	2,175	17,251	7,297	4,442	31,165	1,000	10,406	75.6

● 화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범종	민주당 임흥락	계			
화순군	51,757	38,657	7,976	29,025	37,001	1,656	13,100	74.7

● 곡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중균	민주당 오치봉	무소속 조형래	계			
곡성군	31,524	25,449	5,329	7,646	11,531	24,506	943	6,075	8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례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이동승	무소속 김영일	무소속 전경태	계			
구례군	26,642	21,685	10,799	3,103	7,020	20,922	763	4,957	81.4

● 광양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영일	민주당 김옥현	무소속 박양표	무소속 정채기				계
광양시	82,828	66,388	20,938	30,727	6,697	6,738	65,100	1,288	16,440	80.2

● 고흥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원석	민주당 류상철	무소속 신강식	계			
고흥군	82,228	64,576	12,040	30,618	19,536	62,194	2,382	17,652	78.5

● 보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정순	민주당 문광웅	무소속 장철호	계			
보성군	52,176	41,619	9,111	17,961	13,162	40,234	1,385	10,557	79.8

● 장흥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김재종	무소속 노평식	무소속 이승일	무소속 한동준				계
장흥군	42,785	34,186	13,079	9,033	7,781	3,424	33,317	869	8,599	79.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김재홍	무소속 윤옥윤	무소속 최영범	계			
강진군	39,344	30,866	14,532	11,723	3,541	29,796	1,070	8,478	78.5

● 완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봉래	민주당 차관훈	계			
완도군	51,862	42,047	15,702	24,542	40,244	1,803	9,815	81.1

● 해남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김창일	무소속 김영재	무소속 민화식	무소속 임선규	계			
해남군	74,269	58,806	26,875	4,307	22,282	3,029	56,493	2,313	15,463	79.2

● 진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박승만	자유민주연합 곽봉근	무소속 조극현	계			
진도군	33,364	26,881	13,517	3,176	9,059	25,752	1,129	6,483	80.6

● 영암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전정식	민주당 박일재	무소속 김철호	계			
영암군	45,024	35,822	10,029	12,691	11,829	34,549	1,273	9,202	79.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무안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민재	민주당 이재현	무소속 김영록	무소속 정종희	계			
무안군	53,459	40,578	6,074	19,425	3,876	9,838	39,213	1,365	12,881	75.9

● 영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김봉열	무소속 강명룡	무소속 김기순	무소속 김천식	무소속 조영표	계			
영광군	53,881	41,611	15,886	4,868	9,563	748	9,120	40,185	1,426	12,270	77.2

● 함평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정원강	무소속 김영진	무소속 이연행	무소속 홍양희	계			
함평군	38,526	30,176	9,532	8,215	7,124	4,258	29,129	1,047	8,350	78.3

● 신안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손장조	무소속 김정주	계			
신안군	46,171	35,810	18,116	15,961	34,077	1,733	10,361	77.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북 도

● 포항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최수환	민주당 박기환	무소속 김봉우	무소속 배용재	무소속 이동대	무소속 이석태	계			
포항시	333,848	244,246	58,085	76,986	16,471	40,453	19,644	26,163	237,802	6,444	89,602	73.2

● 경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원식	민주당 이정호	무소속 백상승	무소속 이동천	계			
경주시	197,729	147,475	52,908	10,892	52,428	26,907	143,135	4,340	50,254	74.6

● 김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성우	무소속 박병호	무소속 박팔용	계			
김천시	107,079	83,256	31,710	7,388	41,134	80,232	3,024	23,823	77.8

● 안동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권혁구	무소속 권희택	무소속 김덕배	무소속 김성현	무소속 정동호				
안동시	134,533	105,029	8,449	26,965	24,525	12,850	28,988	101,777	3,252	29,504	78.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미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김관용	자유민주 연 합 전병역	무소속 강구휘	무소속 강상수	무소속 경광수	무소속 장경환	계			
구미시	188,611	134,377	46,130	44,469	19,805	2,891	2,584	15,404	131,283	3,094	54,234	71.2

● 영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시균	무소속 김준식	무소속 김진영	무소속 장수덕	계			
영주시	96,324	76,442	23,583	2,598	26,778	21,182	74,141	2,301	19,882	79.4

● 영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준영	무소속 염길정	무소속 정재균	무소속 조준현	무소속 차동득	계			
영천시	90,388	69,747	20,998	8,557	23,887	3,474	9,954	66,870	2,877	20,641	77.2

● 상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근수	무소속 김동진	무소속 변영주	무소속 신광현	무소속 오정면	무소속 이만희	계			
상주시	97,054	78,336	23,207	13,627	11,271	4,657	9,419	12,499	74,680	3,656	18,718	80.7

● 문경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학문	무소속 강신규	무소속 신상철	무소속 장성원	무소속 채희영	계			
문경시	67,980	54,105	16,817	11,801	8,602	6,467	8,379	52,066	2,039	13,875	79.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고령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이윤대	무소속 이진환	무소속 최상호	계			
고령군	27,995	22,395	2,096	10,851	8,503	21,450	945	5,600	80.0

● 군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구문장	무소속 김영만	무소속 박희삼	무소속 홍순홍				계
군위군	26,178	21,901	4,940	6,167	2,339	7,496	20,942	959	4,277	83.7

● 의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복규	무소속 김재완	무소속 박영일	무소속 정해걸				계
의성군	66,406	54,060	21,499	3,990	4,850	21,773	52,112	1,948	12,346	81.4

● 영덕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우연	무소속 김효태	무소속 이해운	계			
영덕군	43,293	35,198	19,901	10,845	2,938	33,684	1,514	8,095	81.3

● 청송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안의중	무소속 문재석	무소속 박명준	무소속 배용진				계
청송군	28,316	24,299	7,774	7,639	4,765	3,342	23,520	779	4,017	85.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봉화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장수	무소속 금용구	무소속 엄태항	계			
봉화군	36,714	29,206	10,087	5,973	11,853	27,913	1,293	7,508	79.6

● 영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원국	무소속 권용한	무소속 김용암	계			
영양군	19,344	15,989	4,206	6,326	4,694	15,226	763	3,355	82.7

● 울릉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종태	무소속 이상인	무소속 최영기	계			
울릉군	8,270	7,260	2,556	2,223	2,332	7,111	149	1,010	87.8

● 경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박재찬	무소속 김치곤	무소속 신의웅	무소속 이재기	무소속 전수봉	무소속 최희욱				계
경산시	112,683	81,364	18,916	3,672	9,456	11,568	8,620	26,058	78,290	3,074	31,319	72.2

● 청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상순	무소속 박희래	계			
청도군	42,662	34,663	17,456	15,588	33,044	1,619	7,999	81.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칠곡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이규영	자유민주 연합 이용상	무소속 김교운	무소속 류광현	무소속 이상수	무소속 이현시	무소속 최재영	계			
칠곡군	59,718	45,380	5,058	3,629	4,496	2,268	10,205	6,776	11,595	44,027	1,353	14,338	76.0

● 성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창우	무소속 김건영	계			
성주군	40,543	33,540	13,246	19,046	32,292	1,248	7,003	82.7

● 예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수남	무소속 권상국	계			
예천군	50,580	40,624	19,028	19,321	38,349	2,275	9,956	80.3

● 울진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전광순	민주당 박상인	무소속 이상화	무소속 장학중	무소속 정후영	계			
울진군	50,026	39,530	13,674	6,059	8,159	8,202	1,970	38,064	1,466	10,496	7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남 도

● 창원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창수	민주당 정기영	무소속 공민배	무소속 김말태	무소속 김영성			
창원시	294,098	198,355	43,811	20,295	59,448	20,925	6,450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영우	무소속 박용기	무소속 서용석	무소속 손성갑							
8,923	25,302	4,992	4,336	194,482	3,873	95,743	67.4			

● 울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심완구	민주당 이규정	무소속 강정호	무소속 고원준	무소속 김명규	무소속 김영해	무소속 윤병이	계			
울산시	608,925	411,523	122,326	87,690	27,259	85,250	67,483	7,719	4,165	401,892	9,631	197,402	67.6

● 마산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황철근	민주당 최윤기	무소속 김인규	무소속 배대균	무소속 신태성	무소속 이성근	무소속 장철규	무소속 정명준	계			
마산시	290,773	200,582	64,997	9,243	65,046	24,214	7,968	13,515	3,130	6,837	194,950	5,632	90,191	69.0

● 진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백승두	무소속 김동준	무소속 김수생	무소속 김재천	무소속 문병욱	무소속 어정수	무소속 윤용근	무소속 이찬석	계			
진주시	222,709	172,234	54,340	4,409	3,103	52,075	30,054	9,512	9,227	5,130	167,850	4,384	50,475	77.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진해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병로	무소속 김석곤	무소속 박이울	무소속 허대범	계			
진해시	87,935	70,770	26,512	5,736	16,709	20,142	69,099	1,671	17,165	80.5

● 통영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고동주	민주당 이두관	무소속 강부근	무소속 구상식	무소속 장수용	무소속 진의장				계
통영시	95,146	73,618	25,131	2,891	10,272	7,108	7,001	18,701	71,104	2,514	21,528	77.4

● 고성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경문	무소속 박경재	무소속 이갑영	무소속 이방수	계			
고성군	51,861	41,897	9,043	5,750	14,284	11,312	40,389	1,508	9,964	80.8

● 사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하일청	무소속 황완수	계			
사천시	85,135	65,917	36,607	26,966	63,573	2,344	19,218	77.4

● 김해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송은복	민주당 홍의표	무소속 김승도	무소속 이병조	무소속 채창길				계
김해시	168,046	117,964	47,191	18,275	10,751	18,920	19,496	114,633	3,331	50,082	70.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의령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전원용	무소속 김진옥	무소속 허인호	계			
의령군	30,555	25,394	12,174	6,444	5,735	24,353	1,041	5,161	83.1

● 함안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조성휘	무소속 진석규	계			
함안군	50,480	41,555	22,257	17,488	39,745	1,810	8,925	82.3

● 창녕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진백	무소속 김용문	무소속 신윤태	무소속 하대창				계
창녕군	59,740	47,826	16,337	11,231	9,719	8,631	45,918	1,908	11,914	80.0

● 밀양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진영	민주당 이광옥	무소속 이상조	계			
밀양시	93,485	70,929	29,071	6,657	32,649	68,377	2,552	22,556	75.9

● 양산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안종길	무소속 손유섭	무소속 이만희	무소속 전종태	무소속 정대근				계
양산군	103,366	71,972	21,866	25,666	4,445	11,228	6,838	70,043	1,929	31,394	69.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거제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상도	무소속 배길송	무소속 양정식	무소속 이대곤	무소속 황수원	계			
거제시	98,760	76,353	30,166	9,297	25,231	1,443	7,609	73,746	2,607	22,407	77.3

● 하동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정구용	민주당 남명우	무소속 김만태	무소속 이영애	무소속 이원계	무소속 이장권				계
하동군	48,352	39,121	12,812	3,814	8,547	1,035	7,776	3,479	37,463	1,658	9,231	80.9

● 남해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태선	무소속 김두관	계			
남해군	51,619	41,122	17,242	21,605	38,847	2,275	10,497	79.7

● 함양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병오	무소속 정용규	계			
함양군	37,727	31,176	13,070	16,568	29,638	1,538	6,551	82.6

● 산청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기조	무소속 권순영	계			
산청군	35,698	29,422	11,876	16,419	28,295	1,127	6,276	82.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거창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준학	무소속 신중광	무소속 정주환	계			
거창군	52,844	42,424	15,553	9,125	15,877	40,555	1,869	10,420	80.3

● 합천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인교	무소속 강석정	무소속 심의조	계			
합천군	53,775	44,530	14,899	16,175	11,374	42,448	2,082	9,245	82.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제 주 도

● 제주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고민수	민주당 김두전	무소속 김창진	계			
제주시	163,863	127,313	50,881	23,036	50,625	124,542	2,771	36,550	77.7

● 서귀포시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변성근	무소속 고시오	무소속 김지호	무소속 오광협	무소속 이계록				계
서귀포시	57,709	47,747	12,129	11,067	1,404	17,194	4,991	46,785	962	9,962	82.7

● 북제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신철주	민주당 부소윤	무소속 김군택	무소속 김영보	무소속 홍관수				계
북제주군	70,463	58,287	20,908	4,684	14,105	7,756	8,758	56,211	2,076	12,176	82.7

● 남제주군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태훈	무소속 강영지	계			
남제주군	56,156	46,848	27,498	17,474	44,972	1,876	9,308	83.4

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서울특별시

● 종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대한민주당 김이준
			신한국당 이명박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찬	통합민주당 노무현	자유민주연합 김을동	무효 투표수	
종로구	150,189	99,365	40,230	32,918	17,330	6,602	63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21세기한독당 박종구	무소속 김연수	무소속 방세현	무소속 이정남	계			
118	129	462	253	98,105	1,260	50,824	66.2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성범	새정치 국민회의 정대철	통 합 민주당 김유진	자유민주 연 합 이수만	대 한 민주당 김명주	계			
중 구	105,053	67,449	34,238	27,825	2,284		333	64,680	2,769	37,604	64.2

● 용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서정화	새정치 국민회의 오유방	통 합 민주당 강창성	자유민주 연 합 김재영	무당파 국민연합 정한성	무소속 이천형	계			
용산구	189,773	114,513	41,092	36,769	24,023	8,496	1,436	1,081	112,897	1,616	75,260	60.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세기	새정치 국민회의 나병선	통 합 민주당 임종인	자유민주 연 합 배길량	무소속 김철수	계			
성동구갑	136,477	84,326	36,682	29,291	7,649	5,933	3,309	82,864	1,462	52,151	61.8

● 성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학원	새정치 국민회의 조세형	통 합 민주당 설영주	자유민주 연 합 유명곤	무소속 김명희	계			
성동구을	109,402	66,546	28,371	26,358	3,538	3,959	2,883	65,109	1,437	42,856	60.8

● 광진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춘	새정치 국민회의 김상우	통 합 민주당 강수림	자유민주 연 합 박종철	무소속 김도현	무소속 이태희	계			
광진구갑	132,766	81,124	22,309	23,636	12,321	8,785	12,173	650	79,874	1,250	51,642	61.1

● 광진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충근	새정치 국민회의 추미애	통 합 민주당 박석무	자유민주 연 합 김희라	무소속 권왈순	무소속 김광해	계			
광진구을	141,598	84,990	25,312	36,570	9,819	8,610	1,563	1,672	83,546	1,444	56,608	60.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동대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노승우	새정치 국민회의 김희선	통 합 민주당 장광근	자유민주 연 합 순윤준	무소속 이근규	계			
동대문구갑	154,807	91,273	34,120	30,392	10,065	10,207	4,794	89,578	1,695	63,534	59.0

● 동대문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구	새정치 국민회의 김창환	통 합 민주당 김성식	자유민주 연 합 권승욱	무당파 국민연합 박상일	무소속 김태웅				계
동대문구을	147,094	91,543	37,871	29,482	12,177	8,202	716	1,837	90,285	1,258	55,551	62.2

● 중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철기	새정치 국민회의 이상수	통 합 민주당 신형식	자유민주 연 합 신인휴	무소속 강경환	무소속 최상혁				계
중랑구갑	136,285	79,987	21,796	37,625	6,120	6,792	1,175	5,314	78,822	1,165	56,298	58.7

● 중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충일	새정치 국민회의 김덕규	통 합 민주당 조명원	자유민주 연 합 강병진	무당파 국민연합 김병수	계			
중랑구을	181,924	108,907	41,772	39,940	12,589	12,575	738	107,614	1,293	73,017	59.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심의석	새정치 국민회의 유재건	통합 민주당 이철	자유민주 연합 채수호	무당파 국민연합 송영기	무소속 김세현	무소속 임태백	계			
성북구갑	181,721	109,833	22,695	39,159	34,555	8,042	1,440	1,728	971	108,590	1,243	71,888	60.4

● 성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성재	새정치 국민회의 신계륜	통합 민주당 황호산	자유민주 연합 최갑수	계			
성북구을	179,811	107,417	45,025	41,487	7,211	12,209	105,932	1,485	72,394	59.7

● 강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태윤	새정치 국민회의 김원길	통합 민주당 전대열	자유민주 연합 김규원	계			
강북구갑	138,160	78,926	26,228	31,171	6,786	13,483	77,668	1,258	59,234	57.1

● 강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철용	새정치 국민회의 조순형	통합 민주당 이기택	자유민주 연합 김태환	무소속 고충석	무소속 조구성	계			
강북구을	144,185	81,794	22,923	36,405	7,066	12,006	649	1,344	80,393	1,401	62,391	56.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도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양경자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	통 합 민주당 안평수	자유민주 연 합 신오철	무소속 조수휘	계			
도봉구갑	119,140	72,578	25,245	27,768	7,396	9,884	1,176	71,469	1,109	46,562	60.9

● 도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백영기	새정치국민회의 설 훈	통 합 민주당 유인태	자유민주 연 합 장 일	무소속 최순자	계			
도봉구을	134,495	83,757	23,926	25,972	21,376	10,404	822	82,500	1,257	50,738	62.3

● 노원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백남치	새정치국민회의 고영하	통 합 민주당 유영래	자유민주 연 합 박병일	무소속 박남수	계			
노원구갑	198,266	121,049	43,859	41,906	11,503	18,529	3,479	119,276	1,773	77,217	61.1

● 노원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종선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	통 합 민주당 이문옥	자유민주 연 합 김용채	무당파 국민연합 구판홍	계			
노원구을	199,183	126,752	33,396	41,615	15,879	33,026	1,224	125,140	1,612	72,431	63.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은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인섭	새정치 국민회의 손세일	통 합 민주당 장두환	자유민주 연 합 임인채	무당파 국민연합 송창달	무소속 이래원	계			
은평구갑	163,774	96,535	34,058	37,045	11,717	8,967	2,090	1,440	95,317	1,218	67,239	58.9

● 은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재오	새정치 국민회의 이원형	통 합 민주당 이장희	자유민주 연 합 노양학	무당파 국민연합 김명환	무소속	계			
은평구을	189,342	112,002	48,146	39,132	9,785	11,180	2,106	110,349	1,653	77,340	59.2	

● 서대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성현	새정치 국민회의 김상현	통 합 민주당 박경산	자유민주 연 합 이의달	무소속 고은석	계				
서대문구갑	127,154	75,808	29,388	29,979	8,610	5,407	1,372	74,756	1,052	51,346	59.6	

● 서대문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백용호	새정치 국민회의 장재식	통 합 민주당 김태원	자유민주 연 합 김병호	무당파 국민연합 이근봉	21세기 한독당 장영선	계			
서대문구을	142,075	84,373	26,761	32,957	8,384	12,753	1,892	582	83,329	1,044	57,702	59.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마포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명환	새정치 국민의회의 김용술	통 합 민주당 김 용	자유민주 연 합 고순례	무당파 국민연합 고명관	계			
마포구갑	129,561	77,545	31,022	26,817	5,962	11,338	910	76,049	1,496	52,016	59.9

● 마포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주천	새정치 국민의회의 김충현	통 합 민주당 장신규	자유민주 연 합 장덕환	무소속 강신욱				계
마포구을	161,730	99,868	35,819	32,734	7,900	8,516	13,568	98,537	1,331	61,862	61.7

● 양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범진	새정치 국민의회의 한기찬	통 합 민주당 서경석	자유민주 연 합 박수복	무당파 국민연합 권영빈	무소속 강태원	계			
양천구갑	160,121	103,996	36,857	30,886	23,225	10,414	720	802	102,904	1,092	56,125	64.9

● 양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구본태	새정치 국민의회의 김영배	통 합 민주당 이두엽	자유민주 연 합 탁형춘				계
양천구을	163,566	95,487	30,089	36,208	10,546	16,940	93,783	1,704	68,079	58.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유광사	새정치 국민의회의 신기남	통 합 민주당 박계동	자유민주 연 합 최덕수	무소속 김용준	무소속 박태중	계			
강서구갑	141,758	89,410	24,261	29,671	26,358	7,065	359	494	88,208	1,204	52,348	63.1

● 강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신범	새정치 국민의회의 최두환	통 합 민주당 고진화	자유민주 연 합 이경표	계			
강서구을	211,429	128,992	48,083	41,873	18,180	18,828	126,964	2,028	82,437	61.0

● 구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기배	새정치 국민의회의 정한용	통 합 민주당 정병원	자유민주 연 합 정순주	무당파 국민연합 김기선	무소속 김용범	계			
구로구갑	139,517	90,675	33,051	35,345	7,205	11,080	884	1,667	89,232	1,443	48,842	65.0

● 구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신행	새정치 국민의회의 김병오	통 합 민주당 이승철	자유민주 연 합 이재실	무당파 국민연합 노만석	계			
구로구을	124,965	77,893	34,512	30,285	6,070	5,287	464	76,618	1,275	47,072	62.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금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우재	새정치 국민회의 이경재	통 합 민주당 이원영	자유민주 연 합 유지준	계			
금천구	193,885	112,854	41,412	40,771	13,076	15,732	110,991	1,863	81,031	58.2

● 영등포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명섭	새정치 국민회의 장석화	통 합 민주당 한경남	자유민주 연 합 구창림	계			
영등포구갑	130,781	81,271	35,141	27,774	6,825	10,310	80,050	1,221	49,510	62.1

● 영등포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영한	새정치 국민회의 김민석	통 합 민주당 김인동	자유민주 연 합 전흥기	계			
영등포구을	166,636	103,173	33,020	49,657	9,075	9,850	101,602	1,571	63,463	61.9

● 동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서청원	새정치 국민회의 박문수	통 합 민주당 장기표	자유민주 연 합 차은수	계			
동작구갑	160,739	100,212	40,318	31,367	18,851	8,289	98,825	1,387	60,527	62.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동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유용태	새정치 국민회의 박 실	통 합 민주당 김왕석	자유민주 연 합 김우중	무소속 이강언	계			
동작구을	155,171	97,125	42,869	35,031	8,674	7,823	1,179	95,576	1,549	58,046	62.6

● 관악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상현	새정치 국민회의 한광옥	통 합 민주당 김기정	자유민주 연 합 이영춘	무소속 함운경	계			
관악구갑	190,207	116,356	47,699	43,197	5,289	8,360	10,123	114,668	1,688	73,851	61.2

● 관악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홍석	새정치 국민회의 이해찬	통 합 민주당 이상호	자유민주 연 합 김재호	무소속 권태오	계			
관악구을	208,103	122,540	39,855	54,049	9,827	13,244	3,808	120,783	1,757	85,563	58.9

● 서초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병렬	새정치 국민회의 조소현	통 합 민주당 곽일훈	자유민주 연 합 김창호	무당파 국민연합 곽 일	무소속 도승희	무소속 배종달	무소속 차만영				계
서초구갑	138,217	83,639	40,191	21,920	8,667	10,017	293	582	717	372	82,759	880	54,578	60.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초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덕룡	새정치 국민회의 정상용	통 합 민주당 안동수	무당파 국민연합 김상태	21세기 한독당 안방자	무소속 박호성	계			
서초구을	146,751	92,191	40,530	21,112	26,887	743	(등록무효)	1,423	90,695	1,496	54,560	62.8

● 강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서상목	새정치 국민회의 강동연	통 합 민주당 홍성우	자유민주 연 합 김명년	무소속 김종영	무소속 노재봉	무소속 성명선	무소속 이경태				계
강남구갑	196,836	115,099	43,437	21,385	23,465	8,041	698	16,232	373	271	113,902	1,197	81,737	58.5

● 강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성철	새정치 국민회의 김태우	통 합 민주당 이재경	자유민주 연 합 이태섭	무당파 국민연합 서병찬	무소속 김삼연	무소속 홍사덕	계			
강남구을	182,846	118,686	28,563	24,858	5,039	27,648	238	448	30,601	117,395	1,291	64,160	64.9

● 송파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홍준표	새정치 국민회의 김희완	통 합 민주당 양문희	자유민주 연 합 조순환	계			
송파구갑	149,724	96,308	41,257	31,630	7,890	14,542	95,319	989	53,416	64.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송파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맹형규	새정치 국민회의 김진명	통 합 민주당 김종완	자유민주 연 합 정 남	무소속 김흥현	계			
송파구을	145,329	88,485	34,741	29,880	9,801	11,620	1,383	87,425	1,060	56,844	60.9

● 송파구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한수	새정치 국민회의 김병태	통 합 민주당 박인제	자유민주 연 합 조중형	계			
송파구병	155,486	93,870	29,586	34,909	17,186	10,915	92,596	1,274	61,616	60.4

● 강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춘식	새정치 국민회의 김형래	통 합 민주당 이부영	자유민주 연 합 박태희	계			
강동구갑	176,526	108,861	24,939	28,405	42,872	11,238	107,454	1,407	67,665	61.7

● 강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중위	새정치 국민회의 심재권	통 합 민주당 장기욱	자유민주 연 합 허경구	무소속 손은봉	무소속 이순생	계			
강동구을	160,455	95,429	37,947	30,416	14,438	9,703	839	644	93,987	1,442	65,026	59.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부산광역시

● 중구·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의화	새정치국민회의 이철	통합민주당 김정길	자유민주연합 김준호	무소속 동용일	무소속 허삼수	계			
합계	160,555	101,396	41,185	5,246	22,400	1,731	1,574	26,827	98,963	2,433	59,159	63.2
중구	48,589	29,761	14,713	1,709	7,825	688	460	3,697	29,092	669	18,828	61.3
동구	111,966	71,635	26,472	3,537	14,575	1,043	1,114	23,130	69,871	1,764	40,331	64.0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홍인길	새정치국민회의 정오규	통합민주당 최기복	자유민주연합 백영주	무소속곽정출			
서구	128,454	82,120	43,836	5,781	4,872	1,913	19,057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신순기	무소속 조영만	무소속 허정기	무소속 황상모	계						
1,391	441	432	2,808	80,531	1,589	46,334	63.9			

● 영도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형오	새정치국민회의 노차태	통합민주당 김형기	자유민주연합 서명택	무소속 김용원	무소속 이영	무소속 조평래				계
영도구	147,087	96,379	39,849	8,883	2,785	730	19,065	12,355	10,904	94,571	1,808	50,708	65.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산진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재문	새정치 국민회의 송영웅	통 합 민주당 서종범	자유민주 연 합 강경식	무소속 이성우	계			
부산진구갑	161,498	92,410	45,721	8,901	13,315	13,262	9,478	90,677	1,733	69,088	57.2

● 부산진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정수	새정치 국민회의 정인화	통 합 민주당 황백현	자유민주 연 합 한기승	계			
부산진구을	160,954	97,944	47,069	6,128	31,911	10,774	95,882	2,062	63,010	60.9

● 동래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관용	새정치 국민회의 마 청	통 합 민주당 노재철	자유민주 연 합 박중대	계			
동래구갑	115,862	68,633	42,748	4,984	15,876	3,439	67,047	1,586	47,229	59.2

● 동래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경식	새정치 국민회의 정상원	통 합 민주당 정인조	계			
동래구을	96,876	53,586	34,842	5,577	11,763	52,182	1,404	43,290	5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상희	새정치 국민회의 황상수	자유민주 연 합 왕세창	무당파 국민연합 최시명	무소속 김영수	계			
남구갑	119,457	69,508	47,134	5,596	8,245	2,618	4,232	67,825	1,683	49,949	58.2

● 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무성	새정치 국민회의 송정섭	통 합 민주당 허종복	자유민주 연 합 김호길	대 한 민주당 서이남	계			
남구을	105,623	63,602	38,970	5,418	12,175	4,010	1,701	62,274	1,328	42,021	60.2

● 북구·강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형근	새정치 국민회의 조운규	통 합 민주당 우주호	자유민주 연 합 김해규	계			
북 구	170,724	96,824	56,876	8,527	24,298	4,958	94,659	2,165	73,900	56.7

● 북구·강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한이현	통합민주당 안병해	자유민주연합 윤무현	계			
합 계	66,434	39,653	23,784	11,958	2,535	38,277	1,376	26,781	59.7
북 구	14,783	7,573	4,485	2,296	581	7,362	211	7,210	51.2
강서구	51,651	19,299	19,299	9,662	1,954	30,915	1,165	19,571	68.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해운대구 · 기장군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운환	통합민주당 이기택	무소속 박호원	계			
해운대구	179,429	119,238	56,903	55,163	3,687	115,753	3,485	60,191	66.5

● 해운대구 · 기장군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기재	새정치 국민회의 문희탁	통 합 민주당 김기우	무당파 국민연합 김동주	계			
합 계	78,988	56,508	28,533	1,799	5,529	18,878	54,739	1,769	22,480	71.5
해운대구	27,347	17,595	9,965	868	2,679	3,715	17,227	368	9,752	64.3
기장군	51,641	38,913	18,568	931	2,850	15,163	37,512	1,401	12,728	75.3

● 사하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서석재	통합민주당 조경태	자유민주연합 강신수	계			
사하구갑	119,362	71,356	44,988	10,835	14,017	69,840	1,516	48,006	59.8

● 사하구를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종웅	새정치 국민회의 박희동	통 합 민주당 김도강	자유민주 연 합 강호영	무소속 유강렬	계			
사하구를	142,274	79,766	48,889	5,590	9,183	2,882	11,685	78,229	1,537	62,508	5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금정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진재	새정치 국민의 문용한	통 합 민주당 이황규	자유민주 연 합 채선수	무소속 이병태	계			
금정구갑	108,701	66,022	41,963	5,598	9,983	2,778	4,193	64,515	1,507	42,679	60.7

● 금정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도연	새정치 국민의 김종필	통 합 민주당 김재규	자유민주 연 합 최국주	무당파 국민연합 성태진	무소속 박정웅				계
금정구을	102,840	62,222	34,939	2,521	14,495	2,482	4,208	2,418	61,063	1,159	40,618	60.5

● 연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형우	새정치 국민의 김석근	자유민주 연 합 김현근	무소속 박순보				계
연제구	171,457	104,236	61,964	8,184	5,616	26,225	101,989	2,247	67,221	60.8

● 수영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유흥수	새정치 국민의 최승호	통 합 민주당 손태인	무소속 권쌍현	무소속 김현호				계
수영구	141,649	84,641	48,319	5,960	24,084	2,857	1,894	83,114	1,527	57,008	59.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사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권철현	새정치 국민회의 차재철	통 합 민주당 조용호	자유민주 연 합 이상덕	무당파 국민연합 박중기	무소속 이희용	계			
사상구갑	94,447	55,493	27,816	5,915	4,872	5,091	540	9,990	54,224	1,269	38,954	58.8

● 사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신상우	통 합 민주당 정윤재	자유민주 연 합 최윤기	무소속 박정진	무소속 신인식	무소속 양재생	계			
사상구을	99,614	56,232	26,255	12,034	2,942	10,377	488	3,068	55,164	1,068	43,382	56.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구광역시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유성환	새정치국민회의 이수만	통합민주당 이강철	자유민주연합 박준규	무당파국민연합 한병채			
중 구	83,545	53,896	17,079	991	7,183	17,631	3,686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영철	무소속 유병을	무소속 이우대	무소속 임 철							
1,126	344	167	4,790	52,997	899	29,649	64.5			

● 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신성일	새정치국민회의 조동욱	통합민주당 임대운	자유민주연합 김복동	무당파국민연합 위현복			
동구갑	124,092	76,942	15,572	0	5,977	28,134	1,848	8,961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박춘근	무소속 이종구	무소속 채명길	무소속 최규태							
1,444	8,968	400	3,533	74,837	2,105	47,150	62.0			

● 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배석기	새정치 국민회의 이동학	통 합 민주당 류중근	자유민주 연 합 운상용	무당파 국민연합 홍대식	무소속 서 훈	무소속 최상천				
동구을	122,741	69,657	9,172	2,283	2,108	19,925	10,614	20,715	3,600	68,417	1,240	53,084	56.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용진	통 합 민주당 우동철	자유민주 연 합 김풍삼	무소속 김천희	무소속 김현근	무소속 나학진	무소속 백승홍	무소속 정호용	계			
서구갑	123,443	74,218	7,840	1,502	8,748	2,262	2,657	841	29,568	19,583	73,001	1,217	49,225	60.1

● 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재섭	새정치 국민회의 최화용	자유민주 연 합 최운지	무소속 김기수	무소속 김부기	무소속 서중현	무소속 이종섭	계			
서구을	108,195	65,748	20,950	1,070	19,083	1,806	802	19,042	1,578	64,331	1,417	42,447	60.8

●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해석	통합민주당 김진태	자유민주연합 이정무	무당파국민연합 성만현	무소속 박영린	무소속 송효익			
남 구	163,435	97,017	25,064	6,131	42,534	2,669	1,140	1,500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신진욱	무소속 안유호	무소속 양동석	무소속 이승우	무소속 조정환	계						
6,155	1,556	1,222	2,443	5,057	95,471	1,546	66,418	59.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종신	새정치 국민회의 박화익	통 합 민주당 이윤기	자유민주 연 합 이의익	무당파 국민연합 김태달	무소속 박승국	무소속 서창식	무소속 송필목				계
북구갑	130,624	81,070	9,285	1,288	3,461	33,352	2,106	24,355	4,053	1,640	79,540	1,530	49,554	62.1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용태	자유민주 연 합 안택수	무당파 국민연합 최은순	무소속 권오상	무소속 김종호	무소속 김충환	무소속 이성환	계			
북구을	128,499	77,894	23,013	25,688	6,037	8,459	7,999	2,332	3,061	76,589	1,305	50,605	60.6

● 수성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소속 김인석	무소속 마영렬
			신한국당 이원형	통합민주당 권오선	자유민주연합 박철언	무소속 이민현	무소속 이선동		
수성구갑	153,807	94,589	22,073	9,410	49,735	2,017	536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박인목	무소속 박형룡	무소속 이민현	무소속 이선동	계					
451	4,429	4,196	387	93,234	1,355	59,218	61.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수성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윤영탁	새정치국민회의 양현석	통합민주당 정상태	자유민주연합 박구일	무당파국민연합 이치호			
수성구을	151,619	95,677	25,112	1,732	4,390	28,187	14,753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시립	무소속 김중태	무소속 남철우	무소속 박상필	계						
7,324	3,003	7,435	2,425	94,361	1,316	55,942	63.1			

● 달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한규	새정치국민회의 박방희	통합민주당 서정대	자유민주연합 박종근	무당파국민연합 김은집			
달서구갑	145,192	85,258	26,402	2,022	등록무효	32,057	4,944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이상록	무소속 이상섭	무소속 이용택	무소속 임갑수	계						
516	5,525	3,156	7,914	82,536	2,722	59,934	58.7			

● 달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철우	새정치국민회의 김춘곤	자유민주연합 최재욱	무소속 변을유	무소속 서병환	무소속 이광수	무소속 이해봉				계
달서구을	166,203	100,377	12,345	2,145	37,964	4,374	1,935	1,060	38,653	98,476	1,901	65,826	60.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달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석원	새정치국민회의 이원철	자유민주연합 김정훈	계			
달성군	83,838	53,538	31,958	2,289	16,707	50,954	2,584	30,300	63.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인천광역시

●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서정화	새정치 국민회의 김순배	통 합 민주당 이신용	자유민주 연 합 박종국	계			
합 계	134,193	85,979	40,916	27,571	6,832	8,037	83,356	2,623	48,214	64.1
중 구	53,113	32,576	15,337	10,598	2,610	3,109	31,654	922	20,537	61.3
동 구	70,902	45,449	20,542	15,532	3,573	4,555	44,202	1,247	25,453	64.1
옹진군	10,178	7,954	5,037	1,441	649	373	7,500	454	2,224	78.1

●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심정구	새정치 국민회의 박우섭	통 합 민주당 유종섭	자유민주 연 합 정의성	무소속 심상길				계
남구갑	157,093	95,607	27,387	26,304	4,324	15,419	20,619	94,053	1,554	61,486	60.9

● 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강희	새정치 국민회의 하근수	통 합 민주당 안영근	자유민주 연 합 박창근	무소속 강승훈				계
남구을	140,509	86,248	34,867	21,885	10,567	12,391	4,993	84,703	1,545	54,261	61.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연수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서한샘	새정치 국회의 정구운	통 합 민주당 서상섭	자유민주 연 합 명화섭	무소속 민만기	무소속 홍기택	계			
연수구	141,381	87,904	30,128	24,059	11,718	13,140	2,777	4,781	86,603	1,301	53,477	62.2

● 남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윤성	새정치 국회의 유재희	통 합 민주당 김종용	자유민주 연 합 이상만	무당파 국민연합 권오덕	계			
남동구갑	131,669	77,238	41,048	16,895	5,936	10,911	964	75,754	1,484	54,431	58.7

● 남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원복	새정치 국회의 이호웅	통 합 민주당 박호영	자유민주 연 합 김택수	계			
남동구을	126,418	75,915	30,695	26,567	5,329	11,910	74,501	1,414	50,503	60.1

● 부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조진형	새정치 국회의 송선근	통 합 민주당 정정훈	자유민주 연 합 진영광	무당파 국민연합 이수일	무소속 이희구	계			
부평구갑	181,281	102,407	32,355	29,262	13,450	16,121	1,269	8,213	100,670	1,737	78,874	56.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재명	새정치 국민회의 신용석	통 합 민주당 정화영	자유민주 연 합 김유동	무소속 김 유	계			
부평구을	150,222	91,651	39,824	31,266	8,729	8,851	1,587	90,257	1,394	58,571	61.0

●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안상수	새정치 국민회의 이기문	통 합 민주당 김말룡	자유민주 연 합 조홍규	무당파 국민연합 이병현	무소속 이완규				계
계양구	160,686	93,325	24,697	29,688	10,593	11,526	5,615	9,583	91,702	1,623	67,361	58.1

●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경재	새정치 국민회의 김정호	통 합 민주당 정해남	자유민주 연 합 정창화	계			
합 계	60,898	41,495	19,758	3,484	9,936	6,665	39,843	1,652	19,403	68.1
계양구	8,265	2,985	1,151	764	519	435	2,869	116	5,280	36.1
강화군	52,633	38,510	18,607	2,720	9,417	6,230	36,974	1,536	14,123	73.2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조영장	새정치 국민회의 조철구	통 합 민주당 손기선	자유민주 연 합 이훈국	무당파 국민연합 이승희	무소속 조희형				계
서 구	193,691	110,198	33,643	36,823	14,781	19,614	1,060	1,833	107,754	2,444	83,493	56.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광주광역시

●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조규범	새정치 국민회의 신기하	통합 민주당 김범태	자유민주 연합 고병렬	계			
동 구	104,310	66,085	4,264	58,673	1,711	615	65,263	822	38,225	63.4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환의	새정치 국민회의 정동채	통합 민주당 최운용	자유민주 연합 강성상	계			
서 구	148,653	98,250	11,428	83,191	2,051	466	97,136	1,114	50,403	66.1

●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승채	새정치 국민회의 임복진	통합 민주당 진선수	자유민주 연합 김이곤	무소속 강도석				계
남 구	167,175	106,953	7,759	90,687	2,213	684	3,637	104,980	1,973	60,222	64.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경주	새정치 국민의회의 박광태	자유민주 연합 김홍주	무당파 국민연합 신금남	계			
북구갑	144,587	91,406	4,658	83,596	1,172	777	90,203	1,203	53,181	63.2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고귀남	새정치 국민의회의 이길재	통 합 민주당 유인상	자유민주 연합 김천국				계
북구을	154,501	99,809	6,129	88,310	3,449	739	98,627	1,182	54,692	64.6

● 광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용호	새정치 국민의회의 조홍규	통 합 민주당 이승준	자유민주 연합 정원섭	무소속 김동철	무소속 김면중				계
광산구	119,866	78,980	5,783	55,650	1,069	689	10,807	3,457	77,455	1,525	40,886	65.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전광역시

● 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남재두	새정치 국민회의 선병렬	통합 민주당 김덕경	자유민주 연합 김철환	21세기 한독당 이찬구	무소속 오택진	계			
동구갑	104,042	65,046	18,193	6,885	5,350	31,446	426	1,169	63,469	1,577	38,996	62.5

● 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송천영	새정치국민회의 윤성한	통합민주당 강구철	자유민주연합 이양희	대한민주당 김성욱			
동구을	79,833	49,042	11,032	4,996	5,324	24,008	140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선림	무소속 오윤배	무소속 이선권	무소속 정구국	계						
1,265	373	160	836	48,134	908	30,791	61.4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안양로	새정치국민회의 신제철	통합민주당 김홍철	자유민주연합 강창희	대한민주당 송재호			
중 구	181,079	109,169	16,406	12,395	4,598	62,716	551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종길	무소속 김홍만	무소속 송두영	무소속 이종오	계						
615	4,532	4,799	566	107,178	1,991	71,910	60.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재환	새정치 국민회의 정구영	통합 민주당 윤석대	자유민주 연합 이원범	무소속 박영문	무소속 천병학	계			
서구갑	122,713	76,940	18,524	11,708	4,785	37,730	2,410	376	75,533	1,407	45,773	62.7

● 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염홍철	새정치 국민회의 전득배	통합 민주당 이희원	자유민주 연합 이재선	무소속 유재영	계			
서구을	141,734	94,848	32,630	9,368	6,086	41,825	3,679	93,588	1,260	46,886	66.9

● 유성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신현국	새정치 국민회의 이대형	통합 민주당 이병령	자유민주 연합 조영재	무당파 국민연합 박충순	21세기 한독당 류관석	무소속 박상록	계			
유성구	80,173	51,739	7,768	6,475	13,462	20,571	1,342	567	602	50,787	952	28,434	64.5

● 대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상진	새정치 국민회의 서윤관	통합 민주당 김원웅	자유민주 연합 이인구	계			
대덕구	131,677	82,844	6,879	7,580	26,090	40,346	80,895	1,949	48,833	62.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소속 박종택
			신한국당 이호정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철	통합민주당 유용근	자유민주연합 이병희	무소속 박종택	
장안구	168,331	97,943	27,078	18,221	13,890	27,664	1,057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박현호	무소속 안병철	무소속 이희상	무소속 정관희	계			
2,833	2,730	1,558	1,425	96,456	1,487	70,388	58.2

● 수원시 권선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인영	새정치국민회의 최민화	통 합 민주당 김정태	자유민주 연합 이일규	무소속 윤태현	무소속 임병천	계			
권선구	175,762	97,223	28,356	22,845	26,539	14,207	1,448	2,384	95,779	1,444	78,539	55.3

● 수원시 팔달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남평우	새정치국민회의 박왕식	통 합 민주당 김대권	자유민주 연합 김인규	무당파 국민연합 윤시원	무소속 손 민	무소속 이응철	무소속 차상훈	계			
팔달구	151,939	86,676	25,775	21,300	11,134	12,820	421	5,590	1,345	7,012	85,397	1,279	65,263	57.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남시 수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유제인	새정치 국민회의 이윤수	통 합 민주당 김준기	자유민주 연 합 이대엽	무소속 장문영	계			
수정구	180,448	107,846	20,644	39,359	6,460	37,863	1,662	105,988	1,858	72,602	59.8

● 성남시 중원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원립	새정치 국민회의 조성준	통 합 민주당 김일주	자유민주 연 합 강희규	무소속 정형주				계
중원구	191,053	107,545	27,355	40,022	7,318	21,700	8,794	105,189	2,356	83,508	56.3

● 성남시 분당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오세응	새정치 국민회의 나필열	통 합 민주당 성유보	자유민주 연 합 권현성	무소속 김종우	무소속 엄형민				계
분당구	231,900	151,744	49,674	38,439	28,444	29,240	1,668	2,786	150,251	1,493	80,156	65.4

● 의정부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홍문종	새정치 국민회의 문희상	자유민주 연 합 김문원	무소속 지철호				계
의정부시	192,167	116,005	40,507	37,490	26,460	9,092	113,549	2,456	76,162	60.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안양시 만안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종근	새정치 국민회의 이준형	통 합 민주당 김준용	자유민주 연 합 권수창	무소속 김관렬	무소속 김규봉	무소속 김선배	무소속 김종박				계
만안구	179,211	105,335	29,262	29,013	8,183	29,612	739	2,657	1,107	3,181	103,754	1,581	73,876	58.8

● 안양시 동안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심재철	새정치 국민회의 최희준	통 합 민주당 최병권	자유민주 연 합 가재춘	무소속 김일주	계			
동안구갑	115,010	74,777	18,222	20,380	7,604	10,137	17,417	73,760	1,017	40,233	65.0

● 안양시 동안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진섭	새정치 국민회의 이석현	통 합 민주당 송운학	자유민주 연 합 이석원	계			
동안구을	100,882	65,321	21,369	27,330	6,259	9,577	64,535	786	35,561	64.7

● 부천시 원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허태열	새정치 국민회의 안동선	통 합 민주당 하장보	자유민주 연 합 김정기	무소속 이은재	계			
원미구갑	119,139	68,203	22,957	25,118	4,885	11,842	2,340	67,142	1,061	50,936	57.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천시 원미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사철	새정치 국민회의 배기선	통 합 민주당 조영상	자유민주 연 합 김길홍	무소속 김만옥	계			
원미구	133,975	83,885	31,371	27,955	9,647	11,956	1,761	82,690	1,195	50,090	62.6

● 부천시 소사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문수	새정치 국민회의 박지원	통 합 민주당 이홍종	자유민주 연 합 박규식	무소속 김중상	계			
소사구	140,892	86,674	33,446	31,786	4,802	14,238	1,057	85,329	1,345	54,218	61.5

● 부천시 오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오성계	새정치 국민회의 최선영	통 합 민주당 원혜영	자유민주 연 합 김정웅	계			
오정구	120,730	69,383	19,338	20,892	20,502	7,337	68,069	1,314	51,347	57.5

● 광명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덕화	새정치 국민회의 남궁진	통 합 민주당 최정택	자유민주 연 합 김재주	무당파 국민연합 김석영	계			
광명시갑	115,882	74,588	24,405	25,852	7,913	14,563	546	73,279	1,309	41,294	64.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광명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손학규	새정치 국민회의 김은호	통 합 민주당 김승남	자유민주 연 합 차종태	계			
광명시을	117,026	75,233	31,544	21,062	5,289	16,057	73,952	1,281	41,793	64.3

● 평택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광	새정치 국민회의 이미경	통 합 민주당 박정수	자유민주 연 합 조성진	무소속 김용한	무소속 원유철				계
평택시갑	98,736	63,509	11,883	8,372	2,919	12,536	1,430	24,935	62,075	1,434	35,227	64.3

● 평택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자현	새정치 국민회의 서화택	통 합 민주당 장기천	자유민주 연 합 허남훈				계
평택시을	123,381	81,831	19,408	19,757	10,221	30,523	79,909	1,922	41,550	66.3

● 동두천시 · 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목요상	새정치 국민회의 이성수	통 합 민주당 김형광	자유민주 연 합 김국환	무소속 임사빈				계
합 계	115,729	77,570	26,632	7,930	20,137	2,827	17,978	75,504	2,066	38,159	67.0
동두천시	51,053	34,807	14,622	3,125	9,196	1,059	6,079	34,081	726	16,246	68.2
양주군	64,676	42,763	12,010	4,805	10,941	1,768	11,899	41,423	1,340	21,913	6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안산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안재문	새정치 국민회의 김영환	통합 민주당 문영희	자유민주 연합 김동현	무소속 김진옥	무소속 윤동혁	무소속 이백래	계			
안산시갑	162,220	94,226	30,181	31,997	8,546	17,102	2,765	788	1,505	92,884	1,342	67,994	58.1

● 안산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상용	새정치 국민회의 천정배	통합 민주당 장경우	자유민주 연합 윤문원	무소속 김선필	계			
안산시을	165,819	96,616	30,984	36,902	11,274	13,897	2,037	95,094	1,522	69,203	58.3

● 고양시 덕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국현	새정치 국민회의 이영복	통합 민주당 이근진	자유민주 연합 황인형	무소속 양길수	계			
덕양구	179,517	103,594	33,564	32,659	25,251	8,896	1,640	102,010	1,584	75,923	57.7

● 고양시 일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택석	새정치 국민회의 김덕배	통합 민주당 홍기훈	자유민주 연합 김용수	무소속 김양원	무소속 서유석	무소속 이상일	무소속 이호진				계
일산구	221,231	139,577	47,876	40,371	18,676	10,922	1,103	15,480	2,013	1,671	138,112	1,465	81,654	63.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과천시 · 의왕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안상수	새정치 국민회의 이동진	통 합 민주당 김부겸	자유민주 연 합 박제상	무당파 국민연합 신하철	무소속 이희숙	계			
합 계	121,767	77,323	25,844	17,327	13,780	13,274	3,110	3,118	76,453	870	44,444	63.5
과천시	48,212	30,796	11,694	6,223	6,488	3,686	446	1,981	30,518	278	17,416	63.9
의왕시	73,555	46,527	14,150	11,104	7,292	9,588	2,664	1,137	45,935	592	27,028	63.3

● 구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전용원	새정치 국민회의 박영순	통 합 민주당 조정무	자유민주 연 합 박한영	무소속 박수천	무소속 정춘상	계			
구리시	96,868	58,968	21,810	15,760	8,944	8,267	2,455	659	57,895	1,073	37,900	60.9

● 남양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성호	새정치 국민회의 이용곤	통 합 민주당 민병주	자유민주 연 합 조병봉	무소속 서육원	계				
남양주시	163,989	96,659	40,109	31,095	7,199	12,893	2,738	94,034	2,625	67,330	58.9	

● 오산시 · 화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창현	새정치 국민회의 송형석	통 합 민주당 우호태	자유민주 연 합 박신원	무소속 정동호	계				
합 계	163,034	102,731	28,762	15,211	19,717	30,009	5,500	99,199	3,532	60,303	63.0	
오산시	46,074	30,348	6,010	3,853	3,139	15,885	913	29,800	548	15,726	65.9	
화성군	116,960	72,383	22,752	11,358	16,578	14,124	4,587	69,399	2,984	44,577	61.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시흥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병수	새정치국민회의 백청수	통합민주당 제정구	자유민주연합 장천수	계			
시흥시	96,058	60,721	16,638	12,596	25,584	4,755	59,573	1,148	35,337	63.2

● 군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창웅	새정치국민회의 유선호	통합민주당 여익구	자유민주연합 심양섭	무당파 국민연합 박기수	무소속 정창록	계			
군포시	161,710	101,215	30,123	31,869	13,018	21,223	414	3,271	99,918	1,297	60,495	62.6

● 하남시·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영훈	새정치국민회의 문학진	통합민주당 광인식	자유민주연합 양인석	무당파 국민연합 강광호	계			
합계	144,429	81,624	31,190	23,084	9,100	14,840	1,449	79,663	1,961	62,805	56.5
하남시	79,897	45,401	17,684	13,387	3,626	9,348	561	44,606	795	34,496	56.8
광주군	64,532	36,223	13,506	9,697	5,474	5,492	888	35,057	1,166	28,309	56.1

● 여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동성	새정치국민회의 민호영	통합민주당 이규택	자유민주연합 허정남				계
여주군	67,748	46,987	18,232	2,214	19,399	5,364	45,209	1,778	20,761	69.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파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명근	새정치국민회의 김병호	통 합 민주당 박영석	자유민주 연 합 이재창	무당파 국민연합 조근만	무소속 남궁준	무소속 윤승중	계			
파주시	119,875	78,441	25,137	9,632	4,265	31,196	1,305	2,843	2,340	76,718	1,723	41,434	65.4

● 연천군·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한동	새정치국민회의 윤성진	통합민주당 김유근	계			
합 계	128,473	86,609	52,048	22,719	8,498	83,265	3,344	41,864	67.4
연천군	39,046	26,707	13,523	8,985	3,126	25,634	1,073	12,339	68.4
포천군	89,427	59,902	38,525	13,734	5,372	57,631	2,271	29,525	67.0

● 가평군·양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길환	새정치국민회의 민병서	통 합 민주당 조점용	자유민주 연 합 홍성표	계			
합 계	97,400	66,520	28,409	15,368	3,975	16,311	64,063	2,457	30,880	68.3
가평군	39,750	27,548	9,582	4,109	1,935	10,741	26,367	1,181	12,202	69.3
양평군	57,650	38,972	18,827	11,259	2,040	5,570	37,696	1,276	18,678	67.6

● 이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영문	새정치국민회의 전상현	통 합 민주당 황규선	자유민주 연 합 유종열	무소속 이희규				계
이천시	104,843	65,951	15,618	5,437	20,728	7,107	15,382	64,272	1,679	38,892	62.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용인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웅희	새정치 국민회의 김정길	통 합 민주당 나진우	자유민주 연 합 김학규	계			
용인시	167,348	103,710	30,826	28,236	12,599	29,227	100,888	2,822	63,638	62.0

● 안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해구	새정치 국민회의 홍석완	통 합 민주당 이무역	자유민주 연 합 이장재	계			
안성군	87,554	58,169	28,793	12,696	8,775	6,305	56,569	1,600	29,385	66.4

● 김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두섭	새정치 국민회의 이택룡	통 합 민주당 윤문수	자유민주 연 합 이재선	무소속 박종우				계
김포군	76,084	48,820	15,341	7,409	4,228	2,819	17,546	47,343	1,477	27,264	64.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강 원 도

● 춘천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한승수	새정치 국민회의 이용훈	통 합 민주당 최 윤	무당파 국민연합 이상수	계			
춘천시갑	82,523	53,524	29,990	3,623	16,697	1,572	51,882	1,642	28,999	64.9

● 춘천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민섭	새정치 국민회의 백태열	통 합 민주당 유남선	자유민주 연 합 류중수	계			
춘천시을	80,496	54,460	19,659	3,039	10,066	20,069	52,833	1,627	26,036	67.7

● 원주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함종한	새정치 국민회의 임현호	통 합 민주당 박정원	자유민주 연 합 한상철	무소속 원광호	무소속 정덕중	계			
원주시갑	82,335	53,147	22,132	4,436	3,417	16,442	2,858	2,541	51,826	1,321	29,188	64.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원주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진	새정치 국민회의 박전하	통합 민주당 안재운	자유민주 연합 박우순	무소속 김광림	무소속 김천희	무소속 정상철	계			
원주시	80,601	53,530	23,183	4,532	3,415	14,408	857	650	4,940	51,985	1,545	27,071	66.4

● 강릉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돈용	새정치 국민회의 김진하	통합 민주당 함영희	자유민주 연합 황학수	무소속 문준식	무소속 이호영	계			
강릉시	71,357	48,322	12,988	2,866	9,405	14,414	2,102	5,381	47,156	1,166	23,035	67.7

● 강릉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중규	새정치 국민회의 이참수	통합 민주당 최욱철	자유민주 연합 김문기	무소속 정인수	계			
강릉시	82,158	54,723	13,525	2,844	23,988	7,976	4,879	53,212	1,511	27,435	66.6

● 동해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연희	새정치 국민회의 홍을표	자유민주 연합 지일웅	무소속 홍희표	계			
동해시	68,549	49,173	24,146	2,525	6,816	14,547	48,034	1,139	19,376	71.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태백시 · 정선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우병	새정치 국회의 안영배	통 합 민주당 최승영	자유민주 연 합 김좌일	무소속 유승규	무소속 장경덕	계			
합 계	84,278	60,453	17,514	3,352	3,382	9,021	11,847	13,591	58,707	1,746	23,825	71.7
태백시	43,391	31,117	5,438	822	449	1,592	9,987	12,220	30,508	609	12,274	71.7
정선군	40,887	29,336	12,076	2,530	2,933	7,429	1,860	1,371	28,199	1,137	11,551	71.7

●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송훈석	새정치 국회의 최정식	통 합 민주당 조영두	자유민주 연 합 한병기	무소속 정광벽	무소속 황돈태	계			
합 계	129,340	89,076	29,544	9,519	7,709	22,880	6,667	10,248	86,567	2,509	40,264	68.9
속초시	55,279	35,841	10,994	4,078	3,070	10,725	320	5,969	35,156	685	19,438	64.8
고성군	27,731	20,048	9,632	2,727	1,307	4,803	202	727	19,398	650	7,683	72.3
양양군	22,242	16,068	4,155	966	2,524	4,489	312	3,055	15,501	567	6,174	72.2
인제군	24,088	17,119	4,763	1,748	808	2,863	5,833	497	16,512	607	6,969	71.1

● 삼척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신현선	새정치 국회의 박병준	통 합 민주당 장을병	자유민주 연 합 김정남	무소속 김재철	무소속 이주해	계			
삼척시	61,960	48,600	11,245	732	14,957	6,143	5,834	8,111	47,022	1,578	13,360	78.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흥천군 · 횡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용선	새정치 국민회의 안병학	자유민주 연 합 조일현	무소속 박성문	무소속 원용강	무소속 유재규	계			
합 계	88,417	64,082	19,370	2,139	18,876	523	1,645	18,550	61,103	2,979	24,335	72.5
흥천군	53,258	38,509	16,005	1,447	16,303	382	1,342	1,426	36,905	1,604	14,749	72.3
횡성군	35,159	25,573	3,365	692	2,573	141	303	17,124	24,198	1,375	9,586	72.7

● 영월군 · 평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기수	새정치국민회의 신민선	통합민주당 엄화열	자유민주연합 이득현	대한민주당 최봉수	무소속 권병중			
합 계	72,605	50,135	16,675	3,179	5,790	12,814	326	654			
영월군	37,549	25,703	6,674	2,101	4,341	4,798	175	525			
평창군	35,056	24,432	10,001	1,078	1,449	8,016	151	129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문승국	무소속 양재천	무소속 임의현	무소속 정병기	무소속 함영기	계			
1,488	1,235	1,234	268	4,838	48,501	1,634	22,470	69.1
1,127	193	985	180	3,727	24,826	877	11,846	68.5
361	1,042	249	88	1,111	23,675	757	10,624	69.7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용삼	새정치 국민회의 박영률	통 합 민주당 김철배	자유민주 연 합 염보현	계			
합 계	73,165	53,748	24,903	4,666	4,335	18,071	51,975	1,773	19,417	73.5
철원군	37,702	27,440	12,448	1,659	3,129	9,429	26,665	775	10,262	72.8
화천군	18,585	13,948	6,772	1,023	701	4,958	13,454	494	4,637	75.0
양구군	16,878	12,360	5,683	1,984	505	3,684	11,856	504	4,518	73.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홍재형	새정치 국민회의 장한량	통 합 민주당 신창민	자유민주 연 합 구천서	무당파 국민연합 채영만	무소속 김영길	무소속 이경동	무소속 이정균				계
상당구	147,189	97,288	35,286	10,242	3,479	40,509	650	2,602	1,384	1,617	95,769	1,519	49,901	66.1

● 청주시 흥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윤석민	새정치 국민회의 손종학	통 합 민주당 정기호	자유민주 연 합 오용운	무당파 국민연합 이성일	무소속 최현호	계			
흥덕구	193,221	115,466	23,815	9,241	19,729	49,292	706	10,773	113,556	1,910	77,755	59.8

● 충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연권	새정치 국민회의 정달영	통 합 민주당 정기영	자유민주 연 합 김선길	무소속 임 호	계			
충주시	146,719	99,217	23,482	6,894	11,757	41,388	12,496	96,017	3,200	47,502	67.6

● 제천시·단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송광호	통 합 민주당 김대부	자유민주 연 합 안영기	무소속 김영준	계			
합 계	130,851	91,156	25,656	6,610	27,221	27,972	87,459	3,697	39,695	69.7
제천시	99,679	68,588	17,477	4,873	20,195	23,469	66,014	2,574	31,091	68.8
단양군	31,172	22,568	8,179	1,737	7,026	4,503	21,445	1,123	8,604	72.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청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신경식	새정치 국민회의 김기영	통 합 민주당 신언관	자유민주 연 합 오효진	무소속 홍익표	계			
청원군	84,602	59,829	21,853	3,628	7,977	21,478	2,678	57,614	2,215	24,773	70.7

●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동호	새정치 국민회의 이용희	통 합 민주당 최 극	자유민주 연 합 어준선	무당파 국민연합 강영창	무소속 이명우				계
합 계	127,261	96,569	30,402	22,968	3,428	33,117	1,308	2,659	93,882	2,687	30,692	75.9
보은군	35,289	27,181	2,844	3,268	681	19,299	206	276	26,574	607	8,108	77.0
옥천군	46,325	34,581	4,855	16,325	887	10,229	842	562	33,700	881	11,744	74.6
영동군	45,647	34,807	22,703	3,375	1,860	3,589	260	1,821	33,608	1,199	10,840	76.3

● 진천군·음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민태구	새정치 국민회의 박병남	통 합 민주당 구자웅	자유민주 연 합 정우택	무소속 김용태	무소속 이관복				계
합 계	99,470	71,464	23,777	3,493	3,169	33,771	4,036	1,260	69,506	1,958	28,006	71.8
진천군	40,085	28,862	5,222	1,555	999	18,931	1,004	323	28,034	828	11,223	72.0
음성군	59,385	42,602	18,555	1,938	2,170	14,840	3,032	937	41,472	1,130	16,783	71.7

● 괴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종호	새정치 국민회의 고경수	통 합 민주당 김년태	자유민주 연 합 김동관	무소속 황일성	계			
괴산군	59,081	44,196	22,584	1,945	2,103	11,421	4,097	42,150	2,046	14,885	74.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청남도

제 15 대 국 선

● 천안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성무용	새정치 국회의 최기덕	자유민주 연 합 정일영	무소속 양승연	무소속 한청수	계			
천안시갑	117,286	72,114	19,038	5,678	34,789	1,014	9,354	69,873	2,241	45,172	61.5

● 천안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한곤	새정치 국회의 정재원	통 합 민주당 박동인	자유민주 연 합 함석재	무소속 정세용	계			
천안시을	107,459	63,616	10,236	6,775	4,919	37,509	2,594	62,033	1,583	43,843	59.2

● 공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상재	새정치 국회의 이성구	통 합 민주당 윤원중	자유민주 연 합 정석모	계				
공주시	96,019	69,160	17,387	2,355	13,486	33,155	66,383	2,777	26,859	72.0	

● 보령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일영	자유민주연합 김용환	무소속 안갑원	계			
보령시	84,725	55,582	10,696	36,945	4,931	52,572	3,010	29,143	65.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아산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황명수	새정치 국민회의 이원창	통 합 민주당 이진구	자유민주 연 합 이상만	무소속 박인재	무소속 박창호	무소속 이한범				계
아산시	112,465	74,555	21,413	4,273	8,978	35,589	916	493	1,079	72,741	1,814	37,910	66.3

● 서산시·태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태권	새정치 국민회의 안숙순	통 합 민주당 문석호	자유민주 연 합 변응진	계			
합 계	147,277	101,753	27,354	3,435	13,808	52,723	97,320	4,433	45,524	69.1
서산시	97,363	66,623	17,788	2,352	7,710	36,081	63,931	2,692	30,740	68.4
태안군	49,914	35,130	9,566	1,083	6,098	16,642	33,389	1,741	14,784	70.4

● 논산시·금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유한열	새정치국민회의 김형중	통합민주당 강희재	자유민주연합 김범명	무당파국민연합 임덕규	친민당 권정수			
합 계	165,199	109,799	20,630	17,808	3,046	49,075	1,334	571			
논산시	114,594	76,611	6,176	16,058	1,476	42,460	1,237	466			
금산군	50,605	33,188	14,454	1,750	1,570	6,615	97	105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박우석	무소속 박종배	무소속 박찬중	무소속 이훈오	무소속 조남근	계			
3,642	1,794	1,648	1,201	5,805	106,554	3,245	55,400	66.5
3,530	1,562	257	528	885	74,635	1,976	37,983	66.9
112	232	1,391	673	4,920	31,919	1,269	17,417	65.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연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희부	새정치 국민의회의 신상근	통 합 민주당 김준희	자유민주 연 합 김고성	무소속 임재길	무소속 최부웅	계			
연기군	57,179	41,573	11,989	1,169	1,804	15,428	9,415	456	40,261	1,312	15,606	72.7

● 부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진삼	새정치 국민의회의 정용환	통 합 민주당 김택수	자유민주 연 합 김종필	무소속 조종구	계			
부여군	72,563	55,058	13,786	2,034	1,090	35,292	982	53,184	1,874	17,505	75.9

● 서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홍열	통합민주당 나소열	자유민주연합 이금규	계			
서천군	60,680	45,371	18,618	4,068	20,121	42,807	2,564	15,309	74.8

● 청양군·홍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완구	새정치 국민의회의 이해숙	통 합 민주당 홍문표	자유민주 연 합 조부영	계			
합 계	104,536	79,044	35,638	1,581	8,815	29,057	75,091	3,953	25,492	75.6
청양군	33,092	24,980	12,194	423	2,040	9,009	23,666	1,314	8,112	75.5
홍성군	71,444	54,064	23,444	1,158	6,775	20,048	51,425	2,639	17,380	75.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예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오장섭	통 합 민주당 김성식	자유민주 연 합 조종석	무당파 국민연합 민석근	계			
예산군	78,182	57,805	23,090	4,961	27,096	637	55,784	2,021	20,377	73.9

● 당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송영진	새정치 국민회의 백종길	통 합 민주당 정석래	자유민주 연 합 김현욱	무소속 고영석				계
당진군	85,938	59,891	16,535	7,235	2,674	29,897	1,963	58,304	1,587	26,047	69.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북도

제 15 대
국 선

● 전주시 완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손풍삼	새정치 국민회의 장영달	통 합 민주당 임광순	무소속 김광종	계			
완산구	196,861	118,768	13,401	87,158	13,178	2,614	116,351	2,417	78,093	60.3

● 전주시 덕진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현도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계			
덕진구	176,971	112,520	10,971	97,858	108,829	3,691	64,451	63.6

● 군산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송서재	새정치 국민회의 채영석	통 합 민주당 양재길	무소속 강근호	무소속 김봉욱	무소속 엄대우	무소속 조부광	계			
군산시갑	90,113	59,597	7,469	26,883	1,853	14,007	4,594	2,733	853	58,392	1,205	30,516	66.1

● 군산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현욱	새정치국민회의 강철선	통합민주당 고홍길	계			
군산시을	96,954	68,836	36,100	29,874	1,145	67,119	1,717	28,118	71.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익산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조남조	새정치 국민회의 최재승	통합 민주당 손인범	자유민주 연합 김용관	무소속 김범태	계			
익산시갑	102,923	71,145	22,918	43,654	1,505	716	995	69,788	1,357	31,778	69.1

● 익산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공천섭	새정치 국민회의 이 협	통합 민주당 박경철	자유민주 연합 이승홍	무소속 소신섭	계			
익산시을	116,819	76,519	14,792	52,888	3,733	1,147	2,464	75,024	1,495	40,300	65.5

● 정읍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손 양	새정치 국민회의 윤철상	통합 민주당 김원기	자유민주 연합 정태진	무당파 국민연합 이원배	무소속 권영신	계			
정읍시	105,783	77,307	10,318	39,329	20,891	885	2,244	1,050	74,717	2,590	28,476	73.1

● 남원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양창식	새정치국민회의 조찬형	통합민주당 최희원	계			
남원시	76,280	58,049	17,621	34,983	3,213	55,817	2,232	18,231	7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김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건식	새정치 국회의장 장성원	통 합 민주당 조병인	자유민주 연 합 오남성	무당파 국민연합 이창렬	무소속 라경균	무소속 최락도	계			
김제시	92,674	65,195	18,363	32,060	1,292	475	5,277	1,248	4,841	63,556	1,639	27,479	70.3

● 완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상원	새정치 국회의장 김태식	통 합 민주당 이성호	자유민주 연 합 안방창	계			
완주군	62,535	42,868	13,516	24,869	2,162	667	41,214	1,654	19,667	68.6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장현	새정치 국회의장 정세균	통 합 민주당 최팔용	무소속 이상욱	계			
합 계	75,215	54,988	12,869	36,176	1,462	2,027	52,534	2,454	20,227	73.1
진안군	29,393	21,479	4,451	14,787	521	833	20,592	887	7,914	73.1
무주군	23,263	16,901	3,754	11,024	522	724	16,024	877	6,362	72.7
장수군	22,559	16,608	4,664	10,365	419	470	15,918	690	5,951	73.6

● 임실군 · 순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심국무	새정치 국회의장 박정훈	통 합 민주당 양대원	자유민주 연 합 김준소	무소속 신 호	무소속 양영두	무소속 윤병규	계			
합 계	61,770	45,543	5,195	24,411	1,965	362	269	5,947	5,995	44,144	1,399	16,227	73.7
임실군	32,615	23,746	3,446	13,047	523	265	112	4,953	664	23,010	736	8,869	72.8
순창군	29,155	21,797	1,749	11,364	1,442	97	157	994	5,331	21,134	663	7,358	74.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고택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주섭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계			
고창군	59,723	43,236	13,393	27,575	40,968	2,268	16,487	72.4

● 부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고명승	새정치 국민회의 김진배	통 합 민주당 김일범	자유민주 연 합 김연술	무소속 김종국	무소속 조민구	계			
부안군	59,824	43,488	16,539	22,300	689	315	1,445	749	42,037	1,451	16,336	72.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남도

● 목포시 신안군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배종덕	새정치국민회의 김홍일	통합민주당 선무일	자유민주연합 이정수	무소속 서용석	무소속 이상열	계			
신안군갑	136,858	89,138	4,339	70,987	663	290	2,949	8,156	87,384	1,754	47,720	65.1

● 목포시 신안군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광희	새정치국민회의 한화갑	자유민주연합 김재철	계			
신안군을	62,988	42,698	5,569	34,870	666	41,105	1,593	20,290	67.8

● 여수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성재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	무소속 김강식	계			
여수시	119,974	75,256	3,376	55,752	14,419	73,547	1,709	44,718	62.7

● 순천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장성길	새정치국민회의 김경재	계			
순천시갑	75,059	50,222	4,420	43,762	48,182	2,040	24,837	66.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순천시읍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근	새정치 국민회의 조순승	자유민주 연합 조동수	무소속 조총훈	계			
순천시읍	91,386	62,309	2,545	41,010	781	15,813	60,149	2,160	29,077	68.2

● 나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인기	새정치 국민회의 정호선	통합 민주당 박기수	무소속 나창주				계
나주시	85,013	65,761	21,881	32,817	736	7,813	63,247	2,514	19,252	77.4

● 여천시·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로	새정치 국민회의 김성곤	자유민주 연합 김제봉	무소속 이기창				계
합계	95,983	63,299	6,772	47,819	1,215	4,824	60,630	2,669	32,684	65.9
여천시	48,853	30,727	3,016	24,058	739	2,094	29,907	820	18,126	62.9
여천군	47,130	32,572	3,756	23,761	476	2,730	30,723	1,849	14,558	69.1

● 광양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광영	새정치 국민회의 김명규	무소속 김형주	무소속 정지영	무소속 최현리				계
광양시	83,593	59,099	15,911	34,027	5,381	2,105	549	57,973	1,126	24,494	7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담양군·장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일두	새정치 국민회의 국창근	통합 민주당 기노을	자유민주 연합 공창덕	무소속 김사석	계			
합계	88,205	60,772	4,549	48,823	1,930	1,918	1,417	58,637	2,135	27,433	68.9
담양군	45,386	32,080	2,060	26,662	784	498	906	30,910	1,170	13,306	70.7
장성군	42,819	28,692	2,489	22,161	1,146	1,420	511	27,727	965	14,127	67.0

● 곡성군·구례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심상준	새정치 국민회의 양성철	자유민주 연합 황성	무소속 김용신				계
합계	57,448	41,859	6,055	28,251	730	5,110	40,146	1,713	15,589	72.9
곡성군	31,167	23,120	4,328	16,327	422	987	22,064	1,056	8,047	74.2
구례군	26,281	18,739	1,727	11,924	308	4,123	18,082	657	7,542	71.3

● 고흥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문휴	새정치 국민회의 박상천	무소속 송점진	무소속 신금식				계
고흥군	80,720	58,572	8,277	43,081	1,197	3,323	55,878	2,694	22,148	72.6

● 보성군·화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용식	새정치 국민회의 박찬주	통합 민주당 정인환	자유민주 연합 김길곤				계
합계	103,270	75,089	23,774	45,531	1,724	1,008	72,037	3,052	28,181	72.7
보성군	50,788	38,223	18,946	16,642	527	531	36,646	1,577	12,565	75.3
화순군	52,482	36,866	4,828	28,889	1,197	477	35,391	1,475	15,616	70.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장흥군 · 영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윤재영	새정치국민회의 김옥두	계			
합 계	86,901	61,526	10,604	47,513	58,117	3,409	25,375	70.8
장흥군	42,091	30,198	2,336	26,141	28,477	1,721	11,893	71.7
영암군	44,810	31,328	8,268	21,372	29,640	1,688	13,482	69.9

● 강진군 · 완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 식	새정치 국민회의 김영진	통 합 민주당 윤동환	자유민주 연 합 신정철	무소속 김순식	무소속 정병호	계			
합 계	90,099	68,291	16,120	33,765	3,402	752	693	10,847	65,579	2,712	21,808	75.8
강진군	38,999	30,068	9,692	16,080	2,689	128	259	420	29,268	800	8,931	77.1
완도군	51,100	38,223	6,428	17,685	713	624	434	10,427	36,311	1,912	12,877	74.8

● 해남군 · 진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시채	새정치 국민회의 김봉호	통 합 민주당 임종필	무소속 김봉옥	무소속 박종백	무소속 이경식	계			
합 계	106,083	79,547	28,905	41,096	1,027	2,399	1,292	1,408	76,127	3,420	26,536	75.0
해남군	73,203	54,308	16,889	30,005	833	2,241	1,098	1,003	52,069	2,239	18,895	74.2
진도군	32,880	25,239	12,016	11,091	194	158	194	405	24,058	1,181	7,641	76.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무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안희석	새정치 국민회의 배종무	통 합 민주당 김송차	자유민주 연 합 윤무중	계			
무안군	52,925	38,364	8,968	26,533	1,123	497	37,121	1,243	14,561	72.5

● 함평군 · 영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양근수	새정치 국민회의 김인곤	통 합 민주당 김기수	무소속 김동주	무소속 박남도				계
합 계	90,772	60,102	7,309	43,977	2,593	2,316	2,097	58,292	1,810	30,670	66.2
함평군	37,843	25,880	3,677	19,355	662	929	385	25,008	872	11,963	68.4
영광군	52,929	34,222	3,632	24,622	1,931	1,387	1,712	33,284	938	18,707	64.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북 도

● 포항시 북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윤해수	통 합 민주당 방무성	자유민주 연 합 최종태	무당파 국민연합 최영태	무소속 권동수	무소속 권영준	무소속 신의웅	무소속 허화평	계			
북 구	164,962	112,544	37,121	9,866	5,177	1,834	2,344	2,156	2,349	48,251	109,098	3,446	52,418	68.2

● 포항시 남구·울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상득	새정치 국민회의 김만철	통 합 민주당 김병구	자유민주 연 합 장준익	계			
합 계	181,102	116,673	55,105	4,823	20,945	32,104	112,977	3,696	64,429	64.4
포항시 남구	173,055	110,758	51,420	4,680	20,581	30,598	107,279	3,479	62,297	64.0
울릉군	8,047	5,915	3,685	143	364	1,506	5,698	217	2,132	73.5

● 경주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황윤기	새정치 국민회의 배팔용	통 합 민주당 한점수	자유민주 연 합 정종복	무소속 김일윤	무소속 김정열	계			
경주시갑	102,104	69,020	21,089	1,309	3,502	15,360	21,720	3,354	66,334	2,686	33,084	67.6

● 경주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백상승	통 합 민주당 윤석보	자유민주 연 합 이상두	무소속 임진출	계			
경주시을	98,356	67,325	19,045	3,679	18,208	24,411	65,343	1,982	31,031	68.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김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임인배	새정치국민회의 공부동	통합민주당 박연옥	자유민주연합 김한선	무당파국민연합 조석환			
김천시	107,206	78,895	34,576	962	1,595	3,575	296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박영우	무소속 여인섭	무소속 이병무	무소속 정해창							
4,028	456	1,115	29,831	76,434	2,461	28,311	73.6			

● 안동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길홍	통 합 민주당 권오을	자유민주 연 합 강감창	무소속 김노식				
안동시갑	69,770	51,466	16,462	19,749	2,329	11,185	49,725	1,741	18,304	73.8

● 안동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류돈우	새정치 국민회의 강병철	통 합 민주당 신종철	자유민주 연 합 김시명	무소속 권정달	무소속 권태윤	무소속 정석교				
안동시을	65,910	49,440	15,134	916	2,008	3,024	24,516	378	1,965	47,941	1,499	16,470	75.0

● 구미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세직	통 합 민주당 윤상규	자유민주 연 합 박재홍	무소속 김철호				
구미시갑	103,989	67,912	30,415	5,222	27,751	3,493	66,881	1,031	36,077	6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미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윤환	새정치 국민회의 김진복	통합 민주당 윤정석	자유민주 연합 최종두	무소속 최세훈	계			
구미시	92,260	68,821	37,306	1,021	2,687	24,101	1,809	66,924	1,897	23,439	74.6

● 영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장수덕	새정치 국민회의 이광희	자유민주 연합 권영창	무소속 김엽	무소속 김준협	무소속 박시균				계
영주시	96,164	73,916	13,313	1,401	14,593	6,094	13,119	23,207	71,727	2,189	22,248	76.9

● 영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헌기	새정치 국민회의 이육만	통합 민주당 이준우	자유민주 연합 최상용	무당파 국민연합 정동윤	무소속 박병일	무소속 조병환				계
영천시	90,517	66,565	24,113	1,540	3,171	15,261	13,204	5,936	1,211	64,436	2,129	23,952	73.5

● 상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상배	자유민주 연합 이재훈	무소속 김남경	무소속 김상구	무소속 김학인	계			
상주시	97,253	75,738	25,896	21,775	5,548	18,644	1,339	73,202	2,536	21,515	77.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문경시·예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황병대	새정치 국민회의 황병호	통합 민주당 안희대	자유민주 연합 신국환	무소속 이상원	무소속 이승무	무소속 최주영	계			
합 계	117,837	91,173	30,651	2,046	3,587	14,919	3,051	29,987	3,904	88,145	3,028	26,664	77.4
문경시	67,659	51,550	7,884	856	1,236	5,622	2,647	29,298	2,652	50,195	1,355	16,109	76.2
예천군	50,178	39,623	22,767	1,190	2,351	9,297	404	689	1,252	37,950	1,673	10,555	79.0

● 경산시·청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박영봉	무소속 박정규
			신한국당 이영창	새정치 국민회의 이경희	통합민주당 김경운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무당파 국민연합 서진수				
합 계	160,673	104,033	24,053	1,848	6,549	24,433	4,619	10,822	2,697		
경산시	118,040	72,810	13,002	1,439	5,605	19,171	3,974	4,223	1,426		
청도군	42,633	31,223	11,051	409	944	5,262	645	6,599	1,271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성상문	무소속 이선우	무소속 이재연	무소속 이종용	무소속 정재학	무소속 한윤근	계			
1,262	1,044	1,584	4,180	15,421	2,488	101,000	3,033	56,640	64.7
941	849	1,130	3,812	13,389	1,973	70,934	1,876	45,230	61.7
321	195	454	368	2,032	515	30,066	1,157	11,410	73.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고령군 · 성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신한국당 주진우	새정치국민회의 도호기	통합민주당 김창문	자유민주연합 송인식	무소속 김종기	무소속 박정영
합 계	68,936	50,603	13,424	1,774	4,467	7,940	1,925	4,662
고령군	28,490	19,883	4,394	608	3,830	3,387	939	785
성주군	40,446	30,720	9,030	1,166	637	4,553	986	3,877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심광호	무소속 이길용	무소속 이윤기	무소속 최도열	계			
1,036	3,722	2,970	6,625	48,545	2,058	18,333	73.4
282	2,393	510	1,852	18,980	903	8,607	69.8
754	1,329	2,460	4,773	29,565	1,155	9,726	76.0

● 군위군 · 칠곡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장영철	새정치 국민회의 구문장	통 합 민주당 권천문	자유민주 연 합 도갑현	무소속 김현규	무소속 이수담	무소속 이인기				계
합 계	88,036	64,363	19,393	1,931	1,189	7,953	13,834	7,081	11,029	62,410	1,953	23,673	73.1
군위군	25,850	19,883	5,103	1,197	500	1,590	7,089	1,381	2,238	19,098	785	5,967	76.9
칠곡군	62,186	44,480	14,290	734	689	6,363	6,745	5,700	8,791	43,312	1,168	17,706	71.5

● 의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우명규	통 합 민주당 이왕식	자유민주 연 합 김화남	무소속 김동권	무소속 김진욱				계
의성군	65,154	52,548	17,647	2,003	20,417	8,420	2,384	50,871	1,677	12,606	8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청송군 · 영덕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찬우	통합 민주당 박명규	자유민주 연합 김성태	무당파 국민연합 박남수	무소속 김동협	무소속 김현동	무소속 남병집	무소속 조영길	계			
합 계	70,589	54,547	16,202	2,414	14,941	1,113	3,626	4,031	2,418	7,555	52,300	2,247	16,042	77.3
청송군	27,869	21,871	4,610	1,950	4,371	859	413	1,466	1,318	6,079	21,066	805	5,998	78.5
영덕군	42,720	32,676	11,592	464	10,570	254	3,213	2,565	1,100	1,476	31,234	1,442	10,044	76.5

● 영양군 · 봉화군 · 울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광원	새정치국민회의 조영환	통합민주당 김종복	자유민주연합 이학원	무당파국민연합 김중권	무소속 강동호			
합 계	105,681	80,368	21,615	1,395	1,323	4,053	15,724	8,261			
영양군	19,138	14,964	3,003	218	270	631	1,347	1,023			
봉화군	36,117	27,152	2,173	310	368	993	1,085	7,060			
울진군	50,426	38,252	16,439	867	685	2,429	13,292	178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강신조	무소속 오한구	무소속 윤영호	무소속 이동일	무소속 장소택	계			
7,958	7,096	8,432	371	1,746	77,974	2,394	25,313	76.0
446	1,322	5,949	62	210	14,481	483	4,174	78.2
6,983	4,818	2,173	105	288	26,356	796	8,965	75.2
529	956	310	204	1,248	37,137	1,115	12,174	75.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남 도

● 창원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종하	통 합 민주당 이상익	무소속 강청웅	무소속 김용남	무소속 박국제	무소속 박재간	계			
창원시갑	151,446	86,112	40,631	15,709	944	5,874	1,042	20,004	84,204	1,908	65,334	56.9

● 창원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 국당 황낙주	새정치 국민회의 한명철	통 합 민주당 이주영	자유민주 연 합 김영성	무소속 강성모	무소속 김규철	무소속 김호경	무소속 서선호				계
창원시을	151,570	91,652	32,902	5,567	14,683	5,609	2,638	23,587	1,101	4,558	90,645	1,007	59,918	60.5

● 울산시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태호	새정치 국민회의 이일성	통 합 민주당 송철호	자유민주 연 합 이철수	무소속 박삼주	무소속 정갑윤				계
중 구	183,652	113,341	42,543	3,843	39,743	5,399	1,522	18,157	111,207	2,134	70,311	61.7

● 울산시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차수명	새정치 국민회의 김진영	통 합 민주당 한만우	자유민주 연 합 이 복				계
남구갑	106,624	62,949	27,649	3,944	16,591	13,809	61,993	956	43,675	5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울산시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차화준	새정치국민회의 손진철	통합민주당 이규정	계			
남구	88,941	52,656	22,009	4,824	24,592	51,425	1,231	36,285	59.2

● 울산시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최수만	새정치국민회의 정천석	무소속 정몽준	계			
동구	117,063	79,879	7,108	15,637	55,697	78,442	1,437	37,184	68.2

● 울산시 울주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채겸	새정치국민회의 김의곤	통 합 민주당 권기술	자유민주 연합 이광우	무소속 이채현	계			
울주구	127,475	84,417	29,453	3,459	43,727	2,471	2,158	81,268	3,149	43,058	66.2

● 마산시 합포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호일	새정치국민회의 김희극	통합민주당 박정규	자유민주연합 박석동	무당파국민연합 박동관	무소속 권경식			
합포구	149,252	95,817	62,850	1,843	4,428	2,712	643	741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김병수	무소속 이 중	무소속 정명준	무소속 황철곤	계							
1,027	852	1,661	17,038	93,795	2,022	53,435	64.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마산시 회원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강삼재	새정치 국민회의 이상기	통 합 민주당 박재혁	무당파 국민연합 신태성	무소속 김영길	무소속 이건환				계
회원구	143,515	89,953	44,340	2,452	6,682	4,101	28,985	1,835	88,395	1,558	53,562	62.7

● 진주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정필근	새정치 국민회의 강일만	자유민주 연 합 김도철	무소속 김재천	무소속 안정원				계
진주시갑	104,591	74,485	33,246	1,337	1,083	35,487	1,348	72,501	1,984	30,106	71.2

● 진주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하순봉	새정치 국민회의 박영식	통 합 민주당 강갑중	무소속 박정희	무소속 안병호				계
진주시을	120,728	81,253	50,981	2,317	13,311	1,003	11,096	78,708	2,545	39,475	67.3

● 진해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허대범	새정치 국민회의 김종준	통 합 민주당 최 혁	무소속 김학송	무소속 박상호				계
진해시	88,916	64,797	29,836	2,107	3,551	24,974	2,838	63,306	1,491	24,119	72.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통영시·고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동욱	통 합 민주당 송성욱	자유민주 연 합 박청정	무소속 윤우정	무소속 이종성	무소속 제정훈	무소속 최이호	계			
합 계	147,529	101,049	42,546	15,859	3,128	14,764	7,100	9,271	4,757	97,425	3,624	46,480	68.5
통영시	96,139	64,748	33,687	11,706	2,615	10,386	1,925	1,152	1,248	62,719	2,029	31,391	67.3
고성군	51,390	36,301	8,859	4,153	513	4,378	5,175	8,119	3,509	34,706	1,595	15,089	70.6

● 사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방호	새정치 국민의회의 이순근	통 합 민주당 유홍재	무소속 김태웅	무소속 장재태	무소속 조갑주	무소속 황성균	계			
사천시	86,384	65,141	17,350	1,701	1,992	12,852	946	6,574	21,427	62,842	2,299	21,243	75.4

● 김해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영일	새정치 국민의회의 오세호	통 합 민주당 이광희	자유민주 연 합 홍의표	무소속 김병환	무소속 류신현	무소속 장중웅	계			
김해시	176,534	106,763	53,115	5,732	15,966	13,503	3,338	4,829	7,681	104,164	2,599	69,771	60.5

● 밀양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소속 김상원	무소속 김용갑
			신한국당 서정호	새정치국민회의 이태권	통합민주당 이상천	무소속 김상원	무소속 김용갑		
밀양시	93,462	65,372	16,060	4,563	3,581	1,057	18,14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무소속 박상웅	무소속 박종택	무소속 박희선	무소속 정길원	계			
4,568	8,092	2,283	5,204	63,554	1,818	28,090	69.9

● 거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김기춘	통합민주당 지만호	자유민주연합 윤병계	무소속 김권오	계			
거제시	102,503	65,687	47,989	8,541	1,900	4,271	62,701	2,986	36,816	64.1

● 의령군·함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윤한도	통합민주당 이정환	무소속 김진석	무소속 김진욱	계			
합 계	79,996	55,608	36,176	4,390	3,542	7,542	51,650	3,958	24,388	69.5
의령군	30,163	21,503	10,055	1,124	2,039	6,202	19,420	2,083	8,660	71.3
함안군	49,833	34,105	26,121	3,266	1,503	1,340	32,230	1,875	15,728	68.4

● 창녕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노기태	새정치 국민회의 하정구	통 합 민주당 박상곤	자유민주 연 합 신운태	무소속 김정계	무소속 김정일	계			
창녕군	58,994	45,516	17,840	660	1,111	3,178	6,062	14,633	43,484	2,032	13,478	77.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양산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나오연	새정치 국민의 이미애	통 합 민주당 박수근	무소속 박봉식	무소속 박 인	계			
양산시	108,275	66,388	31,249	4,199	4,409	22,272	2,861	64,990	1,398	41,887	61.3

● 남해군·하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박희태	새정치 국민의 흥재표	통 합 민주당 최종립	자유민주 연 합 김기호	계			
합 계	98,670	72,847	49,874	4,419	5,489	5,984	65,766	7,081	25,823	73.8
남해군	50,763	37,817	30,141	1,127	1,340	1,871	34,479	3,338	12,946	74.5
하동군	47,907	35,030	19,733	3,292	4,149	4,113	31,287	3,743	12,877	73.1

● 산청군·함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권익현	새정치 국민의 정막선	통 합 민주당 도상수	자유민주 연 합 하상영	무소속 구상식	무소속 임채홍	무소속 조중신	무소속 차문환				계
합 계	72,770	55,787	23,134	2,278	791	1,170	356	15,989	7,902	1,265	52,885	2,902	16,983	76.7
산청군	35,337	26,441	15,716	1,412	359	300	152	1,896	4,797	402	25,034	1,407	8,896	74.8
함양군	37,433	29,346	7,418	866	432	870	204	14,093	3,105	863	27,851	1,495	8,087	78.4

● 거창군·합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이강두	새정치 국민의 신문규	통 합 민주당 백신중	자유민주 연 합 김용균	무당파 국민연합 박판제	무소속 허태유	계			
합 계	105,623	81,639	33,784	1,200	4,967	19,401	14,721	3,486	77,559	4,080	23,984	77.3
거창군	52,734	41,473	29,230	630	4,026	3,166	1,362	930	39,344	2,129	11,261	78.6
합천군	52,889	40,166	4,554	570	941	16,235	13,359	2,556	38,215	1,951	12,723	75.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제 주 도

● 제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현경대	새정치 국민회의 정대권	통 합 민주당 신두완	자유민주 연 합 송재훈	무소속 양승부	계			
제주시	168,090	112,126	46,679	34,565	3,693	2,827	22,356	110,120	2,006	55,964	66.7

● 북제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양정규	새정치 국민회의 홍성제	통 합 민주당 강희찬	무소속 강창호	무소속 김택환	무소속 조현필				계
북제주군	70,641	53,149	15,913	11,632	1,316	10,561	11,078	963	51,463	1,686	17,492	75.2

● 서귀포시·남제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신한국당 변정일	새정치 국민회의 고진부	무소속 강익조	무소속 김문탁	무소속 김용기	무소속 오진우				계
합 계	114,068	85,732	28,363	25,845	3,538	20,253	589	4,532	83,120	2,612	28,336	75.2
서귀포시	58,001	42,329	14,183	12,458	2,418	9,172	296	2,751	41,278	1,051	15,672	73.0
남제주군	56,067	43,403	14,180	13,387	1,120	11,081	293	1,781	41,842	1,561	12,664	77.4

5. 연표

(1993. 2. 25 ~ 1998. 2. 24)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93	2. 25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4. 23	국회의원보궐선거 실시(광명시, 부산 동래구갑, 사하구)	
	6. 11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명주군·양양군, 철원군·화천군, 예천군)	
	7. 4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6개월간의 영국 캠프리지대학 연구 활동 후 귀국	
	8. 12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춘천시, 대구 동구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실시	
	9. 24	제9대 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퇴임	
	10. 6	제10대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취임	
	12. 12	김영삼 대통령, 황인성 국무총리 후임에 이회창 감사원장 지명 / 국회, 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1994	1. 27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설립
		3. 4	국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공포 3월 16일)
		8. 2	제14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대구 수정구갑, 영월군·평창군, 경주시)
		10. 21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망 32명, 부상 17명)
10. 29		검찰, 12·12 군사반란 수사결과 발표	
1995	2. 9	김종필 전 민주자유당 대표, 민주자유당 탈당과 신당(자유민주연합)창당 선언	
	3. 30	자유민주연합 창당대회(총재 김종필), 4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4. 28	대구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발생(사망 100명)	
	6. 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투표율 68.4%)	
	6. 29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사망 418명, 실종 246명, 부상 408명)	

연도	일자	주요사항
	9. 5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총재 김대중),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11. 17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11. 27	정치개혁시민연합 창당대회(공동대표 장을병·홍성우), 1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12. 3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2. 4	민주당과 개혁신당 통합수입기구 합동회의에서 합당 합의, 12월 21일 통합민주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1996	2. 7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4. 1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실시(투표율 63.9%)
	7. 19	전주시장보궐선거 실시
	8. 5	여천군수보궐선거 실시
	9. 12	노원구청장재선거 실시
	11. 18	오산시장보궐선거 실시
	12. 26	국회, 노동관계법 등 기습 처리
1997	1. 22	제10대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퇴임
	1. 23	한보철강 부도처리(한보사태)
	1. 24	제11대 최종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3. 5	국회의원보궐선거 실시(인천 서구, 수원 장안구)
	3. 12	김영삼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 신한국당 고문을 당 대표로 임명
	4. 17	대법원,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형 확정
	5. 17	김현철(김영삼 대통령 차남) 구속
	5. 19	새정치국민회의 전국대의원대회,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당 총재로 김대중 선출
	7. 21	신한국당 전당대회,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이회창 선출

연도	일자	주요사항
7. 24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실시(충남 예산군, 경북 포항시 북구)	
9. 4	국회의원보궐선거 실시(안양시 만안구)	
9. 11	민주당 임시전당대회,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조순 총재 선출(추대)	
9. 13	이인제 경기도지사,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신한국당 탈당	
10. 26	건설국민승리21 창립대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추대	
10. 27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합의, 11월 3일 야권후보단일화 서명식	
11. 4	국민신당 창당대회 및 제15대 대통령 후보 선출(총재 이만섭, 대통령후보 이인제) 1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11. 7	신한국당·민주당 합당(한나라당)합의	
11. 19	건설국민승리21 창당대회,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11. 21	한나라당 합당 전당대회 및 제15대 대통령 후보 단일화(총재 조순, 대통령후보 이회창),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12. 18	제15대 대통령선거 실시(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당선)	
12. 22	정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19명 사면 석방	

6. 참고문헌

1. 정기간행물

- 국가기관발행 : 경찰청 『경찰백서』, 국회사무처 『국회공보』, 『국회보』, 대검찰청 『검찰연감』, 법무부 『법무연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정당의 활동 및 활동개황보고』
- 연감류 : 『동아연감』, 『연합연감』
- 일간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 기 타 : 『뉴스+』, 『시사저널』, 『신동아』, 『오피저버』, 『월간말지』, 『월간조선』, 『월간중앙』, 『자치행정』, 『저널리즘』, 『경제와 사회』, 『동향과 전망』, 『사상』, 『신문로』, 『역사비평』, 『정책논단』, 『한국정치학회보』

2. 각 기관과 단체 등의 편찬자료

-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1996, 『제15대 총선보고서』
- 국민신당, 1997, 『국민신당 정책공약집』
- 국사편찬위원회, 2008, 『대한민국연표(1968.1~1987.12.1)』
- 국회사무처
 - 1998, 『국회개원 50년』
 - 『국회본회의회의록』
 - 1996, 『국회사(제11대)』
 - 2005, 『국회사(제12대)』

- 2006, 『국회사(제13대)』
- 2006, 『국회사(제14대)』
- 2007, 『국회사(제15대)』
- 대검찰청
 - 1995, 『95 4대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 199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벌칙해설』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 문화방송, 1999, 『1퍼센트의 승부』
- 민주당정책위원회, 1995, 『6.27 4대 지방선거지역공약개발모형』
- 민주자유당, 1995, 『95지방선거 당선길잡이』
- 민주쟁취국민운동중앙선거감시본부, 1988, 『12.16부정선거백서 I』
- 법무부, 1988, 『법무부사』
- 새정치국민회의 · 자민련, 1997, 『21세기로 가는 길』
-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1998, 『97 15대 대통령선거보도감시백서』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보도분석』
- 세종연구소, 1996, 『제15대 총선분석』
- 자유민주연합정책위원회, 1995, 『6.27 지방선거공약 "작은 약속 큰 실천"』
- 조선일보
 - 1988, 『제13대 대통령선거자료집』
 -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자료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82, 『1980.10.22 시행 국민투표투표구별상황』
 - 1983, 『각종선거 및 국민투표 등 결과통계분석』
 - 1991,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 1991, 『구시군의회의원선거총람』
 - 1988, 『국민투표총람(1987. 10. 27)』
 - 1983, 『국회의원선거법 변천상황』

- 1989, 『국회의원선거관결집 : 제10대~제13대』
- 2002, 『선거관계관례집』
- 1994, 『선거관리위원회사(1963~1993)』
- 1996, 『선거법연혁집』
- 2007, 『선거소송판결문집(II)』
- 1991, 『시·도의회의원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 1991, 『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
- 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 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 1988, 『정당의 선거공약』
- 198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후보자득표상황』
- 1985, 『제12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85, 『제12대 대통령선거총람』
- 1988, 『제13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88, 『제13대 대통령선거총람』
-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 1993, 『제14대 대선투표율분석』
-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총람』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 조사』
-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
-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 조사』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총람』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분석』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 조사』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1992,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 투표율분석결과』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6, 『한국인의 투표행동(95 지방선거 중심으로)』
- 한국언론연구원, 1995, 『선거와 미디어(6.27 지방자치제선거보도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지방의회의원선거분석을 위한 연구』
- 한나라당, 1997,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위한 실천약속』
- 현대사회연구소, 1991, 『지방의회의원선거 사례연구 I, II』

3. 단행본

- 강우석컨설팅그룹, 1995, 『6·27 4대선거백서』, 정보여행
- 견학필, 1996,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인간사랑
- 국회저널사, 1996, 『대한민국의정46년(II)』, 국회저널사
- 권영갑, 1995,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한국기자협회
- 권영성, 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광웅, 1990, 『한국의 선거정치학』, 나남
- 김만흠, 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 김명기·박연호 공저, 2008, 『한국정부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삼웅, 2006,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 김영명, 1992, 『한국현대정치사-정치변동의 역할』, 을유문화사
- 김영철, 1998, 『선거운동전략』, 유정
- 김철수·양승두 외 7인 공저, 1995, 『해설지방자치단체선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춘식, 2005, 『대통령선거와 정치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출판사업부
- 김현태, 2008,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오름
- 다홀미디어, 2007, 『한국사연표』, 다홀편집실
- 민준기 · 신명순 · 양성철 · 이정복 · 장달중, 1996, 『한국의 정치』, 나남신서
- 박광주, 2007, 『한국정치 전개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 박기출, 2004, 『한국정치사』, 새한학회
- 박세길, 1992,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 박이석 · 조훈 · 이영춘, 2007, 『정치관계법』, 새롭
- 박철언, 2005,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1, 2』, 랜덤하우스중앙
- 백선기, 1997, 『한국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진문화, 1995,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정사』, 사진문화
- 서중석, 2006,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 손영호, 2006, 『역사의 이해』, 학지사
- 손호철, 2003,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역사 1945~2003』, 사회평론
- 송근원 · 정봉성, 2005, 『선거와 이슈전략』, 신지사원
- 송찬섭 · 김남윤 · 윤대원 공저, 2007,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심재철, 1995, 『제14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약집』, 문예당
- 오명호, 1999,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 이병도, 1995, 『6공화국은 한번은 죽어야 한다』, 가교
- 이은국, 2008, 『한국의 선거와 경제』, 나남
- 이은진 · 김석준 외, 1992,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사회문화연구소
- 이정복, 1997, 『한국의 정치적 과제』, 서울대학교
- 임현진 · 송호근 공편, 1995,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
- 정대수 · 김벽옥 · 백선기 · 류한호 공저, 1995, 『선거와 홍보전략』, 한울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 지병문 · 김용철 · 천성권, 2001, 『현대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 최창호, 1993, 『지방자치제토론』, 삼영사
- 추부길,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백서』, 모스트커뮤니케이션
- 한국정치학회 편, 1996, 『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 한기찬 · 임종훈 · 임인규 · 조성욱, 2000, 『선거법바로알기』, 나라아이넷
- 한만봉, 2007, 『국회의원학』, 한국학술정보
- 한배호, 2008, 『자유를 향한 20세기 한국정치사』, 일조각
- 함정훈, 1997, 『대통령선거취재와보도』, 한국언론연구원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보고서』

4. 논문 및 기고문

- 강명세, 1998, “여야의 균열구조와 한국정당체제의 역사적 변화 1948-1996”, 『국가전략』 4권 2호
- 강영석, 2000,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 강원택, 1992, “게임이론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27호
- 권오남, 1994, “대한민국정당변천에 관한 고찰”, 『선거관리』 제40호
- 김경아, 1996, “4.11총선 투표자조사 오류 원인분석”, 『연구논집』 제31집
- 김기대, 1997, “15대 대선의 황금분할구도하의 지지도 변동과 함의”, 『지방자치』 33호
- 김선종, 1995, “선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정책포럼』 1995 가을호
- 김용학 · 김익기 · 서주성 · 이경용 공저, 1998, “1997년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의 신뢰도 분석”, 『사회비평』 제18권
- 김용호, 1992, “선거와 정치불신”, 『사회비평』 1992년 7호
- 김유남, 2000, “한국대통령선거의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 김정우, 2003, “한국의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 김정택, 1992, “정치사회화 모델에 입각한 한국인의 투표행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종래, 1997, “여권의 대선전략”, 『사상』 여름호

- 김지연, 1995, “서울시민의 투표행태에 대한 경험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 김형기, 1995, “6.27 선거와 진정한 개혁”, 『신문로포럼』7월
- 김호열, 1995, “통합선거법의 올바른 이해”, 『계간 다리』1995 겨울호
- 문용직,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분석과 전망”, 『의정연구』2권 1호
- 문용직, 199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효과”, 『한국과 국제정치』1997년 가을 겨울
- 박찬욱, 1997, “한국인의 투표성향” 『계간 사상』1997년 여름호
- 박찬욱 · 김형준 공저,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배재연, 1998, “역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제4집 3호
- 백종국, 1992, “금권과 복지의 기로에 선 한국정치”, 『읍저버』8월호
- 서기준, 1998, “한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과제”, 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 성낙인, 1995, “통합선거법의 정립을 위한 실천적 과제”, 『법과 사회』1995년 하반기
- 손혁재
 - 1996, “4.11총선과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경제와 사회』여름호
 - 1997, “공명선거 뿌리내려야 한다”, 『수사연구』166호
- 송근원
 - 1996, “4.11총선의 평가와 문제점”, 『국회보』1996년 5월호
 - 1993, “대통령선거 아젠다분석: 제14대 대통령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28집 1호
- 심지연 · 김민전 공저
 - 2001,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보』제35집
 - 2002,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36집 1호
- 안광식, 1994, “한국언론이 대통령선거때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제64집
- 안병만 · 김인철 · 서진완 공저, 1995, “6.27 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자치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1995년 제4호
- 양재인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분석”, 『연구원논집』 제3집(경남대학교)
- 2001, “한국의 선거와 투표행태 : 지역주의가 표출된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4집
- 원성연, 1995, “컴퓨터선거운동론”, 『계간 다리』 1995년 겨울
- 윤용희, 1992, “선거비용규제의 현실화와 선거공영제 확충방안”, 『선거관리』 제38호
- 윤천주, 1997,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발전”, 『학술원논문집』 1997
- 이기선, 2004, “1990년대 이후 한국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내영, 1996, “제15대 총선과 한국정치의 진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
- 이달근, 1995, “역대지방선거의 반성과 6.27지방선거의 과제”, 『사회과학논총』 제14집
- 이도성, 1997, “97 대선 레이스와 야권전략”, 『사상』 여름호
- 이영기, 2000, “정치적 선거비용과 한국경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한독사회과학회)
- 이정희, 1996, “선거문화와 선거제도 문제”, 『경제정의』 1996년 30호
- 이충천, 1995, “한국유권자의 인물지향적 투표행태분석”, 『동서연구』 제7권
- 임명재, 1997, “달라진 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해설”, 『수사연구』 166호
- 정대화, 1996, “4.19 정신으로 본 4.11총선”, 『신문로포럼』 제32호
- 정만희, 2000,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한국공법학회)
- 정봉성, 2004, “사건 및 이슈가 대통령후보 지지율의 변화에 미친 영향”, 경상대학교대학원
- 정상호, 1998, “제15대 대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통권 제37호
- 정영우, 1994, “선거전략 구상과 이행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 정영태, 1998, “15대 대선, 김대중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제37권
- 정윤재, 1997, “부패정치와 선거공영제”, 『신문로』 45호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 정진민 · 황아란 공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 정해구, 1992,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맞선 라이벌 : 1987년 대선과 1노 3김”, 『역사비평』 여름호
- 조병량,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 정치광고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조연현,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와 DJP지역연합”, 『동향과 전망』 제33호

- 조중빈, 1995, “한국민주화와 선거제도”, 『의정연구』1995년 1호
- 최기재, 2003,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최태복, 1994, “한국의 선거운동 양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한수, 1996, “선거법과 선거구도로 본 4·11총선의 구도”, 『정책논단』2월호
- 한일남, 2000, “한국선거비용규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정일, 1997,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거의 비교연구”, 『사회과학논총』제2집
- 황근,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평가”, 『동향과 전망』1998년 봄호

편찬위원회

위원장(전)	김호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중빈	국민대학교 교수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심지연	경남대학교 교수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병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현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간사장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간사장(전)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간사장(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간 사	이계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
간 사(전)	서재영	선거연수원 교수
서 기	이영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편찬실무단

집필진

이영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김성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사무관)
장성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강창길(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송권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행정주사)
심현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행정주사)
김성욱(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김영준(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장형순(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오경화(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철(전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강재수(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교 열

임좌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병우(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박정기(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 훈(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창희(전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大韓民國選舉史 第6輯

인 쇄	2009년 12월 1일
발 행	2009년 12월 10일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길 30 (중앙동 2-3) 전화 02-503-0863 팩스 02-503-0864 http://www.nec.go.kr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2264-5298
